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765-01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2017. 12.



문화재청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의 최종성과품
으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 이 승 규

참 여 연 구 진

◆ 연구총괄

이승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 연구책임

강병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구진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임종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변철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초룡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연구보조

고명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남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지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태경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석진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오하경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이휘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전인석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최나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최선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객원연구진

강보배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김수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손오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김형우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객원연구보조원)

이슬연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객원연구보조원)

이종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객원연구보조원)

◆ 연구지원

나정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정종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지원팀장)

장하연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담당)

김서경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담당)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 요약보고서 -

2017. 1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문화재의 분류는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구분을 함으로써 개별 문화재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대분류 단계만 제시하고 있고, 중분류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화재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첫째, 법률상 분류체계와 관리운영상 분류체계의 불일치
- 둘째, 문화재 유형 간 개념적 중복 발생
- 셋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념과의 차이 발생
- 넷째, 기관별 상이한 분류체계 운용 확인
- 다섯째, 문화유산으로의 명칭변경 경향
- 따라서 개별 문화재의 지정기준을 통해 간접적인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첫째, 현재 지정된 문화재의 재평가 및 분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분류체계 (안)을 제시
 - 둘째,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제적 동향 분석과 세계유산 분류체계와 연계방안 제시
 - 셋째, 향후 지정될 문화재의 위상제고와 올바른 문화재의 가치 정립 방안을 제시
 - 넷째, 대국민(수요자 중심) 문화재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문화재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분류체계 분석을 위한 현행 국가 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무형, 민속,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한정
- 공간적 범위: 유네스코 및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등의 주요국가와 국내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타 부처 사례
- 시간적 범위: 현행 유네스코 및 주요국가 분류체계 내용 및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내용 분석,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지정문화재 현황 자료 분석

2. 연구의 방법

-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학술지, 보고서, 발표자료, 법령 등을 통한 문헌분석
- 국가 지정문화재 현황의 내용 분석
- 지정문화재의 원자료 코딩 및 Data 통계분석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내외 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재 분류체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유네스코 및 주요 국가의 문화재 분류체계 분석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현황과 사례 분석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및 현행 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 진단 및 분석문화재 분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의 방향성 및 추진 방법
문화재 분류체계 위계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통합적 문화재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분류체계의 위계별 분석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대분류 유형의 개념 및 범위 구체화의 방향
문화재 가치평가 요소 현황 분석과 DB구축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가치평가 내용 분석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등	

[그림 1] 연구 모형

제2장 국내·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제1절 국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 유네스코,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의 대분류체계 현황 조사하여 대분류체계 개념변수(물리적 특성, 개념적 차이)에 따라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 유네스코(UNESCO)

- 단일 개념변수 적용
 - 대분류 및 중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유무형성, 자연성, 인위성 등 적용
 - 세계유산은 속성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하위분류
- 새로운 유형 도입
 - 2005년 운영지침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증을 제시하며 기준을 통합하였고, 복합유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수평적 체계에서 도입
- 국가 간 협약으로서의 분류체계의 한계
 -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분류체계 내에 포괄할 필요가 없음
 -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은 동일한 협약 아래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계체계가 성립이 안 됨
 -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경우, 현재 협약이 아닌 사업(project)로서 진행

2. 일본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문화재 유형 전체를 규정, 보호 및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개념 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속성에 따른 구분,

공간단위에 따른 구분이 적용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대분류단계 문화재 유형의 포괄성 부재

- 대분류단계는 하위 분류체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기념물은 하위 개념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적합

○ 분류체계의 수평적 확대 추세

- 일본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문화재의 새로운 유형인 전통건조물군과 문화적경관을 도입하여 기존 문화재 유형에 편입시키지 않고, 대분류 단계에서 수평적으로 확장

○ 대규모 면단위 문화재(문화적경관, 전통적 건조물군보 존지구) 유형의 별도 분류

- 일본의 문화재 유형 중 대규모 면적 공간단위를 취하고 있는 문화재로 문화적경관과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가 있고, 이 두 유형은 별도의 문화재 유형으로 분류되고 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문화재 유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다른 대규모 면단위 문화재인 명승,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과 달리 문화적 경관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그 관리에 있어 타법 및 지역의 관련 조례의 규제 사항을 기초로 하고 중요문화적경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관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중국

○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법 제정

-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재 법률과 체계는 없음
- 따라서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는 존재하지 않음

○ 개념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속성에 따른 구분이 적용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념 간 배타성 성립
- 중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선적용
- 즉, 중국은 관련된 제도에서 제시되는 개념적 정의에 따른 문화재 각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으로부터 모호한 기준 순으로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
- 따라서 한국 문화재 분류체계가 판단 여지가 큰 기준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중복 및 혼란 문제의 발생 소지가 낮음

○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의 구분

- 풍경명승구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으로 이해 가능하며 이는 한국의 천연기념물(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과 유사한 제도
- 중국의 경우 자연보호구와 풍경명승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연환경으로서의 보호대상인가, 자연 경관으로서의 심미적 향유 대상인가를 적용

4. 프랑스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통합법인 「문화유산법전」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그러나 자연·문화유적지는 자연성을 전제로한 문화재 유형으로 역사적기념물과 특성이 상이, 「문화유산법전」에서 문화재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환경법전」에서 이를 관할

○ 단일 개념변수 적용

- 대분류의 개념변수로 ‘자연성’ 적용, 중분류에서 ‘이동가능성’과 ‘인문성’ 적용

5. 영국

○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법 제정

- 동산문화재의 통합관리체계, 그리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재 법률과 체계는 없음
- 라서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는 존재하지 않음

○ 개념변수 다중 적용

- 행정적 대분류단계(문화적자산, 역사적환경)의 개념변수로 이동가능성이 단일하게 적용되나, 법률적 분류에서는 고고성, 역사성, 공간단위, 해양문화성 등이 적용

○ 문화재 분류체계에서 세부 유형이 없는 병렬적인 분류체계

- 영국의 문화재 분류체계에서는 대분류 이하의 분류가 존재하지 않음
- 대분류 단계에서 특정한 문화재 유형을 개별 정의하고, 새로운 문화재 유형은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변화 추세

제2절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분석

1.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운용 사례 조사

- 관계 법령과 조직도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환경유형 분류,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분류, 산림청의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 분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어촌경관 및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분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분류 검토 및 분석

2.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운용 사례 조사의 시사점

- 분류체계와 행정 규제와의 연관성 확인
 - 분류체계에 따라 분법화 진행하는 타부처 사례를 확인(환경부)하였고, 분류 유형별 관리방안이 상이하여 유형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함
 - 즉, 유형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체계 개선 기준으로서의 분류체계 역할 확인
 - 분법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대상 유형별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것 확인 가능
 - 한편 분류체계 상 관리 방식이 상이할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사례도 확인
-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분류체계 재구성 사례 확인
 -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이전에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보안림이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호구역의 유형을 새로이 분류
 - 따라서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현재의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고, 당시 이를 통해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될 것을 기대하였음
 - 즉, 산림청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부처 조직도와 분류체계 간 연관성 확인
 - 유형별로 상이한 규제 운용으로 인해 행정체계 및 조직이 이를 반영하여

- 구성되는 것이 확인 되었지만 유형별 업무량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해 법령상 분류체계와 행정체계 및 조직 구성 간의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그러나 행정체계 및 조직 구성의 기본 틀은 부처별 분류체계를 참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

제3절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및 분석

1.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대분류 체계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4가지로 분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문화재의 종류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 총 7가지로 문화재 분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국보와 보물을 포함, 기념물에 속하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개념상 2단계의 종적인 분류체계를 1단계로 통합하여 수평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2) 대분류체계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
-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기념물은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
- 유형문화재는 원형유지가 가능하지만 무형문화재는 전승하는 과정에서 전형에 따라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승형식’ 또한 개념변수가 될 수 있음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민속문화재는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문화재에 속하지만, ‘민속’이라는 속성을 별도로 분류
- 기념물은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문화재에 속하지만, ‘자연성’,

‘경관성’, ‘예술성’, ‘기술성’ 등의 속성을 별도로 분류

○ 공간단위에 따른 구분

- 유형문화재의 건조물은 점적인 개념이고 기념물의 사적지나 명승, 민속문화재의 민속마을은 면적인 개념으로 공간단위가 개념변수가 될 수 있음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문화재 유형 전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별도로 보호 관리
- 행정적 분류체계에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들을 관리가 용이하도록 재구성

○ 개념 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유무형성, 자연성, 공간단위, 경관성, 예술성, 생활문화성, 인문성 등이 적용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행정적 분류체계의 대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문화재유형들과 함께 분류단위로 논의될 수 없음

○ 대분류단계 문화재 유형의 포괄성 부재

- 대분류단계는 하위 분류체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기념물은 하위 개념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적합

2.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관련 쟁점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하나의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국가유산’이라는 최상위 개념 사용
- 최대분류 단계에서는 ‘유산’, 대분류단계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문화재’로 명칭을 사용
- 한 위계에 하나의 동일한 분류 기준 적용

제4절 통일 대비 북한 문화재 분류체계

1. 북한의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 「민족유산보호법」의 문화재 대분류 체계(2015) 및 개념변수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 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통합법의 역할을 하는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그러나 자연성을 전제로 한 문화재 유형인 자연유산은 물질유산·비물질유산과 특성이 상이하며,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문화재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정 및 보호·관리는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 관할
- 개념 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속성에 따른 구분이 적용
- ‘민족유산’을 최상위 개념으로 정의, ‘유산’으로 명칭 통일
 -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규정
 - 또한 대분류체계 유형 명칭을 모두 ‘유산’으로 통일

2. 통일 대비 한국과 북한 문화재 제도 비교의 시사점

-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 법적 분류체계
 - 한국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보호·관리해왔음
 - 북한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이 채택되어 한국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사적에 속하는 역사유적·역사유물과 명승지·천연기념물을 각각 구분하여 보호·관리
- 북한의 민족유산 분류체계와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 한국은 유형문화재를 크게 동산과 부동산 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북한 또한 물질유산을 력사유물(동산)과 력사유적(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국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되며 확대된 무형

문화재의 확대된 지정범위와 북한의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의 비물질유산의 지정 범위가 유사

- 한국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기념물’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며 북한은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자연유산’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북한은 민속문화재에 대해 별도로 지정·분류하고 있지 않음

○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인식의 차이

- 한국과 달리 북한은 터만 남아있다가 1990년대 이후 복원한 유적도 역사유적의 국보유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정릉사 8각7층석탑과 광법사 8각5층석탑은 원래 목탑으로 터만 전해오던 것을 1990년대에 새롭게 복원했는데 국보유적으로 지정됐음
- 또한 황해남도 구월산에 환인·환웅·환검 등 세 성인을 제사 지내던 사당으로 일제 때 불에 타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던 삼성사에 2000년 삼성전을 복원해 역시 국보유적으로 지정
- 동일한 문화재 유형인 한국의 사적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남북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지정 가치 평가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있어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할 필요

○ 북한의 정치적 이념이 개입된 문화유산

- 북한 법상 ‘천연기념물’은 일반적으로 학술적, 과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고 보호해야할 희소한 동·식물, 지질, 광물 등을 비롯하여, 독재체제 및 김일성 가계 우상화와 관련된 대상과 지리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김일성 일가와 관련되어 지정된 천연기념물과 같이 정치적 이념이 개입된 북한의 문화유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한국과 북한의 분단현실을 기념하는 문화유산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남길 것인지 문화유산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1. 유형문화재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동산문화재와 부동산(건조물)문화재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분류체계 혹은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부재

-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도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따라서 학계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즉, 유형문화재라는 틀 속에 이 두 유형을 함께 두는 것이 결코 행정관리 및 이론연구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근대문화유산의 별도 분류체계 구축 필요성 재검토

-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한 분류체계를 이전 시기 문화재의 분류체계와 별도 구성하여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됨
- 현재 법령상 등록될 수 있는 문화재도 결국에는 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형문화재 중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대라는 시기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분류체계 내 시기성을 개념변수로 포함시켜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하나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일원적이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고, 다축분류체계를 통해 문제가 해결 가능 할 것임
- 사적으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의 분류 방식의 상이성

○ 문화재의 보존 관리 관점에서 중분류 방안 제시

- 기존의 선행연구 중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와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는 모두 대분류 단계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관점의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
- 문화재는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체계 고안 시 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고려가 있어야 할지, 어느 분류 수준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볼 필요

○ 새로운 분류체계(안) 구성상 논리성 부족

- 분류체계와 관련한 일부 선행연구는 현행 분류체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지만, 새로운 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임
-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위위계에

분산되어 편입될 수 있는 유형(예: 민속)이 상위 위계에 위치하게 되고 결국에 이전과 같이 분류가 모호해지는 현상 지속

- 동일 위계상 일관되지 못한 분류기준으로 인해 여러 속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 명확한 분류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민속문화재가 동산문화재와 동일한 위계에 위치한다면 과거의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회화 작품 김홍도 풍속도가 민속문화재인지 동산문화재인지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현재 김홍도의 풍속도는 보물(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코드화를 염두에 둔 분류체계 구성

- 문화재 분류의 목적을 효과적 관리에 방점을 둔 선행연구의 경우 관리 및 정보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향후 분류내용을 코드화할 수 있도록 각 분류항목별 코드번호를 병기하는 분류안 확인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동산문화재 및 부동산문화재 관련 선행연구 검토결과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몇몇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지만, 유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혹은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1988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음
- 다만, 2016년 행해진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에서 동산문화재 관련 유일한 가치평가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
- 해당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와 더불어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정기준(가치평가요소 적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를 별도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음이 확인 가능
- 그러나 특정한 문화재 유형에만 적용되는 가치평가 요소가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으로써 참고할 만한 가치평가요소는 없음

2. 국가무형문화재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선행 연

구에서는 문화재청의 행정적 분류체계 내(대분류 및 중분류)에서 하위 분류 체계를 조정하거나 재구성

- 2004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원 관리방안 연구’를 제의하고, 공통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개칭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는 현재 발견된 것이 없으며 무형문화재법 내 세부 규정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존재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주의 개념적 확장

-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던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주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념이 협소하고 폐쇄적 측면이 존재
-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및표현’으로 지정 범주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
- 또한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전통지식’과 ‘구전전통 및 표현’이 새로운 지정 범주 추가

○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의 횡적인 확장

- 기존의 관리 및 운영적 분류체계는 예능과 기능의 고정적 이분법적 대분류 체계 하위에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지정 범주로 중분류 구성
- 현행 행정적 분류체계의 대분류는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및표현’으로 무형문화재의 법에서 규정하는 지정 범주와 동일하며, 대분류 단계에서 횡적으로 개방적 확장이 가능해짐
- 예능과 기능의 이분법적 대분류체계에서 7개의 지정 범주가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종목의 속성에 적합한 분류가 가능
- 예를 들어 예능과 기능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논란이 되었던 중분류의 유형인 ‘놀이와 의식’을 분리하였으며, 기능에 속하던 음식을 별도의 전통생활관습으로 이동
- 향후 새로운 유형의 무형문화재 종목이 발굴될 경우, 횡적인 확장이 가능하며

비교적 용이

○ ‘무형문화재’의 명칭 변경

- 2004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원 관리방안 연구’를 제외하고,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개칭 제안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의 ‘무형문화재과’와 2014년 10월에 개원한 ‘국립무형유산원’의 행정 조직 명칭 통일 필요

○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체계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각 종목은 서로 상이한 전승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특성으로 인해 가치 평가 요소보다 종목들의 공통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 왔음
- 따라서 동일 분야에 편성된 여러 종목들은 성격이 조금씩 다른 여러 종목들이 혼잡하게 편성되어 있어, 주로 동일 분야 내의 세부 종목 조정에 치중

○ 복합적인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분류

- 문화재청(2004b) 연구에서 종목은 그 안에 중요한 문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고,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
- 해당 종목 자체는 ‘무수히 많은 문화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종합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정 및 분류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보고서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은산별신제는 기본적으로 예능의 의례의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은산별신제 안에 꽃받기를 할 때 관련 물품을 제작하는 부분은 기능에 가까움을 언급
- 또한 과거에는 의식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현대로 전승 및 재현되는 과정에서 놀이의 요소가 강한 종목도 존재하여 두 가지 요소가 상충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가치평가 요소에 의한 분류보다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 행정적으로 분류
- 기존의 예능에는 민속적 성격이 강한 ‘놀이와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 민속성과 예술성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예능에서 별도로 전통놀이와 의례의식을 분리하여 해결
-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 ‘해녀(전통지식)’의 가치

평가 요소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

3. 국가민속문화재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속문화재는 사실상 모두 유형문화재이므로 유형문화재에 포함하는 대안이 적절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여론
-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유형’의 하위분류로 ‘민속’을 그대로 이동시키거나(유적·건조물은 건축에 포함), 유형의 하위분류에 기존의 민속문화재를 각각 해체해서 개별로 포함시키는 대안 제시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기준과 행정적 분류 체계의 정합성 낮음(민속문화재의 행정적 분류 체계는 유형의 행정적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음)
- 문화재청의 보고서 등 행정적인 분류체계에서 민속문화재는 ‘유적건조물’과 ‘유물’로 유형의 동산-부동산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음
- 그러나 민속문화재의 민속마을은 유형문화재-부동산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분류하는 방안이 효율적일지 고찰이 필요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민속문화재의 이전 명칭은 ‘민속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예술성이 배제, 생활 문화적 가치를 강조
- 따라서 ‘국보·보물’로 지정된 유물 및 건조물은 예술성, 역사성이 있는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역사성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생활 문화적 가치가 강조되는 것
- 그러나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유물 중 ‘제1호 덕온공주 당의’, ‘제2호 심동진금관조복’처럼 상층의 공예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들도 상당수 있으며, 모두 예술성이 배제되었다 보기 어려움

4. 사적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적의 분류기준으로부터 그 문화재로서의 성질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사적은 가치요소가 오롯이 드러나 있는 시설물과, 일부 또는 전부가 현존하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사적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공간 또는 면적단위로서의 성질을 드러내고 있음
 - 그 가치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기념’될 만한 것으로서의 가치 즉,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대부분의 사적에 관한 선행연구는 ‘면적단위’, ‘장소와의 연관성’ 그리고 ‘역사적 기념성’을 사적의 주요한 성질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에 있어 법상의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제기됨
 - 현재 사적은 ‘기념물’의 하위 단계에서 명승, 천연기념물과 함께 수평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이 알맞은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재지정기준에 따른 사적의 가치분류는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시대적 대표성·희소성·상징성’, ‘사건관련성’, ‘인물관련성’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문서에서 제시하는 사적 유형별 분류체계는 ‘시대’, ‘용도’, ‘유래’를 유형별로 각각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짐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른 행정적 분류역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같은 위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일관성과 일체성이 떨어짐
 - 즉, 현행 사적 분류체계는 ‘가치’에 따른 구분, ‘용도·유래·시대’에 따른 구분, ‘용도·유래·유물유적 집중도 및 매장여부’에 따른 구분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장소·면적·공간 단위의 성질과 인문·문화적 성질을 갖는다는 특성에 있어 단일 건축물 단위의 문화재와 민속성이 두드러지는 민속마을 유형의 문화재를 사적에 포함할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는 실정임
 - 현재, 단일 건축물 단위 문화재는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음

- 민속성이 두드러지는 공간으로서의 민속마을은 민속문화재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사적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배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접근이 확인됨
 - 타 문화재유형과 구분되는 사적의 중요한 가치는 ‘역사적 기념성’에 있으며, 역사적인 ‘시대, 인물, 사건’ 등이 일어난 터, 시설물, 공간 또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문화재라 풀이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에서 기존 기념물 유형에서 사적을 분리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부여 하는 접근이 나타남
- 사적의 이하 세부 분류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논의역시 활발함
- 사적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가치를 분류하여 제시하면서도, 유형별 구분에 있어서는 본래 용도를 적용하여 기존의 제도(문화재보호법)와 일체성을 추구함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사적 가치판단요소에 대한 일반론
 - 사적은 사전적 의미에서 역사상으로 남아있는 중대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의 자취를 말함
 - 사적의 가치는 특히 해당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사적 가치판단요소에 대한 최근 흐름
 - 사적의 가치판단요소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사적에 있어 특히 강조되는 역사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다른 한편으로 도시 경관에서 건조물 유형의 사적이, 그리고 자연 경관에서 공간 단위의 사적이 갖는 고고(考古)한 미감으로부터 가치를 인식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5. 명승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명승은 그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개념 정립과 지정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위상이 불분명함
 - 명승과 같이 기념물로 분류되는 문화재 유형인 사적, 천연기념물과 개념적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적과 명승의 개념 및 지정 구역 중복
 - 천연기념물의 인문적 가치 강조에 따른 명승과의 중복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경관성에 대한 개념정의 불명확
 - 명승의 주된 가치로 꼽히는 경관성 즉 ‘경관의 가치’가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경관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함께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배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자연과 인문 중 어디에 본질이 있는가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
 - 명승은 자연물의 경관을 지정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가치의 근원으로는 인공적 요소를 적용하는 특별한 성질을 띠며
 - 즉, 자연물로 구성되나 그 가치는 인문적 해석된 내용,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 문화적으로 향유된 경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 명승의 중복적 특성으로 인해 보존가치만을 강조하는 다른 문화재 유형과 달리 ‘향유의 대상으로서 보존한다’라는 ‘활용가치’가 제기되어 유형구분이 상당히 모호함
- 문화재 향유방식과 문화재 분류체계와의 상관성을 고려할 것
 - 명승은 타 문화재 유형과 달리 향유를 전제로 하는 문화재 유형이라는 데 특성이 있음
 - 명승은 시각적 향유대상인 경관을 다루는 문화재 유형으로서 ‘멀리서 조망하는 경관’, ‘내부에서 조망하는 경관’, ‘내·외부 조망이 모두 가능한 경관’으로 구분되기도 함
 - 명승의 향유형태를 문화재 분류체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도 필요함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의 관계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은 명승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명승, 천연기념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
- 즉, 세계유산협약 제도와 상응할 수 있도록 인문·문화 유형의 문화재와 자연·환경 유형의 문화재를 구분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명승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학, 한문학, 국문학, 지리학 분야에서 주로 확인됨
 - 첫째는 서양 회화의 관점에서 경관미의 가치를 분석한 접근임
 - 둘째는 한문학, 국문학 문헌의 묘사와 수사여구를 문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통미의 측면에서 명승의 경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살피는 것임
- 또한 명승의 가치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개념을 도입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명승의 외관상 형태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것과 역사문화적인 것으로 단순 구분하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반동이라 할 수 있음
 - 외관형태의 기준에 따라 역사문화적인 것은 사적이, 자연적인 것은 천연기념물이 대표한다는 인식하에 명승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 것임
 - 즉, 명승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향유 대상으로서의 경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과 문화의 접점'에서 명승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임
 - 문화재청(2011c)은 명승을 자연을 바탕으로 하되 사람에 의해 인공이 가미되거나 문화적 의미가 보태어진 경관이라 정리하였음
 - 즉, 명승의 형태적 본질은 '자연'에 있고, 가치적 유래는 '인문적 요소의 가미'에 있다는 것
 - 조준현(2015)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문화경관'의 개념을 도입해 '연상적 문화경관'으로서 울산 대곡천 유역을 분석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음

6. 천연기념물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천연기념물과 기타 자연보호구역 제도와 구분 모호

- 천연기념물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연보호구역 및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등 자연환경 보존제도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개념적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논리로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문화배경’ 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천연기념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인문·문화적 성질’ 이 강조되는 자연물로서 ‘명승’ 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
- 개념적 중복을 피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개념의 확립이 필요함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천연기념물 유형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정립 필요

- 개념의 중복은 천연기념물 제도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음
- 희귀 생물종을 보호하는 목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생물 및 지구과학 표본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상징적인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이 혼재함
-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천연기념물 제도의 목적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정형태 난립에 따른 복잡성

- 천연기념물은 면적지정(천연보호구역, 생물 생육지, 서식지, 도래지 등…), 생물 종 지정(동물, 식물 종 지정), 생물 개체 지정(노거수 지정), 표본 개체 지정(화석, 광물, 운석 등…) 등 지나치게 다양한 지정형태가 하나의 제도 내에 혼재하고 있음
- 따라서 제도 운영과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의 관리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음
- 즉, 관리 및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적으로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최근에 들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판단 요소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포착됨

○ 첫째는 지역적 특수성을 대표하는 동물 중 외 일반 축양동물에 대한 가치 인식의 대두임

- 문화재청(2015c)는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축양동물 유형 천연기념물의 보호필요성은 민속성, 생

활문화성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희귀성, 생물다양성, 특수성, 신성함, 멸종위기 등에서 보존가치를 확인하는 기존 생물유형과 다른 차이점으로 파악됨

○ 둘째는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의 인문 가치에 대한 인식

- 김재웅·김승민(2014)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서의 보호지역은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 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로서,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
- 김효정(2012)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자연성지(Wildlife Sanctuary)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 자연성지 잠재자원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 즉, 천연기념물, 특히 천연보호구역의 종교적 숭배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
- 또한, 천연보호 대상의 집중도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며, 그 외 독도 등의 지정에 있어 국가적 중요성이 강력하게 작용함(문화재청, 2016b)이 드러남

제3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위계별 분석

제1절 대분류 체계 분석

1) 대분류 구성 종합 분석 개요

-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 단계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유형을 검토 범위로 설정하고 국가별 현행 법률의 분류체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정리 분석
- 대분류 체계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국내외 대분류 체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 시사점
- 각 국가별로 확인된 대분류체계의 특성을 법률적 체계, 개념변수, 대분류 구조, 단일 위계별 적용변수의 구체적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리

2) 시사점

○ 법률적 정의를 전제로 하는 문화재 대분류 단계

- 한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유형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서 대분류 단계의 하위 유형들은 ‘절(문장)’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 및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대분류 하위 단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 단계의 법률적 체계

- 한국은 문화재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유형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를 정의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전 및 진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즉,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와 상이한 속성으로 동일한 법률 체계 내에서 원활한 보전 및 진흥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분리된 것
- 따라서 현행 법률적 체계에서는 크게 유형과 무형의 물리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무형문화재를 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유형의 문화재 중 속성이 상이한 자연유산이 향후 분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내에서 분법된 법률 간의 위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

○ 수직적-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하는 유형의 방향성

- 한국은 문화재보호 법제의 역사상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내에서 모든 문화재 유형이 지정 및 관리 되어 왔으며, 2015년에 무형문화재가 분법된 상황
- 반면 유네스코, 중국, 영국, 프랑스는 문화재보호 법제의 역사상 대분류 단계의 각 문화재 유형이 개별법으로 제정 및 보호되어온 사례
- 따라서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제의 역사적 변천에서도 대분류 단계 문화재 유형들을 병렬로 나열하는 수평적 분류보다 수직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적합
- 향후 장기적인 법률 정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유형별 속성에 따른 행정적 관리에 대한 고찰도 필요

- 대분류 단계 개념변수 적용
 - 수직적 구조에서 1단계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속성을 통해서 개념변수 간 중복과 종속되는 상황 방지
- 위계별 명칭 통일 문화재와 문화유산
 -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한 2005년 선행연구 ‘문화재 분류체계’에서부터 문화재 ‘명칭’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에서 최대분류 단계에서는 ‘유산’, 대분류 단계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문화재’로 명칭을 사용
 - 따라서 대분류 단계에서 ‘유산’ 또는 ‘문화재’의 명칭 사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행정적 개선이 수반되는 문제

제2절 중분류 체계 분석

1. 중분류 단계 개선 방향검토 방법

- 연구대상 : 대분류 이하 문화재를 재분류하는 속성분류체계
- 검토목적
 - 국내 외 문화재 중분류 체계 운영 현황 파악
 - 문화재 중분류 관련 쟁점 및 모순점 도출
 - 문화재 중분류 관련 내·외적 환경변화 파악
- 검토방법
 - 현황분석 : 문화재 관계 법령 및 행정적 구분을 분석하여 문화재 중분류 현황 도출
 - 문헌연구 : 문화재 관련 제 규정 및 선행 연구자료 종합검토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 및 행정문서 분석
 - 문화재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 검토
 - 사례연구 : 유네스코, 일본, 중국 등 해외 문화재 중분류 관련 제도 운영 현황 파악

2. 문화재 분류체계 중분류 구성 현황

1) 법령 및 행정적 문화재 중분류 체계 현황

(1)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중분류 체계 현황

- 현행 법률에 따른 문화재 중분류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기준에 열거된 예시 및 서술을 준용해 중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이 확인됨

(2) 행정적 문화재분류체계 현황

- 문화재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이 수립한 중분류 체계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의 문화재 검색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국내 연구자의 문화재 중분류체계 해석

-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 문화재보호제도 상 지정기준을 토대로 문화재 중분류를 구체화하고 있음
- 중분류는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제도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법령을 토대로 분류기준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또한, 그 개선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학술적 성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호수 외(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추진된 분류체계는 개선 연구는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엄밀하게 선정된 단어를 기반으로 문화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속성분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분류체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주된 내용이 문화재의 세부 장르를 구분하는 내용적 분류에 국한되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보완적 분류체계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됨
- 또한,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세계유산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음

2) 현황 분석의 시사점 및 쟁점

-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기준의 체계를 기준으로 중분류가 해석됨

- 다수 연구자들의 협력적 연구를 위해 문화재의 내용적 분류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음
- 문화재 중분류를 문화재 정보 검색체계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가 국제적 표준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쟁점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명확한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를 갖는 엄밀한 의미의 문화재 분류체계로 보기 어려움
- 문화재의 복합적 성질을 고려할 때 문화재 분류는 다층구조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대분류 문화재 유형마다 일관된 하위 중분류 기준과 분류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해 정합성이 떨어짐
- 다소 실용성이 떨어짐
- 확장성이 제한됨

3. 중분류 구성 해외 사례

- 한국, 일본은 중분류의 근거 규정을 관련 규정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유네스코와 중국은 이를 법령 또는 운영규정상에 적시하고 있음
- 한국, 유네스코, 일본, 중국 모두 문화재 중분류를 하위분류가 상위분류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모-자식(母-子)관계의 나무구조로 수립하고 있음
- 중분류의 내용과 방법
- 한국, 유네스코, 일본, 중국 모두 중분류 항목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임의분류하는 방식이나, 중국은 행정적 분류체계에서 자연분류함
- 한국, 일본, 중국은 가치의 높고 낮음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으나, 유네스코는 그렇지 않음
- 유네스코와 중국은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음

4. 문화재 분류체계 중분류 구성의 시사점

- 문화재 중분류 체계 수립의 방향
 - 속성에 근거해 문화재를 자연 분류함으로써 실용성을 극대화
 - 복합적인 성격을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다축 분류체계를 수립
 - 필요에 따라 유연한 범주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
 -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것

5.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수립)의 구체화 방안

1) 다축분류체계 수립의 의의

- 다축분류체계는 복합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하나의 분류 대상에 다수의 분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체계
 - 문화재 개체에 분류축에 따라 마련된 다수의 분류기준을 적용해 분류하여 복합적인 성격의 대상물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 또한, 문화재 특정 분류 기준에 따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유동적이고 유연한 범주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분류의 복잡성으로 인해 분류 정보의 작성과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나 자료의 DB구축과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보관리가 용이해진 현재의 시점에서는 기존의 복잡성을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임
 - 다축 체계의 사례는 미국정신과학회의 다축진단체계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분류체계가 대표적임

2)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수립) 및 운영 방안

- 문화재 다축분류체계 구성 방안
 - 다축분류체계를 위한 축과 기준의 수립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할 것이고, 이는 문화재 관리 활동의 네 가지 주요 목적인 보존, 관리, 활용, 연구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을 의미함
- 문화재 다축분류체계 운영 방안
 - 문화재 중분류 다축체계 수립 추진방안

-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분류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하 분류기준을 고안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
- 문화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 패넌회의를 추진하여 다축분류체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
-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준으로는 보존위험성 여부, 보수 및 수리 이력의 존재, 복원필요성 등을 고려
- 문화재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는 소재지, 소장처, 소유관계, 공개여부, 재질 등을 고려
- 문화재 활용에 관한 기준으로는 관광지 여부, 향유방법, 콘텐츠의 성격, 용도, 장르 등을 고려
- 문화재 연구에 관한 기준으로는 시대, 관련 기록의 존재여부, 연구 자료 활용도 등을 고려
- 문화재 중분류 다축체계 수립 후 운영 방안
 - 수립된 분류축과 분류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작성의 기초자료를 수집
 -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전산화된 분류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

제3절 세분류 체계 분석

1. 행정명령에 의한 분류체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종별 지정기준 규정
 -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와, 지정을 위한 가치평가 기준을 함께 적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에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라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 규정
 - 세분류 없이 중분류에 따른 문화재의 종류를 나열한 정도와, 구체적인 세분류 모두 확인됨

2.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기본정보’ 상 분류체계

- 2017.07.20. 기준 부속문화재를 포함한 13,032개의 문화재의 정보 검색되며, ‘유형분류’ 페이지에서는 문화재 대분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반해, ‘문화재검색’의 문화재 기본정보에서는 등록문화재 또한 대분류 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대분류를 포함하여 최대 4단계까지의 분류 단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수의 문화재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분류별 문화재 현황(2017년 7월 20일 기준)
 - △유적건조물 (총 5,154개), △유물 (총 2,689개), △기록유산 (총 1,625개), △무형유산 (총 423개), △자연유산 (총 685개), △등록문화재 (총 698개)
 - 문화재 유형에 따라 각 단계의 분류 기준이 용도, 주체, 시기 등으로 일관되지 않음

3.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현황

-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 국립박물관 및 온라인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조사
 -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목간연구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외교부 외교사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아카이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목록,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국립국악원 국악기 및 국악자료,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4.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운영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이하 기관들의 훈령, 예규, 지침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해외문화홍보원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관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개발·도입 사례

-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별 개별적인 분류체계 개발 및 도입 사례 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6. 문화재 유형별 분류체계 개선 관련 연구

- 문화재 유형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 검토

7. 문화재 세분류체계 현황의 특징 및 시사점

- 앞서 검토한 문화재 세분류체계 종류별 특징 및 시사점 도출
- 문화재의 세분류 체계는 문화재의 운영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분류
 - 분석결과, 문화재 유형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리기관별로 세분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 유형별로 상이한 세분류 기준 및 위계의 수준이 존재
 -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분류체계 구성에 필요한 위계설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별 세분류 체계 구성 필요
 - 문화재 관리 운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에 적합한 자율규제형 세분류 체계 운영

제4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개념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정의

1.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현황

-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서 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종별에 대한 가치평가용어를 규정
 - 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의 각 종별에 대하여 선택적

으로 추가적인 가치평가 개념을 부가

2.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

-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계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가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를 위한 기준 마련의 토대 구축
- 사전적 정의 분석의 방법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각 용어의 명사형과 관형사적 파생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고 정의 내용을 분석

3.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개념

-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용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용어의 세부 정의 중, 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적 성격을 지닌 뜻과 그에 따른 핵심 개념을 도출

제2절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분석

1. 법령 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규정 현황

- 「문화재보호법」 및 행정규칙 상의 관련 규정
 -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을 적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 시행령 제1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의 규정 내용
 -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보물,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 상의 관련 규정

-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별도로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을 적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 그 밖에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위한 조사지표 등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에서 정함
 -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전승능력, 참여도 등에 따라 종목 및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지정 조사 지표 마련
 - ‘[별첨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등의 산식’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종목([문화재청고시 제2016-19호] 기준)의 종목별 조사지표와 측정기준 마련

2.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에 문화재 종별로 규정된 조문을 분석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치평가요소 도출 및 각 요소에 대한 세부 개념 검토
- 개념적 용어 도출 및 검토의 방법
 - 각 조문의 내용 중 가치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개념적 용어로 치환 및 사전적 개념 검토
 - 문화재 지정기준 조문 검토 결과, 31가지 가치평가 관련 용어가 5가지 상위 가치평가요소 이외에 추가적인 가치평가 관련 용어로 확인
 - 상위 가치평가용어에 개념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추가 요소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적용 대상 및 내용 분석

3. 문화재 세분류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관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가치평가요소를 문화재 종목별로 검토한 후, 각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관계 분석
 - 문화재 종별 지정기준에 명시된 가치평가요소를 종합 정리하면 각 평가요소 및 문화재 지정 종목별로 규정 사항이 다르게 나타남
 - 그러나 동일한 가치평가요소를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세부 개념은

상이할 수 있으며, 곧 문화재 종별로 주요하게 평가하는 가치의 종류가 다름을 의미함

○ 상위 가치평가요소의 문화재 종별 사용 관계

- 역사적 가치의 경우, 문화재 종목 모두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치평가요소이지만, 세부 개념의 측면에서는 ‘역사’의 (1)-①/②/③, (2), (3)번 뜻과 ‘역사적’의 (3)번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예술적 가치의 경우, 보물·국보·국가무형문화재에서 평가되는 요소이며, 보물과 국보에서는 동일하게 ‘예술’의 (1)-①/②, (3)-③번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에서는 (3)-①번 ‘예능’의 의미로 사용됨
- 학술적 가치의 경우, 명승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치평가요소이며, ‘학술적’의 (1), (2)번 뜻으로 사용됨
- 경관적 가치의 경우, 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에서 평가되는 요소이며, 명승과 천연기념물에서는 (1)번 뜻인 ‘자연 경관’, 국가민속문화재에서는 ‘문화 경관’ 및 ‘도시 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의미함
- 문화적 가치의 경우, 국보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치평가요소이며, ‘문화’의 (1), (2), (3)번 뜻과 ‘문화적’의 (1)번 뜻으로 사용됨

제3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유형에 대한 가치평가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적 설명이 부족
 - 법 제2조(정의)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재를 분류하는 기준과는 성격이 다름
- 문화재 가치평가 관련 추가 도출 요소와 개념을 분류하였으나 지정기준 및 인정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제한적이어서 문화재 대상물에 대한 가치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
- 상위 가치평가요소와 추가 가치평가요소를 통하여 문화재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단순한 유형 구분에는 적합하나 문화재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

- 단편적인 문화재 가치평가요소로 인하여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 발생
-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치평가요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상위 가치평가요소, 추가 가치평가요소, 하위 가치평가요소 등을 명문화할 필요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가치평가요소에 대해 개념적인 용어 사용과 설명을 하고 있어 명확한 문화재의 유형구분과 분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요소에 대한 설명과 기준 필요

제5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DB 구축 및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요소의 DB 구축 현황

- 문화재 가치평가요소 DB 구축 개요
 - 조사대상
 - 총 3,713건의 지정문화재 현황(2017년 5월 지정기준)
 - 국보 (320건), 보물 (1935건), 국가무형문화재 (126건), 국가민속문화재 (286건), 사적 (479건), 천연기념물 (457건), 명승 (110건)
 - 조사방법
 - 지정조사보고서, 지정사유서, 가치조사보고서, 기록화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및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서 해당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내용 확인 및 정리(한글문서)
 - 가치평가내용 중 가치평가요소를 뽑아 Excel DB 구축

제2절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DB 분석

1. 국보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대표성, 희소성 가치의 적용
 -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지정 됨

- 즉, 보물 중에서도 대표성과 희소성을 띤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는 것으로 대표성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국보 지정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유형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인물성의 경우 회화/조각에서만 확인되는 가치평가요소
 - 규모와 관련 있는 거대성 또한 건조물에서만 확인되는 가치평가요소
 - 특정유형에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는 분류체계 구성에 있어 구분 변수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법령 상 명시된 가치평가 요소의 두드러진 사용 확인
 - 법령 상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유사한 고고자료’로 정의
 - 법적 정의 상 확인되는 가치평가 요소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경관성을 꼽을 수 있고, 면적인 특성이 내포된 경관성을 제외하고, 유형문화재인 국보의 가치평가에 있어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이 모두 적용된 것 확인
 - 특히, 학술성과 예술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 가능
 - 법령 상 명시된 가치요소가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

2. 보물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특정유형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전적/서적/문서의 경우 학술성이 해당 문화재 유형의 전체 가치평가 요소 중 45%에 해당하는 사용빈도를 보임
 - 또한 우수성은 6가지 보물의 세부 유형 중 전적/서적/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을 확인
- 특정유형에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예술성의 경우 고고자료, 무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만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 확인
 - 특정유형에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는 세부유형을 분류체계 상 상위 위계에서 그룹화 하고자 할 때 구분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분류체계 연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위 가치평가요소로 변환 작업 후 빈도 분석 필요

- 현재 보물은 가지번호까지 포함하여 약 2000건이 지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보물 지정에 적용된 가치평가요소도 매우 다양한 것이 확인
- 이번 분석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고 분석을 실시한 것을 한계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때 일부 가치평가요소의 경우도 출된 다른 가치평가요소에 의미가 내포되는 경우도 있음
- 가치평가 요소의 빈도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의 위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가치개념을 확인하여 일괄적으로 변환 후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적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사적 유형의 문화재의 경우 정치/국방과 제사/장례 유형에 대한 지정이 집중되고 있으며, ‘역사적 건조물 또는 유적지’라는 사적의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가치평가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함

- 사적의 역사성은 사적의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골자이며, 이는 가치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확인됨

○ ‘연구 활용성’은 문화재 지정에 관한 의결권자의 입장이 반영된 서술일 것으로 생각됨

- 사적 유형에 있어 ‘연구 활용성’이 매우 주된 가치평가요소라 나타는데 이는 일종의 학술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심미성에 대한 언급이 적음

- 시각적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오브제(object)로서 문화재가 갖는 가치 요소를 심미성 내지는 예술성이라 할 때, 사적은 심미성과 예술성에 대한 언급이 타 문화재 유형에 비해 적음
- 즉, 사적이 심미성과 관계없이 역사성이 있는 건조물, 유적 또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임에 따른 인식임

4. 명승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명승 유형은 자연경관에 대한 문화재 유형으로서 지정되어왔으나, 2000년대 이후 역사문화명승에 대한 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과 인문이 양립되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또한, 현행 문화재 지정기준 상 명승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경관’의 가치를 강조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경향으로부터 견주어 볼 때, 명승에 대한 가치인식 역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인간 삶의 흔적으로부터 조화적 가치를 강조하는(즉, 조화성)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명승에 대한 가치평가는 ‘심미성’에 기초함

- 심미성은 인간이 오감에 대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 명승의 심미성에 대하여는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명승의 심미성은 단순히 경관이 선사하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칭하기도 하나, 경관이 갖는 장소감(즉, 역사성, 인물성, 생활문화성 등)이 시각적 요소와 적극적으로 조화되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를 지칭하기도 함

○ 명승이 ‘대표성을 갖는 경관’이라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것

- 명승을 ‘대표성’으로 가치 평가하는 인식 역시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시대’, ‘문화현상’, ‘생활문화’ 등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서 명승이 갖는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사례임

5.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천연기념물 유형에 대한 지정은 2000년대 이후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와 조사사업의 확대로 약간의 증가폭으로 보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줄어든 모습을 보임
- 동물의 경우 희귀동물 및 멸종위기종이 아닌 축양동물에 대한 추가지정이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지진으로 인한 활성단층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고려될 수 있음

○ 가치평가에 있어 인문학적 관점과 자연과학적 관점 양립됨

-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가치평가요소의 언급 빈도를 살펴보면 가치평가에

- 있어 인문학적 관점과 자연과학적 관점이 양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천연기념물은 자연물과 그 환경을 보호 및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가치평가에 있어 인문학적 관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 멸종 위기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
 - 일반적으로 천연기념물 제도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환경부, 2001: 4) 이지만, 천연기념물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라 보기 어려움
- 자연물이 갖는 대표성의 의미
 - 천연기념물 유형에 대한 가치평가 서술에 있어 ‘대표성’에 해당하는 서술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음

6.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 추세 및 전망
 - 1990년대 이후 ‘유물’, ‘민속마을’에 비해 ‘유적건조물’이 꾸준히 지정되고 있는 추세.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민속문화재의 정의 상, 민속문화재 지정은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을 전제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국가민속문화재는 ‘민속자료’로 정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술성’을 전제로 지정되어왔음
 - 또한 공통적으로 ‘차별성’과 ‘희소성’이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오랜 ‘역사성’ 속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유물과 유적건조물이 선별 지정됨
- 유물과 유적건조물(동산-부동산) 분류에 따른 가치평가요소
 - 유물은 동산문화재로 ‘희소성’과 ‘차별성’이 있으며, 온전히 남아 있어 ‘완전성’을 갖춘 유물이 중점적으로 지정
 - 유적건조물은 부동산문화재로서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전통 농촌마을의 급격한 변화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보전성’이 있으며, 시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성’을 보여주거나 ‘대표성’이 있는 유적건조물이 중점적으로 지정
 - 가치평가요소 중 ‘관리’, ‘교육성’, ‘기증격려’는 유물에만 해당되는 요소이며, ‘우수성’, ‘경관성’, ‘구조’, ‘다양성’은 유적건조물에만

해당되는 요소임

- 유적건조물의 무형적 요소를 포함하는 가치평가요소 ‘전승’
 - 국가민속문화재(법제정 당시 ‘민속자료’로 칭함)의 개념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상 처음 등장
 -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 민속자료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이외에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을 표상하는 유형문화재’로 규정(시행규칙(1964))

7.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상의 중분류인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례의식’에서 전통공연예술과 전통기술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지정수량이 극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낮음
 - 반면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적인 성격을 갖는 ‘전통생활관습’,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이 새로이 추가
 - 향후 생활문화적 성격을 갖는 무형문화재 조사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지정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전통문화적 성격을 갖는 유형의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정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
- ‘전통문화성’, ‘전승’, ‘예술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재
 - 전통문화성, 전승, 예술성은 전체 빈도 분석에서 관리보전성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치평가요소이며, 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임
 - 국가무형문화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전통문화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통한 인적 ‘전승’을 전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발굴은 전국민속경연대회, 전통공예대전 등 전통문화 관련 행사에서 수상하거나 특별히 돋보인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진 바 있음(문화재청, 1994: 10)
 - 따라서 예술성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관리보전성’에 의한 지정에서 다양한 가치평가요소에 의한 지정

-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1990년대까지는 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정을 통한 보전이 시급한 문화재가 지정되어 왔음
- 2010년대 들어서는 ‘관리보전성’이 감소하고 ‘역사성’, ‘전통문화성’, ‘민속성’ 등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되고 있음
-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원칙이 원형 유지에서 전형 유지로, 전통지식과 구전전통 및 표현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무형문화재가 추가됨으로써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3절 가치평가요소 DB 분석의 시사점

○ 가치평가요소의 다양화

- 유형문화재는 2010년대 들어 다른 시기에 비해 지정건수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가 고려됨
-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 상, 1990년대까지는 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정을 통한 보전이 시급한 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관리보전성'이 감소하고 '역사성', '전통문화성', '민속성' 등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되고 있음
-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추출되는 가치평가요소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

○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평가요소

- 민속문화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물·유적건조물과 함께 현재까지 민족의 전통 문화가 함께 전승되어 오는 무형적 가치인 '전승'을 주요 지정 요소로 하고 있음

○ 상위 가치평가요소 변환 작업 후 빈도 분석 필요

- 문화재 유형별 다양한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
- 즉, 일부 가치평가요소의 경우 의미가 내포 또는 중복되거나 각 유형 간 용어 사용 불일치 발생
- 가치평가요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의 위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상위가치개념을 정리한 후 일괄적으로 모든 유형에 재적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제6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1절 문화유산 용어의 근거와 향후 연구 방향

1.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통일된 용어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용어 사용에 관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재를 재화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고 무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기념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 치환하여 사용하는 통일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
- 그러나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어원과 사전적, 법령 상, 그리고 국제협약 상의 개념 정의를 살펴본 결과 2가지 용어가 단순 치환될 수 있는 단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 됨
- 따라서 현 상태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히 변경한다 하더라도 국내 법령상 문화유산의 개념이 국제협약상 문화유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문화재’ 보다 시대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유산’으로 개념 및 용어 사용 변경을 공통적으로 요구
- 그러나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천연기념물’
 - 문화유산의 개념에 무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포함시켜 ‘문화재’를 ‘문화유산’ 용어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대안
 - 국제적인 규범체계에도 정합하도록 ‘문화재’라는 용어대신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더불어 자연적 유산은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안
- 주목할 점은 법적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의 제정을 통한 국가유산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법적 체계 제시

3. 대내외 환경 변화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 문화재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 ‘원형’ 개념의 상대화 : 기존에 ‘문화재 원형’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 관리형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상대적인 보존방법을 수립

-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 문화재 원형을 유지하는 한에서 개발활동을 규제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문화재 보존과 지역발전을 양립하는 발전적인 시각으로 변화함
- ‘합리적 활용’에서 ‘가치 활용 활성화’로 : 문화재 활용의 대상을 ‘문화재 실물’이 아닌 ‘문화재 가치’로 재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화된 문화재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사업 주체도 정부, 민간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다변화
-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 문화재에 대한 향유를 단순 욕구가 아닌 헌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
- 국제화 및 세계화 : 문화재를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아가 세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접근
- 사유재산권 보호와 갈등관리 : 문화재 지정 등 보존관리를 위한 침익적 행정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갈등 관리의 토대 마련

2) 문화재 관리 자연환경의 변화

- 문화재 관련 자연환경에 변화로부터 보존환경의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온변화에 따라 천연기념물, 명승 등의 자연유산 자원과 문화재 주변 자연환경에 식생의 변화, 동물 서식지 이동, 재해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의 유의미한 피해 내지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지진에 의한 한반도 자연 재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짐

3) 문화재 관리 사회인식

- 문화재 관광을 비롯한 향유는 이미 주요한 여가선용의 방법 중 하나로 정착되었으며 그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문화재 장르별 분류의 필요성
 - 문화재의 주요 콘텐츠, 장르, 내용 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향유자가 관련된 정보를 취득코자 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재 향유 방식에 따른 분류의 필요성이 대두함
 - 문화재에 대한 향유 방식은 ‘무형문화재-공연, 체험’, ‘사적지-방문, 답사’, ‘유형문화재(동산)-박물관 관람’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못함
 - 따라서 문화재 향유방식에 따른 구분을 문화재 분류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여 문화재 향유자의 편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

4) 문화유산 관리의 세계적 추세

- 세계유산 제도의 보급과 문화유산 관리의 국제적 표준의 확산
- 유산에 대한 포괄적/ 복합적 인식
 - 광범위한 공간에 소재하는 문화적 자원을 포괄하여 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문화재 유형이 보편적
- 자연환경에 대한 인문적 해석
- 무형유산 보호의 보편화
- 기록물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
 -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대상으로서의 기록물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고, 국제도서관연맹을 비롯한 서지학 관련 국제단체들의 지지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문화재 분류체계 모형의 구체화와 향후 연구 방향

- 종합 시사점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인위성과 자연성으로 구분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상의 구분과는 상당한 차이 발생
 - 문화재의 대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법적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대분류 이하 중분류와 세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문화재의 중분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개별적 정의와 더불어 공간단위 특성과 가치평가용어의 복합적인 특성 반영이 필요
 - 따라서 문화재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분류하는 개선 방안 도입 필요

○ 향후 연구 방향

- 문화재의 다축분류체계 혹은 다차원분류체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분류체계를 분석할 필요
- 의료분야의 다축분류체계, 문서분야의 다차원 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물품분류 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분류체계를 통해 비교 및 분석 연구 필요

제3절 가치평가용어 DB 구축 활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

○ 종합 시사점

-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된 가치평가용어는 개별 문화재의 특징과 속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문화재의 지정기준과 혼용하여 사용하여 혼란 발생
- 문화재의 유형화와 문화재가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과 맥락,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
- 그러나 현행 문화재의 가치평가 기준은 법적 용어의 사용과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 심의위원, 심의기준, 심의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의 DB를 구축하여 시대적 특성, 가치평가용어의 변화 정도, 개별 가치평가용어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경향과 특징을 도출

○ 향후 연구 방향

- 문화재 분야 가치평가용어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용어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등의 통합평가 방법론 적용 필요
- 문화재 분야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및 타당한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제4절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과 향후 연구 방향

1. 문화재 기본법 관련 현황

○ 문화재 유형별 관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분법화 경향

-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보호·관리에 있어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분법이 진행됨. 이 때 기본법은 지침법적인 역할을 함으로 분법된 법령의 근간이 되는 것임
- 문화재보호의 기본법체계화 및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경향은 문화재 유형별 맞춤형 보호·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문화재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분법화
- 경향에 따라 관리 방식이 명확히 차이가 나는 유형을 구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관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유형 구분에 따라 분류체계를 구성한다면 각 규제의 모범이 되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강화 가능

2. 기념물 관련 법령 선행 연구

○ 법령 개정 방안

-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자연유산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조항 수립
- 자연유산에 관한 세계유산 제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 자연유산 보호 환경 연구를 추진하여 자연유산과 그 주변환경에 대두하는 위협요소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극복방안을 마련
- 자연유산 보호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자연유산에 대두하는 국제적 제도와 국내 수용 가능성 및 방안을 도출
- 자연유산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자연유산이 지역개발, 공동체 활동, 관광활동 등과 양립하고, 다양한 계층, 세대 간에 형평성 있는 편익을 낳을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
- 자연유산 보전환경, 제도 사례,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자연유산의 보전, 관리, 활용을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3. 문화재 활용법 관련 선행 연구

○ 선행 연구 시사점

- 200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활용 체제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음
- 2015년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15)에서 「문화재 활용법」은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분류 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형 이외에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등 광범위한 범위 포함할 것을 제안
- 「문화재보호법」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정 및 등록을 전제로 한다면, 「문화재 활용법」은 각 개별법을 통해 규정된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정 및 등록 행위가 불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분류체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다만 문화재 유형별 활용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의 중분류체계 위계에서 세부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활용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문화재의 분류는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구분함으로써 개별 문화재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대분류 단계만 제시하고 있고, 중분류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화재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제2장에서는 국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분석에서는 유네스코,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의 대분류체계 현황 조사하여 대분류체계 개념변수(물리적 특성, 개념적 차이)에 따라 검토 및 시사점 도출하였음

- 제3장의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위계별 분석은 대분류 체계 분석, 중분류 체계 분석, 세분류 체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4장의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개념 분석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종별에 대한 가치평가용어를 규정하고 검토하였음
- 제5장에서는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DB 구축하였고, 총 3,713개에 대한 문화재의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제6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방향에서는 향후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에 필요한 연구 분야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리하였음

제2절 정책제언

- 문화재에서 문화유산 용어로 변경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문화유산 용어 사용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차원 혹은 다축 분류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차원 및 다축 분류체계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함
- 문화재 가치평가 용어의 개념 정립과 문화재 가치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적합성 분석 필요
-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제2조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가칭 「문화유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국내·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제1절 국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14
1. 유네스코(UNESCO)	14
2. 일본	20
3. 중국	25
4. 프랑스	30
5. 영국	34
제2절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분석	40
1. 국내 행정부처별 분류체계 운용 사례 조사	40
2. 국내 행정부처별 분류체계 운용 사례 조사의 시사점	52
제3절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및 분석	53
1.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53
2.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관련 쟁점	57
제4절 통일 대비 북한 문화재 분류체계 분석	61
1. 북한의 문화유산 분류체계 현황	61
2. 통일 대비 한국과 북한 문화재 제도 비교의 시사점	63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66
1. 유형문화재	66
2. 무형문화재	98
3. 민속문화재	111
4. 사적	117
5. 명승	135

6. 천연기념물	150
----------------	-----

제3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위계별 분석

제1절 대분류 체계 분석	167
1. 대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방법	167
2.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구성의 유형	169
3.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개선 방향의 시사점	175
제2절 중분류 체계 분석	179
1. 중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방법	179
2. 문화재 분류체계의 중분류 구성 현황 및 쟁점	182
3. 중분류 구성 해외 사례 및 구성의 유형 분석	195
4. 문화재 분류체계 중분류 구성의 시사점	206
5.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수립)의 구체화 방안	210
6.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의 시사점	220
제3절 세분류 체계 분석	221
1. 행정명령에 의한 분류체계	221
2.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기본정보’ 상 분류체계	229
3.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현황	240
4.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운영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발 사례	267
5.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 체계 개선 관련 연구	279
6. 문화재 세분류 체계 현황의 특징 및 시사점	285

제4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개념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정의	291
1.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현황	291
2.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	292
3.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개념	300
제2절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분석	304
1. 법령 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규정 현황	304
2.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0
3. 문화재 세분류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관계	322
제3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시사점	324

제5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DB 구축 및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요소의 DB 구축 현황	329
제2절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DB 분석	331
1. 국보	331
2. 보물	347
3. 사적	365
4. 명승	372
5. 천연기념물	380
6. 국가민속문화재	390
7. 국가무형문화재	400
제3절 가치평가요소 DB 분석의 시사점	410
1.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특징	410
2. 종합 시사점	412

제6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1절 문화유산 용어의 근거와 향후 연구 방향	415
1.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415
2. 관련 선행연구	421
3. 대내외 환경 변화	426
제2절 문화재 분류체계 모형의 구체화와 향후 연구 방향	433
1.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433
2.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적용(예시)	434
3.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의 향후 연구 방향	435
제3절 가치평가용어 DB 구축 활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	436
1. 가치평가용어의 분석 현황	436
2.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향후 연구 방향	437
제4절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과 향후 연구 방향	438
1. 문화재 기본법 관련 현황	438
2. 기념물 관련 법령 선행 연구	446
3. 문화재 활용법 관련 선행 연구	45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456

제2절 정책제언 460

□ 참 고 문 헌 467

□ 부 록 474

표 목차

[표 2-1] 환경 분류체계에 따른 분법 현황	40
[표 2-2] 환경부 조직표	40
[표 2-3] 보물 및 국보 지정 적용 가치평가요소	67
[표 2-4] 등록문화재 등록 적용 가치평가 요소	68
[표 2-5] 유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목록	69
[표 2-6] 문화재관리국(1988)의 동산문화재 가치평가요소	71
[표 2-7] 근대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기본 원칙	77
[표 2-8] 중앙정부 분류체계 분석	77
[표 2-9]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근대문화유산 분류기준	79
[표 2-10] 문화재청(2016a)의 지정가치 적용 지정기준안1(분류체계 1안 기준)	83
[표 2-11] 문화재청(2016a)의 지정가치 적용 지정기준안2(분류체계 1안 기준)	83
[표 2-12] 문화재관리국(1988)의 건조물문화재 가치판단 기준	85
[표 2-13] 문화재관리국(1988)의 세부 건축유형별 가치판단 기준	86
[표 2-14] 최연규(2012)의 분류 기준 및 내용	89
[표 2-15] 장호수(2004)의 사적 분류(안)	120
[표 2-16] 문화재청(2005)의 사적 분류(안)	122
[표 2-17]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사적 분류(국립문화재연구소안)	124
[표 2-18]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사적 분류(문화재청안)	125
[표 2-19] 문화재청(2009a)의 사적 분류(안)	126
[표 2-20] 관점에 따른 사적의 가치판단요소	132
[표 2-21] 문화재청(2011c)의 명승 분류(안)	138
[표 2-22] 장호수(2004)의 명승 분류(안)	139
[표 2-23] 문화재청(2005)의 명승 분류(안)	141
[표 2-24] 문화재청(2014a)의 명승 분류(안)	142
[표 2-25] 신준(2017)의 명승 유형별 가치 구분	144
[표 2-26] 관점에 따른 명승의 가치판단요소	147
[표 2-27] 문화재청(2011c)의 천연기념물 분류(안)	155
[표 2-28] 장호수(2004)의 천연기념물 분류(안)	156
[표 2-29] 문화재청(2005)의 천연기념물 분류(안)	158
[표 2-30] 관점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가치판단요소	162
[표 3-1] 국가별 대분류체계 종합비교표	167
[표 3-2] 문화재 대분류체계 구성 유형	171
[표 3-3] 대분류 구성 유형별 장·단점 비교	173
[표 3-4] 문화재 속성 인식의 구분기준 표	180
[표 3-5] 법률 상 문화재 분류 내용	181
[표 3-6] 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른 문화재 분류	181
[표 3-7] 문화재청 홈페이지 검색체계에 따른 문화재 분류	183
[표 3-8] 국가/단체 별 문화재 중분류 체계 종합비교표	201

[표 3-9] 미국정신과학회 <DSM IV>에 따른 다축진단체계	211
[표 3-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다축분류체계	211
[표 3-11] 문화재 다축 분류체계 구성(안)	216
[표 3-1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한 분류 현황	219
[표 3-13]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223
[표 3-14]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유적건조물)	228
[표 3-15]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유물)	230
[표 3-16]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기록유산)	232
[표 3-17]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무형유산)	234
[표 3-18]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자연유산)	235
[표 3-19]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등록문화재)	235
[표 3-20]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문화재 분류 현황 비교	238
[표 3-21] 천연기념물센터의 전시 구성	245
[표 3-22] 목간의 종류	245
[표 3-23] 전국 국립박물관 목록	246
[표 3-24]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248
[표 3-25]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검색’상 분류체계	251
[표 3-26]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상 분류체계	252
[표 3-27]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재질별 보존환경 기준	252
[표 3-28]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별 보존환경 현황	252
[표 3-29]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253
[표 3-30] 국악박물관의 전시 구성	255
[표 3-31] 외교부 외교사료관의 온라인 전시 구성	255
[표 3-3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소장품 분류	256
[표 3-33]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256
[표 3-34]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258
[표 3-35] 서울특별시 사진아카이브의 분류체계	259
[표 3-36]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260
[표 3-37]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의 국악분류	260
[표 3-38] 국립국악원의 국악기 분류	262
[표 3-39] 국립국악원의 국악자료 분류	262
[표 3-40]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분류	263
[표 3-41] 국립국악원 자료 유형의 구분	267
[표 3-4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별치기호 부여 기준	268
[표 3-43]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 (안)	272
[표 3-44] 한글자료 분류표(주류표) 예시	273
[표 3-45] 한글자료 분류표(강목표-문학류(100)) 예시	274
[표 3-46] 한글자료 분류표(요목표-문학류(100)) 예시	275
[표 3-47] 보호지역 재분류 (1안)	279
[표 3-48] 보호지역 재분류(2안)	280
[표 3-49] ‘구전 전통 및 표현’ 분야의 분류 (안)	281
[표 3-50] 무형문화재(음악 분야) 종전의 분류체계 및 개선안	282

[표 3-51] 문화재 유형별·분류위계별 분류의 기준	283
[표 4-1] ‘역사’ 및 ‘역사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291
[표 4-2] ‘역사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292
[표 4-3] ‘예술’ 및 ‘예술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292
[표 4-4] ‘예술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293
[표 4-5] ‘학술’ 및 ‘학술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293
[표 4-6] ‘학술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294
[표 4-7] ‘경관’ 및 ‘경관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294
[표 4-8] ‘경관’의 하위어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295
[표 4-9] ‘문화’ 및 ‘문화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296
[표 4-10] ‘문화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297
[표 4-11] ‘역사’ 및 ‘역사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298
[표 4-12] ‘예술’ 및 ‘예술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299
[표 4-13] ‘학술’ 및 ‘학술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300
[표 4-14] ‘경관’ 및 ‘경관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300
[표 4-15] ‘문화’ 및 ‘문화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301
[표 4-16] 문화재 관련 상위 가치평가용어 및 개념	308
[표 4-17] 보물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09
[표 4-18] 국보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1
[표 4-19] 사적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2
[표 4-20] 명승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3
[표 4-2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4
[표 4-22]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7
[표 4-23]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317
[표 4-24] 문화재 가치평가 관련 추가 도출 요소 및 개념 분류	318
[표 4-25] 추가 가치평가요소의 평가대상	319
[표 4-26]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종합	320
[표 4-27] 가치평가용어의 세부 개념별 사용 현황	321
[표 5-1]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 관련 한글 DB 예시	327
[표 5-2]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 관련 엑셀 DB 예시	328
[표 5-3] 세부 유형 및 시기별 국보지정 건수	329
[표 4-4] 국보 지정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330
[표 4-5] 국보 지정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338
[표 5-6] 세부 유형 및 시기별 보물지정 건수	345
[표 5-7] 보물 지정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346
[표 5-8] 보물 지정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354
[표 5-9] 사적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363
[표 5-10] 사적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64
[표 5-11] 사적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67
[표 5-12] 명승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370
[표 5-13] 명승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71
[표 5-14] 명승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74

[표 5-15]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378
[표 5-16] 천연기념물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79
[표 5-17] 천연기념물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83
[표 5-18]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388
[표 5-19] 국가민속문화재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0
[표 5-20]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4
[표 5-21]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398
[표 5-22] 국가무형문화재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0
[표 5-23] 국가무형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4
[표 6-1] 국내 기본법 제정 현황	437
[표 6-2]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기본법(안)	440
[표 7-1] 학술연구분야분류표 현황	46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4
[그림 1] 연구 모형	9
[그림 2-1] 유네스코의 대분류체계	16
[그림 2-2] 일본 문화재보호법 대분류체계	20
[그림 2-3] 중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26
[그림 2-4] 프랑스의 문화재 분류체계	31
[그림 2-5] 영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와 근거법률	33
[그림 2-6] 영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37
[그림 2-7]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의 분류체계	39
[그림 2-8]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분류체계	42
[그림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 분류체계	44
[그림 2-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보호구역 분류체계	45
[그림 2-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의 지속적 복지에 관한 법률」상 보전대상의 분류체계	47
[그림 2-12] 「농지법」상 농지 분류체계	49
[그림 2-13]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분류체계	53
[그림 2-14] 한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분류체계	53
[그림 2-15]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체계	56
[그림 2-16]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 분류체계(개선안)	58
[그림 2-17]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 분류체계(문화재청안)	58
[그림 2-18]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의 대분류체계	61
[그림 2-19]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의 분류체계	61
[그림 2-20] 유형문화재 세부유형	65
[그림 2-21] 문화재 가치평가 과정	66
[그림 2-22] 문화재청(2004a)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72
[그림 2-23]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74
[그림 2-24]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76
[그림 2-25] 김정신(2013)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78
[그림 2-26]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1안) 도식화	80
[그림 2-27]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2안) 도식화	80
[그림 2-28]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3안) 도식화	80
[그림 2-29]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최종안) 도식화	81
[그림 2-30] 문화재청(2016a)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84
[그림 2-31]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87
[그림 2-32]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1안) 도식화	91
[그림 2-33]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2안) 도식화	91
[그림 2-34]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2안) 도식화	92
[그림 2-35]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최종안) 도식화	92
[그림 2-36] 문화재청(2004b)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101

[그림 2-37] 장호수(2004)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102
[그림 2-38]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103
[그림 2-39]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104
[그림 2-40] 문화재보호법 민속문화재의 행정적 분류 체계	110
[그림 2-41]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112
[그림 2-42]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113
[그림 2-43] 사적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115
[그림 2-44] 사적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116
[그림 2-45] 사적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청 홈페이지)	116
[그림 2-46] 사적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117
[그림 2-47] 명승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134
[그림 2-48] 명승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청 홈페이지)	134
[그림 2-49] 천연기념물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150
[그림 2-50] 천연기념물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청 홈페이지)	151
[그림 3-1]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분류 체계 모식도	196
[그림 3-2] 일본 문화재 중분류 체계 모식도	197
[그림 3-3] 중국 문화재 행정적 중분류 체계 모식도	199
[그림 3-4] 중국 문화재 내용적 중분류 체계 모식도	199
[그림 3-5] 기존(나무구조)의 문화재 분류 흐름	209
[그림 3-6] 다축분류체계에 의한 문화재 분류의 흐름	210
[그림 3-7] 한국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연표	244
[그림 3-8]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세분류 예시	264
[그림 3-9]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범주	265
[그림 3-10]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 DB구축 사업’의	271
[그림 3-11] 근대문화유산(동산) 분류안	278
[그림 3-12] 근대문화유산(건조물) 분류안	278
[그림 5-1] 국보 가치평가요소 총계표	330
[그림 5-2] 국보 가치평가요소별 시기누적 빈도표	331
[그림 5-3] 국보 196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2
[그림 5-4] 국보 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3
[그림 5-5] 국보 198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4
[그림 5-6] 국보 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5
[그림 5-7] 국보 200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6
[그림 5-8] 국보 201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7
[그림 5-9] 국보 지정 가치평가요소별 세부유형 누적빈도	338
[그림 5-10] 국보 건조물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39
[그림 5-11] 국보 회화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40
[그림 5-12] 국보 공예품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41
[그림 5-13] 국보 전적/서적/문서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42
[그림 5-14] 국보 고고자료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43
[그림 5-15] 보물 가치평가요소 총계표	346
[그림 5-16] 보물 가치평가요소별 시기누적 빈도표	347

[그림 5-17] 보물 196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48
[그림 5-18] 보물 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49
[그림 5-19] 보물 198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0
[그림 5-20] 보물 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1
[그림 5-21] 보물 200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2
[그림 5-22] 보물 201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3
[그림 5-23] 보물 지정 가치평가요소별 세부유형 누적빈도	355
[그림 5-24] 보물 건조물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6
[그림 5-25] 보물 회화/조각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7
[그림 5-26] 보물 공예품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8
[그림 5-27] 보물 전적/서적/문서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59
[그림 5-28] 보물 고고자료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60
[그림 5-29] 보물 무구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361
[그림 5-30] 사적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63
[그림 5-31] 사적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65
[그림 5-32] 사적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67
[그림 5-33] 명승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70
[그림 5-34] 명승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72
[그림 5-35] 사적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75
[그림 5-36]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2017.09. 기준)	378
[그림 5-37] 천연기념물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80
[그림 5-38] 천연기념물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83
[그림 5-39] 국가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89
[그림 5-40] 국가기념물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0
[그림 5-41] 국가기념물 1960-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1
[그림 5-42] 국가기념물 1980-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2
[그림 5-43] 국가기념물 2000-201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3
[그림 5-44] 국가기념물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4
[그림 5-45] 국가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399
[그림 5-46] 국가기념물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0
[그림 5-47] 국가기념물 1960~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1
[그림 5-48] 국가기념물 1980-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2
[그림 5-49] 국가기념물 2000년대 이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3
[그림 5-50] 국가기념물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404
[그림 6-1] 유네스코 문화재 분류체계 모식도	416
[그림 6-2]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안)	431
[그림 6-3]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적용 예시	432
[그림 7-1]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의 개념 변화	458
[그림 7-2]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체계도	459
[그림 7-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	46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분류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징이나 일반적인 속성에 따라 사물을 범주화하는 것이고, 일반적 사례와는 같지 않은 구분을 의미함(Hunter, 2009)
- 또한, 학술적으로 ‘분류’란 구분된 개념을 거듭 구분하여 개념의 외연의 계통적 조직을 분명히 한 것으로 개념 정의 함
- ‘구분’은 개념의 외연을 분해함으로써 개념 간의 구별을 명확하게 정돈 하는 것임
 - 구분은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서 행해져야 하며, 여러 구분의 종속개념은 그 외연에 있어 서로 중첩되어서는 안 됨
 - 또한 여러 구분의 종속개념의 총합이 상위 개념의 외연 전부와 부합되어야 함
-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인간의 분류 역사는 인간의 본능적인 분류법적 사고를 증명하고, 또한 특정한 목적에 맞는 분류를 끊임없이 행해온 것을 보여줌
-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는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축되고 개선되어져 옴(Wright, 2008)
- 즉, 인간이 발전시킨 분류체계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하여 발전해 왔고 ‘계층구조’와 ‘네트워크’라는 항구적인 속성이 있음(Wright, 2008)
- 따라서 ‘분류체계 구축’이란, 명확한 개념구분과 계층구조(계통적 조직) 구축을 통해 어떠한 상태 또는 현상에 목적에 맞는 유효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며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문화재의 분류는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구분을 함으로써 개별 문화재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대분류 단계만 제시하고 있고, 중분류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화재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첫째, 법률상 분류체계와 관리운영상 분류체계의 불일치

- 법령 상 분류체계와 행정처리 시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
-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상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가 동일한 위계에서 유형문화재의 세부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행정 운영에 있어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는 ‘동산’으로 그룹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 유형문화재과의 업무 또한 건조물문화재와 동산문화재 관리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
- 민속문화재 또한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세분류 유형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반면, 관리운영상으로는 유물과 유적건조물로 대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속마을(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을 분리하여 지정 및 관리

○ 둘째, 문화재 유형 간 개념적 중복 발생

- 문화재 유형 간 개념적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사적의 경우 실제 지정사례에서 점단위 문화재와 면단위 문화재가 혼재하여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음
- 점 단위 문화재의 문화재 유형별 개념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형문화재의 건조물과 외형적인 관점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예) (기념물)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 예) (유형) 시도유형문화재 제51호(인천) 내동 성공회성당
- 사례별 모호성의 원인은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주관적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개인별로 개념의 정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대상들 간의 개념적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셋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념과의 차이 발생

-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맞춰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경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유형과 유사하게 분류체계를 개선

- 그러나 여전히 세계유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재 유형이 있어 세계유산 등재 후 관리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국내의 민속문화재의 경우 유물에 해당하는 유형의 민속문화재는 세계유산의 무형문화재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현 문화재청 조직도에 따르면 등재 이후 이를 관리 및 활용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업무부서(무형문화재과, 유형문화재과(동산))의 협업이 필수적임
- 또한 하나의 부서에서의 업무처리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넷째, 기관별 상이한 분류체계 운용 확인

- 문화재의 보호·관리·활용에 있어 박물관, 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관련기관이 운영 중에 있음
- 각 기관별로 운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문화재 분류체계도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다섯째, 문화유산으로의 명칭변경 경향

- 문화재 분류체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최상위 단계에서의 ‘문화재’의 정의는 최근 ‘문화유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문화재청의 영문명칭 Cultural Heritage of Administration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 재화적 의미가 내포된 문화 ‘재’에서 문화 ‘유산’으로 개념으로 확장하려는 경향 확인
- 또한 최근 개원한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의 명칭에서도 유산의 개념으로 대체하였고, 2006년에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도 문화유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문화재 분류체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문화유산’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문화재의 지정기준을 통해 간접적인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 문화재 분류체계와 인증체계 개선 추진 방안의 중장기 전략으로, 2016년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음

- 후속 연구로 2017년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수행함

2. 연구의 목적

-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시대상황을 반영한 문화재 분류체계의 변화내용을 통해 문화재 분류체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시대별 문화재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
- 또한 과학기술 및 ICT의 발전으로 인한 정책 환경변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문화향유의 관점에서 문화재 활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정책수요 발생으로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 현행 분류체계 운영 상 쟁점은 다음과 같음
 - 법률상 분류체계와 관리운영상 분류체계의 비일치
 - 문화재 유형 간 개념적 중복 발생
 -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념과의 차이 발생
 - 기관별 상이한 분류체계 운용 확인
 - 문화유산으로의 명칭변경 경향
- 따라서 문화재 분류체계 재구축은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며 문화재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를 가짐
- 문화재 분류체계 구축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문화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하는 것임
- 현재 문화재 분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이슈는 분류체계의 범위, 역할, 영향성, 지향점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분류체계 범위
 - 수평적 관점
 - 과학기술 및 ICT의 발달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문화적 소산을 유연하게 포괄 할 수 있도록 함
 - 수직적 관점
 - 법률 상 중분류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
 - 세분류 단계에서는 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류체계 구축 및 운영 도모

○ 분류체계의 역할

- 문화재청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행정 업무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의 기준으로써의 역할
- 관련기관 대상: 문화재의 관리방식에 있어 관련 기관별 문화재 분류체계의 표준화된 기준으로써의 역할
- 일반국민 대상: 문화재의 활용·향유 정책 마련에 기준이 되는 역할

○ 분류체계의 영향성

- 관리업무에 있어 해당 조직의 구성과 명확한 업무 분장에 영향
- 분류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규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 분류체계에 따른 분법 제정의 당위성 확보 가능

○ 분류체계의 지향점

- 행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
- 현대의 문화적 소산물(예: 디지털유형의 자료 등)이 향후 유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분류체계의 확장성 확보)
- 변화하는 국민의 정책수요(문화재 향유)를 반영하는 분류체계 마련
- 세계유산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소분류 단계 이하의 경우 각 관리 기관별로 분류체계 구축에 자율성 부여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첫째, 현재 지정된 문화재의 재평가 및 분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분류체계(안)을 제시
- 둘째,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제적 동향 분석과 세계유산 분류체계와 연계방안 제시
- 셋째, 향후 지정될 문화재의 위상제고와 올바른 문화재의 가치 정립 방안을 제시
- 넷째, 대국민(수요자 중심) 문화재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문화재 관리 및 운영 방안 제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대상

- 유네스코 및 국외 주요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법령 및 국제 협약
- 국내 타 부처 관련 법령 및 정책
- 북한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보고서
- 현행 국내 문화재 관련 법령 및 정책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 문화재 지정 및 기록 관련 보고서, 사유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

○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분류체계 분석을 위한 현행 국가 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무형, 민속,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한정
- 공간적 범위: 유네스코 및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등의 주요국가와 국내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타 부처 사례
- 시간적 범위: 현행 유네스코 및 주요국가 분류체계 내용 및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내용 분석,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지정문화재 현황 자료 분석

○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념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념은 문화재청(2016)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각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구조화된 관리도구’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따른 문화재 관리운영상 기준이 되는(적용되는) 분류체계로 범위를 한정

2. 연구의 방법

-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학술지, 보고서, 발표자료, 법령 등을 통한 문헌분석
 - 분류체계 관련 이론 및 역사에 관한 개념 정의와 분석
 - 분류체계 관련 국외 주요 국가의 법령 및 보고서 분석
 - 분류체계 관련 국내 타 부처 법령 및 제도 분석
 - 분류체계 관련 학술지 및 사전 분석
- 국가 지정문화재 현황의 내용 분석
 - 국보, 보물, 무형, 민속,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 등의 기록문서 및 지정문서, 회의록 등의 내용 분석
- 지정문화재의 원자료(Raw Data) 코딩 및 Data 통계분석
 - 유형별 국가 지정문화재의 코딩
 - 유형별 지정문화재의 빈도 분석
 - 시기별, 평가요소별 빈도분석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내외 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유네스코 및 주요 국가의 문화재 분류체계 분석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현황과 사례 분석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및 현행 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 진단 및 분석 문화재 분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의 방향성 및 추진 방법
문화재 분류체계 위계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적 문화재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분류체계의 위계별 분석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대분류 유형의 개념 및 범위 구체화의 방향
문화재 가치평가 요소 현황 분석과 DB구축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가치평가 내용 분석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등 	

[그림 1] 연구 모형

제2장 국내·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제1절 국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제2절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분석

제3절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및 분석

제4절 통일 대비 북한 문화재 분류체계 분석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제1절 국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

1. 유네스코(UNESCO)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필요성에 의해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하여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유산을 중점적으로 등재하여 보호·관리
 - 세계유산 운영지침(2015.7.8.) 제2장 ‘II.A 세계유산의 정의(Definition of World Heritage)’에서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 정의
-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
 -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장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 제2항 정의에서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로 규정
-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시작하여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 접근을 향상하기 위해 유형의 기록유산을 등재하여 보호·관리
 - 세계기록유산은 ‘기록유산보호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의 1.1.1 항목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세계문화유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which in turn represents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ld’s cultural heritage)’이라고 명시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소개
 - 지침 2.6.3에서 세계기록유산의 대상은 ①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②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③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④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로 예시를 들고 있음

- 따라서 ‘Textual items’, ‘Non-textual items’, ‘Audiovisual items’, ‘Virtual documents’ 로 구분 가능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2015)

II. 세계 유산 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45.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의 제1조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상 '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미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
- 건축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 치로부터 역사상, 미 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 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제 2 조 본 협약의 목적상 '자연유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 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 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 적지.

복합유산

46. 협약의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정의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충족하는 유산은 “복합유산” 으로 고려할 수 있다.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2015)

II. A Definition of World Heritag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5.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re def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 monuments: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elements or structures of an archaeological nature, inscriptions, cave dwellings and combinations of featur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 groups of buildings: groups of separate or connected buildings which, because of their architecture, their homogeneity or their place in the landscape,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 sites: works of man or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and area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historical, aesthetic, ethnological or anthropological points of view.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atural heritage”:

- natural features consisting of physical and biological formations or groups of such formation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aesthetic or scientific point of view;
- 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 and precisely delineated areas which constitute the habitat of threaten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 natural sites or precisely delineated natural are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conservation or natural beauty.

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6. Properties shall be considered as “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f they satisfy a part or the whole of the definitions of both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laid out in Articles 1 and 2 of the Convention.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제2조 정의

본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 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b) 공연 예술
 - (c)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e) 전통 공예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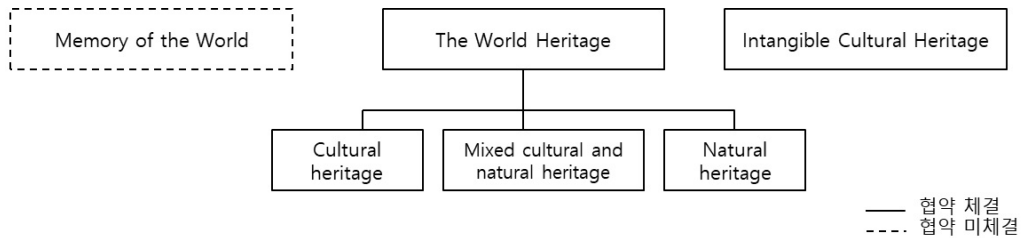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003)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1.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 with–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defined in paragraph 1 above, is manifested inter alia in the following domains:
 - (a)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b) performing arts;
 (c)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d)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e) traditional craftsmanship.



[그림 2-1] 유네스코의 대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은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
 - 유형의 문화적 소산인 세계유산은 물리적 형태를 보존하는 물질전승을 취하고 있는 반면,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 문화재는 인간의 행위전승을 전승 방법으로 취하고 있음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세계유산은 ‘자연성’ 혹은 ‘인문성’에 따라 문화유산, 복합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
 -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에서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하였으나 1994년 운영지침에서 문화유산의 범주에 ‘문화경관’ 포함, 2005년 운영지침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시키는 유산인 복합유산을 규정
 - 세계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 제2조에서 자연유산을 정의하는 주요 개념 변수로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정, 자연유산 중 인문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복합 유산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두어 해결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단일 개념변수 적용

- 대분류 및 중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유무형성, 자연성, 인위성 등 적용
 - 대분류단계에서 문화재의 물리적 성질(유무형성)을 기준으로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상호배타적으로 구분·정의하고, 세계유산의 중분류에서 자연성과 인위성의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는 단순한 구조
 - 문화재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단일 개념변수를 1차적으로 적용하여 개념 간 중속 및 중복 문제 발생 소지가 낮음
 -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은 형태에 따른 분류로 포괄성과 배타성 확보
- 세계유산은 속성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하위분류
 - 자연유산은 온전히 자연성을 갖고 있는 유산으로 문화유산과 확실한 배타성이 존재
 -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유형은 복합유산을 도입하여 해결

○ 새로운 유형 도입

- 2005년 운영지침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증을 제시하며 기준을 통합하였고, 복합유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수평적 체계에서 도입
 - 자연유산 중 인문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복합유산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두어 해결한 것

○ 국가 간 협약으로서의 분류체계의 한계

- 유네스코의 문화재 분류체계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한 문화재 목록화 체계이므로,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분류체계 내에 포괄할 필요가 없음
-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은 동일한 협약 아래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위계체계가 성립이 안됨
-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경우, 현재 협약이 아닌 사업(project) 형태로서 진행

-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나, 분류체계 내에 규범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음(세계기록유산의 기록유산보호일반지침(최근 2002년 개정) 1.1.1에서 ‘Memory of the world’는 ‘which in turn represents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ld’s cultural heritage’로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소개)

2. 일본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유형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경관, 전통적건조물군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
- 1950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며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4가지 유형으로 규정
-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통가옥지구가 급속히 사라져가는 것을 우려하여 197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도뿐만 아니라 시가지지역과 집락구역 내의 전통가옥지구도 보존대상으로 규정하는 ‘전통적건조물군’ 도입
- 2000년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Cultural Landscape’의 영향을 받아 200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적경관’ 도입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및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러한 것들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및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과 고고자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공예기술 및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및 기타 물건으로 일본국민생활의 추이의 이해를 위해 결여할 수 없는 것(이하 「민속문화재」라 한다)
4. 패총, 고분, 도성터, 성터, 구택 및 기타 유적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및 기타 명승지로 일본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과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및 지질광물(특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일본에 있어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5. 지역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업 및 당해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 일본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해 결여할 수 없는 것(이하 「문화적경관」이라 한다)
6. 주위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건조물군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하 「전통적건조물군」이라 한다)

「文化財の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で「文化財」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 一 建造物、絵画、彫刻、工芸品、書跡、典籍、古文書その他の有形の文化的所産で我が国にとって歴史上又は芸術上価値の高いもの(これらのものと一体をなしてその価値を形成している土地その他の物件を含む)並びに考古資料及びその他の学術上価値の高い歴史資料(以下「有形文化財」という。)
 - 二 演劇、音楽、工芸技術その他の無形の文化的所産で我が国にとって歴史上又は芸術上価値の高いもの(以下「無形文化財」という。)
 - 三 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等に関する風俗慣習、民俗芸能、民俗技術及びこれらに用いられる衣服、器具、家屋その他の物件で我が国民の生活の推移の理解のため欠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以下「民俗文化財」という。)
-

- 四 貝つか `古墳` `都城跡` `城跡` `旧宅` 其他の遺跡で我が国にとつて歴史上又は學術上価値の高いもの、庭園 `橋梁` りょう `峡谷` `海浜` `山岳` 其他の名勝地で我が国にとつて芸術上又は觀賞上価値の高いもの並びに動物(生息地 `繁殖地` 及び `渡来地` を含む。°) `植物` (自生地を含む。°) 及び地質鉱物(特異な自然の現象の生じている土地を含む。°) で我が国にとつて學術上価値の高いもの(以下「記念物」という。°)
- 五 地域における人々の生活又は生業及び当該地域の風土により形成された景觀地で我が国民の生活又は生業の理解のため欠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以下「文化的景觀」という。°)
- 六 周囲の環境と一体をなして歴史的風致を形成している伝統的な建造物群で価値の高いもの(以下「伝統的建造物群」という。°)



[그림 2-2] 일본 문화재보호법 대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른 분류
 - 유형의 문화재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물리적 특성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전통적건조물군, 문화적경관은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른 분류
- 그러나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는 일본의 유형민속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로 구분, 따라서 물리적 특성에 의한 분류에서 ‘민속성’을 별도로 분리해 낸 경우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민속문화재는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서 ‘민속(생활문화성)’이라는 속성을 별도로 분류
 - 유형문화재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과 고고자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로 정의
 -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및 기타 물건으로 일본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를 위해 결여할 수 없는 것’로 정의
 - 따라서 ‘민속성(생활문화성)’이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를 구분하는 변수로 적용

- 또한 무형민속문화재는 민속예술로서 무형문화재의 연극, 음악과 전승자 및 ‘예술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 기념물은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문화재에 속하지만, ‘자연성’, ‘예술성’, ‘지역성’, ‘생활문화성’ 등의 속성을 별도로 분류
- 기념물 중 유적지를 제외한 명승지, 동·식물·지질·광물은 자연성이 가미된 것으로 유형문화재와는 자연성 여부가 개념변수로 작용
- 유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조물과 기념물이 될 수 있는 고택은 건축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정의상으로는 예술성의 여부에 차이가 있음
- 또한 지정기준 상 유형문화재의 건조물과 사적의 차이는 기술성, 유파나 지역성(지방적 특색)의 유무가 해당
- 기념물의 명승지는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등 일본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임
- 문화적경관은 ‘지역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업 및 당해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 일본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해 결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되어 지역성 및 생활문화성이 강조됨

○ 공간단위에 따른 구분

- 유형문화재의 건조물은 점단위 문화재인 반면 전통건조물군은 주위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는 면(area)단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속문화재의 가옥과 전통적건조물군은 공간단위가 두 개념을 구분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음
-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조물, 미술공예품은 하나의 개체(점단위)이지만 문화적 경관은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공간(면단위)으로서 두 개념은 공간단위에 있어 차이를 보임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문화재 유형 전체를 규정, 보호 및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개념 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속성에 따른 구분, 공간 단위에 따른 구분이 적용
 - 문화재의 객관적인 물리적 성질의 개념변수와 주관적인 가치 판단 요소가 포함된 개념변수가 혼재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형태에 따른 분류로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도 유형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음
 - 형태에 의한 분류와 형태에 의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속성에 의한 분류가 동일 위계에 위치함으로 인해 문화재의 개념에 불명확성 발생

○ 대분류단계 문화재 유형의 포괄성 부재

- 대분류단계는 하위 분류체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기념물은 하위 개념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적합
 - 기념물의 사적은 “패총, 고분, 도성터, 성터, 구택 및 기타 유적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임
 - 명승은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및 기타 명승지로 일본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 임
 -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광물로 일본에 있어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으로 세 유형의 공통점이 부재

○ 분류체계의 수평적 확대 추세

- 일본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문화재의 새로운 유형인 전통건조물군과 문화적경관을 도입
- 기존 문화재 유형에 편입시키지 않고, 대분류 단계에서 수평적으로 확장

○ 대규모 면단위 문화재(문화적경관,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유형의 별도 분류

- 일본의 문화재 유형 중 대규모 면적 공간단위를 취하고 있는 문화재로 문화적경관과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와 있고, 이 두 유형은 별도의 문화재 유형으로 분류되고 관리에 있어서도 다른 문화재 유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화적경관과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는 경관법 혹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타부처 소관

법률에 의해서도 그 관리에 있어 규제를 받고 있음

- 또한 다른 대규모 면단위 문화재인 명승,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과 달리 문화적경관과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 타법 및 지역의 관련 조례의 규제 사항을 기초로 하고 중요문화적경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상의 규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관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중국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 중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른 문화재는 크게 ‘문물’, ‘비물질문화유산’, ‘풍경명승구’ 세 개 유형으로 구분
 - 3개의 문화재 유형은 서로 다른 법률에 의거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
 - 문화재 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므로 이들 간에 특별한 관계성은 없음
 - 다만 세계유산 등 국제적 유산(heritage) 개념과의 관계에 있어 문물을 문화유산, 비물질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 풍경명승구를 자연유산(또는 National Park)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
- 중국의 ‘자연보호구’는 대표성을 띠는 자연생태계, 희귀 동식물의 집중 분포지역, 특수한 의미를 지닌 자연유적 등이 소재해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일정 면적을 의미
 - 자연보호구는 자연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의 자연 환경에 대한 보호와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재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그 보호대상이 한국의 천연기념물 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범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풍경명승구 제도와 비교하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참조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

제2조(문물)

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의 열거한 문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1)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유적, 고분, 건축, 석굴사원과 석각, 벽화
 - (2)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혁명운동 및 유명인물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적 의의, 육적 의의 또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중요한 사적, 실물, 대표적 건축
 - (3) 역사상 각 시대의 진귀한 예술품과 공예미술품
 - (4)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한 문헌자료 및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친필 원고와 도서자료 등
 - (5) 역사상 각 시대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 실물
- 문화재로 인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문화재행정기관이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다.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동물 화석과 고대 인류화석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 下列文物受国家保护:

- (一) 具有历史、艺术、科学价值的古文化遗址、古墓葬、古建筑、石窟寺和石刻、壁画;
- (二) 与重大历史事件、革命运动或者著名人物有关的以及具有重要纪念意义、教育意义或者史料价值的近现代

- 代重要史迹、实物、代表性建筑；
(三) 历史上各时代珍贵的艺术品、工艺美术品；
(四) 历史上各时代重要的文献资料以及具有历史、艺术、科学价值的手稿和图书资料等；
(五) 反映历史上各时代、各民族社会制度、社会生产、社会生活的代表性实物。
文物认定的标准和办法由国务院文物行政部门制定，并报国务院批准。
具有科学价值的古脊椎动物化石和古人类化石同文物一样受国家保护。

「중화인민공화국비물질문화유산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지칭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은 각 민족·인민·세대 상호 간에 전승되어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전통문화의 표현방식, 전통문화 표현방식과 상호 관련된 실물 및 장소에 까지 이른다. 이는:

- (1) 전통구두문학과 그 작품의 매체로서의 언어
- (2) 전통예술, 서예, 음악, 무용, 희극, 민속, 예술 및 곡예
- (3) 전통기술, 의약 및 역법
- (4) 전통예의, 축제 및 민속
- (5) 전통 체육 및 예능(유흥)
- (6) 기타 비물질문화유산

비물질문화유산 조성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는 법률에 통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第二条

本法所称非物质文化遗产，是指各族人民世代相传并视为其文化遗产组成部分的各种传统文化表现形式，以及与传统文化表现形式相关的实物和场所。包括：

- (一) 传统口头文学以及作为其载体的语言；
- (二) 传统美术、书法、音乐、舞蹈、戏剧、曲艺和杂技；
- (三) 传统技艺、医药和历法；
- (四) 传统礼仪、节庆等民俗；
- (五) 传统体育和游艺；
- (六) 其他非物质文化遗产。

属于非物质文化遗产组成部分的实物和场所，凡属文物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的有关规定。

「풍경명승구조례」

제2조 (정의)

풍경명승구의 설치, 계획, 보호, 이용 그리고 관리 활동은 본 조례에 따른다.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풍경명승구는 관상상, 문화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인문경관비교집중, 환경우미 등으로서 인민의 관광, 과학발전 또는 문화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风景名胜区条例」

第二条

风景名胜区的设立、规划、保护、利用和管理，适用本条例。

本条例所称风景名胜区，是指具有观赏、文化或者科学价值，自然景观、人文景观比较集中，环境优美，可供人们游览或者进行科学、文化活动的区域。

「자연보호구조례」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지칭하는 자연보호구라 함은 대표성이 있는 자연 생태 계통,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식물종의 천연 집중 분포 지구, 특수한 의의가 있는 자연유적의 보호대상이 소재한 내륙, 내륙수면 또는 해역으로서 본 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는 지역의 말한다.

제21조 (정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고 과학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또는 특수한 과학연구가치가 있는 자연보호구역을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건립할 수 있다. 국가급 자연보호구 외에 중요한 자연보호구역을 지방급 자연보호구로 지정할 수 있다.

「自然保护区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自然保护区,是指对有代表性的自然生态系统、珍稀濒危野生动植物物种的天然集中分布区、有特殊意义的自然遗迹等保护对象所在的陆地、陆地水体或者海域,依法划出一定面积予以特殊保护和管理的区域。

第二十一条

国家级自然保护区,由其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自然保护区行政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自然保护区行政主管部门管理。地方级自然保护区,由其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自然保护区行政主管部门管理。



[그림 2-3] 중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적용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전승방법에 따른 구분)

- 문물과 비물질문화유산은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른 분류
 - 「문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물은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따라 전해 내려온 유물 또는 유적지로 물질문화유산에 한정
 - 비물질문화유산은 물질문화유산 범주의 문물과 구분되는 문화재 유형으로 무형적 형태로 존재하며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대로 전승되어 온 각종 전통문화적 표현양식을 의미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풍경명승구는 「풍경명승구조례」의 보호대상으로서 풍경명승구가 특별한 가치를 갖는 자연경관, 인문경관 등의 환경우미(자연적 미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경관성’에 따른 분류

- 자연보호구는 「자연보호구조례」의 보호 대상으로 대표성이 있는 생태계통, 희귀한 명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특별한 의의가 있는 자연유산지역을 제시하며 ‘자연성’에 따른 분류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법 제정

-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재 법률과 체계는 없음. 따라서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는 존재하지 않음
 - 문물은 「문물보호법」, 비물질문화유산은 「비물질문화유산법」, 풍경명승구는 「풍경명승구조례」, 자연보호구는 「자연보호구조례」 제정
 - 중국의 문화재 개념인 문물, 비물질문화유산,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는 하나의 제도 하에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계적 관계를 설정할 수 없고 독립적·병렬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개념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속성에 따른 구분이 적용
 - 문화재의 객관적인 물리적 성질의 개념변수(유무형성)와 비교적 명확한 속성변수가(자연성) 혼재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념 간 배타성 성립
 - 문물과 비물질문화유산은 형태에 의한 분류,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는 자연성이라는 객관적 속성에 의해 분류
 - 문물과 비물질문화유산은 형태에 따른 분류로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도 형태에 따르면 문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문물’의 명칭은 문화적 소산에 한정되므로 자연성과 배타성 성립
- 중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선적용
 - 역사성, 예술성, 생활문화성 등의 판단여지가 큰 가변적 기준은 소분류단계에서 적용
- 즉, 중국은 관련된 제도에서 제시되는 개념적 정의에 따른 문화재 각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으로부터 모호한 기준 순으로 분류 기준을 적용
- 따라서 한국 문화재 분류체계가 판단 여지가 큰 기준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중복 및 혼란 문제의 발생 소지가 낮음

○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의 구분

- 풍경명승구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으로 이해 가능하며 이는 한국의 천연기념물(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과 유사한 제도
- 중국의 경우 자연보호구와 풍경명승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연환경으로서의 보호대상인가, 자연 경관으로서의 심미적 향유 대상인가를 적용
 - 즉, 자연물의 환경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보호 및 재생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자연보호구로, 심미적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관광, 여가선용 등 향유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풍경명승구로 구분¹⁾
 - 동양적 경관 개념인 경승지(景勝地 : 경치가 아름답고 이름난 곳)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 구분으로 판단

1) 「풍경명승구조례」 8조는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의 구역이 중복되거나 교차되어서는 안 되며 만일 부득이할 경우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 계획이 서로 협조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이들 제도가 유사한 대상(자연환경 또는 경관)에 대한 다른 방향의 제도(보호 vs 활용)라는 점이 확인됨

4. 프랑스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별로 구분되어 있던 법령들을 2004년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으로 통합
- 「문화유산법전」에서 문화재는 ‘문화유산(Patrimoine)’으로 규정하며, ‘문화유산(Patrimoine)’이란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화재를 의미
 - 문화유산법전에서 문화유산을 ‘공적 소유권 또는 사적 소유권에 속하는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미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이익을 갖는 재산, 부동산, 동산의 총체’로 규정²⁾
- 문화유산은 자연성을 중심으로 ‘역사적기념물(Monuments Historique)’과 ‘자연·문화유적지(Sites)’로 대분류
- 역사적기념물은 역사적·예술적 관점에서 전체 혹은 일부가 보존의 가치를 가진 거석, 건조물, 선사 유적지 또는 일정 부분의 토지와 역사적 기념물의 가치를 가진 건축물을 포함하는 ‘역사적기념물-부동산(Monuments Historique-Immeubles)’과 국보, 고문서, 도서관·박물관 소장품, 고고학적 유산을 포함하는 ‘역사적기념물-동산(Monuments Historique-Objets mobiliers)’으로 구분
- 자연문화유적지는 「문화유산법전」 L630-1, 명령630-1항에 의거하여 ‘자연기념물(Monuments naturels)’과 ‘유적지(Sites)’로 구분(문화재청, 2014c: 131)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L341-1~22, 명령341-1~31(Titre IV: Sites)에 따라 ‘에너지 지속가능 환경부(MEDDE)’가 지정 및 관리

「문화유산법전」

제6권 역사적 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 및 보호지구

법 621-1조 역사적 또는 예술적 관점에서 그 보존이 공익적 가치를 갖는 부동산은 이하의 조항에 의한 구분에 따라 문화관련 장관의 직책으로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한다. 본법의 조건에 따라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immeubles)은 다음과 같다.

- a) 거석기념물, 선사의 생활유적(station) 또는 지층(gisement)을 포함하는 토지
- b) 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제안된 부동산은 격리, 발굴 또는 정화하기 위하여 지정이 필요

2) L1

Le patrimoine s'entend, au sens du présent code, de l'ensemble des biens, immobiliers ou mobiliers, relevant de la propriété publique ou privée, qui présentent un intérêt historique, artistique, archéologique, esthétique, scientifique ou technique.

한 부동산과 일반적 방법으로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제안된 부동산의 가시범위 내에 위치하는 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법 622-1 본래의 의미에서 동산(meubles)이든 정착한 부동산(immeubles par destination)이든, 동산(objets mobiliers)은 그 보존이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관점에서 공익성을 가지면, 행정당국의 결정에 의해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효과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동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정 부동산정착물에 미친다.

법 630-1조 자연기념물(monuments naturels) 또는 자연문화유적지(sites)의 보호에 관한 규칙은 이하에서 전제하는 환경법전 법431-1조에서 법34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다.

“법341-1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존 또는 보호가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전설적 또는 회화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가지는 천연기념물 및 경승지의 일람을 작성한다.”

자료: 문화재청, 2010: 545-558

「Code du patrimoine」

LIVRE VI : MONUMENTS HISTORIQUES, SITES ET ESPACES PROTÉGÉS

L. 621-1 Les immeubles dont la conservation présente, au point de vue de l'histoire ou de l'art, un intérêt public sont classés comme monuments historiques en totalité ou en partie par les soin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Sont notamment compris parmi les immeubles susceptibles d'être classés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 : a) Les monuments mégalithiques, les terrains qui renferment des stations ou gisements préhistoriques ; b) Les immeubles dont le classement est nécessaire pour isoler, dégager, assainir ou mettre en valeur un immeuble classé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

L. 622-1 Les objets mobiliers, soit meubles proprement dits, soit immeubles par destination, dont la conservation présente, au point de vue de l'histoire, de l'art, de la science ou de la technique, un intérêt public peuvent être classés au titre des monuments historiques par décis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Les effets du classement prévus dans la présente section s'appliquent aux biens devenus meubles par suite de leur détachement d'immeubles class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621-1, ainsi qu'aux immeubles par destination classés qui sont redevenus meu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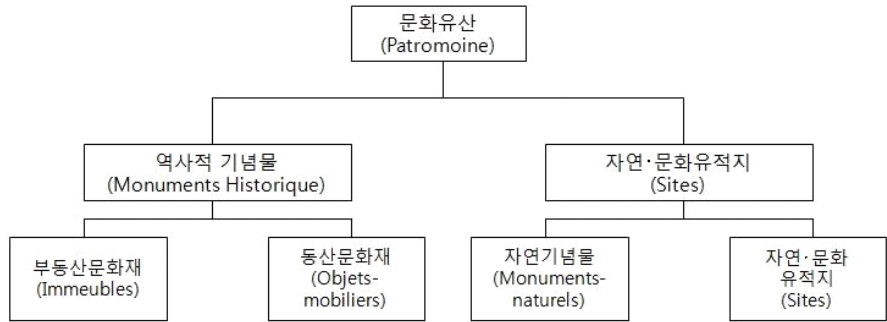
L. 630-1 Les règles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s monuments naturels et des sites sont fixées par les articles L. 341-1 à L. 341-22 du code de l'environnement ci-après reproduits :

“ Art. L. 341-1. - Il est établi dans chaque département une liste des monuments naturels et des sites dont la conservation ou la préservation présente, au point de vue artistique, historique, scientifique, légendaire ou pittoresque, un intérêt général.

“Après l'enquête publique réalisée conformément au chapitre III du titre II du livre Ier, l'inscription sur la liste est prononcée par arrêté du ministre chargé des sites et, en Corse, par délibération de l'Assemblée de Corse après avis du représentant de l'Etat.

“L'inscription entraîne, sur les terrains compris dans les limites fixées par l'arrêté, l'obligation pour les intéressés de ne pas procéder à des travaux autres que ceux d'exploitation courante en ce qui concerne les fonds ruraux et d'entretien normal en ce qui concerne les constructions sans avoir avisé, quatre mois d'avance, l'administration de leur intention.”

자료: 프랑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림 2-4] 프랑스의 문화재 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적용 개념변수 검토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역사적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는 ‘자연성’을 기준으로 분류
 - 자연·문화유적지는 「문화유산법전」 L630-1, 명령 630-1항에 의거, ‘자연 기념물(Monuments naturels)과 유적지(Sites)’로 구분되며 지정 및 관리는 「환경법전」에 의하여 규정
- 자연·문화유적지의 자연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는 ‘인문성’을 기준으로 분류
 - 자연기념물은 천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 자연·문화유적지는 면단위의 자연을 보호하며, 자연기념물과 구분이 되는 지역으로 회화적·전설적·역사적·예술적 관점에서 지정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역사적기념물은 ‘이동가능성’에 따라 부동산문화재와 동산문화재로 분류
 - 부동산 역사적기념물은 역사적·예술적 관점에서 부동산의 전체 혹은 일부가 보존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으로서 거석, 건조물, 선사 유적지 또는 일정 부분의 토지와 역사적 기념물의 가치를 가진 건축물을 규정
 - 동산 역사적기념물은 국보, 고문서, 도서관·박물관 소장품, 고고학적 유산 등으로 구분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통합법인 「문화유산법전」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그러나 자연·문화유적지는 자연성을 전제로한 문화재 유형으로 역사적기념물과 특성이 상이, 「문화유산법전」에서 문화재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환경법전」에서 이를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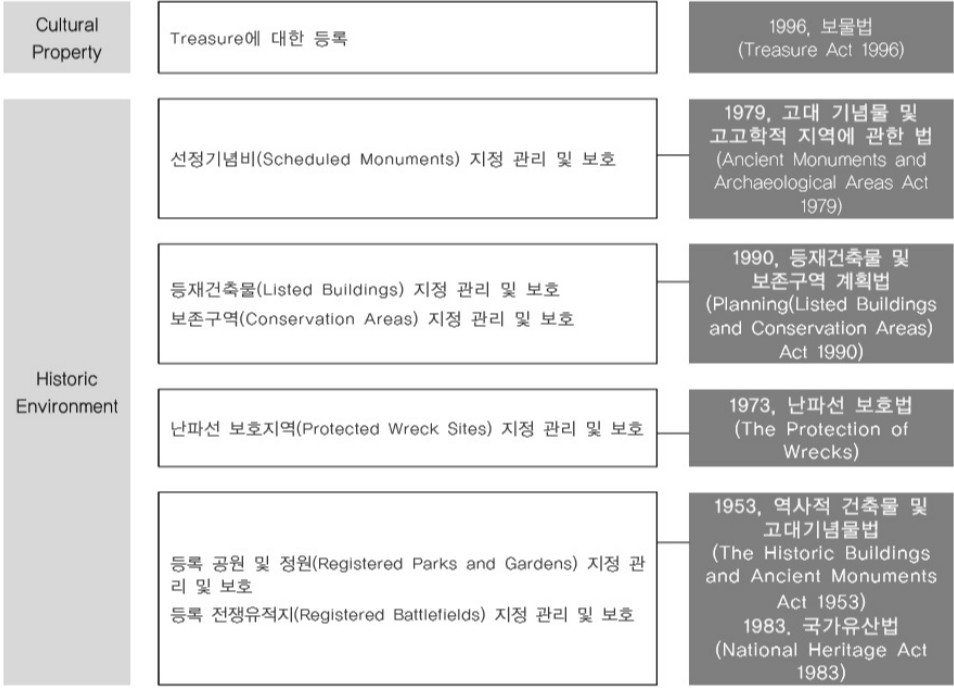
○ 단일 개념변수 적용

- 대분류의 개념변수로 ‘자연성’ 적용, 중분류에서 ‘이동가능성’과 ‘인문성’ 적용
 - 대분류단계에서 문화재를 단일 속성(자연성)을 기준으로 역사적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문화재 유형을 상호배타적으로 구분
 - 중분류단계에서 역사적기념물은 이동가능성에 따라 부동산 역사적기념물과 동산 역사적기념물로 분류, 자연·문화유적지는 인문성 여부에 따라 자연 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분류하는 단순한 구조
 - 문화재의 비교적 명확한 속성(자연성)에 따른 단일 개념변수를 1차적으로 적용하여 개념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소지가 낮음
 - 역사적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는 속성에 따른 분류로 포괄성과 배타성을 확보

5. 영국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 영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른 문화재는 크게 ‘보물’, ‘선정기념물’, ‘등재 건축물’, ‘등재보존구역’, ‘등록공원 및 정원’, ‘등록 전쟁유적지’, ‘난파선 보호구역’ 일곱 개 유형으로 구분
 - 이들 문화재 유형은 서로 다른 법률에 의거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
 - 문화재 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므로 이들 간에 특별한 관계성은 없음
 - 영국 정부는 문화재를 ‘문화의 유형적 산물’에 제한하여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함
- 국가적 체계로 관리되는 문화재의 정의는 제한적으로, 크게 동산문화재인 ‘문화적 자산(Cultural Property)’ 과 부동산문화재인 ‘역사적 환경(Historic Environment)’ 의 두 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문화재청, 2014c: 213)



[그림 2-5] 영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와 근거법률

자료: 문화재청, 2014c: 216

「보물법 1996」

1. (1) 보물이란,
 - (a) 발견 당시에 적어도 300년 이상 된 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물
 - (i) 중량의 최소한 10% 이상이 가치 있는 금속물질로 구성된 동전이 아닌 금속물
 - (ii) 발견 당시, 가치 있는 금속물의 함량을 충족하고 발견 당시 적어도 300년 이상 된 것으로서 동시에 발굴된 최소한 두 개의 동전 중 한 개
 - (iii) 발견 당시, 적어도 300년 이상 된 것으로서 동시에 발굴된 최소 10개 이상의 동전 중 한 개
 - (b) 보물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주에 속한 것으로서 발견 당시 최소한 200년 이상 된 대상물
 - (c) 보물법 제4조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견된 수집물로 인정되는 대상물
 - (d) 발견 당시, 동시 발굴물의 일부분인 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물
 - (i) 동시에 또는 이전에 발견된 것으로서 상술된 (a), (b), (c)에 해당되는 대상물의 일부
 - (ii) 당해 대상물이 동시에 발견된 것일 경우에 상술된 (a), (b)에 해당되는 대상물 보다 앞서 발견된 일부
- (2) 다음의 것들은 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인공적으로 작업한 것이 아닌 자연적 대상물
 - (b) 자연적 매장물에서 추출된 광물(minerals) 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류에 속하는 대상물

「Treasure Act 1996」

- (1) Treasure is—
 - (a) any object at least 300 years old when found which—
 - (i) is not a coin but has metallic content of which at least 10 per cent by weight is precious metal;
 - (ii) when found, is one of at least two coins in the same find which are at least 300 years old at that time and have that percentage of precious metal; or
 - (iii) when found, is one of at least ten coins in the same find which are at least 300 years old at that time;
 - (b) any object at least 200 years old when found which belongs to a class designated under section 2(1);
 - (c) any object which would have been treasure trove if foun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4;
 - (d) any object which, when found, is part of the same find as—
 - (i) an object within paragraph (a), (b) or (c) found at the same time or earlier; or
 - (ii) an object found earlier which would be within paragraph (a) or (b) if it had been found at the same time.
- (2) Treasure does not include objects which are—
 - (a) unworked natural objects, or
 - (b) minerals as extracted from a natural deposit, or which belong to a class designated under section 2(2).

자료: 문화재청, 2010: 408-409 및 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고대기념물 및 고고학 지역에 관한 법 1979」

1. 선정기념물
 - (1) 국무장관(역사적환경스코틀랜드)은 동법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형식에 의해 선정기념물 목록(동법 별표에 첨부)을 편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2) 국무장관은 최초 목록에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 편집하여야 한다.
 - (a) 동법 시행전 1913 M1 고대 유물 통합 및 수정법 12조에 의하여 최근 공표된 목록에 포함된 일체의 유물
 - (b) 국무장관이 동법의 시행전에, 1913 M2 그대 유적법 6(1)조에 따라, 12조에 의해 공표되는 목록에

-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특정인에게 통지한 일체의 유물
- (3) 아래 (4)항에 관한 것으로, 국무장관(역사적환경스코틀랜드)은 최초 목록이나 그 후 국가적 중대성을 고려하여 목록에 일정 유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1. Schedule of monuments.
- (1) The Secretary of State(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shall compile and maintai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n such form as he(it) thinks fit) a schedule of monuments (referred to below in this Act as “the Schedule”).
- (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on first compiling the Schedule include therein—
- (a) any monument included in the list last pu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under section 12 of the Ancient Monuments Consolidation and Amendment Act 1913; and
- (b) any monument in respect of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ha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erved notice on any pers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6(1) of the Ancient Monuments Act 1931 of his intention to include it in a list to be published under section 12.
- (3) Subject to subsection (4) below, the Secretary of State(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may on first compiling the Schedule or at any time thereafter include therein any monument which appears to him(it) to be of national importance.
-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sult 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 (in this Act referred to as “ the Commission ”) before he includes in the Schedule a monument situated in England.]

자료: 문화재청, 2010: 415-417 및 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 1990』

1. 특별한 건축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재건축물
- (5) 이 법에서 “등재건축물”은 이 법 하에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목록에 포함되어진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 (a) 건축물에 고정된 구조물이나 물체
- (b) 1948년 7월 1일 이후 비록 건축물에 고정되지 않았을지라도 땅의 일부분인 건축물 주변의 토지 내의 구조물과 물체이다.
69. 보호 구역의 지정
- (1) 모든 지역 계획 당국은
- (a) 그들 지역의 일부분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의 외양 또는 특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건축작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결정한다.
- (b) 이러한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1. Listing of buildings of special architectural or historic interest.
- (5) In this Act “listed building” means a building which is for the time being included in a list compiled or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this section;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a) any object or structure fixed to the building;
- (b) any object or structure within the curtilage of the building which, although not fixed to the building, forms part of the land and has done so since before 1st July 1948,
69. 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s.
- (1) Every local planning authority—

-
- (a) shall from time to time determine which parts of their area are areas of special architectural or historic interest the character or appearance of which it is desirable to preserve or enhance, and
(b) shall designate those areas as conservation areas.
-

자료: 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난파선보호구역법 1973」

1. 역사적 난파선 보호구역

- (1) 내무장관은 영국 영해에 있는 지역이 다음을 충족하면,
(a) 해저에 표면 또는 안에 있는 난파된 선박의 유적지이거나 혹은 그렇게 밝혀진 곳, 그리고
(b) 해저의 난파선 또는 난파선 안 혹은 근처에 놓여 진 선박에 속하거나 속했던 물체의 역사적, 고고학적, 또는 예술적 중요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승인되지 않은 침범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곳
내무장관은 해당 유적지의 주변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명령할 수 있다.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1. Protection of sites of historic wrecks.

- (1) If the Secretary of State is satisfied with respect to any site in United Kingdom waters that—
(a) it is, or may prove to be, the site of a vessel lying wrecked on or in the sea bed; and
(b) on account of the historical, archaeological or artistic importance of the vessel, or of any objects contained or formerly contained in it which may be lying on the sea bed in or near the wreck, the site ought to be protected from unauthorised interference,

he may by order designate an area round the site as a restricted area.

자료: 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역사적 건조물 및 고대 기념물법 1953」

3A.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보존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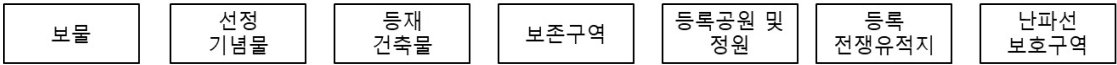
- (1) 위원회는 영국에 위치하고 위원회가 뛰어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조물의 수리와 보존, 또는 영국에 위치하고 이러한 건조물을 구성하거나, 건조물에 근접 또는 인접한 토지의 유지, 또는 이러한 건물 안에 보통은 포함되어 있는 물건의 수리 또는 유지, 또는 영국에 위치하고 위원회가 뛰어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뛰어난 역사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에 근접 또는 인접해 있지 않은 정원이나 다른 토지의 유지에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지출의 전액 혹은 일부의 상환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3A. Grants and loans for pre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etc.

- (1) The Commission may make grants for the purpose of defraying in whole or in part any expenditure incurred or to be incurred in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 building which is situated in England and which appears to the Commission to be of outstanding historic or architectural interest, or in the upkeep of any land which is situated in England and which comprises, or is contiguous or adjacent to, any such building, or in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ny objects ordinarily kept in any such building or in the upkeep of a garden or other land which is situated in England and which appears to the Commission to be of outstanding historic interest but which is not contiguous or adjacent to a building which appears to the commission to be of outstanding
-

historic or architectural interest.
자료: 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록 전쟁유적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거법 없으며, NPPF(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 의해 ‘지정유산자산’으로 분류(문화재청, 2016c: 115)



[그림 2-6] 영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적용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보물은 동산이며 나머지 유형은 부동산으로 ‘이동가능성’에 따른 분류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선정기념물과 보물은 ‘고고성’, 등록공원 및 정원과 등록전쟁유적지는 ‘역사성’, 난파선보호구역은 ‘해양문화성’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
- 공간단위에 따른 구분
 - 등재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뛰어난 가치를 기리기 위한 인증이며, 건축물 하나만을 고려하고 있기에 면적개념이 없는 반면 보존구역의 경우 도시 재건이 배경이기 때문에 면적·공간적 개념이 강함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법 제정
 - 동산문화재의 통합관리체계, 그리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재 법률과 체계는 없음. 따라서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는 존재하지 않음
 - 보물은 ‘1996년 보물법(Treasure Act 1996)’
 - 선정기념물은 ‘1979년 고대 기념물 및 고고학적 지역에 관한 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

- 등재건축물과 보존구역은 ‘1990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 등록공원 및 정원과 등록전쟁유적지는 ‘1953년 역사적 건축물 및 고대기념물법(The 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53)’ ,
- 난파선보호구역은 ‘1973년 난파선 보호법(The Protection of Wrecks)’
- ‘1983년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1983)’³⁾이 근거 됨

○ 개념변수 다중 적용

- 행정적 대분류단계(문화적자산, 역사적환경)의 개념변수로 이동가능성이 단일하게 적용되나, 법률적 분류에서는 고고성, 역사성, 공간단위, 해양문화성 등이 적용
- 문화재의 물리적 성질의 개념변수와 주관적인 가치 판단 요소가 포함된 개념변수가 혼재

○ 문화재 분류체계에서 세부 유형이 없는 병렬적인 분류체계

- 영국의 문화재 분류체계에서는 대분류 이하의 분류가 존재하지 않음. 대분류 단계에서 특정한 문화재 유형을 개별 정의하고, 새로운 문화재 유형은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변화 추세
- 즉, 상황 변화에 따라 수평·병렬적으로만 문화재의 지정체계가 분화되었기 때문에 동일 층위 간 개념변수의 잦은 충돌이 발생 가능

3) 「1983년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1983)」으로 인하여 English Heritage가 탄생했고, 이것이 결국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을 다양화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임. 복권기금 조성, 투자 유치, 수익 활동, 기부금 조성 등 같은 일련의 재원 조달 방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이유도 결국 국가유산법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음. 수립 이후 「국가유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는데 앞서 설명한 「도시 및 농촌계획법」이 주로 계획과 관련된 맥락을 다루는 반면에 「국가유산법」은 기금 조성 및 관리와 연관됨. 다시 말해 제도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문화재청, 2014c: 228)

제2절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분석

1.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운용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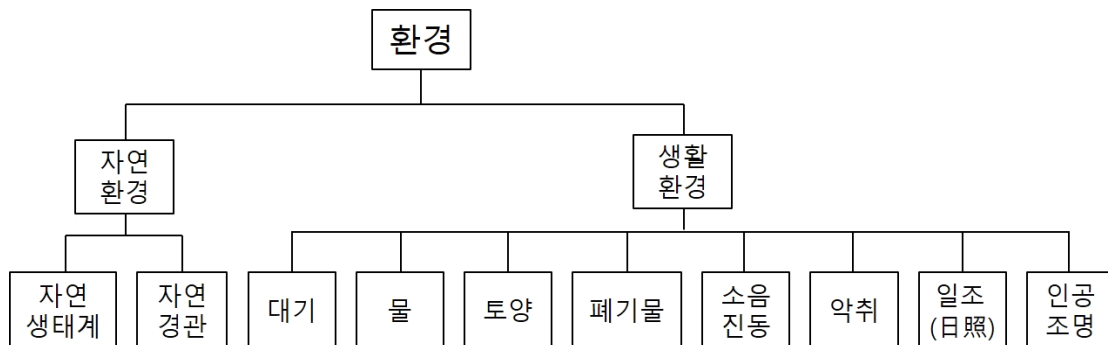
1) 환경부 - 환경유형 분류체계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4494호)

○ 분류 현황

-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
- 본법 제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
- 자연환경은 다시 자연의 상태와 관련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으로 구분되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으로 구분



[그림 2-7]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의 분류체계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분류체계 활용현황

- 분법 제정

- 「환경정책기본법」은 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의 유형에 따라 분법화

[표 2-1] 환경 분류체계에 따른 분법 현황

대분류	중분류	분법명
자연환경	자연생태계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	
생활환경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물	「물환경보전법」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악취	「악취방지법」
	일조(日照)	-
	인공조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자연환경 분야의 경우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포괄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
- 생활환경 분야의 경우 중분류 단계의 유형별로 분법 제정. 일조(日照)관련 법령은 아직 분법화되지 않음

[표 2-2] 환경부 조직표

실/국		부서명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보건관리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실/국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관	화학안전과
		대기환경정책과
		청정대기기획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기후미래정책국		기후미래전략과
		환경산업기술과
		국제협력과
		지구환경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
	환경융합정책관	국토환경정책과
		통합허가제도과
		국토환경평가과
		환경경제통계과
		환경감시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과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생활하수와
		토양지하수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
		생태서비스진흥과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자원활용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 조직도의 경우 실/국/과의 위계가 분류체계와 일치하진 않음
- 자연환경, 물, 폐기물의 경우 국 또는 실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할

- 반면, 대기,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은 과단위에서 해당 업무 담당
- 악취의 경우 대기의 한 분야로 업무 진행(「악취방지법」의 소관부서는 대기관리과로 확인)
- 부처 조직 구성은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 과제 제시와 함께 변함. 지난 정부 환경정책실 아래에 기후대기정책관 하위부서로 대기과 기후관련 부서가 함께 있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 현재 기후 관련 업무는 국단위(기후미래정책부)로 별도 분리·확장되었고 대기관련 업무는 환경정책실 하위부서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수준에서 통합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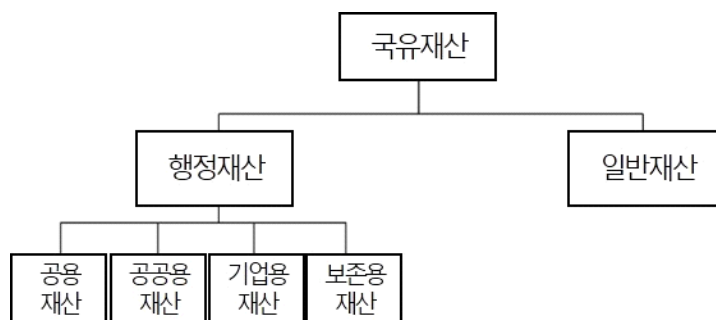
2)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 분류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법률 제14841호)

○ 분류현황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
- 본 법에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크게 구분
-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세분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지칭
- 국유재산은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림 2-8]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분류체계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분류체계 활용현황

- 차별된 규제 적용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처분 및 관리 등에 있어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 법령 구조상에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어 관련 조항을 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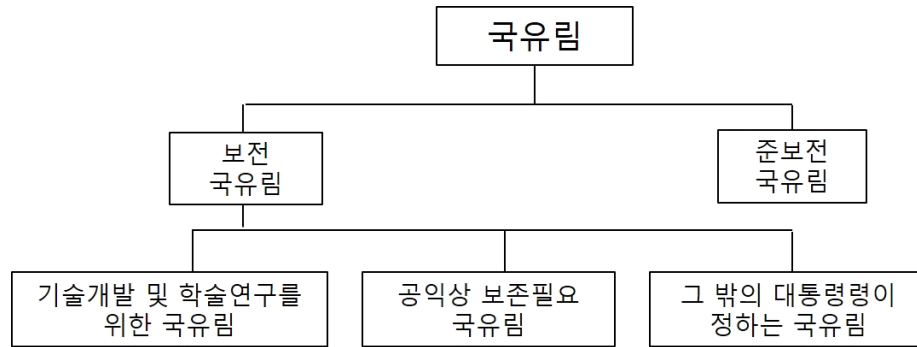
3) 산림청 - 국유림 구분

○ 관련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8호)

○ 분류현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
- 보전국유림은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
-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고, 준보전국유림 동법상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이 두 국유림유형의 구분은 재산유형에 따른 행정규제의 적용 차이가 직접적인 분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
분류체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1. 보전국유림

-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 나. 사적(史蹟)·성지(城址)·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 분류체계 활용현황

- 차별된 규제 적용

-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는 반면 준보전국유림은 특정한 경우 매각 및 교환이 가능한 등 처분에 있어 관리상의 차이를 보임

4) 산림청 - 산림보호구역 구분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법률 제14519호)

○ 분류현황

-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방제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곳으로, 본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
- 산림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오던 것을 재구성 한 것⁴⁾
-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의 분류기준은 **보호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보호구역 분류체계

4) 2009년 산림보호법 제정 이유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분류체계 활용현황

-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보호·관리 수행
 -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즉 지정 목적별로 차별화된 보호·관리 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 예를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그 보호·관리를 위해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을 별도의 조항에 명시하고 있음(「산림보호법」 제10조의3)

5)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어촌경관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분류

○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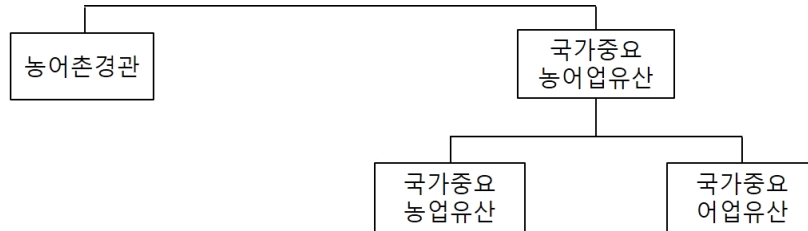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81호)

○ 분류현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정
- 법 제정 당시 농어촌의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농(산)어촌 경관보존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5년에는 동일조항에 추가적으로(제30조의2, 제30조의3)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

- 농어촌 경관 및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을 총괄하는 상위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개발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의 경관 및 농어업의 유무형적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항 구성



[그림 2-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보전대상의 분류체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5.2.3.]

○ 분류체계 활용현황

- 관리주체의 다양화(부처별 관리 시행)
 -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어업유산은 그 지정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이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주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각 부처별로 별도의 지정 관리 기준을 고시
 - 농어촌 경관 또한 그 보전을 위해 지자체와 해당지역 주민이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야하고,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는 지자체의 조례를 따름. 즉 관리 주체가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로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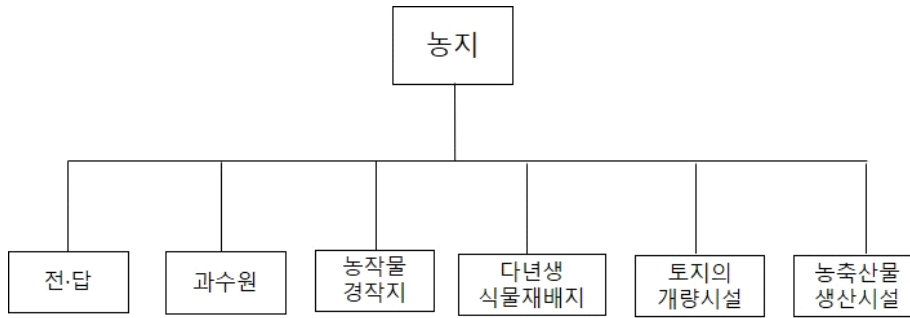
6)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분류

○ 관련법령

- 「농지법」(법률 제14242호)

○ 분류현황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제정
- 본 법 제2조 1호에서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재배지, 토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구분
- 「농지법」에서는 농지와 초지, 임야 등 일반적으로 농업용지를 사용하는 대상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타 법에서 규정하는 지명과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와 실제 농업 생산을 위한 활용농지와 구분을 한다는 점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목은 농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그림 2-12] 「농지법」상 농지 분류체계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뿌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분류체계 활용현황

- 이용 목적에 따른 농지분류

- 「농지법」의 운용 목적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인만큼 이를 위해 농지의 유형을 세분한 것으로 확인
- 농지의 이용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다른 토지와 구분 기준으로 적용
- 즉, 실제 농지의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초지와 같이 축산업과 관련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농지의 이용에 기준을 둠
- 따라서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 관련 생산 토지라는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다른 축산업, 임업 등에 관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분류되지 않음

2.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운용 사례 조사의 시사점

○ 분류체계와 행정 규제와의 연관성 확인

- 분류체계에 따라 분법화 진행하는 타 부처 사례 확인하였음(환경부)
- 분석결과 분류 유형별 관리방안이 상이하여 유형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즉, 유형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체계 개선 기준으로서의 분류체계 역할 확인
- 분법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대상 유형별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것 확인 가능
- 한편, 분류체계 상 관리 방식이 상이할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사례도 확인
- 농지와 같이 이용 목적에 기준을 두어 명확한 분류체계의 기준을 설정함

○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분류체계 재구성 사례 확인

-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이전에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보안림이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호구역의 유형을 새로이 분류
- 따라서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현재의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고, 당시 이를 통해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될 것을 기대하였음
- 즉 산림청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부처 조직도와 분류체계 간 연관성 확인

- 유형별로 상이한 규제 운용으로 인해 행정체계 및 조직이 이를 반영하여 구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유형별 업무량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해 법령상 분류체계와 행정체계 및 조직 구성 간의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그러나 행정체계 및 조직 구성의 기본 틀은 부처별 분류체계를 참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

제3절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및 분석

1.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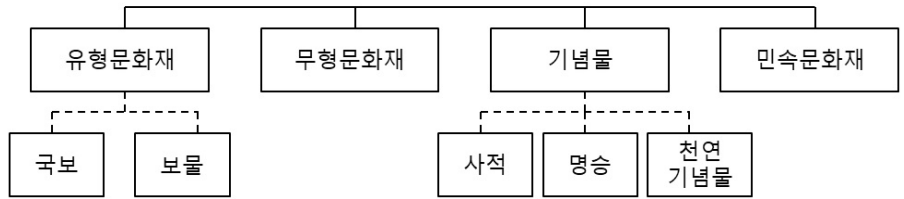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대분류 체계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4가지로 분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문화재의 종류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 총 7가지로 문화재 분류하였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국보와 보물을 포함, 기념물에 속하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개념상 2단계의 종적인 분류체계를 1단계로 통합하여 수평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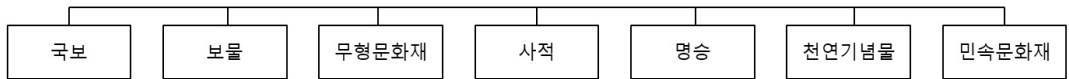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림 2-13]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분류체계



[그림 2-14] 한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
 - 법령상 유형문화재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두 개념을 ‘형태’의 변수로 구분함을 추정할 수 있음
-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기념물은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
- 유형문화재는 원형유지가 가능하지만 무형문화재는 전승하는 과정에서 전형(典型)에 따라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승형식’ 또한 개념변수가 될 수 있음
 - 전승방법에 있어서도 유형문화재는 물질전승인 반면, 무형문화재는 행위전승의 형태를 띠고 있음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민속문화재는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문화재에 속하지만, ‘민속’이라는 속성을 별도로 분류
 - 유형문화재의 경우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되는 반면, 민속문화재는 국민생활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어 민속문화재는 예술성을 제외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
 - 또한 민속문화재의 경우 국민의 생활상의 변화 이해에 필요한 생활문화성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문화성이 개념변수로 적용

- 기념물은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문화재에 속하지만, ‘자연성’, ‘경관성’, ‘예술성’, ‘기술성’ 등의 속성을 별도로 분류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자연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유형적 소산으로서 자연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지 및 시설물을 제외한 기념물과 유형문화재는 자연성 포함 여부로 구분 가능
 - 명승은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경관성을 해당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의 경우에도 경관성에 대한 지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사적 지정 추세를 살펴 볼 때 경관성이 지정 판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 법령상 유형문화재는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것이고, 기념물 중 사적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 보물의 세부 종별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에서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만 예술성이 적용되며 기술성을 지정기준의 하나로 적용

○ 공간단위에 따른 구분

- 유형문화재의 건조물은 점적인 개념이고 기념물의 사적지나 명승, 민속문화재의 민속마을은 면적인 개념으로 공간단위가 개념변수가 될 수 있음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문화재 유형 전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별도로 보호 관리
- 행정적 분류체계에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들을 관리가 용이하도록 재구성

○ 개념 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유무형성, 자연성, 공간단위, 경관성, 예술성, 생활문화성, 인문성 등이 적용

- 문화재의 물리적 성질의 개념변수와 주관적인 가치 판단 요소가 포함된 개념변수가 혼재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형태에 의한 분류, 민속문화재는 민속성이라는 속성에 의한 분류, 기념물은 분류단위로서 부적합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형태에 따른 분류로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도 유형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음
 - 형태에 의한 분류와 형태에 의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속성에 의한 분류가 동일 위계에 위치함으로 인해 문화재의 개념에 불명확성 발생
- 행정적 분류체계의 대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분리하여 구성됨
- 이러한 것은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문화재유형들과 함께 분류단위로 논의될 수 없음

○ 대분류단계 문화재 유형의 포괄성 부재

- 대분류단계는 하위 분류체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기념물은 하위 개념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적합
 - 기념물의 사적은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임
 - 명승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임
 -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 으로 세 유형의 공통점이 부재함
- 따라서 대분류 단계의 전제는 각각의 하위 문화재를 포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대분류 단계에서 문화재의 포괄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문화재 분류에서 기념물을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음
- 즉, 대분류를 전제하고 있는 공통성, 포괄성에 포함되지 않는 하위 유형으로 인하여 대분류의 전제 기준에 부적합

2.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관련 쟁점

1)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최종 대분류체계

- 최종안의 대분류체계는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유형유산은 유적·건조물(부동산)과 유물(동산)로 분류
 - 5차 회의(2004. 9. 18.)까지 논의된 체계에서 대분류 체계가 최종안으로 지속
 - 대분류체계 유형 명칭을 ‘유산’으로 통일
-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다시 유형유산을 유적·건조물과 유물로 분류하는 2단계 분류 방식
 - 최종안의 대분류체계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기념물의 사적을 유형유산의 유적·건조물로 이동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자연유산으로 이동하여 자연성을 분리
 - 현행 민속문화재는 유형유산의 유적·건조물과 유물로 분리하여 이동, 민속성을 유형유산의 하위로 통합
- 현행 유형문화재에 속하던 전적류를 대분류의 새로운 유형 ‘기록유산’으로 제시
 - 기록유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자문회의 의견(2004. 10. 20.)’에서 기록유산은 수적으로도 많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은 통해서 알 수 있음
 - 반면 자문회의 의견(2004. 10. 20.)에서 김춘실은 기록 유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언급



[그림 2-15]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체계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한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대분류단계에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은 형태에 따른 분류이며, 자연유산과 기록유산은 속성에 따른 분류로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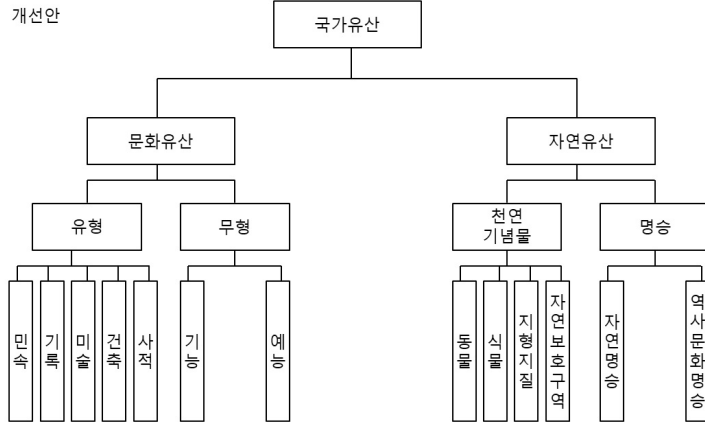
- 보고서의 문화유산 유형별 정의⁵⁾를 살펴보면 유형유산은 기록유산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나 동일 위계에서 기록유산을 별도로 분류
- 또한 기록유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대유산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같은 위계의 유형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시대적 차이가 발생하며 세부 유형 중 언어전승은 형태분류에 따르면 무형유산에 속함

2)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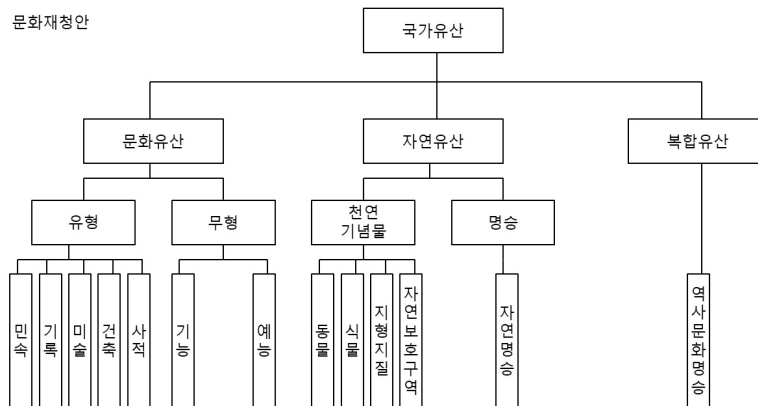
○ 최종 대분류체계

- 최종안의 대분류체계는 ‘국가유산’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대별하고,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2단계 분류
 - 현행 문화재보호법 기념물의 사적은 유형문화재로 이동,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자연유산으로 이동
 - 현행 문화재보호법 민속문화재의 건조물과 민속마을은 유형문화재의 건축으로 이동, 민속문화재의 유물은 유형문화재의 민속으로 이동
- 문화재청안 분류체계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포괄적인 분류체계 개념인 ‘복합유산’을 제시하여 문화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역사문화명승을 별도로 분류
 - 우리나라는 건축, 미술, 기록유산 등 분야별 유산이 풍부한 전통이 있으나 유형문화재로만 분류되어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
 - 최대분류 단계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 것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체계와 어느 정도 합치
- 등록문화유산은 지정과는 별개의 방식에 따라 별도 분류체계를 둠

5) “유형유산(물질유산)은 건조물, 동산문화재, 유적 등 실체가 있는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 기록유산은 언어, 문자 등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언어전승, 인쇄물, 서적들을 말하며, 현대 기술의 산물로서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영상물, 음반,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청, 2005: 35)



[그림 2-16]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 분류체계(개선안)



[그림 2-17]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 분류체계(문화재청안)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국가유산’이라는 최상위 개념 사용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유산’을 상위 개념으로 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132)
- 최대분류 단계에서는 ‘유산’, 대분류단계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문화재’로 명칭을 사용
 - ‘자연성’이 강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경우 ‘문화재’라는 명칭보다 ‘유산’으로서의 개념이 적합
 - 국제적으로 “유산(Heritage)” 개념을 통용,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관리가 각 국가 뿐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

- 한 위계에 하나의 동일한 분류 기준 적용
 - 대분류체계에서 속성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1차적으로 분류
 - 문화유산 하위체계는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
 - 자연유산 하위체계는 ‘자연성’의 속성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분류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에서 분류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과 중복 문제를 해소
- 그러나 대분류 기준으로서 설정을 하고 있으나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의 개념 간 위계의 모호성 발생
 - 최대분류와 대분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을 추가 하였으나 국가유산의 개념이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절한지 의문
- 또한 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추세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즉,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차이와 단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 발생
- 유형문화재의 하위분류에 있어서 민속, 기록, 미술, 건축, 사적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 단순히 유형문화재의 일반적 특징 내지는 속성에 따라 분류는 하는 것이 문화재의 특징을 반영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 즉, 유형 문화재 중에서도 건축과 미술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문화재의 분류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진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자연유산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구분도 모호한 측면이 발생함
 - 천연기념물을 동물, 식물, 지형·지질,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념물의 범주와 별도로 지정
 - 그러나 천연기념물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은 현행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류방식인 문화역사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지구과학기념물과 상당한 차이를 발생
- 자연유산으로서의 명승과 복합유산으로서의 명승을 구분하여 명승의 특성에 따라 복합유산의 유형을 도입
 - 명승이 가지는 복합적 특성에 따라 제시된 분류체계는 자연유산의 명승과 복합유산의 역사문화명승으로 구분
 - 그러나 현행 문화재청의 명승 구분인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명승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분 기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제4절 통일 대비 북한 문화재 분류체계

1. 북한의 문화유산 분류체계 현황

1) 문화재 대분류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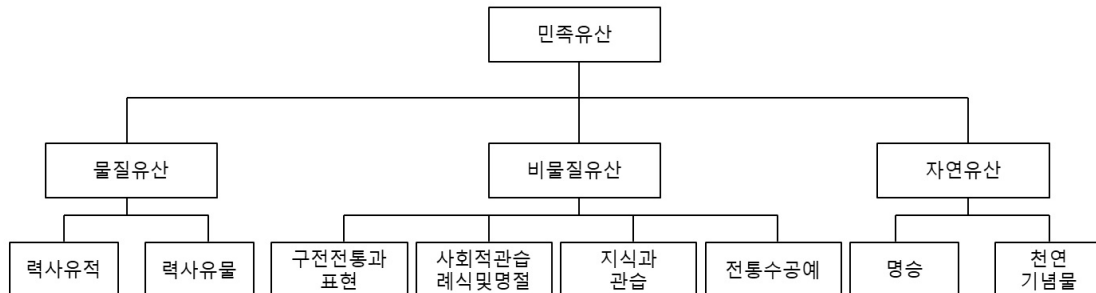
○ 「민족유산보호법」의 문화재 대분류 체계(2015)

- 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민족유산보호법」이 채택되면서 2012년 8월 7일에 채택된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이 사라짐
-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2012)에서 사용되던 ‘문화유산’ 용어가 ‘민족유산’으로 변경
-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에서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 정의하고 있으며,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
 -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과 같은 역사유물이 속함”
 -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의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업 같은 것이 속함”
 -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닷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함”
- 동법 제9조(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에서 “이 법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원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자연유산은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는 1995년에 채택되어 1999년, 2008년, 2011년 세 차례 수정⁶⁾한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6) 국내에는 1999년에 수정된 법과 2011년 수정된 법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음(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 2016년 9월 12일 검색)



[그림 2-18]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의 대분류체계



[그림 2-19] 북한 민족유산보호법의 분류체계

2) 대분류체계 적용 개념변수 검토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은 ‘유무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자연유산은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서 유형인 ‘물질유산’에 속하지만, ‘자연성’이라는 속성을 별도로 분류
-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의 소산인 반면,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과 같이 자연적 활동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음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유형에 의한 대분류 단계 구성

- 문화재 대분류단계는 통합법의 역할을 하는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들로 구성
- 그러나 자연성을 전제로 한 문화재 유형인 자연유산은 물질유산·비물질유산과 특성이 상이하므로,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문화재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정 및 보호·관리는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 관할

○ 개념 변수 다중 적용

-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속성에 따른 구분이 적용
· 한 위계에서 2개의 분류 개념이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객관적인 물리적 성질의 개념변수(유무형성)와 비교적 명확한 속성 변수가(자연성) 혼재

○ ‘민족유산’을 최상위 개념으로 정의, ‘유산’으로 명칭 통일

-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규정
- 또한 대분류체계 유형 명칭을 모두 ‘유산’으로 통일

2. 통일 대비 한국과 북한 문화재 제도 비교의 시사점

○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 법적 분류체계

- 한국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보호·관리해왔음
 - 「문화재보호법」에서 함께 보호·관리하고 있던 무형문화재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보호·관리
- 북한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이 채택되어 한국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사적에 속하는 역사유적·역사유물과 명승지·천연기념물을 각각 구분하여 보호·관리
 - 이후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이 채택되며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을 물질문화유산과 함께 보호·관리하기 시작
 -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이 채택되어 물질유산, 비물질유산과 함께 자연유산을 규정
 - 자연유산은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에서 별도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의 민족유산 분류체계와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 한국은 유형문화재를 크게 동산과 부동산 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북한

또한 물질유산을 력사유물(동산)과 력사유적(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되며 확대된 무형문화재의 확대된 지정범위와 북한의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의 비물질유산의 지정 범위가 유사
 - 한국은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일곱 가지 유형으로 새로운 유형인 ‘전통지식’과 ‘구전전통 및 표현’으로 확장
 - 북한은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의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로 규정
- 한국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기념물’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며 북한은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자연유산’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북한은 민속문화재에 대해 별도로 지정·분류하고 있지 않음
 -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이른바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민족 문화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개조하여 체제선전과 주민교양에 적극 이용하여 왔고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종교문화재와 민간신앙 등과 관련된 민속자료, 그리고 민속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박대남, 2008: 10)

○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인식의 차이

- 한국과 달리 북한은 터만 남아 있다가 1990년대 이후 복원한 유적도 력사유적의 국보유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정릉사 8각7층 석탑과 광범사 8각5층 석탑은 원래 목탑으로 터만 전해오던 것을 1990년대에 새롭게 복원했는데 국보유적으로 지정됐음
- 또한 황해남도 구월산에 환인·환웅·환검 등 세 성인을 제사 지내던 사당으로 일제 때 불에 타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던 삼성사에 2000년 삼성전을 복원해 역시 국보유적으로 지정(정창현, 2012: 242)
- 동일한 문화재 유형인 한국의 사적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남북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지정 가치 평가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있어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할 필요

○ 북한의 정치적 이념이 개입된 문화유산

- 북한 법상 ‘천연기념물’은 일반적으로 학술적, 과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할 희소한 동·식물, 지질, 광물 등을 비롯하여, 독재체제 및 김일성 가계 우상화와 관련된 대상과 지리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음(김성옥, 2010: 53)

- 따라서 김일성 일가와 관련되어 지정된 천연기념물과 같이 정치적 이념이 개입된 북한의 문화유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한국과 북한의 분단현실을 기념하는 문화유산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남길 것인지 문화유산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

○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제안(정은찬·문철은, 2017: 107-108)

- 첫째, 교류협력의 범위와 내용의 확대 필요
 - 과거에는 고구려 중심의 문화유산교류였지만 생활문화 분야 포함 필요
 - 북한의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풍습, 혼상제풍습, 명절풍습 등
- 둘째, 북한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물질적 지원 이외에 기술적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 관리 필요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지원 필요
- 셋째, 문화유산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제도적, 인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
- 넷째, 민간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함
 - 종교, 관련 NGO, 학생단체,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남북 문화유산 교류를 문화재청, 특정단체, 관련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참여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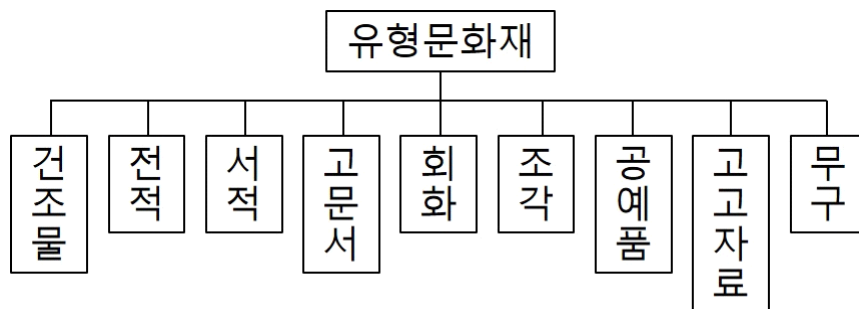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1. 유형문화재

1)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의 현황

(1) 제도상 정의 및 분류 현황

-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되고 있음
- ‘유형’이란 형태가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실재한다는 영어의 ‘tangible’을 의미함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이라는 넓은 의미를 형태가 있는(tangible) 것들 중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이들 이외의 문화재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과 구분되고 있음
- 유형문화재의 세부유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본법에 정의된 유형문화재의 종류로 ‘무구’가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림 2-20] 유형문화재 세부유형

- 그러나 [그림 1]과 같은 현행 유형문화재의 세부 유형은 기념물, 민속문화재와 같은 유형적(tangible)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문화재의 세부유형과의 형태적 유사성(예: 동일한 주거건축 형태를 갖고 있지만 유형문화재(보물)로 분류되는 대전 회덕 동춘당(보물 제209호)과 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되는 경주 월암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34호))이 있고, 단순한 유형 분류체계의 관점에서는

- 문화재 세부유형간 유형중복현상이 발생(예: 유형문화재의 건조물과 사적의 시설물)
- 따라서 각 유형별 지정(指定) 및 등록(登録) 단계(가치평가단계)에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지정기준 및 등록기준이라는 별도의 분류기준을 두고 있음
-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유형 분류(예를 들어, 유형문화재(건조물)과 사적(시설물)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 주관적 가치평가요소가 작용한다는 점
-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건조물과 시설물로 분류되는 기준으로 예술성(유형문화재의 건조물이 지정될 때에만 작용하는 가치평가 요소)을 꼽을 수 있는데, 예술성이란 심미적 가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주관적 심상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주관적 가치평가요소가 분류절차 상 개입할 경우 객관적 분류결과 도출의 어려움 발생하고 이는 일반인의 공감을 얻기 어렵게 될 수도 있음

(2) 가치평가 현황

- 유형 혹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 지정문화재가 되기까지 해당 소산물은 2번의 가치평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구조화 해볼 수 있음⁷⁾



[그림 2-21] 문화재 가치평가 과정

- 첫 번째 가치평가단계에서는 해당 소산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
- 따라서 현행법상 문화재의 정의에 따라 첫 번째 가치평가 단계에서 작용하는 가치평가 요소로 국가성, 민족성, 세계성,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경관성을 꼽을 수 있음
- 1단계 가치평가 이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보호/규제의 틀 속에 해당

7) 행정절차상 가치평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증될 만한 대상이 확인되면 인증절차가 시작됨

문화재를 포함시키기 위한 두 번째 가치평가 진행(인증). 이를 통해 지정문화재 혹은 등록문화재로 인증

- 예를 들어, 유형문화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보물로 지정할 수 있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23조)
-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 즉 유형문화재 중 보물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음

[표 2-3] 보물 및 국보 지정 적용 가치평가요소

구분			가치평가 요소	
보물	건조물	목조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석조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분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조적조 및 콘크리트 건축물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전적 서적 문서	전적류	사본류	계통성, 역사성
			판본류	역사성, 판본학적
			활자본류	역사성, 인쇄사적
		서적류		서예사적 대표성, 금석학적, 사료적
		문서류		역사성, 사료적
	회화 조각		특이성, 문화사적, 시대성, 회화사적, 조각사적, 제작기법 우수, 작가 또는 유파 대표성, 문화적 의의	
	공예품		현저한 특성, 문화사적, 공예사적, 제작기법 우수	
	고고자료		학술성, 역사성, 제작상 가치	
	무구		희귀성, 대표성, 군사적 의의	
국보			특히 뛰어난 가치, 높은 보존가치, 제작의장(意匠) 및 제작기술의 독보적(유례없는) 우수성, 특이성, 저명한 인물 관련성	

- 또한 유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수 있음⁸⁾
-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즉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중 등록문화재로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등록될 수 있는 가치평가 기준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됨

[표 2-4] 등록문화재 등록 적용 가치평가 요소

내용		가치평가 요소
공통기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간성/시기성 (제작 후 50년 이상) 보호 조치 필요성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기념비적, 상징성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역사성, 문화성, 가치공유성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대성

- 두 번째 가치평가 단계에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는다면 비지정문화재라고 명명할 수 있음
- 동산문화재 중 비지정문화재에는 일반동산문화재가 해당

(3) 주요특징

- 일반동산문화재의 별도 분류범위 설정 및 운영 확인
 -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즉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상 분류방식과 상이한 분류체계 별도 마련
 - 또한 동일한 위계에 상하위 개념이 될 수 있는 유형이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여 분류의 불명확성 확인 가능(예: 불교회화 및 종교회화가 대 분류 위계에 동일하게 위치)
- 법률상 분류체계와 행정상 분류체계의 비일치
 - 유형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상 최상위계에는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유형문화재과의 업무는 크게 건조물문화재 관리와 동산문화재 관리로 대별하고 있는 것 확인 가능

- 따라서 법령상 분류체계 및 행정조직구분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2)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유형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유형문화재는 행정편의상 다시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와 장소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동산문화재로 분류
- 부동산문화재에는 건조물이 해당되며, 건조물 이외의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이 해당
- 유형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유형문화재를 총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를 구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할 예정
-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 일부는 해당 분류내용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보다는 연구를 위해 문화재 유형을 임의로 분류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해당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문화재 유형분류의 기준을 추정하여 정리
- 유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혹은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1988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음
- 다만 최근(2016년)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에서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와 더불어 지정기준 개선안을 제시

[표 2-5] 유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목록

구분	제목	연구자/발행처	연도	유형	주제
동산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	문명대 외/ 문화재관리국	1988	보고서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의 가치재평가를 위한 재설정된 가치판단기준 제시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문화재청	2004	행정 간행물	동산문화재 관리 및 보존
	「문화재 분류체계」	장호수 외 /문화재청	2005	보고서	문화재 분류체계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보고서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구분	제목	연구자/발행처	연도	유형	주제
	“사례조사를 통한 근대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연구-총체적 분류와 천주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김정동/교회사학	2013	학술 논문	근대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안) 제시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이정수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보고서	근대 동산 및 건조물 문화재의 분류체계 개발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	정영수 외/ 문화재청	2016	보고서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지정기준 개선안 제시 및 일괄공모제 실행방안 제시
부동산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	문명대 외/ 문화재관리국	1988	보고서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의 가치재평가를 위한 재설정된 가치판단기준 제시
	「문화재 분류체계」 보고서	장호수 외 /문화재청	2005	보고서	문화재 분류체계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보고서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건축문화재 분류체계 적용에 관한 연구”	최연규/목원대학교	2012	석사학위논문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건축문화재 속성분류체계 구축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이정수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보고서	근대 동산 및 건조물 문화재의 분류체계 개발

(1)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문화재관리국, 1988)

- 주요내용

- 당시 지정된 문화재가 오랜 기간 상이한 국가 제도 및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가치판단되어 왔고 지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정문화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보·보물·사적을 필두로 하여 지정문화재 전반에 걸친 재평가작업 실시
- 재평가를 통해 지정문화재 가운데 해제해야 할 것, 등급이 상향 혹은 하향 조정 되어야 할 것,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 조성 년대 및 조성국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재설정 등을 정함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언급이 없음
- 가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조각, 회화·전적, 공예 분야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재평가 내용을 담고 있음

- 각 문화재 유형별 재평가 담당 연구원들이 특정한 가치평가 요소를 언급하며 재평가의 당위성 주장
- **조각**의 경우 특정한 지정문화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국보 가운데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 보물 가운데 국보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가치재평가 진행
- 주관적 서술에 의한 가치평가 기준으로는 양식의 대표성, 시대적 대표성, 학술성, 특수성(최고의 걸작), 사료적가치(제작년대有), 완전성(형태의 완전성)을 사용하고 있음
- **회화**의 경우 국보는 ‘작품 자체가 지닌 격조가 각별히 뛰어나고, 학술자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작가가 역사상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야하는 등의 조건을 두루 구비한 명실 공히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를 대표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며, 보물은 ‘국보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것’ 으로 정의하면서 지정 가치기준을 언급
- 가치평가 기준에 추가적으로 작품의 희귀성을 언급하며 희귀성이 높을 경우 지정기준 제반조건의 완화 가능성을 제시. 조각의 경우와 동일하게 특정한 지정문화재를 선택하여 가치재평가 진행
- **전적**의 경우 ‘전적의 발달 변천과정에 있어서 문화사적 또는 역사적으로 비중있는 자료’ 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희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적으로 보존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음
- 앞선 유형들과 동일하게 특정 지정문화재를 선별하여 지정문화재의 가치재평가 진행
- **공예**의 경우 지정문화재의 잘못된 명칭을 개칭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정문화재의 지정조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정문화재를 선별하여 가치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때 강조하는 가치지정기준으로 학술성, 시기성(가장 오래된), 희귀성, 유일성, 특수성(가장 뛰어나)을 사용

[표 2-6] 문화재관리국(1988)의 동산문화재 가치평가요소

구분	적용된 가치판단 기준
조각	양식의 대표성, 시대적 대표성, 학술성, 특수성(최고의 걸작), 사료적가치(제작년대有), 완전성(형태의 완전성)
회화	특수성, 학술성, 완전성, 인물성, 희귀성
전적	문화사적, 역사성, 희귀성

구분	적용된 가치판단 기준
공예	학술성, 시기성(가장 오래된), 희귀성, 유일성, 특수성(가장 뛰어난)

- 시사점

- 당시 문화재 지정현황을 가치평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재평가하려는 시도
- 그러나 소수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재평가의 객관적인 가치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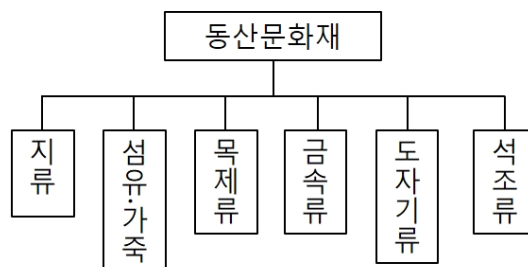
○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문화재청, 2004a)

- 주요내용

- 문화재청은 일선에서 직접 소장 및 관리되고 있는 개인소장 동산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관리를 위해 소장품의 보존 조치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담은 안내지침서 간행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책자에서는 동산문화재를 재질별로 구분하고 있음
- 재질별 구분으로 책자의 간행 목적이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전달이기 때문에 재질별 보존관리 방법이 상이한 동산문화재를 재질에 따라 지류, 섬유·가죽류, 목재류, 금속류, 도자기류, 석조류로 분류
- 한편 동산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음

- 시사점

- 이동이 쉽고 개인이 직접 소장하는 경우가 많은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관리방법에 따라 재질별로 동산문화재 유형 구분



[그림 2-22] 문화재청(2004a)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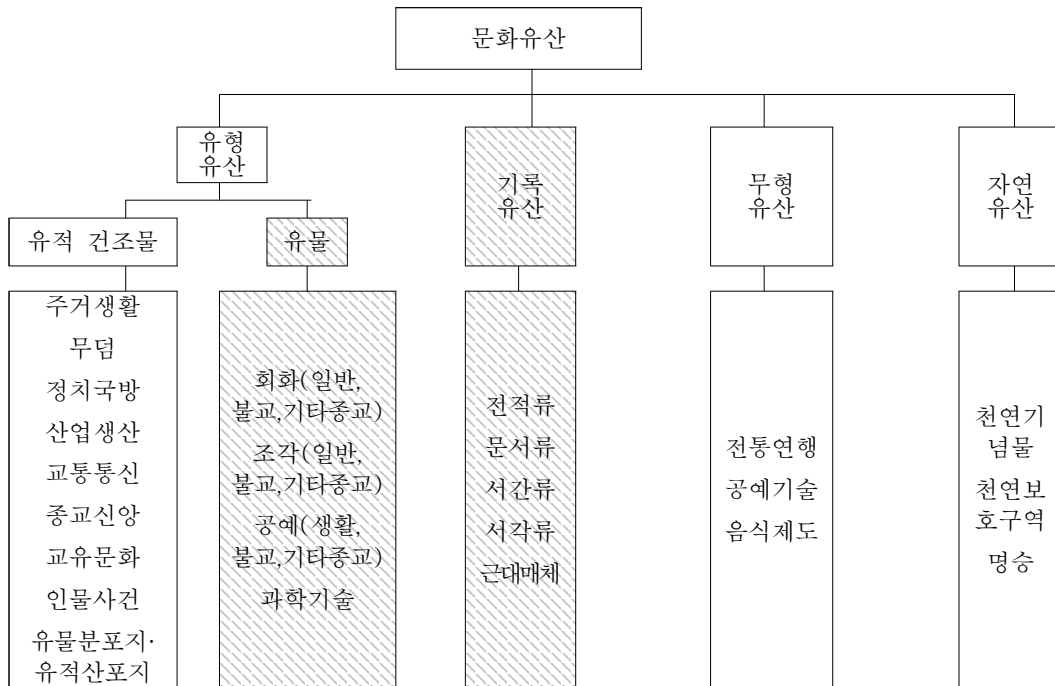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문화재 분류체계의 정비 및 제도화를 위해 2004년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관련 TF 구성하여 연구 추진
- 해당 연구는 기관별 문화재 분류기준이 표준화되고 있지 못한 당시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문화재 분류체계(안)을 작성 및 코드화 함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대분류단계에서 문화유산을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4개 유형으로 구분
- 해당 유형들을 최대분류단계에서 구분한 명확한 개념변수를 제시하지 않았음
- 4개의 유형 중에서 동산문화재에 해당할 수 있는 문화재는 유형유산의 ‘유물’ 과 기록유산으로 분리됨
- 기록유산을 최대분류단계에서 별도로 분리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고, 중소 분류단계 별 분류기준도 별도 언급이 없음⁹⁾
- 유물의 경우 중·소분류 단계에서 대상 유물의 성격에 따라 대별 후 그에 따른 종류별 구분 (예:회화(대)-산수인물화(중)-산수화(소))
- 가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

- 시사점

- 분류체계상 유형유산을 동산(유물)과 부동산(유적 건조물)으로 1차 구분 시도
- 문화재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코드화를 염두에 둔 속성별 분류체계 구성

9) 2017년 7월 4일 자문회의에서 당시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동산문화재 혹은 전체 분류체계상 기록유산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기록유산을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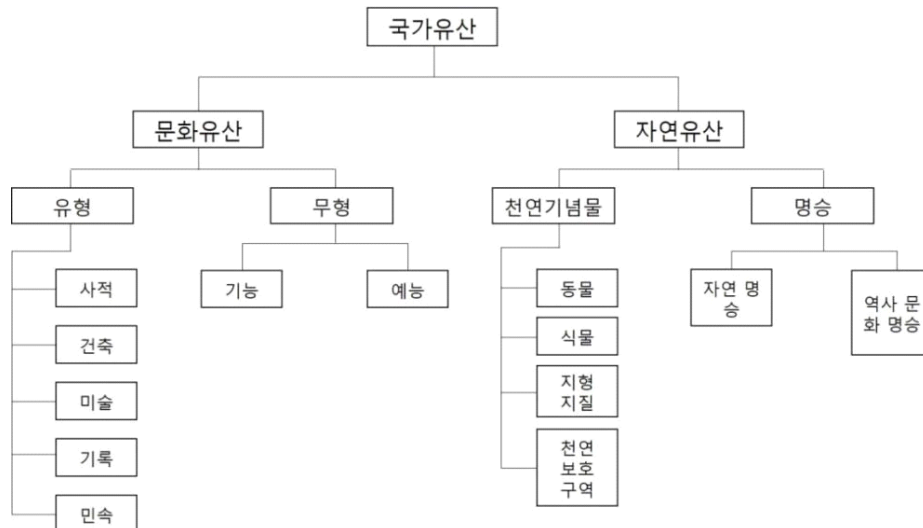
[그림 2-23]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주요내용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의 개념정의, 문화재 분류체계와 더불어 지정체계를 함께 논의
- 당시 논의된 지정체계 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급 분류에 관한 논의로 한정하여 연구진행
- ‘문화재’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총체적 명칭에 ‘유산’을 적용하고, 세부 항목을 지정할 때는 ‘문화재’로 통일하는 방안 제시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연구된 분류체계(안)을 바탕으로 내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체계 및 범주를 정함
- 국제적 추이를 반영하여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대별하는 개선(안) 제시하였으며,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새로운 분류체계(안) 중 ‘문화유산-유형-미술, 기록’에 포함. 또한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것 중 기록유산을 별도의 카테고리 분류
- 여러 차례 진행된 자문회의에서 중분류단계의 문화재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설정 및 용어 사용에 관한 것이 주로 논의

- 가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동일 문화재 유형이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에 구분되어 지정된 사례를 지적(예: 보부상 관련 전적의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
 - 민속문화재를 해체하여 유형문화재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자문위원은 가치가 더 저평가 될 수 있음을 우려가 있음
 - 또한 고고학적 중요도와 미술사적 중요도에 따라 고고자료와 미술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자문의견 확인
 - 즉, 문화재의 형태보다는 해당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측면을 적용하여 분류 시도. 결론적으로는 ‘역사문화유물’로 분류체계 상 미술의 개념 확정
- 시사점
- 문화재 분류체계 논의에 있어 문화재 본연의 특성보다는 개개의 문화재가 갖는 상대적 의미/가치평가의 관점에서 분류하려는 전문가들의 의도 확인
 - 예를 들어, 고고자료가 별도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고학적 중요도를 무시 못 하기 때문이며, 민속과 관련된 유산이 별도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민속의 의미가 더욱 더 저평가 될 수 있기 때문
 - 분류단계별 개념변수의 성격이 일관되지 못함
 - 대분류 단계-문화유산을 형태에 따라 유형/무형으로 구분한 반면, 자연유산은 특성(인문성)에 따라 구분됨
 - 중분류 단계-사적과 명승은 공간단위, 미술과 전적은 문자사용 여부, 민속과 그 외의 유형은 생활문화성의 포함 여부로 구분함
 - 일관되지 못한 분류기준으로 인해 여러 속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 명확한 분류가 어려워질 수 있음(예: 과거의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회화 작품 김홍도 풍속도가 민속문화재로 포함될 수는 없는지 고민해볼 수 있음)



[그림 2-24]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사례조사를 통한 근대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연구-총체적 분류와 천주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김정신, 2013)

- 주요내용

- 개인소유의 동산유물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근대동산문화재의 총체적 분류체계(안)을 제시
- 특히, 교회유산의 분류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분류체계(안)상 천주교 동산문화유산의 위치를 세부유형화(소분류) 하여 제시함
- 근대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등 기관에서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동산문화재 분류현황 및 박물관 관련 서적에서 박물관 전시관리를 위한 한국의 문화유산 분류 사례를 연구하였고, 국외의 경우 일본, 호주, 중국, 영국, 독일의 등록문화재 분류현황 및 체계를 살펴봄
- 또한 종교별 박물관(유물)관 및 관련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기준을 확인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산문화재 분류체계의 구축방법 및 기본원칙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함

[표 2-7] 근대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기본 원칙

구분	분류기준	분류의 기본원칙	비고
대분류	업무분야별 분류	사회적 구조영역별 업무조직 단위별	역사 및 민족적 영역 인물 및 장소성과 지역성 문화별 및 관리 조직별
중분류	영역별 분류	사용영역별 생산 또는 사용기능별 분류	유형별, 역사적 사건별, 중요인물 행적별 생산 및 사용별
소분류	개체별 분류	생산 재질별 사용 용도별	개개의 해당명칭

자료: 김정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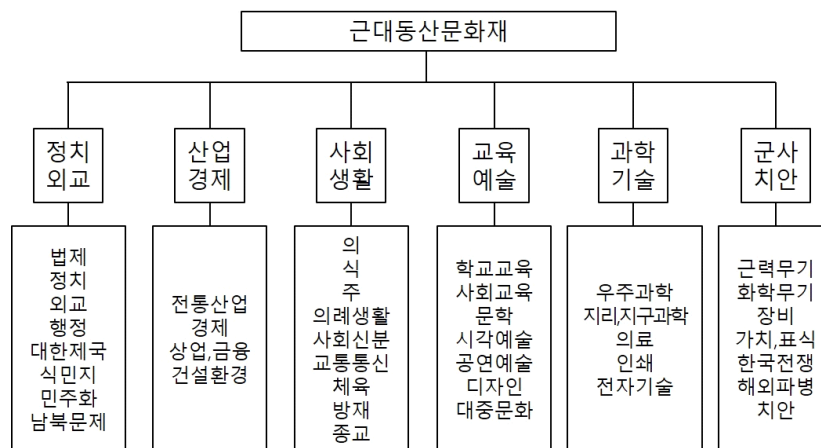
- 대분류는 관리 조직의 업무분야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기능중심의 업무조직으로 분류체계를 갖춘 국가이며 따라서 동산문화재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중심 업무조직과 연계하여 분류방안을 제시함
- 역사 및 민족적 영역분야, 인물 및 장소성과 지역적 특성분야, 문화별 및 관리조직별 영역분야를 기본으로 분류

[표 2-8] 중앙정부 분류체계 분석

예산배분체계상 분류	국제분류기준(UN COFOG)	중앙정부 BRMI레벨 분류
일반 공공행정	일반공공서비스	일반 공공행정
통일외교		통일외교
국방	범위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경제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수송 및 교통
통신		통신
과학기술		과학기술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보호
사회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역개발		지역개발
보건	보건	보건
문화, 체육, 관광	여가문화 종교	문화, 체육, 관광
교육	교육	교육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예비비		

자료: 김정신, 2013

- 중분류는 용도 및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각각의 대분류가 활동하는 영역이 범주가 되어 그 안에서 특별한 사건 등을 포함한 것이 해당. 사용 영역과 기능 그리고 생산영역별로 분리함
 - 소분류는 재질 및 용도에 따라 개개의 명칭으로 분류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소분류까지는 총체적 분류체계(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천주교유산을 사회생활분야(대분류)의 종교분야(중분류) 내에 천주교(소분류)에 포함시키고, 천주교 동산문화유산의 세분류체계를 제시
 -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근대동산문화재의 지정 혹은 등록 등 가치평가요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시사점
- 동산문화재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기능중심 업무조직과 연계하여 분류방안을 제시
 - 세부 분류단계에서 분류의 기준이 모호함 확인



[그림 2-25] 김정신(2013)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등록문화재 분류 및 잠정목록 대상 발굴을 중심으로』(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주요내용
- 이전에 진행되었던 「근대 동산문화재 분류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하여 추가적으로 근대 명승·유적·사적·기념물·생활유품 등의 분류방안을 연구하여 근대 동산문화재뿐만 아니라 근대 건조물 및 시설물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근대 문화유산의 분류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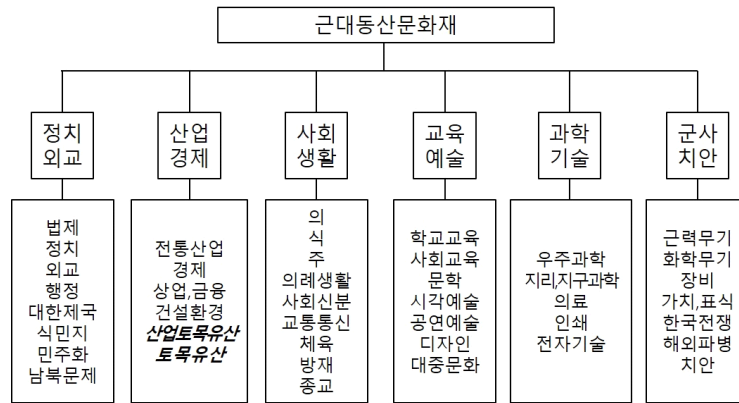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활용되는 분류방안(국립중앙박물관, 지역박물관의 분류체계)과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분류방안 기준을 수립하였음
- 또한 앞서 진행된 연구의 분류(안)과 별도로 근대문화유산과 관련된 사건, 인물, 가치(공법이나 디자인 측면 등), 지역, 시기 등의 테마 등록 의미를 분류항목으로 설정하여 다중적이고 다의적인 근대문화유산의 성격을 포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연구

[표 2-9]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근대문화유산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분류의 기본원칙
대분류	기능 및 용도 중심의 조직 분류	사회적 구조영역별 업무조직 단위별
중분류	용도군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에 따라 분류. 근대문화유산의 활동과정에 따른 테마 등록의 의미를 부여하여 분류	사용용도별 분류
소분류	중분류 내 세부 용도 및 기능별 분류	중분류의 세부 용도 및 기능별 분류
테마 등록의 의미	한국 근현대 사건/인물/문화유산적 가치로 구분하여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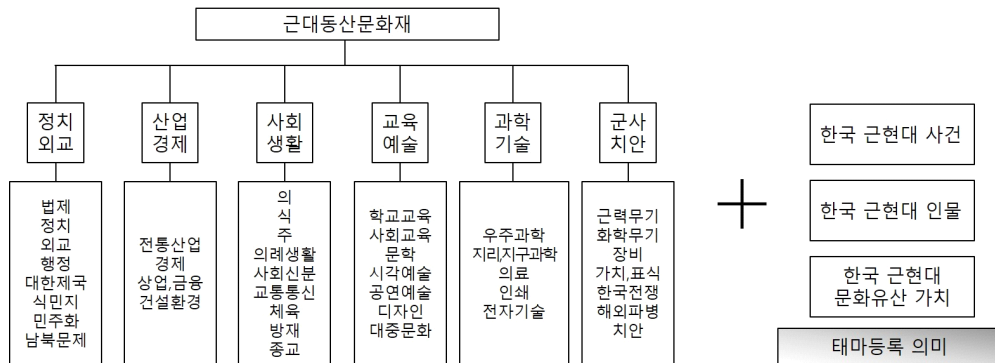
자료: 이정수 외, 2013

- 근대동산문화재 분류에 있어 4가지 분류방안을 제시하고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동산부분을 제시
 -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음
- 시사점
-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관점에서 분류를 시도하였음
 - 따라서 대분류 단계에서 업무에 따라 조직 단위별 분류의 기본원칙 적용
 - 시기성을 기준으로 근대문화유산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분류체계 마련 시도
- 분류체계 도식화
- 대안1: 1차년도 동산부분 분류방안의 6개 대분류 항목에 건조물 분류 항목을 대입하여 성격이 동산 및 건조물 통합안 제시(동산 및 건조물의 분류 체계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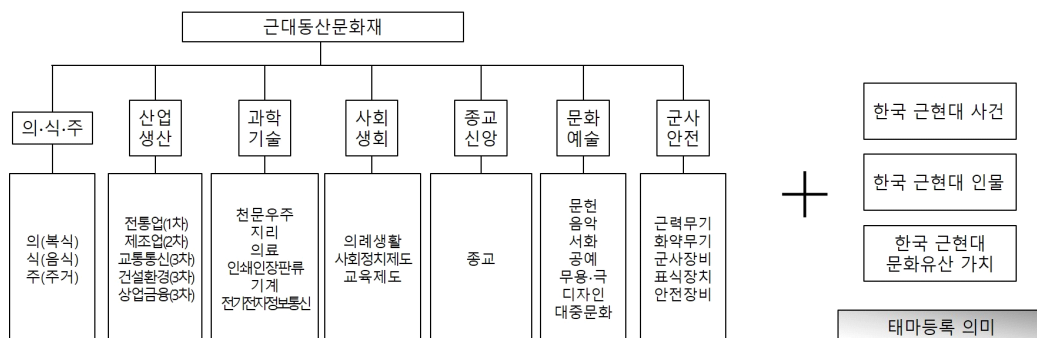
[그림 2-26]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1안) 도식화

- 대안2: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문화재의 분류체계를 각각 별도로 수립하고 1차년도 분류체계의 기본 구조를 최대한 수용하고 한국 근현대 사건·인물·문화유산 가치에 해당하는 중소분류는 테마등록의 의미로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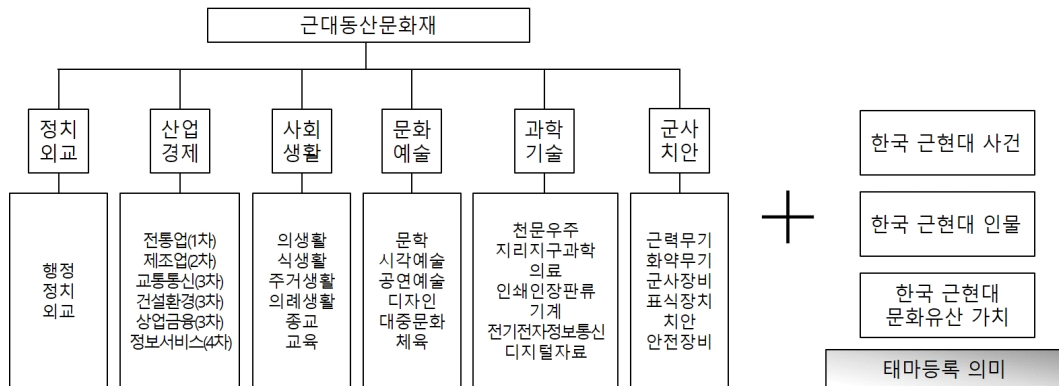
[그림 2-27]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2안) 도식화

- 대안3: 국립중앙박물관의 용도 기능 분류법을 기준으로 대중분류 재정리



[그림 2-28]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3안) 도식화

- 최종안: 1차년도 결과 및 국립중앙박물관 용도 및 기능 분류법을 융합하여 동산 부분에 적합하도록 대중분류 재정리



[그림 2-29]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최종안) 도식화

○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문화재청, 2016a)

- 주요내용

- 현행 동산문화재의 지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동산문화재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동산문화재의 유형별 세부 지정기준을 재수립하고 일괄공모제 도입과 이에 따른 실행방안 제시
- 동산문화재의 지정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합리적 분류체계 수립 시도.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동산문화재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 중 인위적으로 형성된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이며,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
- 분류체계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안 제시를 위해 기존의 규범상 제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비교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분류체계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재료, 특성 등 다양한 분류기준 사용)¹⁰⁾
- 결론적으로 동산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의 관점에서 합리적 분류체계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10) MECE 개념 지속적 제시하며 현행 분류체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MECE는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의 약자로, 어떤 사항을 중복 없이, 그럼에도 누락 없는 부분의 집합체로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

- 분류체계의 방향성은 첫째, 관리의 관점에서 기능 또는 형태 중심의 대분류체계 둘째, 분류된 대상물을 수량을 고려한 분류기준 지양 셋째, 기존의 박물관 유물분류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넷째, 국제적 용어와 공감될 수 있는 동산문화재 정의 다섯째, 대·중·소분류에 대한 일정한 원칙 수립 및 전문가와 일반인의 이해·합의 필요의 다섯 가지로 정리
- 동산문화재 분류체계의 기준을 보존과 관리라는 동산문화재의 개념적 목적에서 찾았고, 이에 따라 대분류 체계의 경우 형태, 용도, 재질 등의 관리적 측면의 분류기준 선정
- 총 5가지 안을 제시하였지만 형태, 용도, 재질 등의 관리적 측면의 분류기준이 각 분류단계 상 적용되는 방식이 비논리적
- 예를 들어, 구상내용 1의 미술문화재, 기록문화재, 고고역사문화재를 형태적 조건으로 나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형태’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불분명한 의미를 내포함
- 또한 미술문화재의 중분류단계를 미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누었다고 밝히지만 ‘특성’ 또한 단어의 의미가 불명확함
- 소분류단계에서는 중분류 유형별로 각각 내용, 재질, 대상 등 일관적이지 못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
-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새로운 분류체계, 특히 분류체계 1안을 기반으로 각 세부유형별로 구체화된 동산문화재 지정기준(가치평가 기준) 제시
- 동산문화재의 지정에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갖춰야할 기본(공통)가치 및 특정 유형의 동산문화재가 갖춰야할 고유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함
- 공통가치와 고유가치는 현행 규범상 지정기준인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기준과 국가무형문화재지정기준,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상 언급된 지정가치, 해외의 지정사례를 종합하여 추출한 것들 중 분류체계 안을 토대로 해당가치를 선택
- 지정가치 key word : 역사성, 희소성, 보존상태, 예술성, 특이성, 대표성, 학술적 가치, 사료적 가치

[표 2-10] 문화재청(2016a)의 지정가치 적용 지정기준안1(분류체계 1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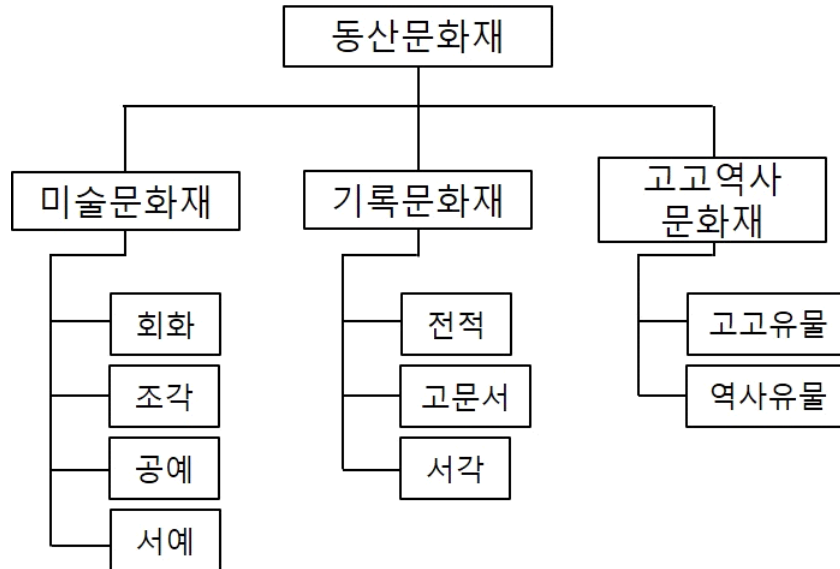
구분		공통가치			고유가치			
미술 문화재	회화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회화 예술성	회화 특이성	회화 대표성	회화 학술성
	조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조각 예술성	조각 특이성	조각 대표성	조각 학술성
	공예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공예 예술성	공예 특이성	공예 대표성	공예 학술성
	서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서적 예술성	서적 특이성	서적 대표성	서적 학술성
기록 문화재	전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전적 특이성	-	전적 학술성
	고문서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고문서 특이성	고문서 대표성	고문서 학술성
	서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서각 예술성	서각 특이성	서각 대표성	서각 학술성
고고 역사 문화재	고고유물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고고유물 특이성	고고유물 대표성	고고유물 학술성
	역사유물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역사유물 특이성	역사유물 대표성	역사유물 학술성

[표 2-11] 문화재청(2016a)의 지정가치 적용 지정기준안2(분류체계 1안 기준)

구분		공통가치			고유가치					
미술 문화재	회화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회화 예술성	회화 특이성	회화 대표성	회화 학술성	회화 기술성	회화 인물성
	조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조각 예술성	조각 특이성	조각 대표성	조각 학술성	조각 기술성	
	공예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공예 예술성	공예 특이성	공예 대표성	공예 학술성	공예 기술성	
	서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서적 예술성	서적 특이성	서적 대표성	서적 학술성		서예 인물성
기록 문화재	전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전적 특이성	-	전적 학술성	전적 기술성	
	고문서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고문서 특이성	고문서 대표성	고문서 학술성		
	서각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서각 예술성	서각 특이성	서각 대표성	서각 학술성		
고고 역사 문화재	고고유물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	고고유물 특이성	고고유물 대표성	고고유물 학술성		
	역사유물	역사성	희소성	완전성		역사유물 특이성	역사유물 대표성	역사유물 학술성	역사유물 기술성	

- 시사점

-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요소를 모두 다룬 유일한 선행연구
- 분류체계를 먼저 설정한 후 그에 따른 가치평가요소를 선별적으로 적용



[그림 2-30] 문화재청(2016a)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2) 부동산문화재(건조물)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문화재관리국, 1988)

- 주요내용

- 당시 지정된 문화재가 오랜 기간 상이한 국가 제도 및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가치판단되어 왔음
- 가치판단에 따라 지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정문화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보·보물·사적을 필두로 하여 지정문화재 전반에 걸친 재평가작업 실시
- 재평가를 통해 지정문화재 가운데 해제해야 할 것, 등급이 상향 혹은 하향 조정 되어야 할 것,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 조성년대 및 조성국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 지적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재설정 등을 정함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
-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당시 문화재 지정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정건조물문화재의 새로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8가지 기준 재설정

[표 2-12] 문화재관리국(1988)의 건조물문화재 가치판단 기준

1. 시대별 건축양식 대표성
2. 조영·기술·의장의 대표성
3. 사회상의 반영
4. 종교적 특성의 대표성
5. 지방적 특성의 대표성
6. 특수성이나 희소성 소유(특수용도, 특수조영, 특수기능)
7. 용도 및 기능의 대표성
8. 복원의 원형성

- 가피판단의 8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한 건조물은 국보로 지정하길 권고
- 특히, 주택의 경우 별도의 판단기준을 제시, ①전통주택은 가장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음을 주장(역사성), ②또한 지역에 따라 주택 평면의 형식이나 조형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경우 각각의 장소에 있어 의미있는 것(장소성), ③건축물의 구조가 전통건축 전형으로써 건축양식요소가 특색 있는 경우도 의미 있는 것(의장(意匠)성), ④건축양식이 과거 신분상을 나타내는 경우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킬 필요(신분상의 분류)
- 또한 주택 중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민속자료(문

화재)로 구분되는 기준으로 시기성(조선 초기-보물급, 조선 중기·말기-중요민속자료급), 지역성(지역성 대표 주택은 보물급), 의장성(주택의 기능 및 시설을 완전히 갖춘), 주택밀집성으로 제시

- 개항이후 지어진 서양양식의 근대건축의 경우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요구

[표 2-13] 문화재관리국(1988)의 세부 건축유형별 가치판단 기준

구분			재설정된 가치판단 기준
건축 전반			시대적 대표성 조영·기술·의장의 대표성 사회상의 반영 종교적 대표성 지역적 대표성 특수성 또는 희소성 용도 및 기능의 대표성 원형성(복원)
주택			역사성, 장소성, 의장성, 신분상 반영
	지정 유형		시기성, 지역성, 주택밀집정도
근대건축			역사성, 건축미학적

- 시사점

- 가치평가의 관점에서 전통건축 문화재를 재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 확인
- 동산문화재의 가치재평가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전문가의 가치평가 내용만 반영된 재평가 내용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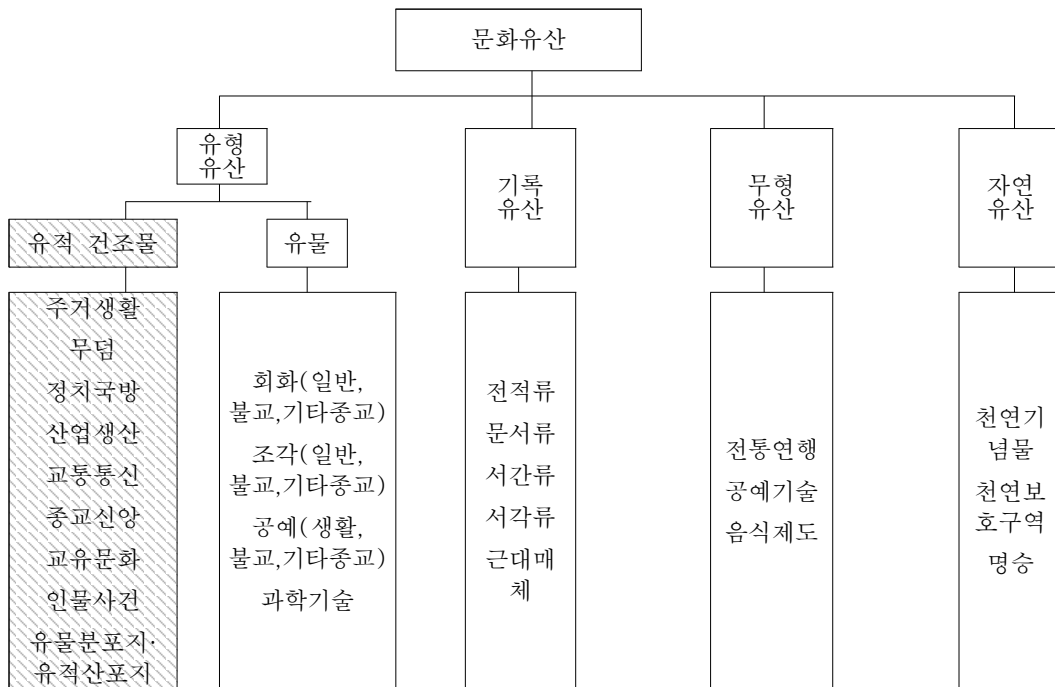
-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문화재 분류체계의 정비 및 제도화를 위해 2004년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분류체계 및 지정체계 관련 TF 구성하여 연구 추진
- 해당 연구는 기관별 문화재 분류기준이 표준화되고 있지 못한 당시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문화재 분류체계(안)을 작성 및 코드화 함
- 새롭게 제시한 분류체계 상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유형유산-유적 건조물’에

포함된 건축물/건조물 해당.

- 건조물의 경우 ‘터(site)’와 ‘건조물(building)’을 구분할 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최대분류상 유적건조물을 통합하여 속성(성격)에 따른 하위분류체계 제시
-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는 없었음

- 시사점

- 분류체계상 대분류에서 부동산과 동산을 유적 건조물과 유물로 1차 구분
- 유적 건조물을 유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관리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구분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



[그림 2-31]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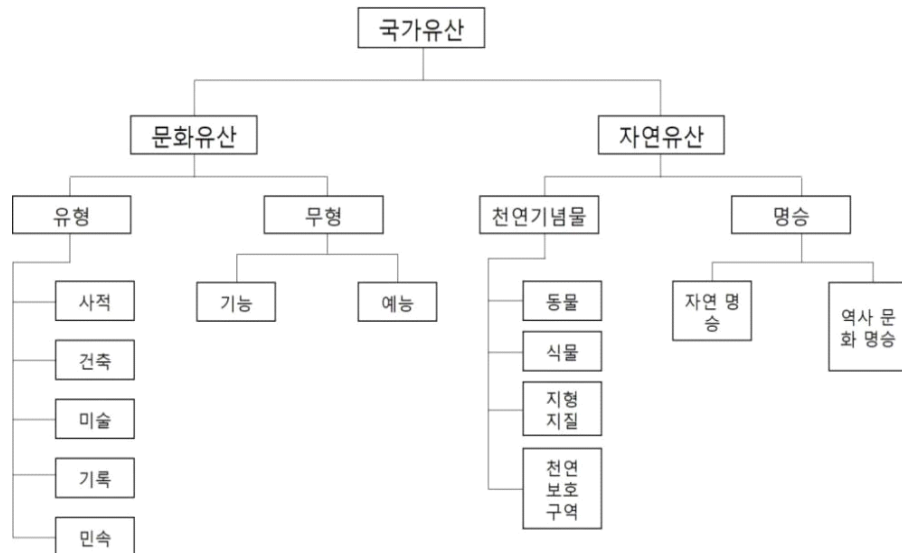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의 개념정의, 문화재 분류체계와 더불어 지정체계를 함께 논의
- 당시 논의된 지정체계 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급 분류에 관한 논의로

한정하여 연구진행

- ‘문화재’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총체적 명칭에 ‘유산’을 적용하고, 세부 항목을 지정할 때는 ‘문화재’로 통일하는 방안 제시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유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조물은 ‘유형-건축’에 포함하였고, 건축의 개념은 궁궐, 종교시설, 공공·산업시설, 마을·가옥 등 건조물로 정의하고 석탑, 부도, 석등의 경우도 건축으로 분류
- 가치평가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과정에서 등장
- 건조물과 관련하여 전통가옥은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즉, 전통가옥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가치의 관점에서 서열화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시사점

- 기존에 기념물로 포함되었던 사적을 유형문화재 하위에 포함시켰지만, 사적과 건조물에 모두 건축적 요소를 갖는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음
- 예를 들어, 성곽의 경우 ‘건축’이 아닌 ‘사적’에 포함시켜 놓음
- 유형문화재의 하위 단계에서 부동산문화재와 동산문화재를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여러 유형을 동일 위계에 수평적으로 배치



[그림 2-1]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건축문화재 분류체계 적용에 관한 연구』(최연규, 2012)

- 주요내용

- 콘텐츠 보유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재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속성 분류값이 콘텐츠 생산기관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검색에 불편을 겪게 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분류체계 고안의 필요성 제기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축문화재의 분류체계상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된 문화재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전체 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중 건축문화재 속성분류체계 설계안을 제시
-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건축문화재 속성분류체계 설계안 개발을 위해 사회적 속성, 쓰임새(용도, 기능), 재질, 양식 등 건축문화재의 다양한 분류기준을 제시

[표 2-14] 최연규(2012)의 분류 기준 및 내용

분류 기준	분류 내용(대분류)
사회적 속성	주거생활, 정치국방, 산업생산, 교통통신, 종교사상, 교육문화, 역사인물, 민속신앙, 매장문화
용도	궁궐건축, 성곽건축, 종교건축, 공공건축, 주거건축, 종교시설, 공공시설
재료(재질)	목조, 석조, 철근 콘크리트조, 금속조 등
양식	지붕형태-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 공포형식- 포작계(다포, 주심포), 익공(초익공, 이익공, 출목익공), 민도리(납도리, 굴도리, 소로수장)

- 사회적 속성에 따른 분류체계는 예일대에서 제공하는 Human Relations Area Files¹¹⁾을 참고하여 작성함을 밝히고 있지만, 용도나 재질, 양식 등은 분류내용을 참고한 이론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건축문화재의 가치평가 요소와 관련된 언급은 확인되지 않음

- 시사점

- 행정적 관리의 편의성이 아닌 정보검색의 용이성 개선을 위한 문화재의 속성분류체계 연구

○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등록문화재 분류 및 잠정목록 대상 발굴을 중심으로』(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주요내용

- 이전에 진행되었던 「근대 동산문화재 분류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하여 근대 동산문화재뿐만 아니라 근대 건조물 및 시설물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근대 문화유산의 분류기준 제시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조물의 분류 항목을 문화재청의 용도별 분류 유형¹²⁾에서 착안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로 유형을 분류
- 유형분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상의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도시계획법에서 제시하는 기반시설의 정의를 토대로 건조물의 용도 기능별 중·소분류를 설정하여 건축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고려

11) 세계문화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학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권에 대한 자료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 해당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족지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해 세계문화 요약(Outline of World Cultures, OWC)과 문화자료요약(Outline of Cultural Materials, OCM)에 제시된 체계적 분류법 사용

12)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 중 근대건조물을 총 12가지 유형(종교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주거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인물기념시설, 상업시설, 기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구분의 근거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2004-5년 사이 이루어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사업 당시 이 기준으로 건축물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 확인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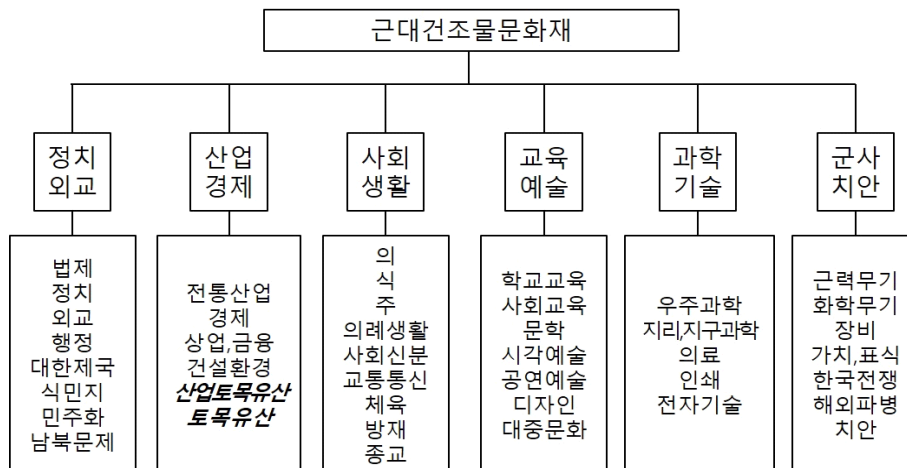
- 건립당시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용도가 변경된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원래 용도의 의미가 퇴색된 경우 이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 검토 진행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일부 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의원, 파출소, 우체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유산의 용도를 우선적인 분류기준으로 함
- 근대건조물유산의 분류방안으로 4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을 비교하여 최종안 제시

- 시사점

-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관점에서 분류시도. 따라서 대분류 단계에서 업무조직 단위별 분류의 기본원칙 적용
- 시기성을 기준으로 근대문화유산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분류체계 마련 시도
- 전년도 연구에서 근대동산문화재에 대한 분류체계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근대건축문화재의 분류체계 연구 진행하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총괄적 분류체계구축 시도
- 그러나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문화재 각각 별도의 분류체계(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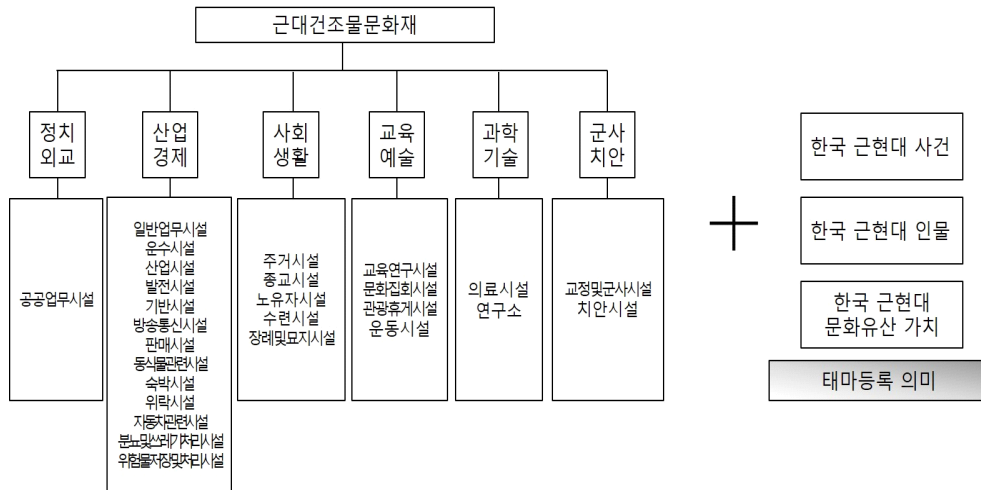
- 분류체계 도식화

- 대안1: 1차년도 동산부분 분류방안의 6개 대분류 항목에 건조물 분류항목을 대입하여 성격이 동산 및 건조물 통합안 제시(동산 및 건조물의 분류체계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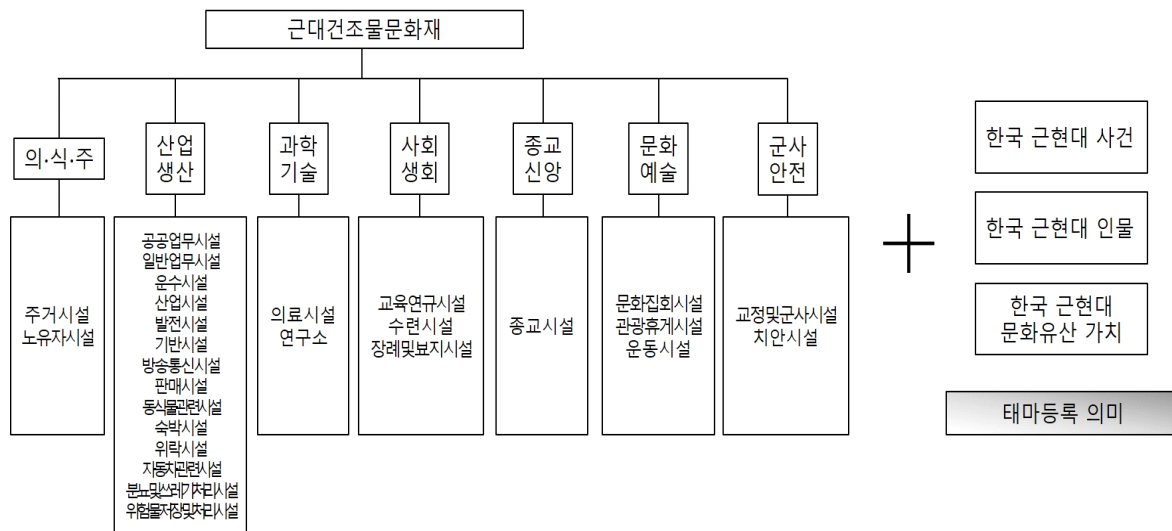
[그림 2-32]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1안) 도식화

- 대안2: 1차년도 분류방안 기본구조를 최대한 수용 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근대문화유산 건조물 부분의 분류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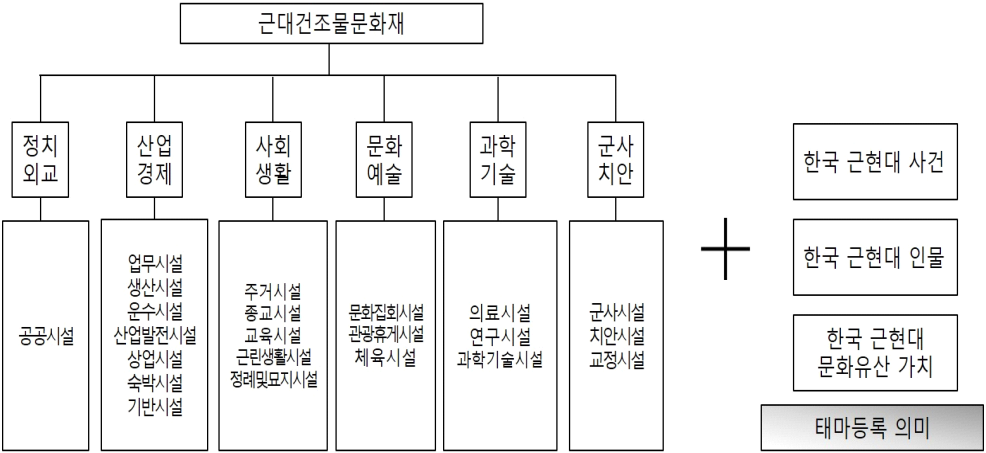
[그림 2-33]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2안) 도식화

- 대안3: 국립중앙박물관의 용도 기능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건조물부분에 적합하도록 대중분류 재정리하였음
-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 건조물의 분류체계 마련



[그림 2-34]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2안) 도식화

- 최종안: 1차년도 결과 및 국립중앙박물관 용도 및 기능 분류법을 융합하여 건조물 부분에 적합하도록 대중분류 재정리



[그림 2-35] 국립문화재연구소(2013)의 분류체계(최종안) 도식화

3) 종합 시사점 및 쟁점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동산문화재와 부동산(건조물)문화재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분류체계 혹은 가치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부재
- 이미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따라서 학계에서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동산과 부동산 유형문화재라는 틀 속에 이 두 유형을 함께 두는 것이 결코 행정관리 및 이론연구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근대문화유산의 별도 분류체계 구축 필요성 재검토

-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한 분류체계를 이전 시기 문화재의 분류체계와 별도 구성하여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됨
- 현재 법령상 등록될 수 있는 문화재도 결국에는 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형문화재 중 선택될 수 있는 것임
- 근대라는 시기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분류체계 내 시기성을 개념변수로 포함시켜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하나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일원적이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도모 필요함
- 즉, 다축분류체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 가능 할 것임
- 사적으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의 분류 방식의 상이성
 - 예시)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 스텐관(유적건조물/교육문화/근대교육문화/학교시설)
 - 예시) 등록문화재 제14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 홀
 (등록문화재는 세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문화재의 보존 관리 관점에서 중분류 방안 제시

- 기존의 선행연구 중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와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는 모두 대분류 단계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관

리의 관점의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

- 문화재는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체계 고안 시 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고려가 있어야 할지, 어느 분류 수준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볼 필요
 - 예시) 동산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관리를 위해 소장품의 보존 조치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담은 문화재청의 안내지침서 「동산문화재 관리 가이드북 (2010)」에서는 동산문화재를 재질에 따라 지류, 섬유/가죽류, 목공예, 금속, 도자기, 석조로 구분

○ 새로운 분류체계(안) 구성상 논리성 부족

- 분류체계와 관련한 일부 선행연구는 현행 분류체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지만, 새로운 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임
-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위위계에 분산되어 편입될 수 있는 유형(예: 민속)이 상위 위계에 위치하게 되고 결국에서 이전과 같이 분류가 모호해지는 현상 지속
- 동일 위계상 일관되지 못한 분류기준으로 인해 여러 속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 명확한 분류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민속문화재가 동산문화재와 동일한 위계에 위치한다면 과거의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회화 작품 김홍도 풍속도가 민속문화재인지 동산문화재인지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현재 김홍도의 풍속도는 보물(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코드화를 염두에 둔 분류체계 구성

- 문화재 분류의 목적을 효과적 관리에 방점을 둔 선행연구의 경우 관리 및 정보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향후 분류내용을 코드화할 수 있도록 각 분류항목별 코드번호를 병기하는 분류안 확인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동산문화재 및 부동산문화재 관련 선행연구 검토결과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몇몇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지만, 유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혹은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1988년 문화재관리

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음

- 다만, 2016년 수행된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 계획 연구」에서 동산문화재 관련 유일한 가치평가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와 더불어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정기준(가치평가요소 적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의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를 별도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음이 확인 가능함
- 그러나 특정한 문화재 유형에만 적용되는 가치평가 요소가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으로써 참고할 만한 가치평가요소는 없음

2. 국가무형문화재

1)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의 현황

(1) 「문화재보호법」상¹³⁾ 분류 및 가치평가 현황

○ 분류체계

- 「문화재보호법」(시행 2016.2.3.) 제2조(정의)에서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 2015.1.29.)의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그 밖의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각 지정 대상 아래 세부 종목 나열
- 무형문화재의 행정적 분류 체계는 대분류단계에서 속성(기능)에 따라 ‘예능종목’과 ‘기능종목’ 두 가지로 분류, 이는 행정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
- 예능종목의 하위분류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다섯 가지로 분류
- 기능종목의 하위분류는 공예기술, 음식 두 가지로 분류
- 행정적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의 정의에서 나열한 유형(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들을 중분류에서 포함

-
- 무형문화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이란 사람이 가진 두드러진 솜씨로서 한국 전래의 제작 기량이며 전통적 수공예라 할 수 있음(문화재청, 1988: 7)
 - 공예기술은 개인의 천부적인 기술에 의하여 재료를 사용하여 유형을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극, 음악, 무용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음악 무용과 같이 공연이나 표현에 의하여 예능을 표현하는 예술도 아님. 오히려 전통공예는 일반 회화나 조각처럼 창작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음악이나 무용은 감정에 의하여 표현하는 예술이고 전통공예는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예술. 따라서 예능 부문인 연극, 음악, 무용과는 무형문화재와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문화재청, 1996: 130)
 - 이처럼 무형문화재는 대분류단계에서 속성(기능)에 따라 예능과 기능으로 크게 분류해 왔으며, 기능의 주 종목인 공예기술은 개인의 천부적인 기술로서 단체 종목이 없으며, 모두 개인 종목으로 단체 종목이 많은 예능과 행정적 관리 상 차이도 존재
-

13) 2016년 3월 이전 기준.

○ 가치평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 2015.1.29.)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지정 가치 규정

「문화재보호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이 경우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연극
인형극·가면극
 - 나. 음악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宴禮樂), 대취타(大吹打), 가곡, 가사(歌詞) 또는 시조의 영창(詠唱), 산조(散調), 농악, 잡가(雜歌), 민요, 무악(巫樂), 범패(梵唄)
 - 다. 무용
의식무, 정재무(呈才舞), 탈춤, 민속무
 - 라. 공예기술
도자공예, 피모(皮毛)공예, 금속공예, 골각(骨角)공예, 나전칠(螺鈿漆)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紙物)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玉石)공예, 수·매듭공예, 복식(服飾)공예, 악기공예, 초고(草藁)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 마.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 주요특징

-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정의와 지정 기준은 문화재 유형의 개념적 속성이 아니라 해당되는 세부 유형의 나열을 통한 정의를 하고 있어, 유형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함
- 또한 각 유형별로 ‘~등’을 사용하여 세부유형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유형의 개념적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계층적 분류가 불가하나 문화재청의 행정적 분류에 의해 대분류, 중분류 계층적 분류가 되어왔음
- 무형문화재 가치 평가 기준의 주관적 요소 개입 및 일관적이지 못한 지정 경로
 - 이장열(2006)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설명이 애매 모호하여 지정조사 전문가나 문화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할 실정이라며, 지정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김순호, 2011: 44)
 - 문화재청의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보존 가치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음을 언급
 - 역사적, 예술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 궁중연례음악과 궁중정재는 당연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마땅함

- 그러나 현재 궁중연례악과 궁중정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것들이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잘 보존하고 있으니 따로 보존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 그렇다면 국악원에 전승되는 궁중연례악에 처용무 및 학연화대합설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됨
- 지정하려면 전체를 지정하던지 아니면 전부를 지정하지 말았어야 했음
- 궁술의 경우에도 전통기예능이지만 궁술 5종 기예능보유자가 많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씨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려짐(문화재청, 1996: 78)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의 발굴은 전국민속경연대회, 전통공예대전 등 전통문화 관련 행사에서 수상하거나 특별히 돋보인 경우 국가에서 직접 관계 전문가가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라 지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함
- 또한 기존의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승격하여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문화재청, 1994: 10)
- 무형문화재 지정 초기에는 지정되는 방법이 일관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종목을 지정하기도 함으로써 가치 평가에 혼란이 발생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상¹⁴⁾ 분류 및 가치평가 현황

○ 분류체계

- 문화재보호법(시행 2017.6.21.) 제2조(정의)에서 무형문화재는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7가지 지정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
-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며 ‘전통지식’과 ‘구전전통 및 표현’이 새로운 지정 범주로 추가
- 무형문화재의 행정적 분류체계는 무형문화재법에서 나열한 유형(전통적 공연·

14) 2016년 3월 시행 이후 기준.

- 예술, 공예와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한의약과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들을 모두 대분류 위계에서 동일하게 나열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동년 7월 14일 제다(전통생활관습-식생활) 지정, 2017년 1월 4일 씨름(전통놀이·무예-놀이) 지정, 2017년 5월 1일 해녀(전통지식-생산지식) 지정
 - 무형문화재법에 새롭게 추가된 전통지식에는 2017년에 지정된 해녀가 있으며, 구전 전통 및 표현에는 해당 사항 없음

○ 가치평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1.)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대표성, 전형 유지를 무형문화재의 지정 가치로 규정
-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에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나,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에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기술적 가치, 대표성을 지닌 것,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정 가치 추가
- 특히 ‘향토색이 현저한’ 가치가 사라지고,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새로운 지정 가치로 규정된 것이 특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주요특징

- 무형문화재법 제정으로 기존의 지정 범주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였으며, 개별 종목을 좀 더 세분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재배치함
 - ‘음악’, ‘무용’, ‘연극’은 ‘전통공연·예술’로 통합되고, ‘놀이와 의식’은 ‘전통놀이’와 ‘의례·의식’으로 분리
 - ‘무예’는 ‘전통놀이’와 함께 ‘전통놀이·무예’로 통합
 -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에 ‘줄타기’는 놀이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전통놀이·무예’의 하위 ‘기예’로 별도로 분류
 - 줄타기는 일반 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예(技藝)로 오랜 수련을 거쳐서 비로소 가능한 기술임
 - 줄타기를 제외하고 놀이는 모두 세시풍속¹⁵⁾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인 놀이로서 제액초복의 종교의식이나 농경의례로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음(문화재청, 1985: 14-15)
-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주와 행정적 분류 체계가 동일
-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기존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기술적 가치, 대표성을 지닌 것,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정 가치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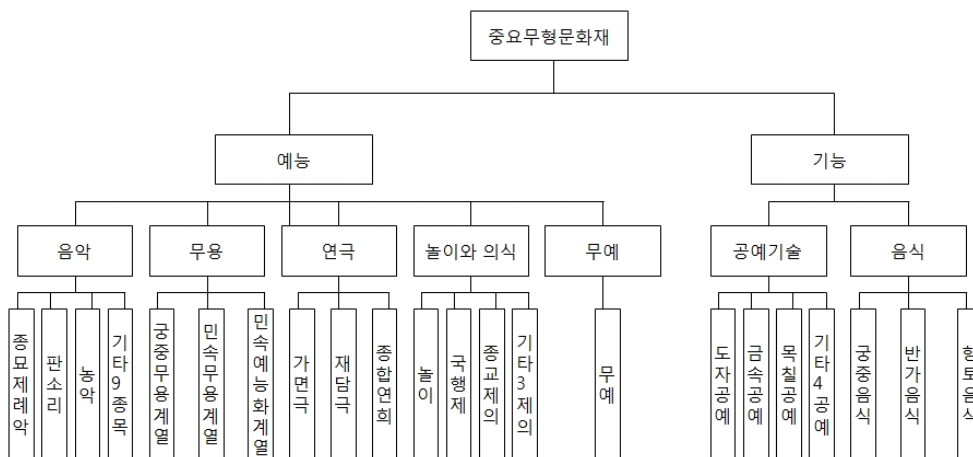
2)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 관리방안 연구』(문화재청, 2004b)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첫 시도
 - 2004년 당시 지정되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109건)의 각 분야 및 종목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해 지정명칭, 지정단위, 지정범위 등의 합리성 검토, 109개 종목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

15)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추어 관례(慣例)로서 행하여지는 전승적 행사.

- 문화재청이 발간한 『2004년 중요무형문화재 현황』의 분류체계(대분류 및 중분류)에서 대분류의 예능과 기능, 중분류의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종목들을 전수 살펴보고 소분류 단계 조정
- 시사점
 - 각 분야별 종목의 지정 명칭과 지정 단위를 기준으로 문화재청의 행정적 분류체계(대분류 및 중분류) 내에서 소분류 단계 조정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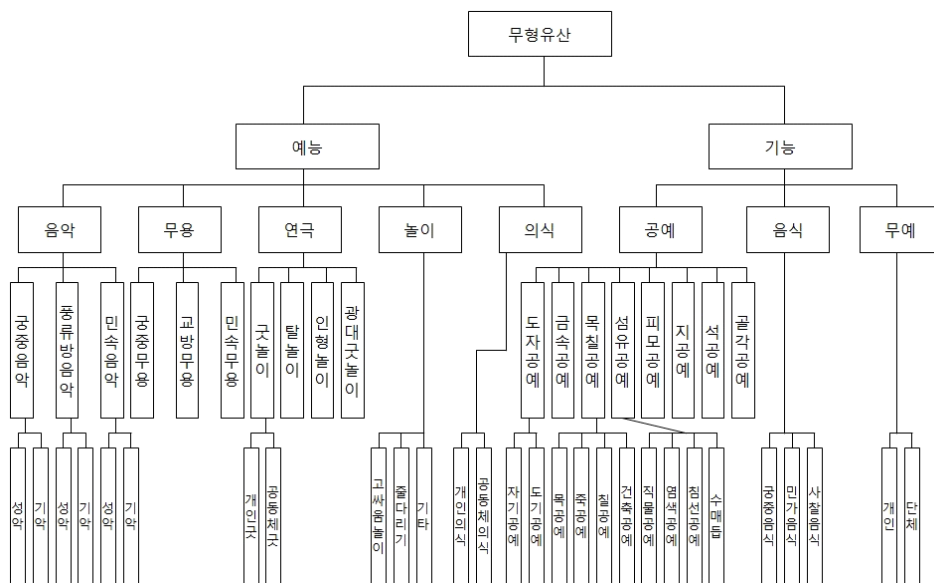
[그림 2-36] 문화재청(2004b)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장호수, 2004)

- 주요내용
 - 연역적 방법과 인위 분류 방식 사용
 - 이 연구의 핵심은 문화의 구성요소와 전승방법에 따라 분류·구분하는 방안이 있고, 이 가운데 전승방법을 대분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상당부분 수용 가능
 - 문화재 분류체계를 전승방법에 따라 무형유산을 행위전승으로 보고 당시 문화재청에서 행정적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최대분류 예능과 기능, 대분류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공예, 음식, 무예로 분류하고 하위 중분류와 소분류 체계 제시¹⁶⁾
 - 그러나 중분류가 생략된 유형(놀이, 음식, 무예)도 있어 중분류와 소분류의

16) 문화재청의 예능 분류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이나, 장호수(2004)는 놀이와 의식을 분류하고 무예를 기능에 포함

- 위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중분류와 소분류의 분류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 생략
- 문화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시대분류, 지역분류, 형태분류, 재질분류, 용도분류, 속성분류, 유래분류, 가치 분류(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 제시
 - 무형유산(행위유산)은 ‘형태별-용도별-속성별-종류별-시대별-지역별-가치별’ 단계에 따라 분류
- 시사점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대체, 문화재의 최대분류를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제안
 - 무형유산의 최대분류와 대분류는 문화재청에서 행정적으로 분류하던 방식(대분류와 중분류)을 그대로 적용, 중분류와 소분류 제시한 연구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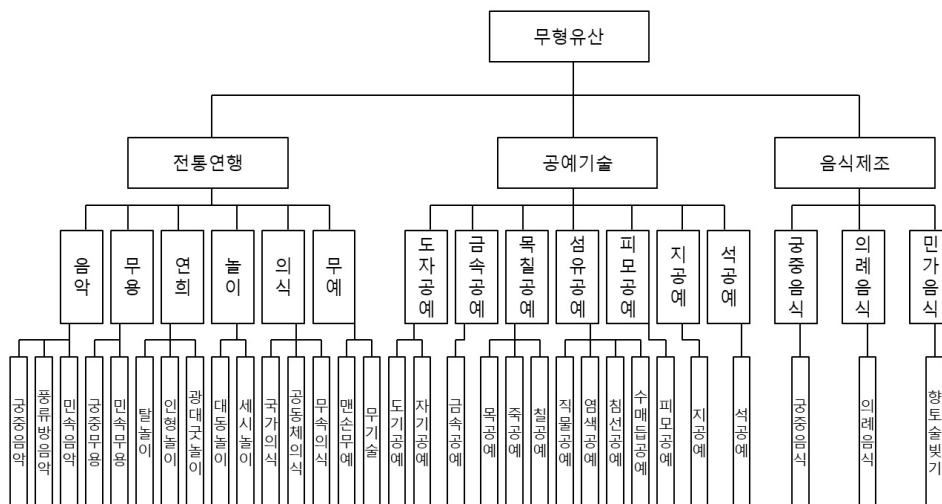
[그림 2-37] 장호수(2004)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주요내용
-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문화재 분류체계의 정비가 목적
 - 장호수(사적과 전문위원)를 팀장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전문위원이 대거 참여
 - 분류기준으로 ① 문화재의 시대별, 지역별, 분야별 특성 및 문화재 고유의

특성이 포함된 분류체계, ② 향후 새로운 성격의 문화재를 포함할 수 있는 분류체계, ③ 분류단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분류체계, ④ 분류체계의 사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류체계, ⑤ 문화재 특성 등에 의해 문화재 상호간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분류체계 제시하고자 함

- 무형유산은 대분류 단계에서 전통연행, 공예기술, 음식제조로 분류
 - 전통연행은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무예로 분류, 기존 행정적 분류인 예능의 중분류와 동일
 - 공예기술은 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피모공예, 지공예, 석공예로 중분류
 - 음식제조는 궁중음식, 의례음식, 민가음식으로 중분류
- 시사점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대체, 문화재의 최대분류를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제안
 - 기존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문화재 관리 편의에 중점을 둔 분류체계안
 - 문화재청의 예능과 기능 이분법적 분류에서 기능에 해당하던 음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대분류에서 전통연행, 공예기술, 음식제조로 분류하고 소분류와 세분류 제시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그림 2-38]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주요내용

- 문화재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해 효율적 문화재 관리 및 대내외 변화의 여건 수용을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회의록이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주축으로 문화재청, 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 T/F팀으로 조직
- 무형문화유산 분류체계에 관련된 회의는 소위원회 자문회의와 6차 회의
- 무형유산은 기능과 예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능은 공예, 음식 등 기능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 예능은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와 관련된 예능문화유산으로 논의(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174)
- 무형유산에 대한 분류는 기존 무형문화재의 행정적 분류체계와 동일하며, 세부종목에 대한 논의없음
- 무형유산에서 민속성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언급되었으나 당시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의 큰 변동이 예상되므로 현행 분류체계 내에서 재편성하는 것으로 협의

- 시사점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대체, 모든 문화유산을 총칭하는 최상위 개념인 ‘국가유산’ 용어 등장
- 무형문화재의 상위 분류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 제안(문화유산, 자연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 무형문화재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문화재청에서 행정적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 소분류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무형문화재의 상위 분류체계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을 제안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그림 2-39]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문화재청, 2011a)

- 주요내용

-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신법 제정의 필요성 제안
- 무형문화유산 지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래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종목, 비활성화종목, 기록화종목으로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은 지원의 차등을 위한 것이지 문화유산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아님
- 따라서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 종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규정하여 해결, 기록화 종목은 긴급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해결
- ‘법률 제정안 초안 및 해설’에서 제2조(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현행 무형문화재법에 상당 부분 반영, 무형문화유산의 확장된 정의 제시

법률 제정안 초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적 공연예술
2. 전통적 미술기법 및 공예기술
3. 전통지식
4. 구전전통 및 표현
5. 전통적 의식주 등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8.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이를 수 있는 것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43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시사점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대체
- 무형문화유산의 확장된 정의 제시, 그러나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논의 부재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3) 종합 시사점 및 쟁점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의 행정적 분류체계 내(대분류 및 중분류)에서 하위 분류체계를 조정하거나 재구성
- 2004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원 관리방안 연구’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개칭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는 현재 발견된 것이 없으며 무형문화재법 내 세부 규정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존재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주의 개념적 확장

-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던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주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으로 비교적 명시적, 이로 인해 개념이 협소하고 폐쇄적 측면 존재
-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및표현’으로 지정 범주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
- 또한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으로 ‘전통지식’과 ‘구전전통 및 표현’이 새로운 지정 범주 추가

○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의 횡적인 확장

- 이전의 행정적 분류체계는 예능과 기능의 고정적 이분법적 대분류체계 하위에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지정 범주로 중분류 구성
- 현행 행정적 분류체계의 대분류는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으로 무형문화재의 법에서 규정하는 지정 범주와 동일하며, 대분류 단계에서 횡적으로 개방적 확장이 가능해짐
- 예능과 기능의 이분법적 대분류체계에서 7개의 지정 범주가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종목의 속성에 적합한 분류가 가능

- 예를 들어, 예능과 기능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논란이 되었던 중분류의 유형인 ‘놀이와 의식’을 분리하였으며, 기능에 속하던 음식을 별도의 전통생활관습으로 이동
- 향후 새로운 유형의 무형문화재 종목이 발굴될 경우, 획적인 확장이 가능하며 비교적 용이

○ ‘무형문화재’의 명칭 변경

- 2004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및 지원 관리방안 연구’를 제외하고,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개칭 제안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의 ‘무형문화재과’와 2014년 10월에 개원한 ‘국립무형유산원’¹⁷⁾의 행정 조직 명칭 통일 필요

○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체계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각 종목은 서로 상이한 전승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특성으로 인해 가치 평가 요소보다 종목들의 공통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 왔음
- 따라서 동일 분야에 편성된 여러 종목들은 성격이 조금씩 다른 여러 종목들이 혼잡하게 편성되어 있어, 주로 동일 분야 내의 세부 종목 조정에 치중

○ 복합적인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분류

- 문화재청(2004b) 연구에서 종목은 그 안에 중요한 문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고,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
- 해당 종목 자체는 ‘무수히 많은 문화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종합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정 및 분류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보고서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은산별신제는 기본적으로 예능의 의례의식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은산별신제 안에 꽃받기를 할 때 관련 물품을 제작하는 부분은 기능에 가까움을 언급
- 또한 과거에는 의식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현대로 전승 및 재현되는 과정에서 놀이의 요소가 강한 종목도 존재하여 두 가지 요소가 상충

17)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교류·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기구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가치평가 요소에 의한 분류보다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 행정적으로 분류
- 기존의 예능에는 민속적 성격이 강한 ‘놀이와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 민속성과 예술성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예능에서 별도로 전통놀이와 의례의식을 분리하여 해결
-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새로운 유형으로 지정된 ‘해녀(전통지식)’의 가치평가 요소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

3. 민속문화재

1)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의 현황

(1) 제도상 정의 및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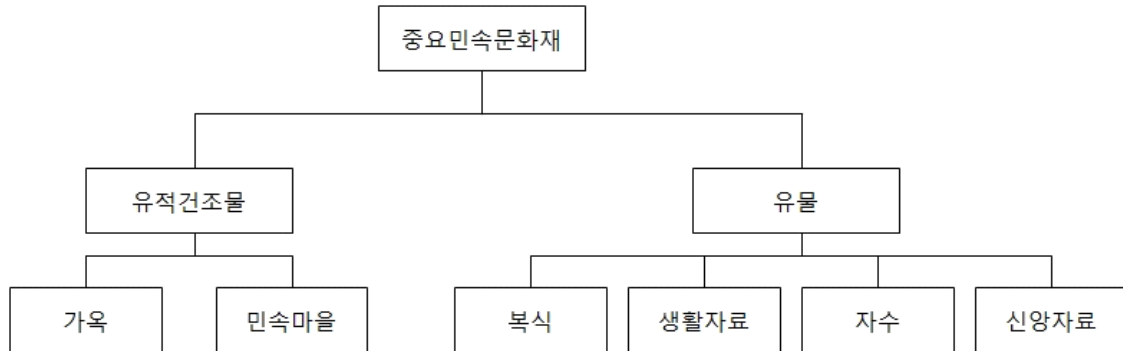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의 분류체계

- 「문화재보호법」(시행 2016.2.3.) 제2조(정의)에서는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지정된 것을 살펴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풍속이나 관습은 전혀 없고, 풍속이나 관습과 관련된 유형 자료들만 있음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시행 2016.3.28.) 제2조(정의)에서는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오류 수정
- 이로써 민속문화재는 법령에서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

○ 행정적 분류체계

- 국가민속문화재의 행정적 분류체계에서 대분류는 ‘유물’과 ‘유적건조물’으로 분류하여 유형의 동산-부동산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음
- 유물은 복식, 생활자료, 자수, 신앙자료로 중분류, 유적건조물은 가옥과 민속마을로 중분류
- 문화재청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발행된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은 목차 ‘9. 중요민속문화재’에서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의 현황만 다루고 있고, 중요민속문화재의 유물은 ‘중요무형문화재 현황’에서 다루고 있음
- 그러나 민속문화재의 민속마을은 유형의 일반적인 분류 체계에 포함이 불가하며, 마을 내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보부상 유품의 경우, 유물의 중분류에 별도로 분류하는 보고서도 있음
- 이는 1989년 문화재관리국의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중요민속자료』를 보면 “의생활의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정건수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하나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별, 지정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의류, 생활용품, 작은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 각각 지정번호가 주어지면 그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한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용도에 따라 각각 지정될 수도 없으므로 유품이라는 것으로 일괄 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로 추정하고 있음



[그림 2-40] 문화재보호법 민속문화재의 행정적 분류 체계

(2) 가치평가 현황

○ 유물과 가옥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 2015.10.6.)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유물과 가옥의 경우,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주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역사적 변천, 시대적 특색, 지역적 특색,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정 가치 제시

○ 민속마을

- 민속마을의 경우, 전통적 생활양식과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 그리고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의 지정 가치로 제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 2015.10.6.)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

전형적(대표성)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漁獵具)·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3) 주요특징

-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속문화재의 범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비해, 행정적 분류체계는 유물과 유적건조물로 협소하고 한정적
- 유물, 가옥과 별도로 민속마을(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을 분리하여 지정 기준과 가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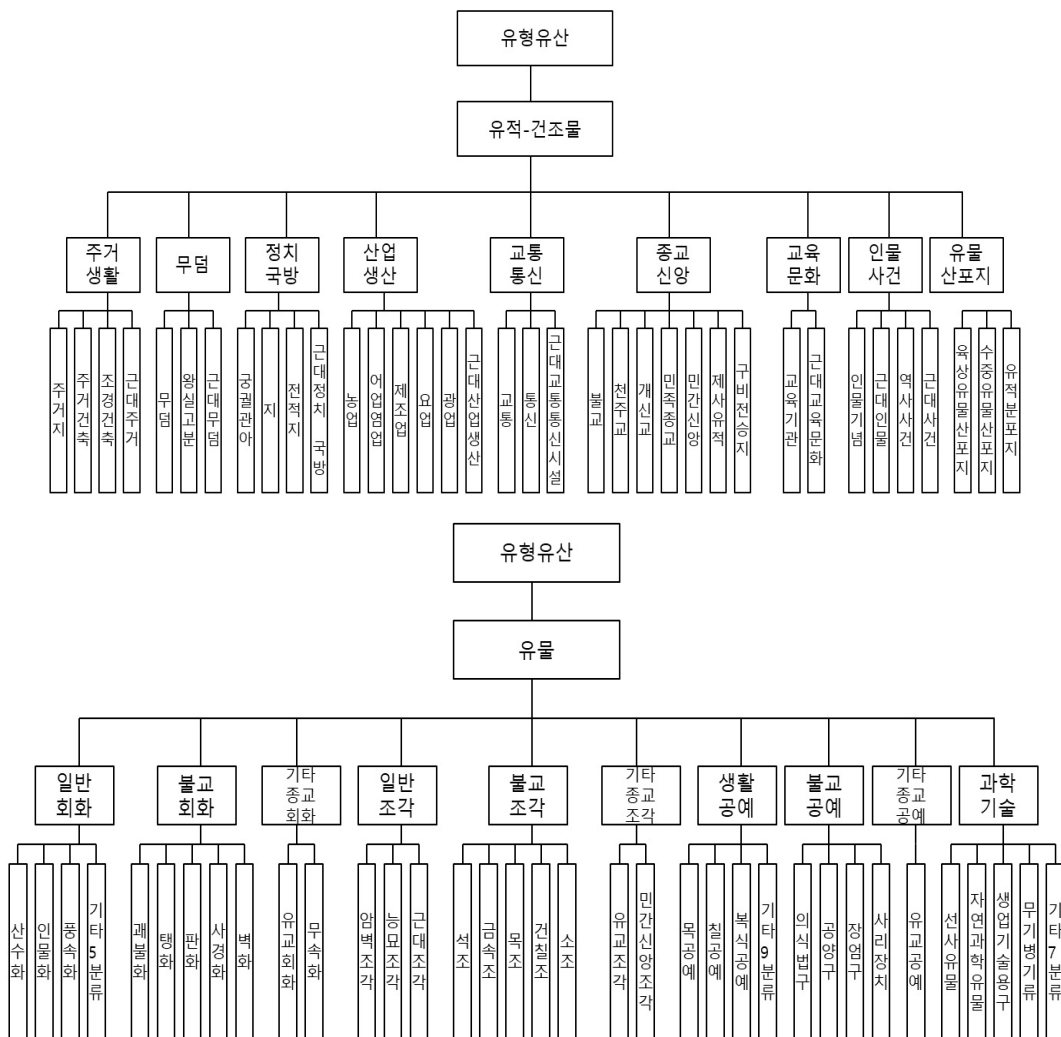
2)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주요내용

- 민속자료(현행 민속문화재)는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지정체계와 같이 별도로 분류하여 지정하지 않고, 전승방법에 따라 유형문화재(물질유산)와 무형문

- 화재(행위 유산) 하위에 민속자료의 일부분을 각각 포함시키는 분류안 언급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속자료는 유형유산에만 해당
 - 민속문화재는 전승방법에 의해 유형문화재에 포함되며, 유형유산의 하위체계인 ‘유적’과 ‘유적-건조물’에 각각 해체되어 분류
 - 민속문화재의 민속마을은 ‘유형유산-생활유적-주거건축-민가 마을’에 포함
- 시사점
- 전승방법을 기준으로 유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분류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그림 2-41] 문화재청(2005)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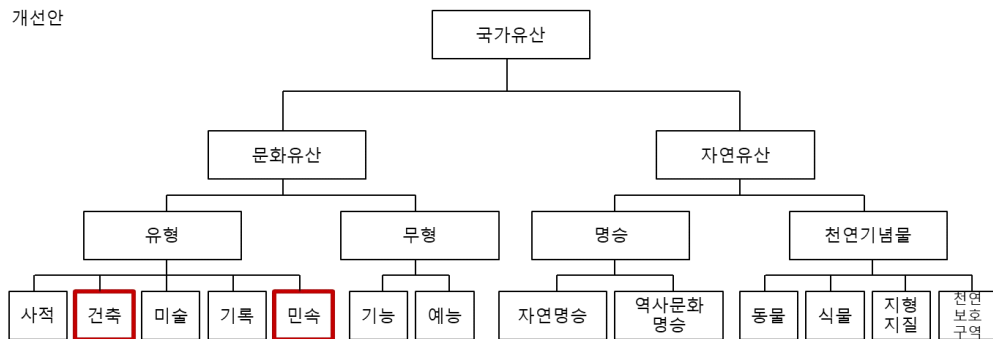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민속,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관련된 회의는 소위원회 자문회의와 6차 회의에서 진행
-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보다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통계와 같이 민속문화재의 행정적 분류를 바탕으로 유형의 민속과 무형의 예능·기능에 기존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를 재배치하는데 중점
- 민속문화재의 유물은 ‘국가유산-문화유산-유형-민속’으로 그대로 이동
- ‘유형’의 하위 ‘민속’은 일상의례, 세시풍습, 민속신앙, 생산풍습, 의식주풍습 및 민속유물로 규정
- 민속문화재의 유적건조물(가옥, 민속마을)은 유형문화유산의 건축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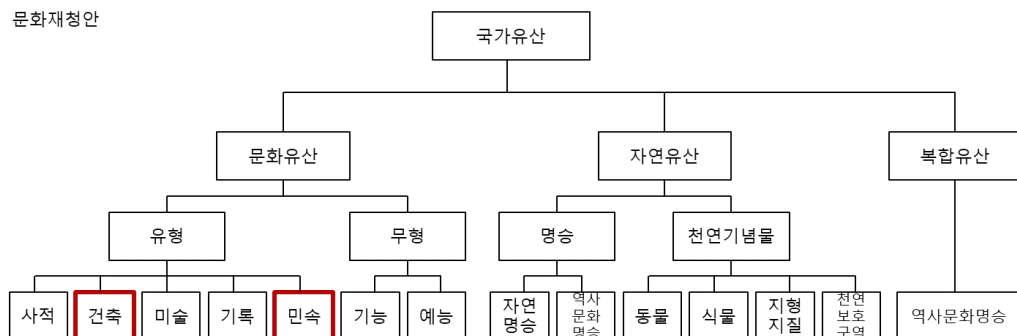
- 시사점

- 문화재청에서 행정적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최대한 적용, 민속문화재의 유물은 ‘유형문화유산’의 하위 분류체계 ‘민속’으로 별도 분리하여 그대로 이동하였으며 유적건조물은 ‘유형문화유산’의 ‘건축’에 포함
- 가치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개선안



문화재청안



[그림 2-42]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분류체계(안) 도식화

3) 종합 시사점 및 쟁점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속문화재는 사실상 모두 유형문화재이므로 유형문화재에 포함하는 대안이 적절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임
-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유형’의 하위분류로 ‘민속’을 그대로 이동시키거나(유적·건조물은 건축에 포함), 유형의 하위분류에 기존의 민속문화재를 각각 해체하여 개별로 포함시키는 대안 제시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기준과 행정적 분류 체계의 정합성 낮음(민속문화재의 행정적 분류 체계는 유형의 행정적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음)
- 문화재청의 보고서 등 행정적인 분류체계에서 민속문화재는 ‘유적건조물’과 ‘유물’로 유형의 동산-부동산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음
- 그러나 민속문화재의 민속마을은 유형문화재-부동산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분류하는 방안이 효율적일지 고찰이 필요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민속문화재의 이전 명칭은 ‘민속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예술성이 배제, 생활문화적 가치를 강조
- 따라서 ‘국보·보물’로 지정된 유물 및 건조물은 예술성, 역사성이 있는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역사성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생활 문화적 가치가 강조되는 것
- 그러나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유물 중 ‘제1호 덕온공주 당의’, ‘제2호 심동진금관조복’ 처럼 상층의 공예 작품으로 보아야할 것들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 모두 예술성이 배제되었다 보기 어려움

4. 사적

1)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의 현황

(1) 제도상 정의 및 분류 현황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3항의 가목의 사적 분류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3항의 가목은 사적지를 “절터, 옛 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의 정의에 따르면 사적은 크게 사적지(史蹟地)와 시설물로 구분되는데 이는 해당 문화재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대분류임
- 사적지는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가 현존하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옛 터, 즉 흔적(蹟)’을 의미하고, 시설물은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가 가시적으로 현존하여 드러나는 것을 의미함

구분	사적	
	사적지	시설물
구분 변수	불가시적 가치표현요소	가시적 가치표현요소
유형 예시	절터,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	사찰, 고궁, 고분군 등

[그림 2-43] 사적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사적 지정기준에 따른 사적 유형 구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사적 지정기준에 따르면 사적은 크게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즉 선사유적지
-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즉 정치국방 유적지
-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즉 산업·교통·주거생활 유적지
-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으로 교육·의료·종교 유적지

- 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즉 제사·장례 유적지
-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즉 인물 유적지

구분	사적										
	선사 시대 유적		정치 국방 유적		산업, 교통, 주거 생활 유적		교육, 의료, 종교 유적		제사, 장례 유적		인물 및 사건기념 유적
구분 변수	시대		용도		용도		용도		용도		유래

[그림 2-44] 사적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 원활한 문화재 정보 검색 및 콘텐츠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적 분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사적																
	주거 생활		정치 국방		교통 통신		교육 문화		유물 분포 지, 유적 산포 지		무덤		산업 생산		종교 신앙		인물 사건
구분 변수	용도		용도		용도		용도		유물, 유적 집중 도 및 매장 여부		용도		용도		용도		유래

[그림 2-45] 사적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청 홈페이지)

(2) 가치평가 현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적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가치 구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은 사적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가치를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

-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즉, 역사적 대표성·희소성·상징성
-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역사 사건 관련성을 의미함
- 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며 역사 인물 관련성을 의미함

구분	사적					
	중요한 정보 보유성		시대적 대표성·희소성·상징성		사건 관련	인물 관련
구분 변수	역사적 및 학술적 정보		각 시대에 대한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인물 관련성

[그림 2-46] 사적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3) 주요특징

- 사적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재 관련 용어 중 기념물(monument)에 대응하는 성질의 문화재 유형으로 인식됨
 - 아테네 헌장은 기념물(monument)을 역사적(historic), 예술적(artistic) 및 학술적(scientific) 의미와 가치를 갖는 장소로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
 - 기념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는 베니스 헌장에서 나타나는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역사적인 기념물은 단일 걸작 건축물뿐만 아니라 특정 문명의 증거가 발견된 또는 현저한 발전이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도시 및 농촌 환경에 대한 개념이다. 이것은 위대한 예술적 걸작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과거의 일반적 결과물에도 적용된다(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번역으로 교체할 것). (베니스헌장 제1조-정의)
- (원문) The concept of a historic monument embraces not only the single architectural work but also the urban or rural setting in which is found the evidence of a particular civilization, a significant development or a historic event. This applies not only to great works of art but also to more modest works of the past which have acquired cultural significance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Venice Charter, article 1-definition)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베니스헌장) 1964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The Venice Charter) 1964)」, 1964, 제1조 (정의)에서 발췌

- 베니스 헌장은 ‘역사적 기념물(historic monument)’을 역사적 발전이나 사건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건축물과 역사적 생활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절작(great works)’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 중요성을 갖게 된 ‘일반적 결과물(modest works)’도 기념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역사성’으로부터 기념물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제시함
-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영문, 이하 세계유산보호협약, 1972)」에서 밝히는 기념물의 개념은 인공적 문화 소산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인공적)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협약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 (원문)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elements or structures of an archaeological nature, inscriptions, cave dwellings and combinations of featur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세계유산보호협약」 제1조 문화유산의 정의에서 발췌

- 이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의 기념물 개념은 역사적·예술적 및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 기념적 예술품, 유적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이후 1987년 역사 마을 및 역사 도시지역의 보존에 관한 헌장 (위싱턴 헌장) 1987 (Charter on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 1987)은 베니스 헌장에서 제안한 도시 및 농촌 환경이 기념물적 의의를 보다 강화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냄
-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자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념물(monument)은 ‘인공적’ 소산으로서 인간의 가공에 의해 예술성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성을 획득한 가치 있는 공간 또는 장소단위의 문화재’로 파악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른 기념물의 세부 유형은 역사적 건축물(절작 및 평범한 작품), 유적지, 역사정원, 역사마을, 역사도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상의 사적은 크게 시설물과 사적지로 구분되며, 그 가치는 ‘중요한 정보 보유성’, ‘시대적 대표성·희소성·상징성’, ‘사건 관련성’ 및 ‘인물 관련성’ 등으로 파악됨, 이는 결국 ‘역사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치임
 - 요약하면 사적은 공간 또는 장소단위의 면적 개념의 문화재이며, 그 가치의 근원이 역사성에 있다는 것으로, 다른 문화재 유형과 구분되는 사적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이는 국제적 의미의 기념물(monument)와 상통하는 문화재 유형으로 파악하는 근거이기도 함

2)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1)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장호수, 2004)

- 주요내용

- 문화재를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남겨진 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겨레의 자산인 문화유산(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등)과 자연유산(천연기념물)이라 간주하고 있음
- 문화재를 관리하고 소비 또는 향유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 현행 분류체계가 문화재학 정립에 있어서의 학술적 관점, 공공 문화콘텐츠로서의 유통과 소비의 관점에서 적당하지 않음
- 문화재 관련 기관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체계가 난립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음
- 문화재의 논리적 분류체계와 계층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문화재 분류체계를 대, 중, 소분류로 단계적·계층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논리를 연역적 방법과 인위분류 방식으로 수립하였음
- 즉, 문화재 분류의 구분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그 속성에 따라 문화재 유형을 구분하는 것임
- 분류 기준의 작성에 있어 보편성, 일관성, 유일성, 포용성과 신축성, 호환성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시사점

- 총체적론적으로 문화론을 근간으로 문화재를 이해하여 사회조직·제도·종교·신앙·예술 등의 관념적 상부구조와 생업 또는 생계양식의 하부구조를 모두 문화재의 구성요소로 파악함
- 문화재를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남겨진 것으로 파악하여 그 전승방법을 문화재 분류의 기준으로 파악
- 아울러, 자연유산을 문화생산의 배경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문화재 개념에 포함하고 있음(1. 물질전승 문화유산: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일부; 2. 행위전승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일부, 민속자료 일부; 3. 언어전승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일부; 4. 문화배경: 자연 및 인위적 경관)
- 최대 분류의 기준을 구성요소로 하는 안과 전승방법으로 하는 두 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기존 문화재분류체계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고, 중분류와의 혼란을 피할 수 있어 일관성 및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승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채택
- 즉, 문화재의 최대분류를 문화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함
- 최대분류 이하 중분류 및 세분류 단계에서는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를 제시함 이러한 구성요소로서의 분류기준은 시대, 지역, 형태, 재질, 용도, 속성, 유래, 가치가 있으며, 이를 문화재 최대분류에 따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위와 같이 분류체계의 수립에 있어 하위분류가 상위분류에 포섭되는 Tree형 계층구조로 구성
- 사적은 문화유산으로서 형태별-용도별-속성별-재질별-시대별-지역별-가치별 단계에 따라 구분

[표 2-15] 장호수(2004)의 사적 분류(안)

구분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준	전승방법	형태	용도	재질, 시대, 지역, 가치
분류 체계	유형유산	유적건조물	생활유적	주거유적
				주거건축
				능원묘
			무덤유적	고분(고려이전)
				민묘(고려이후)
			정치국방유적	궁궐 관아
				성곽 전적지

구분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통치관련
				근대정치 국방
			산업생산유적	농업
				어업업
				수공업
				요업
				광업
				상업 유통
				근대산업시설
			교통통신유적	교통토목
				통신
				근대교통통신
			종교사상유적	불교
				도교
				기독교
				근대민족종교
				근대사상
			교육문화유적	유교교육기관
				근대교육문화
			역사인물유적	인물기념
				근대인물
			민속신앙유적	제사유적
				민간신앙
			유물산포지	육상
				수중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주요내용

- 문화재청(2005)의 연구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염두에 두고 메타데이터 개념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고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즉, 문화재 정보를 전산화 하여 효율적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표준화된 문화재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통합된 분류체계를 도출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 연계기반을 마련하려 하였음
- 본 연구는 장호수의 연구(장호수, 2004)를 보다 심화 발전시킨 연구로 적용된 이론은 장호수(2004)와 유사한 내용을 보임

- 즉, 장호수(2004)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크게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하위분류를 위해 시대, 지역, 형태, 재질, 용도, 속성(사회적 속성, 즉 성격), 유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다만, 그 연구 과정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류체계 도출 논리의 구체성을 제고하였음
- 시사점
- ‘기념물’의 대분류를 해체하고 사적(유적)과 건조물 문화재를 한데 묶어 유형유산의 하위 유형인 유적·건조물로 분류하였다는 데 있음
 - 문화재청(2005)은 유적·건조물에 대한 세분류로 주거생활, 무덤, 정치국방, 산업생산, 교통통신, 종교문화, 교육문화, 인물사건, 매장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유적·건조물 문화재 고유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됨
 - 상위 분류에 따라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요소들 간에 대체로 일관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분류체계라 할 수 있음
 - 즉, 제안된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가 보편적, 일관적, 유일적, 포용적, 신축적 그리고 호환적으로 구성됨
 - 다만, 그 분류체계상에 분류변수를 적용하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가 지적됨

[표 2-16] 문화재청(2005)의 사적 분류(안)

구분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준	전승방법	형태	용도	재질, 시대, 지역, 가치
분류 체계	유형유산	유적건조물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근대주거
			무덤	무덤
				왕실무덤
				고대무덤
			정추국방	궁궐관아
				성곽
				전적지
				근대정치 국방
			산업생산	농업
				어업염업
				제조업

구분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요업
				광업
				근대산업생산
			교통통신	교통통신
				근대교통통신시설
			종교신앙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민간신앙
				제사유적
				구비전승지
			교육문화	교육기관
				근대교육문화
			인물사건	인물기념
				근대인물
				역사사건
				근대사건
			유물산포지	육상유물산포지
				수중유물산포지
				유적분포지

○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주요내용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8년 ‘문화재’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문화재 분류체계와 더불어 지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는 일본의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를 참조해 제정된 현행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가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아 여러 개선점이 대두함을 인식한 데서 출발함
- 우선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유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세계 유산에 대응하는 국내적 개념으로 국가유산을 제시하였음
- 또한, 국민적 인식에 대응하는 일반 용어와 실제 행정상에 적용되는 관리 용어를 이원화하여 접근하였음
- 등급체계에 있어 문화재 분야에만 가치에 따른 2단계 구분(국보, 보물)을 적용한다는 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대응함

- 국립문화재연구소(2008)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지된 문화재 지정분류체계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선안 2개(각각 문화재청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안)를 제시하였음
 - 분류체계 개선안은 공통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세계유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국가유산 개념을 제안
 - 또한, 국가유산의 하위분류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각각 제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체계에 대응하는 구조를 수립
 - 문화유산은 그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의 2종으로 분류하는데, 사적은 문화유산 이하 ‘유형’의 일부로 분류됨
- 시사점
- 본 분류체계 역시 인공적 소산과 자연적 소산을 우선 분류함으로써 기존의 ‘기념물’ 개념을 해체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즉, 사적이 인공적 활동의 소산이라는 특성을 재확인한 것임
 - 사적 내의 세부 유형을 분류하는 안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적과 건축을 ‘문화유산-유형’ 이하의 중분류에서 사적과 건축을 따로 제시하고 있어 사적으로 지정된 ‘건조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함

[표 2-17]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사적 분류(국립문화재연구소안)

구분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기준	형태	전승방법, 형태	형태
분류 체계	문화유산	유형	사적
			건축
			미술
			기록
			민속
		무형	기능, 예능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표 2-18] 국립문화재연구소(2008)의 사적 분류(문화재청안)

구분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기준	형태	전승방법, 형태	형태
분류 체계	문화유산	유형	사적
			건축
			미술
			기록
			민속
		무형	기능, 예능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명승	자연명승
	복합유산	-	역사문화명승

○ 『사적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문화재청, 2009a)

- 주요내용

- 문화재청은 (2009) 사적 지정제도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지정분류체계의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용역을 통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적 지정분류체계의 주요 쟁점으로 ‘개체단위 문화재(시설물)의 포함 여부; 근대건축물 및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의 포함여부’ 등 사적의 개념에 대한 사항과 함께, ‘사적의 유형별 분류기준 신설 여부’를 제시한 바 있음
- 이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가 사적 이하 중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 즉, 문화재청이 행정 편의를 위해 또는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부여한 분류가 법적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임
- 위와 같은 쟁점을 극복해 문화재 유형과의 중복을 피하고 사적 유형의 중분류 이하 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음
- 중분류에 있어서는 특히 유적의 시대, 용도, 유래를 기준으로 삼음
- 세분류에 있어서는 유적의 형태, 위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삼음
- 세분류는 법령 상 추상적인 조문의 형태로 제시된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분류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시사점

- 사적의 지정 및 분류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쟁점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우선 개체 단위 문화재의 포함여부에 있어 건물 한 개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토지 및 면적단위 문화재만을 사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
- 둘째, 개항기를 기준으로 개체단위의 근대건축물 유형의 사적은 유형문화재로 전환하고, 면적단위의 근대건축물사적은 등록문화재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으며, 다만 이 경우 사적의 가치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치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제안
- 셋째, 민속문화재의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이른바 민속마을) 지정기준 중 일부 사적의 기준으로 전환하여, 면적단위의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서 그 가치가 사적에 준하는 대상에 한해 사적으로 전환하여 분류할 것을 제안¹⁸⁾

[표 2-19] 문화재청(2009a)의 사적 분류(안)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준	형태	시대, 용도, 유래	형태, 위치, 가치
분류 체계	사적	선사시대 유적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기타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	궁궐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기타
		산업, 교통, 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연못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기타
		교육,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	서원
			향교
			학원

18) 이를 위해 민속문화재 지정기준 제3호의 마와 바(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을 삭제해야 할 것임. (문화재청, 2009a)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병원
			절터
			교회
			성당
			기타
		제사, 장례에 관한 유적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기타
		인물, 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인물유적
			사건유적

(2)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사적의 이해」(노중국, 2006)

- 사전적 의미에서 ‘사적(史蹟)’의 용어를 해석하여 역사성을 강조
 - 사전적 의미에서 사적은 역사상으로 남아있는 중대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의 자취를 말함
 - 따라서 사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적에 있어 역사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요소가 됨

○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문화재청, 2009a)

- “사적의 가치는 그 장소, 고건축물 및 유구와 관계된 사건, 인물, 의미 등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발생한다 할 것(historic site)”이라 보았음
 - 즉, 사적의 가치는 특히 해당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사적은 기본적으로 ‘토지(즉, 일정한 장소)’를 전제하는 문화재 유형임을 강조하고, 사적은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원위치에서 이동된 사적은 그만큼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법에 따른 사적 지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설하여 사적의 가치판단요소로서의 역사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사적지정제도의 개선에 있어 개별적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는데 이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요약됨
 - ①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② 시대적 대표성·희소성 및 상징성, ③ 역사적

사건성, ④ 역사적 인물성

-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이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 이를테면 학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문화재청, 2009a: 102). 이는 사적의 세부 유형중에서도 특히 매장문화재 집중 분포지에 강조됨
- 시대의 대표성·희소성 및 상징성이란 해당 사적이 다른 문화재 자원과 비교하여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하거나 또는 상징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즉, 해당 문화재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 생활방식, 문화, 건축양식 또는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간에 관한 역사성·학술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당대의 생활문화를 대표하는 필수적 환경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문화재청, 2009a: 103)
- 역사적 사건성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 활동, 발달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역사에 국가적으로 나타난 경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그 경향을 대표하면서 나아가 그 경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문화재청, 2009a: 103)
- 역사적 인물성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역사에서 특별히 공헌한 개인과 연관을 가진 문화재에 적용되는 가치판단요소임(문화재청, 2009a: 104)

○ 「도시경관 자원으로서 건축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제천 엽연초생산 조합 구사옥을 중심으로」 (이완건, 2014)

- 사적에 있어서는 역사적 가치와 그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도시 경관에서 건조물 유형의 사적이, 그리고 자연 경관에서 공간 단위의 사적이 갖는 고고(考古)한 미감으로부터 가치를 인식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와 같은 인간의 생활환경에 자연요소, 공간요소 및 인간의 생활요소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역사적 흐름에 있어 특별한 장소들이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경관미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이완건, 2014)
- ‘특별한 장소’는 도시 전체의 경관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러한 관점은 사적의 장소성에 대한 접근과 동일한 전제이나, ‘역사적 경관’의 가치를 강조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종합 시사점 및 쟁점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적의 분류기준으로부터 그 문화재로서의 성질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 사적은 가치요소가 오롯이 드러나 있는 시설물과, 일부 또는 전부가 현존하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사적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공간 또는 면적단위로서의 성질을 드러내고 있음
 - 그 가치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기념’될 만한 것으로서의 가치 즉,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에 비추어 대부분의 사적에 관한 선행연구는 ‘면적단위’, ‘장소와 의 연관성’ 그리고 ‘역사적 기념성’을 사적의 주요한 성질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에 있어 법상의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제기됨
 - 현재 사적은 ‘기념물’의 하위 단계에서 명승, 천연기념물과 함께 수평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이 알맞은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념물(monument)은 인간의 문화적 활동의 소산으로서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문화재를 의미하는데,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그 본질이 인문·문화 보다는 자연·환경에 가까움
 - 이에 따라 기존 기념물 분류를 해체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재지정기준에 따른 사적의 가치분류는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시대적 대표성·희소성·상정성’, ‘사건관련성’, ‘인물관련성’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문서에서 제시하는 사적 유형별 분류체계는 ‘시대’, ‘용도’, ‘유래’를 유형별로 각각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짐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른 행정적 분류역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같은 위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일관성과 일체성이 떨어짐
 - 즉, 현행 사적 분류체계는 ‘가치’에 따른 구분, ‘용도·유래·시대’에

따른 구분, ‘용도·유래·유물유적 집중도 및 매장여부’에 따른 구분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장소·면적·공간 단위의 성질과 인문·문화적 성질을 갖는다는 특성에 있어 단일 건축물 단위의 문화재와 민속성이 두드러지는 민속마을 유형의 문화재를 사적에 포함할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는 실정임
 - 현재, 단일 건축물 단위 문화재는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음
 - 민속성이 두드러지는 공간으로서의 민속마을은 민속문화재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사적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배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접근이 확인됨
 - 타 문화재유형과 구분되는 사적의 중요한 가치는 ‘역사적 기념성’에 있으며, 역사적인 ‘시대, 인물, 사건’ 등이 일어난 터, 시설물, 공간 또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문화재라 풀이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에서 기존 기념물 유형에서 사적을 분리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접근이 나타남
 - 사적 유형을 유형유산 이하 ‘유적건조물’ 유형으로 따로 분리하는 안(장호수, 2004; 문화재청, 2005), 사적의 ‘유적지’로서의 성질을 강조하여 유형문화재 이하에서 ‘건축 문화재’와 ‘사적 문화재’를 분리하는 안(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또한, 민속문화재와의 중복에 있어 민속마을(법상 민속문화재 구역)에 대한 지정기준을 사적의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적의 가치범주를 확대하는 안임(문화재청, 2009a)
- 사적의 이하 세부 분류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논의역시 활발함
- 사적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가치를 분류하여 제시하면서도, 유형별 구분에 있어서는 본래 용도를 적용하여 기존 제도(문화재보호법)과의 일체성을 추구함(장호수, 2004; 문화재청, 2005; 문화재청, 2009a)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사적 가치판단요소에 대한 일반론

- 사적은 사전적 의미에서 역사상으로 남아있는 중대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의 자취를 말함(노중국, 2006: 231)
 - 사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러한 측면에서 사적의 가치는 그 장소, 고건축물 및 유구와 관계된 사건, 인물, 의미 등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발생한다 할 것임(historic site)(문화재청, 2009a)
- 사적의 가치는 특히 해당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문화재청(2009a)에서 사적은 기본적으로 ‘토지(즉, 일정한 장소)’를 전제하는 문화재 유형임을 강조함
 - 문화재청(2009a)에 따르면 사적은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하며, 원위치에서 이동된 사적은 그만큼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음
 - 즉, 사적 가치의 형성에 있어 장소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임

○ 사적 가치판단요소에 대한 최근 흐름

- 사적의 가치판단요소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사적에 있어 특히 강조되는 역사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다른 한편으로 도시 경관에서 건조물 유형의 사적이, 그리고 자연 경관에서 공간 단위의 사적이 갖는 고고(考古)한 미감으로부터 가치를 인식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렇듯 관점에 따라 대두하는 사적의 가치판단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역사적 관점은 역사적 의미와 역사성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역사적 의미의 학술적 해석과 학술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장소적 관점은 장소와 사적의 연과성과 장소성으로 구분
- 역사적 관점의 세분화는 역사적 정보, 역사적 의미, 역사적 사건 관련, 역사적 인물관련 등과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시대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 역사적 사건성, 역사적 인물성 등으로 구분
- 도시경관의 관점은 도시의 시대적 구성요소, 역사적 경관성으로 구분

[표 2-20] 관점에 따른 사적의 가치판단요소

관점에 따른 사적 가치판단요소		
관점	대상	가치판단요소
역사적 관점	역사적 의미	역사성
	역사적 의미의 학술적 해석	학술성
장소적 관점	장소와 사적의 연관성	장소성
역사적 관점의 세분화	역사적 정보	중요한 정보의 보유성
	역사적 의미	시대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
	역사적 사건 관련	역사적 사건성
	역사적 인물 관련	역사적 인물성
도시경관의 관점	도시 경관의 시대적 구성요소	역사적 경관성(예술적 요소에 대한 검토)

- 따라서 사적의 가치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역사적 관점의 경우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과 세분화를 통한 역사적 관점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판단은 대상에 따라 가치판단요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역사적 관점 자체가 포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역사와 관련된 인물, 사건, 정보, 중요 의미 등은 역사적 관점을 보다 다양화하여 가치판단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에 따라 다름
 - 가치판단의 기준이 인물인지 아니면 사건인지에 따라서 역사적 관점의 가치판단이 구분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적의 경우에도 가치판단요소가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가치판단요소가 개입될 수 있음

5. 명승

1)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의 현황

(1) 제도상 정의 및 분류 현황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3항의 나목은 명승을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조문 상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명승의 지정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즉 자연경관지
 - 나.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즉 생물경관지
 -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 다.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즉 경관조망지
 - 라)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 마)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 라.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의 역사경관지
 - 마.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즉 문화경관지
 -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 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임

구 분	명승										
	자연 경관지		생물 경관지		경관 조망지		역사 경관지		문화 경관지		유네스코 자연유산
구 분 변 수	경관 가치의 주요소 (자연지 질)		경관 가치의 주요소 (자연생 물)		경관 향유 형태 (조망)		경관의 역사성		경관의 인문성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대상지

[그림 2-47] 명승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

○ 원활한 문화재 정보 검색 및 콘텐츠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승 분류는 다음과 같음

- 가. 자연명승
- 나. 역사문화명승

구분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문화 역사 기념물	생물 과학 기념물	지구 과학 기념물	문화 및 자연 결합성	자연 과학성	자연 명승		역사 문화명승
구분 변수	가치의 주요소 (인문역 사)	가치의 주요소 (자연생 물)	가치의 주요소 (자연지 질)	가치의 주요소 (역사인 문)	가치의 주요소 (천연자 연)	경관 가치의 주요소 (자연물)		경관가치 의 주요소 (인문가치 물 또는 인공물)

[그림 2-48] 명승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청 홈페이지)

(2) 가치평가 현황

명승은 문화재에 관련된 초기 입법사례인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의 제정에서부터 확인되는 문화재 유형임

- 문화재 지정관리의 세부 기준과 원칙 및 지정사례를 담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1935)」에 따르면 명승을 “경승지, 경치와 전망이 뛰어난 곳을 말하며, 국민의 관광에 대비해서 위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외국의 관광객을 초대하는 등 필요에서 국가로서 보존을 꾀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 명승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경치’라는 특성을 지닌 곳(즉, 장소)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임

- 또한, 국민(즉, 내국인)의 관광에 대비하고 외국의 관광객(즉, 외국인)을 초대하는 등의 필요를 강조하여 관람에 의한 활용가치가 고려되는 문화재 유형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시각을 계승한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명승을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앞서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경치’의 특성을 강조함
- 특히, ‘예술적 가치’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경치의 감상을 통해 경관(즉, view)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되는 예술적 센스가 주된 가치판단요소로 작용함이 드러남

○ 명승의 세부 분류체계로부터 경관의 예술성 뿐 아니라 역사성, 학술성 등 ‘인문·문화적 의미’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역시 포함됨이 나타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명승의 지정유형은 크게 ‘자연경관지’, ‘생물경관지’, ‘경관조망지’, ‘역사경관지’, ‘문화경관지’,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7종으로 구분됨
- 특히, 역사경관지와 문화경관지의 경우 인문·문화적 의미로서의 가치가 강조되는 유형으로 파악됨
 - 역사경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을 의미
 - 단순히 경치가 뛰어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 경관에 대하여 역사적 의미와 인문적 해석이 덧입혀진 대상을 구분하는 것임
 - 문화경관지는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를 의미
 - 역사경관지의 인문·문화적 성격에 더해 자연적 경관에 인공적 시설 또는 가공이 더해진 경관 유형을 의미하며, 그 가치를 ‘저명한(이름난, 즉 勝地의 개념) 것’에서 찾고 있음
- 단순히 자연 경관의 ‘예술적 가치’에만 국한되지 않는 가치요소이며, 명승이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를 아우르는 문화재 유형임을 나타냄

(3) 주요특징

- 명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재 관련 용어 중 역사정원(historical gardens)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
 - 1981년 플로렌스 헌장(Historical Gardens, The Florence Charter)은 ‘기념물’의 개념에서 ‘인공적 자연물’인 역사적 정원을 해설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음

“역사적 정원은 역사에 관한 관점 혹은 예술적 관점에서 대중에게 흥미를 주는 건축적 및 원예학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정원은 기념물이다.

(원문) “A historic garden is an architectural and horticultural composition of interest to the public from the historical or artistic point of view“, as such, it is to be considered as a monument.

「역사적 정원, 플로렌스 헌장(플로렌스 헌장) 1981, (HISTORIC GARDENS THE FLORENCE CHARTER 1981)」, 제 1조-정의에서 발췌

- 역사적 정원은 기본적으로 자연물이나 그 조성에 가미된 인간의 건축적 및 원예적 가공으로부터 역사적 및 예술적 가치가 발생하는 기념물로 이해됨
 - 즉, 「문화재보호법」 체계에 따른 명승 유형 중 특히 ‘문화경관지’와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명승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경관’과 ‘인공적으로 해석되는 자연경관’, 그리고 ‘인간이 감상하는 자연경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역사정원에 비해 더욱 넓은 의미임
- 즉, 문화재로서 인식되는 명승의 예술성 및 역사성은 역사정원의 기념물적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대상 범위는 역사정원보다 더욱 넓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명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응하는 국내적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함
- 본질적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면적·공간·장소 단위 문화재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세계자연유산과 유사한 측면을 보임
 - 다만 명승의 세부 유형으로서의 역사경관지와 문화경관지는 유네스코세계유산 제도의 ‘문화경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문화경관’은 세계유산협약 제도 운영에 있어 ‘문화유산’ 내지는 ‘복합유산’에 가까운 사례로 나타남

- 또한, 명승은 ‘경치’의 아름다움과 ‘경관’으로서의 조망대상을 지칭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자연환경으로서의 관광·향유·연구·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연유산기준 xii¹⁹⁾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1)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 『자연유산법 제정연구』(문화재청, 2011c)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일원적 문화재보호제도에서 탈피하고, 다른 문화재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자연문화재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임
 - 해당 연구에서는 자연유산을 자연물로 구성된 문화재로서 문화유산에 대비되는 개념의 문화재로 인식하고, 크게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하였음
 - 명승은 천연기념물에 비해 인문적 요소의 개입이 큰 ‘경관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임
 - 즉 ‘인공’을 주요 변수로 삼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구분하였음에도 또 다시 ‘인공의 개입’을 변수로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구분하는 것임
 - 명승은 또 다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2종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도 같은 ‘인공의 개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함
 - 자연경관은 그 유형별로 ‘산악, 화산, 계곡, 폭포, 하천, 호수, 해안, 도서, 동식물의 서식지’로 구분되고 문화경관은 따로 세분하지 않았음
- 시사점
 - 문화재청(2011)의 분류체계는 법철학적 입장에서 기존의 자연물에 대한 문화재 분류체계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관리상의 실용성을 고려해 그 유형을 보다 단순하게 재구성한 결과물이라 할 것임
 - 일관된 개념변수를 적용해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명승의 성격 (즉, 인문적 가치구성요소의 존재)를 규명하는 특징을 보임

19)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xii :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현상이나 지역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문화경관 개념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즉, 자연환경이 바탕이 된 공간에 인간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기적인 관계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

[표 2-21] 문화재청(2011c)의 명승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자연유산	명승	자연경관	산악
			화산
			계곡
			폭포
			하천
			호수
			해안
			도서
			동식물
	천연기념물	문화경관	-

○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장호수, 2004)

- 주요내용

- 장호수(2004)는 문화재를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남겨진 유산으로서의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소비 또는 향유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장호수(2004)는 현행 분류체계가 문화재학 정립에 있어서의 학술적 관점, 공공 문화콘텐츠로서의 유통과 소비의 관점에서 적당치 아니하고, 문화재 관련 기관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체계가 난립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음
- 논리적 분류체계와 계층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음
- 본 분류체계는 기존의 명승을 자연적 형태요소와 인문적 가치요소가 병합된 형태의 ‘자연문화 복합기념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자연문화복합기념물은 그 용도를 기준으로 문화역사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여기에서 ‘문화역사기념’물은 자연물로서 인문적 의의 및 가치를 갖는 문화적 경관 일체에 대한 분류이고, ‘명승’은 심미적 향유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관점에서 구분

- 문화역사 기념물은 그 속성에 따라 종교, 민속, 생활, 역사, 기념 등으로 세분류

- 시사점

- 분류 기준의 작성에 있어 보편성, 일관성, 유일성, 포용성과 신축성, 호환성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총체론적 문화론을 근간으로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연을 문화가 생성되고 전승되는 배경으로서의 환경적 요소로 이해하였음
- 즉, 문화유산에 대비되는 자연유산을 인간이 문화를 생산·소비하고 전승하는 환경으로서의 ‘문화배경’으로 이해한 것임
- 문화배경을 구성요소 또는 전승방법을 기준으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음
- 자연경관은 그 가치가 자연적 가치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문화경관은 그 가치가 문화적 구성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구분
- 또한 자연경관은 그 전승이 자연환경의 보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화경관은 그 전승이 경관 속에서의 삶의 방식, 민속, 의례, 전설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승방법을 기준으로 구분

[표 2-22] 장호수(2004)의 명승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구성요소 전승방법	형태별	용도별	속성별	시대별, 지역별, 가치별
자연유산	자연문화 복합기념물	문화역사 기념물	종교문화	불교
				유교
			민속문화	민속신앙
				자연사상
				전설관련
				민속관련
			생활문화	마을숲
				정자나무
				유용성
			역사성	문화교류
				국토방위
			기념성	행정구역
				마을왕실관아
				추념관련
		명승	세분류 하지 않음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자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자연과학기념물	아래에서 다룸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주요내용

- 문화재청은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표준의 제정, 문화콘텐츠 유통과 소비를 돕기 위한 표준적 속성체계의 필요성,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와 소통 가능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함을 인식
- 이를 반영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호수의 2004년 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문화재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재 분류체계 표준을 연구
- 본 연구의 특징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염두에 둔 메타데이터 개념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고안하였다는 것
- 자연유산을 인간의 관념을 투영하고 재해석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 환경을 인간의 문화적 환경과 깊이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문화재청, 2005: 31)
- 자연유산을 형태-용도-속성-시대-지역-가치별 단계에 따라 분류(문화재청, 2005: 35)
- 위의 기준에 따라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명승의 3종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명승을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경관 문화재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또다시 가치구성요소의 인문성을 기준으로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으로 분류

- 시사점

- 자연유산을 인간의 관념이 투영되어 재해석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순수한 자연환경과 대비되는 인문적 자연환경으로서 명승을 개념화
- 즉, 자연환경과 문화적 관념의 유기적 관계로부터 명승의 가치를 인식
- 위와 같은 인식에서 기존 안에서 산악형, 해안형, 도서형으로 단순 분류하던 명승 분류를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 다만, 유산 분류에 있어 분류 변수의 적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한계가 지적됨

- 또한, 인문적 요소에 따라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과 명승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하위 중분류에서 동일한 분류 기준을 다시 적용하고 세분류에서 명확한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분류의 구체성이 미비
- 이 연구 역시 인문과 자연을 문화재 분류의 최대 분류의 변수로 사용하여 기존의 기념물 개념을 해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장호수의 이전 연구(2004)와 달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행 문화재 관련 용어를 수용하였다는 데에서 특징이 있음

[표 2-23] 문화재청(2005)의 명승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구성요소 전승방법	형태별	용도별	속성별	시대별, 지역별, 가치별
자연유산	자연문화 복합기념물	문화역사 기념물	종교문화	불교
				유교
			민속문화	민속신앙
				자연사상
				전설관련
				민속관련
			생활문화	마을숲
				정자나무
				유용성
			역사성	문화교류
				국토방위
			기념성	행정구역
				마을왕실관아
				추념관련
		명승		-
	자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
		자연과학기념물		

○ 『국가지정 명승 유형별 보존 및 활용방안』(문화재청, 2014a)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명승을 뛰어난 경관중에서도 특히 인위적 행위가 투영되어 ‘이름 붙여진 대상’으로 인식
- 또한 명승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그 유기적인 결합에서 가치를 발산한다고 주장

- 위의 관점에서 명승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학술적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그 연장에서 명승을 분류하는 체계를 제시
 - 명승의 가치 인식에 있어 ‘물리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를 구분하고 이들 간의 결합을 강조
 - 물리적 요소는 자연적 혹은 인공적 형상으로 경관을 형성하는 물리적 기반, 인문적 요소는 물리적 기반 위에 인위적으로 부여된 문화적 가치임
 - 인공경관은 조성목적에 기준으로 생활명승과 산업명승으로 구분함
 - 자연경관은 인간의 접근 가능여부와 조망시점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조망이 적당한 경우’, ‘외부에서 조망이 적당한 경우’ 그리고 ‘내 외부 시점에서 조망이 두루 적당한 경우’로 구분함
- 시사점
- 전통적 경관인식에서 명승을 해석하여 ‘경지(경치가 뛰어난 곳, 시각적 향유대상으로서의 경관. 즉, 자연명승)’와 ‘승지(이름난 곳, 인문적 가치 배경으로서의 경관 즉, 인공경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명승 분류체계를 구성
 - 자연경관의 구분에 조망시점을 적용하여 시각적 향유 대상으로서의 경관 개념까지도 접목함
 - 인공경관을 생활명승과 산업명승으로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터전으로서의 유기적 경관개념을 강조

[표 2-24] 문화재청(2014a)의 명승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형태	인문적 요소의 다소	향유형태, 용도
명승	자연명승	외부조망
		내부조망
		내/외부조망
	인공경관	생활명승
		산업명승

(2)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게슈탈트 이론을 적용한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연구—산을 중심으로」(김기호, 1996)
 - 게슈탈트 심리학의 이론을 도입 경관의 구성요소를 경관 요소를 '도형'과 '배경'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조화에서 경관의 아름다움이 발생한다는 인식
 - 경관을 각 구성요소간의 조화 속에서 예술적 가치가 발생하는 시각적 향유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경관의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발생 과정을 이론화한 접근
 - 이론화 접근은 김현정(2015)의 명승의 구조를 조망대상과 조망지점으로 해체하고 주변 경관의 조화에서 심미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연구로 이어짐
 - 심미적 가치에 대한 서양 회화의 관점에서 명승의 경관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조선시대 한강변 명승의 향유방식」(김현정, 2015)
 - 김현정(2015)은 이러한 관점을 계승해 명승의 구조를 조망대상과 조망지점으로 분류하고 주변 경관의 조화를 통해 심미적가치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즉, 경관을 각 요소간의 조화를 통해 경관미를 발생시키는 시각적 향유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경관미'라는 가치의 발생을 이론화한 것임
 - 단, 이는 명승 자원을 단순히 시각적 향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좁은 견해임
-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의 유형과 팔경(八景), 동천구곡(洞天九曲)과의 연관성」(노재현·신상섭, 2010)
 - 명승으로 국가 지정 된 68건의 명승을 대상으로 옛 문헌 속 경승과의 연관성을 조사
 - 각 지역에 전래되어 온 팔경(八景)과 동천(洞天), 구곡(九曲)을 전통적 경관으로 보고 오늘날에도 현대팔경의 형태로 그 가치가 전래되고 있음을 주장
 - 명승을 고유의 전통적 문화재 형태로 인식하고 그 유래를 옛 문헌이 전하는 경지와 승지의 개념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
 - 그 외에도 이석해·이행렬(2001), 신준(2017) 등 옛 문헌에서 전하는 경승에 대한 문학적 표현으로부터 명승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파악됨
 - 이석해·이행렬(2001)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곡운구곡의 실제 경관을 김수증의 문집과 비교하여 가치요소와 차이점을 찾아내고 경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노재현·신상섭(2010)은 또한 제주시 방선문이 문화재보호법의 명승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라 주장하며 도교적 이념이 방선문의 경관에 내재되었음을 연구
- 즉, 한국 전통문화에 내재된 미의식을 통해 오늘날 명승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는 한국 전통 문학에서 이르는 경치가 뛰어난 곳(景地)과 이름난 곳(勝地)을 명승 유형의 문화재로 연결하는 전통적 경관 가치론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요약됨
- 신준(2017)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명승의 가치평가에 적용된 인문적 가치를 역사적 가치, 심미적 가치 그리고 정신적 가치로 구분해 제시하였음

[표 2-25] 신준(2017)의 명승 유형별 가치 구분

지정기준에 따른 명승의 유형		주요 가치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화산, 하천, 해안, 하안, 섬 등	심미적 가치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심미적 가치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심미적 가치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역사·문화적 가치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역사·문화적 가치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심미적 가치

비고 정신적 가치는 모든 명승 유형에 적용되나 관람자의 수용력에 따라 달리 향유되는 것으로 봄

3) 종합 시사점 및 쟁점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명승은 그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개념 정립과 지정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위상이 불분명함
- 명승을 같이 기념물로 분류되는 문화재 유형인 사적, 천연기념물과 개념적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적과 명승의 개념 및 지정 구역 중복
 - 문화재로서의 명승은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다른 문화재 유형과

중복되어왔음

- 즉, 인공물인 사적과 자연물인 천연기념물의 중간 개념으로 명승을 인식하여 온 데에서 기인함
- 특히, 사적의 경우 근래까지 ‘사적 및 명승’ 유형이 운영되어온 이유로 중복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
- 천연기념물의 인문적 가치 강조에 따른 명승과의 중복
 - 명승은 천연기념물과도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나타남
 - 특히, 장소 및 공간 단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본격화되면서 그 개념적 중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현행 분류체계에서 명승과 천연기념물이 구분되는 주된 변수는 ‘인문성에 대한 판단’에 있는데 천연보호구역 중 ‘문화역사기념물’은 인문적 가치가 반영된 자연물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명승의 개념과 상당부분 중복되게 됨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경관성에 대한 개념정의 불명확

- 명승의 주된 가치로 꼽히는 경관성 즉 ‘경관의 가치’가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경관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함께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배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자연과 인문 중 어디에 본질이 있는가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

- 명승은 자연물의 경관을 지정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가치의 근원으로는 인공적 요소를 적용하는 특별한 성질을 띠
- 즉, 자연물로 구성되나 그 가치는 인문적 해석된 내용,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 문화적으로 향유된 경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 명승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보존가치만을 강조하는 다른 문화재 유형과 달리 ‘향유의 대상으로서 보존한다’라는 ‘활용가치’가 제기되어 유형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문화재 향유방식과 문화재 분류체계와의 상관성을 고려할 것

- 명승은 타 문화재 유형과 달리 향유를 전제로 하는 문화재 유형이라는 데 특성이 있음
- 명승은 시각적 향유대상인 경관을 다루는 문화재 유형으로서 ‘멀리서 조망하는 경관’, ‘내부에서 조망하는 경관’, ‘내·외부 조망이 모두 가능한 경관’으로 구분되기도 함
- 향유형태를 문화재 분류체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접근 역시 필요할 것임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의 관계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은 명승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명승, 천연기념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
- 즉, 세계유산협약 제도와 상응할 수 있도록 인문·문화 유형의 문화재와 자연·환경 유형의 문화재를 구분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구분할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명승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학, 한문학, 국문학, 지리학 분야에서 주로 확인됨

-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음
- 첫째는 서양 회화의 관점에서 경관미의 가치를 분석한 접근임
 - 김기호(1996), 김현정(2015) 등의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둘째는 한문학, 국문학 문헌의 묘사와 수사여구를 문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통미의 측면에서 명승의 경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살피는 것임
 - 노재현·신상섭(2010), 이석해·이행렬(2001), 신준(2017) 등의 연구에서 확인됨

○ 또한 명승의 가치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개념을 도입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명승의 외관상 형태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것과 역사문화적인 것으로 단순 구분하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반동이라 할 수 있음
- 역사문화적인 것은 사적이, 자연적인 것은 천연기념물이 대표한다는 인식하에

명승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 것임

- 즉, 명승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향유 대상으로서의 경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과 문화의 접점'에서 명승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임
- 향유의 관점에서 문화재청(2011c)은 명승을 자연을 바탕으로 하되 사람에 의해 인공이 가미되거나 문화적 의미가 보태어진 경관이라 정리하였음
- 즉, 명승의 형태적 본질은 '자연'에 있고, 가치적 유래는 '인문적 요소의 가미'에 있다는 것
- 조준현(2015)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문화경관'의 개념을 도입해 '연상적 문화경관'으로서 울산 대곡천 유역을 분석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음

[표 2-26] 관점에 따른 명승의 가치판단요소

관점에 따른 명승 가치판단요소		
관점	대상	가치판단요소
자원적 관점	자연물	자연적 가치
	인공물	역사·문화적 가치
회화적 관점	조망 대상	시각적 미감
	조망 대상군 전체	조화적 가치
전통적 가치	경치가 뛰어난 곳	심미적 가치
	이름난 곳	역사적 가치
	무형적 요소	정신적 가치
문화경관적 관점	연상적 문화경관	자연-인문 연계가치
	인문-자연 조화	지속가능성 가치

- 따라서 명승의 가치판단 요소는 관점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자원적 관점의 경우 대상이 자연물인지 인공물인지에 따라 자연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로 구분됨
 - 회화적 관점의 경우 조망 대상과 대상군에 따라 시각적 미감과 조화적 가치로 구분됨
 - 전통적 가치의 관점은 경치, 저명성, 무형요소에 따라 심미적, 역사적, 정신적 가치로 구분됨
 - 문화경관적 관점은 연상적 문화경관과 인문-자연조화에 따라 자연-인문 연계가치와 지속가능성 가치로 구분됨

6. 천연기념물

1)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현황

(1) 제도상 정의 및 분류 현황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3항 다목은 천연기념물을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의 정의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현상을 포함하는 문화재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위의 법문에서 언급한 천연기념물의 세부 유형은 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위한 세부 항목의 나열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 분류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3항 다목에서는 유의미한 천연기념물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은 사적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분류하고 있음
 - 1. 동물
 -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 다.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 2. 식물
 -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

- 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 3. 지질·광물·지형
 -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와 그 분포지
 -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 2)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瀉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 1) 얼음골, 풍혈
 - 2) 샘: 온천, 냉천, 광천
 -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 4. 천연보호구역
 -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 5. 자연현상
 - 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

구분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광물 지형		천연보호 구역	
구분 변수	생물종, 형태		생물종, 형태		무기체, 형태		면적, 집중분포도	

[그림 2-49] 천연기념물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 자연현상으로 분류된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제527호 의성 빙계리 얼음골과

밀양 남면리 얼음골 두 개 사례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얼음골은 지질·광물·지형에 해당함

- 같은 자료의 ‘자연현상’ 유형에 대한 정의 역시 그 특성을 확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서술이 아니므로 ‘자연현상’의 문화재유형으로서의 특성 및 구분변수를 도출할 수 없음

○ 원활한 문화재 정보 검색 및 콘텐츠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천연기념물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천연기념물
 - 문화역사기념물
 - 생물과학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천연보호구역
 - 문화 및 자연 결합성
 - 자연과학성

구분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문화 역사 기념물	생물 과학 기념물	지구 과학 기념물	문화 및 자연 결합성	자연 과학성	자연 명승	역사 문화명승	
구분 변수	가치의 주요소 (인문역사)	가치의 주요소 (자연생물)	가치의 주요소 (자연지질)	가치의 주요소 (역사인문)	가치의 주요소 (천연자연)	경관가치의 주요소 (자연물)	경관가치의 주요소 (인문가치 물 또는 인공물)	

[그림 2-50] 천연기념물 유형 구분 현황(문화재청 홈페이지)

(2) 가치평가 현황

○ 문화재에 관련된 초기 입법사례인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학술연구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강조되는 문화재 유형임

- 동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고적, 명승과 함께 분류되는 유형의 문화재로서 “동물, 식물, 지질, 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되는 것”을 지칭

○ 학술적 관점을 계승한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천연기념물을 “동물

(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법적 서술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여전히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술적 가치’ 외에도 역사적 및 경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됨
- 다만, 다른 문화재 유형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예술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천연기념물에 있어 ‘심미적 아름다움’은 중요한 가치요소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주요특징

- 국제적인 관점에 있어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보호제도에 따른 문화재 유형 보다는 환경보호제도에 따른 자연환경 유형에 가까움
 - 천연기념물의 천연보호구역, 동식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은 유네스코 Man and Biosphere(인간과 생물권, 이하 MAB) 계획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에 가까운 개념
 - 천연기념물의 지질 및 지형은 유네스코 Ecological and Earth Science(환경과 지구과학) 부문에서 운영하는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s)에 가까운 개념
 - 동·식물 생물종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하, IUCN)이 멸종위험에 처한 생물종을 등재하는 목록인 Red List와 유사함
- 그럼에도 천연기념물이 ‘문화재’로서 인식되는 것은 한반도 고유의 자연환경으로서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배경’이 되어왔다는 데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기준의 서술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한국 특유의’ 또는 ‘한국의’, ‘한국 고유의’ ...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천연기념물 제도는 국내/외 문화재 보호제도 중 가장 다양한 지정형태가 나타나는 사례임
 - 천연기념물 제도는 천연보호구역, 동/식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자연 생물 환경에 대한 면적 지정; 지형, 지질 등과 무생물 지구 환경에 대한 면적 지정;

노거수와 같은 생물 개체에 대한 지정; 동/식물 생물종에 대한 지정(멸종위기종/축양생물종); 화석, 광물, 운석 등과 같은 무생물 개체에 대한 지정 등 매우 다양한 지정형태가 나타남

○ 국제적인 문화재 보호제도로서 천연기념물과 상응하는 것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세계자연유산이 있음

- 세계 자연유산 제도에 따른 자연유산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음
 - VII.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 VIII. 생명체의 기록, 지형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 X.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 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
- 천연기념물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밝히는 ‘역사성, 경관성 및 학술성’을 충족하는 자연물로서 지정된 문화재 유형임을 전제한다면 천연기념물 중 면적 단위에 대해 지정되는 유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 다만, 천연기념물은 이에 더하여 국내적 수준에서의 특수성, 고유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분히 국내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
- 예를 들어,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고라니’의 서식지는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불가할 것임
 - 첫째, 국내에서는 고라니가 흔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 둘째, 국내에서 고라니와 그 생육환경이 한국인의 전통 및 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임

2) 분류체계 및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1)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 『자연유산법 제정연구』(문화재청, 2011c)

- 주요내용

- 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밝히는 법적 개념에 의거한 분류를 수용하나, ‘문화적 요소의 개입여부’를 중요한 개념변수로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재구성
- 자연문화재를 크게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
- 하위분류로서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천연기념물에 대한 중분류에서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을 구분하였고 자연현상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음
- 중분류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변수는 분류 유형이 포섭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른 것
- 동물의 세부분류로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의 생물권을 따로 구분하고, 조류, 포유류, 어류, 곤충기타의 생물 유형을 따로 구분하고 있음
- 여기에서 주요 변수는 생물권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는 면적 개념과 특정 동물종을 따로 다루는 개념으로 파악되며, 생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 생물분류학의 기준을 차용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
- 식물의 세부 분류에 있어서는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분포한계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노거수’와 ‘희귀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유형은 기본적으로 일정 구역에 대한 면적 개념으로 이해됨
- ‘노거수’와 ‘희귀식물’은 개별 식물 개체를 다루는가와 특정 식물종에 다루는가에 따라 구분
- 지질의 세부분류에 있어서는 ‘화석, 암석, 지형지질일반, 동굴’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지구 활동에 의한 지질학적 생성물의 형태적 특성 및 성질에 따른 구분
- 천연보호구역은 별도의 세부분류를 제시하지 않음

- 시사점

-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자연유산을 구분하고 그

하위분류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제시함

- 상대적 개념 분류에 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세계유산 분류인 ‘문화유산-자연유산’을 구분하는 분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문화재를 생성한 주체가 인간이나, 자연이냐를 기준으로 삼은 것
- 문화재청(2011c)의 분류체계는 법철학적 입장에서 현행 자연유산 분류체계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나, 실제 자연유산 관리상의 실용성을 고려해 그 유형을 재구성한 성과

[표 2-27] 문화재청(2011c)의 천연기념물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성의 유래	가치의 유래	생물여부, 구역	종족, 면적, 형태, 기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생물권
			조류
			포유류
			어류
			곤충 기타
		식물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지질	화석
			암석
			지형지질일반
			동굴
		천연보호구역	-
	명승	앞에서 다룸	

○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장호수, 2004)

- 주요내용

- 문화재를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남겨진 유산으로서의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소비 또는 향유하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 향유적 측면과 관련하여 현행 분류체계가 문화재학 정립에 있어서의 학술적 관점, 공공 문화콘텐츠로서의 유통과 소비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화재 관련 기관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체계가 난립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논리적 분류체계와 계층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음
 - 분류 기준의 작성에 있어 보편성, 일관성, 유일성, 포용성과 신축성, 호환성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제안
 - 본 분류체계는 자연유산을 형태별-용도별-속성별-시대별-지역별-가치별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분류기준을 근간으로 자연유산을 자연문화복합과 자연기념물의 2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은 자연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연기념물은 생물과학기념물, 지구과학기념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과학기념물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에, 지구과학기념물은 생명이 없는 무기체로서 지형·지질·광물 또는 화석 등에 해당함
- 시사점
- 본 분류체계는 자연유산을 문화생산의 배경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
 - 즉,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자원의 원천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산, 강, 바위, 나무, 짐승 등의 자연을 문화재적 시각으로 해석한 것임
 - 문화재적 측면에서 자연은 삶의 요소로서, 또 때로는 숭배의 대상으로서 ‘사람과 함께 해 온 것’ 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다고 보았음
 - 그러나 명승(자연문화복합기념물)과의 구분을 위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 구성과 가치의 형성에 있어 자연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한 대상으로 그 범주를 명확히 하였음

[표 2-28] 장호수(2004)의 천연기념물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승방법, 구성요소	생물 여부	속성별, 가치별	시대별, 지역별, 종족별
자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분포학특성	북한계지
			남한계지
			전과경로
			특수분포
			원산지 자생지
		유전학	격리진화
			유용유전자원
			희귀유전자원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승방법, 구성요소	생물 여부	속성별, 가치별	시대별, 지역별, 종족별
			특산종
		생물상	동물상
			식물상
		생물학 특수성	발광생물
			비막활공
			수중생활
		대표성	노거수
		진귀성	희소성
	관상성		
	야행성		
	대형맹금		
	지구과학기념물	생물자료	지질사관련
			생물출현표식
		고생물자료	고생물화석지
			고환경자료
		지질자료	암석광물 성인
			지질지형
		천연동굴	용암동굴
석회동굴			
자연현상			

○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문화재 정보 전산화와 메타데이터 작성을 통한 콘텐츠 활용을 위한 목적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실용적 측면이 크게 고려되었음
- 본 연구는 장호수의 2004년 연구를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화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장호수(2004)와 동일함
- 그러나 천연기념물 분야에 있어 장호수(2004)의 연구와 상당히 다른 점이 확인됨
- 본 연구에 있어 천연기념물 분류의 성격별 분류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동물 및 식물학적 분류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음
- 따라서 ‘심미적 향유 대상으로서의 경관성’ 즉,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명승과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을 구분하고 천연기념물에 인문적 요소를 포함하는 분류체계가 구성됨
- 즉, 천연기념물은 문화역사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지구과학기념물의 3종으로 구분됨

- 천연보호구역은 문화 및 자연결합성, 자연과학성의 2종으로 구분됨
- 시사점
 - 본 연구의 자연유산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 문화론에서의 문화 생산의 환경적 요소가 되는 ‘문화배경’이라는 점에서 장호수(2004)와 동일함
 - 그러나 세분류체계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나타남
 - 장호수(2004)가 인문성, 즉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상위 변수로 ‘자연 문화복합기념물 및 명승(즉, 명승)’과 ‘자연기념물’을 구분하고 하위 분류에서 심미적 향유대상으로서의 경관성을 제시함
 - 즉 아름다움을 적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향유대상으로서의 경관성을 상위 변수로 삼아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과 명승을 우선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인문성’이라는 명승의 특성이 희석되어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 중 면적단위 유형과 명승의 혼동이 심화되는 측면이 나타남

[표 2-29] 문화재청(2005)의 천연기념물 분류(안)

최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승방법, 구성요소	구역, 개체, 단위	속성, 인문성	용도, 학술분류, 생물여부, 가치유래 등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종교
			민속
			생활
			역사
			기념
		생물과학기념물	분포학
			분류학
			유전학
			생물상
			특수성
			대표성
			진귀성
		지구과학기념물	생물
			고생물
			지질·지형
			천연동굴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문화 및 자연결합성	영토적 상징성
			경관 및 과학성
		자연과학성	해양생물상
			특수생물상

(2)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문화재청, 2016b)
 - 천연기념물은 순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지정 유형으로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든 유형임
 - 천연기념물은 기념적 가치가 있는 식물, 동물, 광물, 지질 그리고 천연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함
 - 위와 같은 대상에 대한 보호제도는 보편적이기는 하나(IUCN 등) 이를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연장에서 다루는 접근은 없음
- 「천연기념물 대구시 도동 측백수림의 보존가치 측정」(이주희 외, 2000)
 - 식물 서식지 유형 천연기념물의 보존이 생물다양성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에 주목하였음
 - 이러한 접근을 증명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이들 천연기념물 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RAPD marker로 추적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의 유연관계」(강경홍 외, 1999)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 14개 개체의 유연관계 및 개체 간 다양성을 DNA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이라는 대승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 천연기념물 보호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관리방안 II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강현경·이승제, 2004)
 - 노거수에 대한 수목송배사상으로부터 그 문화재적 보호가치를 인식하였음
 - 즉, “노거수 자연문화재의 가치는 유구한 역사와 자연 속에서 존재해 온 문화적 상징물이면서 그 자연의 기념물이고, 민족의 사상과 정신 및 문화의 원생적인 모태가 되고 있다(강현경·이승제, 2004: 37)” 는 것
- 「경상남도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육환경 연구」(김효정, 2011)
 - “노거수의 신령함으로 마을 주민이 매년 제를 올리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기도 한다” 는 국립문화재연구소(2007)의 서술을 인용하였음

- 즉,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수목숭배사상’의 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한 것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문화재청, 2015c)
 - 동물에 대한 접근은 생물다양성과 지역 지역적 대표성의 이원적 구조로 이해됨
 -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은 한반도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육지와 도래지, 서식지 등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백운기·유정철·함규황, 1996; 함규황, 1997)
 - 지역 문화대표성에 대한 접근은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자원으로서 특정 생물종이 갖는 문화적 감수성과 순수성을 강조함

3) 종합 시사점 및 쟁점

(1) 선행연구의 현황 관련 시사점

- 천연기념물과 기타 자연보호구역 제도와의 구분 모호
 - 천연기념물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연보호구역 및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등 자연환경 보존제도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즉, 개념적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논리로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문화배경’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천연기념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인문·문화적 성질’이 강조되는 자연물로서 ‘명승’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
 - 다른 문화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개념의 확립이 필요함

(2) 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천연기념물 유형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정립 필요
 - 위와 같은 개념의 중복은 천연기념물 제도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음
 - 희귀 생물종을 보호하는 목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생물 및 지구과학 표본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상징적인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이 혼재함
 -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천연기념물 제도의 목적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정형태 난립에 따른 복잡성

- 천연기념물은 면적지정(천연보호구역, 생물 생육지, 서식지, 도래지 등…), 생물 종 지정(동물, 식물 종 지정), 생물 개체 지정(노거수 지정), 표본 개체 지정(화석, 광물, 운석 등…) 등 지나치게 다양한 지정형태가 하나의 제도 내에 혼재하고 있음
- 따라서 제도 운영과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의 관리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음
- 즉,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가치평가 관련 시사점 및 쟁점

- 최근에 들어서 천연기념물의 가치판단 요소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남
- 첫째는 지역적 특수성을 대표하는 동물 중 외 일반 축양동물에 대한 가치 인식의 대두임
 - 문화재청(2015c)은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축양동물 유형 천연기념물의 보호필요성은 민속성, 생활문화성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희귀성, 생물다양성, 특수성, 신성함, 멸종위기 등에서 보존가치를 확인하는 기존 생물유형과 다른 차이점으로 파악됨
- 둘째는 천연기념물 및 천연보호구역의 인문 가치에 대한 인식
 - 김재웅·김승민(2014)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서의 보호지역은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 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임
 -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
 - 김효정(2012)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자연성지(Wildlife Sanctuary)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 자연성지 잠재자원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 즉, 천연기념물, 특히 천연보호구역의 종교적 숭배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
 - 또한, 천연보호 대상의 집중도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며, 그 외 독도 등의 지정에 있어 국가적 관심사와 상징성, 대표성 등 중요성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음(문화재청, 2016b)

[표 2-30] 관점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가치판단요소

관점에 따른 천연기념물 가치판단요소		
관점	대상	가치판단요소
생물 다양성	식물	다양성 보호필요성
	동물	다양성 보호필요성
전통적 가치관	식물(노거수)	수목 숭배성
지역적 대표성	동물	지역 대표성, 상징성 ²⁰⁾
지질학적 관점	지질, 화석, 광물 등	학술성
천연자원 포괄 보전	천연보호구역_자연	천연자원 집중도
국가적 관점	천연보호구역_인문	국가적 중요성
생활문화적 관점	동물(축양동물)	보편성, 민속성, 친밀성
종교적 가치관	식물(노거수)	종교적 숭배성
	자연 성지	종교적 숭배성

- 천연기념물의 가치판단은 다양한 대상과 관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음
 -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식물과 동물을 대상으로 다양성 보호필요성을 가치판단요소로 적용함
 - 전통적 가치관 관점은 식물(노거수)을 대상으로 수목 숭배성이 주요 가치판단요소로 적용함
 - 지역적 대표성 관점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이 가치판단요소로 적용할 수 있음
 -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지질, 화석, 광물 등을 대상으로 학술성을 가치판단요소로 적용함
 - 천연자원 포괄 보전 관점에서는 천연보호구역의 자연성을 대상으로 천연자원의 집중도를 가치판단요소로 활용함
 - 국가적 관점에서는 천연보호구역의 인문성을 대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중요 가치판단요소로 적용됨
 - 생활문화적 관점에서는 동물(축양동물)을 대상으로 보편성, 민속성, 친밀성 등이 가치판단요소로 적용됨
 - 종교적 관점에서는 식물과 자연성지를 대상으로 종교적 숭배성이 가치판단요소로 작용

20) 자연이 본질이지만 가치가 발현되는 것은 인문이다.

제3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위계별 분석

제1절 대분류 체계 분석

제2절 중분류 체계 분석

제3절 세분류 체계 분석

제1절 대분류 체계 분석

1. 문화재 대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방법

1) 검토 자료

○ 검토 대상

- 한국의 현행 법률적 문화재 대분류 체계 및 관련 선행연구
- 유네스코와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4개국의 법률적 문화재 대분류체계를 대상으로 함

○ 검토 기준

- 한국의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을 대분류 체계의 기준으로 설정
 - 한국의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4가지로 분류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에서 문화재의 종류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됨
 -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총 7가지로 문화재 분류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의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국보와 보물을 포함
- 기념물에 속하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개념상 2단계의 수직적인 분류체계를 1단계로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법률적 대분류 단계에 속하는 문화재유형들이 해외 사례에서 어떠한 위계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2) 대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개요

○ 대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목적

-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 단계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유형을 검토 범위로 설정하고 국가별 현행 법률의 분류체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정리 분석
- 대분류 체계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국내외 대분류 체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검토 대상 국가

- 한국, 유네스코,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 검토 방법

- 자료 수집 및 정리
 - 대상국가의 법제 관련 웹사이트 및 관련 행정기관 홈페이지 검색
 - 국가별 대분류 체계 관련 최신 법률 및 훈령, 고시 등 관련 규범 분석
 -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정리 및 분석 체계
 - 국가별 문화재 대분류 체계의 분류 기준을 도출하여 유형별로 정리·분석하고 종합적인 비교 평가
 - 각 문화재 대분류 체계 유형별 장·단점 도출
 -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 개선 방향 시사점 도출

2.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구성의 유형

1)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구성 분석의 기준과 방법

○ 대분류 구성 종합 분석 기준

- 각 국가별로 확인된 대분류체계의 특성을 법률적 체계, 개념변수, 대분류 구조, 단일 위계별 적용변수의 구체적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리

○ 대분류 구성 종합 분석의 방법

- 법률적 체계, 개념변수, 대분류 구조, 단일 위계별 적용변수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특징을 종합 비교
- 국가별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되는 항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징을 종합
- 국내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표 3-1] 국가별 대분류체계 종합비교표

		한국	유네스코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법률적 체계		단일법	개별 협약	단일법	개별 독립법	통합법	개별 독립법
개 념 변 수	물리적	○	○	○	○	○	○
	개념적	○	○	○	○	○	○
	공간단위 (물리적)	○		○			○
구 조	수평적 (1단계)	○		○	○		○
	수직적 (2단계)		○			○	
위계별 적용변수		다중적용	단일적용	다중적용	다중적용	단일적용	다중적용

2)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구성 항목 비교

(1) 법률적 체계

○ 단일법 체계

- 문화재 유형에 대한 정의, 지정 및 관리가 하나의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경우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이 단일법에 해당
 - 한국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이 분법 되었으나 나머지 문화재 유형은 분법 되지 않음

○ 개별 독립법 체계

- 문화재 유형에 대한 정의, 지정 및 관리가 각각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경우
-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재 법률과 체계는 없음
- 따라서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는 성립이 되지 않음
- 유네스코, 중국, 영국은 문화재 유형별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는 독립법 국가에 해당
 - 유네스코의 경우 국가 간 협약에 의한 문화재 목록화 체계이며,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은 동일한 협약 아래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운영
 -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경우에는 현재 협약이 아닌 사업(project)로서 진행

○ 통합법 체계

- 문화재 유형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통합 법률을 근거로 하고, 지정 및 관리는 각 개별법에 영향을 받는 경우
- 문화재의 법률적인 근거는 통합법에 따르나, 효율적인 행정적 관리에 있어서 관할법률은 타 부처의 법률에서 소관하도록 함
-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이 통합법에 해당함
 -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에서는 문화유산의 모든 유형을 정의하고 있으나 ‘자연·문화유적지’는 자연성을 전제로 한 문화재 유형으로 역사적기념물과 특성이 상이하여 환경부 및 「환경법전」에서 관할하고 있음

(2)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과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

- 대분류 체계의 문화재 유형 간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고, ‘유무형적인 형태’, ‘이동가능성’이 해당되며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 ‘공간단위’ 또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나 상대적인 기준
- 문화재 유형 간 물리적 특성이므로 상대적인 개념이 한 쌍으로 존재
 - 유형과 무형
 - 이동가능과 이동불가
 - 상대적으로 넓은, 상대적으로 좁은

○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 문화재 유형의 개별 속성에 따라 구분하며, ‘민속(생활문화성)’, ‘예술성’, ‘자연성’, ‘인문성’, ‘경관성’, ‘기술성’, ‘지역성’, ‘고고성’, ‘역사성’, ‘해양문화성’이 해당
-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되는 분류 기준

(3) 대분류 구조

○ 수평적 구조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 유형(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들을 1단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방식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대분류 단계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전통적건조물군, 문화적경관을 병렬식으로 나열
 - 중국은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며, 문물, 비물질문화유산,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 사이에 위계가 없으므로 병렬식 나열에 해당
 - 영국은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며, 보물, 선정기념물, 등재건축물, 등재보존구역, 등록공원및정원, 등록전쟁유적지, 난파선보호구역 사이에 위계가 없으므로 병렬식 나열에 해당

○ 수직적 구조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의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 유형(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들을 2단계 계단식으로 분류하는 방식
 - 유네스코는 문화재 유형별 독립적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협약 간에 위계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유네스코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동일 위계로 설정, 세계유산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는 2단계 구조
 - 프랑스는 통합법인 「문화유산법전」에서 역사적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분류, 역사적기념물은 하위에 부동산과 동산역사적기념물로 분류하고 자연·문화유적지는 하위에 자연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분류하는 2단계 구조

(4) 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방식과 다중 개념변수 구분 방식

○ 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방식

- 하나의 위계에 하나의 개념변수가 적용되는 경우
- 단일 속성으로 구분하여 속성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소지가 낮으나, 수평적으로 개념을 확장하기 어려움
- 대분류체계 구조가 2단계 수직적 구조에 해당하는 유네스코와 프랑스가 해당
 - 유네스코는 대분류단계에서 문화재의 물리적 성질(유무형성)을 기준으로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상호배타적으로 구분·정의하고 있음
 - 세계유산의 중분류에서 자연성과 인위성의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는 단순한 구조
 - 프랑스는 대분류단계에서 문화재를 단일 속성(자연성)을 기준으로 역사적 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문화재 유형을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함
 - 중분류단계의 역사적기념물은 물리적 성질(이동가능성)에 따라 부동산 역사적 기념물과 동산 역사적기념물로 분류함
 - 자연·문화유적지는 단일 속성인 인문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분류하는 단순한 구조

○ 위계별 다중 개념변수 구분 방식

- 하나의 위계에 두 개 이상의 개념변수가 적용되는 경우
- 한 위계에서 개념변수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 대분류체계 구조가 1단계 수평적 구조에 해당하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이 해당됨
 - 한국은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인 유무형성, 공간단위, 개별 속성에 해당하는 자연성, 경관성, 예술성, 생활문화성, 인문성이 적용
 - 일본은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인 유무형성과 공간단위, 개별 속성에 해당하는 민속(생활문화성), 예술성, 자연성, 지역성이 적용
 - 중국은 대분류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인 유무형성과 개별 속성에 해당하는 자연성, 경관성이 적용
 - 영국은 대분류 단계의 개념변수로 물리적 특성인 이동가능성과 공간단위, 개별 속성에 해당하는 고고성, 역사성, 해양문화성 등이 적용

3)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구성 유형

[표 3-2] 문화재 대분류체계 구성 유형

대분류 구조 유형		주요 내용
수평적 구조 (1단계)	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
	위계별 다중 개념변수 구분	- 개념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 개별 문화재의 다양한 특성 부각 - 수평적 확장 용이
수직적 구조 (2단계)	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 - 한 위계에서 개념변수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소지가 낮음 - 문화재의 가장 객관적대표적인 속성을 통해 행정적 분류 및 관리 용이 - 수평적으로 개념을 확장하기 어려움
	위계별 다중 개념변수 구분	-

○ 수평적 구조-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 분석 대상 국가 사례 없음

○ 수평적 구조-위계별 다중 개념변수 구분

- 수평적인 1단계 구조에 다양한 문화재 유형이 나열되고,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는 방식
- 한 위계에서 개념변수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수평적 확장이 용이,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 개별 독립법 체계에 적합한 유형
- 한국, 일본, 중국, 영국이 해당됨
 - 한국과 일본은 단일법 내에서 문화재 유형을 나열식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간에 다양한 개념변수(물리적, 속성)가 다중 적용되고 있어 개념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 중국과 영국은 개별 독립법을 통해 문화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가 성립되지 않음

○ 수직적 구조-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 수직적인 2단계 구조에, 각 위계에서 하나의 개념변수가 적용되는 방식
- 대분류 구성은 명확하고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상위에서 하위로 갈수록 사다리꼴로 확장되는 방식
- 문화재유형의 가장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속성을 통한 구분으로 행정적 관리가 용이

- 한 위계에서 하나의 개념변수가 적용하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은 어려움
- 그러나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경우는 적용되고 있는 개념변수의 중간적인 유형이 등장할 시 가능
 - 유네스코는 2005년 운영지침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유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수평적 체계에서 도입
 - 자연유산 중 인문적 성격이 강한 것들을 복합유산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두어 해결한 것
- 유네스코, 프랑스가 해당됨
 - 유네스코는 개별 협약을 통해 문화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가 성립되지 않음
 - 그러나 세계유산보호협약과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물리적 형태인 유무형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함
 - 한국 문화재 기념물과 민속문화재(일부)에 해당하는 세계유산보호협약은 자연성(혹은 인문성)에 따라 구분
 - 프랑스는 통합법 내에서 문화재 유형을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성이라는 단일 속성에 따라 역사적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구분
 - 한국의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역사적기념물은 이동가능성에 따라 구분, 한국의 기념물에 해당하는 자연·문화유적지는 인문성에 따라 구분

○ 수직적 구조-위계별 다중 개념변수 구분

- 분석 대상 국가 사례 없음

3.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개선 방향의 시사점

1) 대분류 구성 유형별 장·단점 요약

[표 3-3] 대분류 구성 유형별 장·단점 비교

	수평적-위계별 다중 개념변수 구분	수직적-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수평적 확장이 용이 -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 개별 독립법 체계에 적합한 유형 - 개별 문화재의 다양한 특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위계에서 개념변수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소지가 낮음 -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 - 문화재 유형의 가장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속성을 통한 구분으로 행정적 관리가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위계에서 개념변수 간 종속 및 중복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위계에서 하나의 개념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은 어려움
해당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 단일법 - 영국, 중국: 개별 독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개별 협약 - 프랑스: 통합법

2) 한국 문화재 대분류체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

○ 법률적 정의를 전제로 하는 문화재 대분류 단계

- 한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유형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정의
 - 단일법 체계인 일본과 통합법 체계인 프랑스도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유형들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별 독립법 체계인 영국, 중국, 프랑스는 각 법에서 문화재를 정의
- 「문화재보호법」에서 대분류 단계의 하위 유형들은 ‘절(문장)’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 및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대분류 하위 단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 단계의 법률적 체계

- 한국은 문화재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유형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²¹⁾이 있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를 정의하고 있으며, 「무형

2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한국은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

-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전 및 진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와 상이한 속성으로 동일한 법률 체계 내에서 원활한 보전 및 진흥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분리된 것
 - 따라서 현행 법률적 체계에서는 크게 유형과 무형의 물리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무형문화재를 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통합법인 「문화유산법전」에서 문화유산의 모든 유형을 정의하고 있으나 ‘자연·문화유적지’는 자연성을 전제로 한 문화재 유형으로 역사적기념물과 특성이 상이하여 환경부 및 「환경법전」에서 관할
 - 그러나 향후 유형의 문화재 중 속성이 상이한 자연유산이 향후 분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내에서 분법된 법들 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

○ 수직적-위계별 단일 개념변수 구분하는 유형의 방향성

- 한국은 문화재보호 법제의 역사상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내에서 모든 문화재 유형이 지정 및 관리 되어 왔으며, 2015년에 무형문화재가 분법된 상황
- 반면, 유네스코, 중국, 영국, 프랑스는 문화재보호 법제의 역사상 대분류 단계의 각 문화재 유형이 개별법으로 제정 및 보호되어온 사례
 - 유네스코, 중국, 영국은 문화재 유형별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는 독립법 체계임
 - 따라서 문화재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재 법률과 체계는 없으며 문화재 유형 사이에 위계는 성립이 되지 않음
 - 반면 프랑스는 문화재 유형별 독립법 체계에서 2004년 「문화유산법전」으로 개별법들이 통합 된 사례
- 따라서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제의 역사적 변천에서도 대분류 단계 문화재 유형들을 병렬로 나열하는 수평적 분류보다 수직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적합
- 향후 장기적인 법률 정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유형별 속성에 따른 행정적 관리에 대한 고찰도 필요

○ 대분류 단계 개념변수 적용

- 수직적 구조에서 1단계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속성을 통해서 개념변수

간 중복과 종속되는 상황 방지

- ‘유무형적인 형태’, ‘이동가능성’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으로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공간단위’ 또한 물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나 상대적인 기준
- 문화재 유형의 개별 속성에 따라 ‘민속(생활문화성)’, ‘예술성’, ‘자연성’, ‘인문성’, ‘경관성’, ‘기술성’, ‘지역성’, ‘고고성’, ‘역사성’, ‘해양문화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되는 분류 기준

○ 위계별 명칭 통일 문화재와 문화유산

-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한 2005년 선행연구 ‘문화재 분류체계’에서부터 문화재 ‘명칭’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문화재청, 2005)
- 최종적으로 제안된 분류체계에서 대분류 단계는 유형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유형 명칭을 ‘유산’으로 통일
-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에서 최대분류 단계에서는 ‘유산’, 대분류 단계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문화재’로 명칭을 사용
- 최대분류 단계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2단계 분류
- ‘자연성’이 강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경우 ‘문화재’라는 명칭보다 ‘유산’으로 개념이 적합하기 때문에 최대분류 단계에서 ‘유산’으로 명칭 통일
- 또한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관리가 각 국가 뿐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산(Heritage)” 개념을 통용
- 따라서 대분류 단계에서 ‘유산’ 또는 ‘문화재’의 명칭 사용을 명확히 하고, 학술적·법률적·행정적인 검토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3) 대분류 체계 분석의 종합 시사점

- 법률적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재 유형의 대분류 단계에서 지정 기준 및 범위 이외에 하위 범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규정과 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시되고 있어 하위 문화재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지정문화재 유형별 하위 범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타 부처 사례인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과 분법화된 개별법과 같이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분법된 법령들의 위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개별 법률들과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계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보호법의 통합적 성격에 따라 수평적인 문화재 분류보다는 수직적 문화재 분류 방식이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에 적합
-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수평적인 분류보다 수직적 분류체계가 보다 효율적인 분류방식임
- 문화재보호법상 유형 분류에서 ‘역사성’, ‘예술성’, ‘기술성’, ‘경관성’ 등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분 기준 적용
- 문화재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가치평가 용어 기준으로 사용되는 현행 용어들의 개념적 용어 중복으로 인한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존재
-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단계에서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통일적 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 및 합의 필요
- 현재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관련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대한 연구 필요
 - 문화유산의 경우 유네스코 및 세계적 추세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나 문화재가 문화유산을 포함하는지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음
 - 또한 국내에서도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의견에 따라 문화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관련 용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합의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중분류 체계 분석

1. 중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방법

1) 연구 대상

○ 분류체계 개선 연구대상으로서 문화재 중분류의 의의

- 나무 구조(tree structure)의 계층적 구조에 있어 중분류는 상위 계층에 개념적으로 속한 세부 유형의 나열을 의미함
- 나무 구조에 있어 각 분류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 간 부모-자손 관계를 이루며 나뭇가지처럼 갈라지게 되는데²²⁾ 문화재 분류체계에 있어서의 중분류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함
- 즉, 총괄적인 분류체계에 있어 최대 분류계층인 ‘문화재’는 대분류 계층의 각 문화재 유형²³⁾을 포함하고, 각 문화재 유형은 중분류 계층의 각 문화재 세부유형²⁴⁾을 포함
-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지칭하는 문화재 중분류란 대분류 계층의 문화재 개념과 부모-자손 관계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서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의미함

○ 분류체계 개선 연구대상으로서 문화재 중분류의 특성

- 문화재 중분류는 상위 대분류와 비교해 다음의 특성을 보임
- 법률상 명시된 공식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 대분류와 달리 상징성이 없으며 전문적 관리 영역에 적용
- 세부 문화재 유형을 분류하므로 실용적인 이용이 가능

2) 검토 자료

○ 검토 대상

- 현행 국내 법률 및 행정적 문화재 중분류 체계 현황
- 문화재 중분류 체계 관련 선행연구
- 유네스코와 일본, 중국 2개국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운영현황

22) IT용어사전, 표제어 : 나무구조(Tree structur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3) 「문화재보호법」 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24) 예를 들어 유형문화재의 경우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 검토 기준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기준’을 대분류 체계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련 선행연구의 해석을 인용해 중분류 체계의 현황 파악하였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문화재 중분류 체계는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²⁵⁾
 - 다만 다수 연구자들이 시행령의 [별표1] 지정기준 상 정의를 준용하여 중분류 체계를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문화재청,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문화재청, 2011c 등)
 - 법적인 해석을 근간으로 국내 문화재 중분류 체계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한편으로, 2005년 『문화재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수립된 문화재 전산화 체계를 통해 행정적 측면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의 기준을 검토하였음
 - 해당 연구는 문화재를 크게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시대, 지역, 행태, 재질, 용도, 속성(사회적 속성, 즉 성격), 유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문화재 중분류 체계를 수립함
 - 중분류 체계를 통해 수립된 문화재 분류체계의 현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검색 시스템을 통해 활용되고 있음

3) 중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개요

○ 중분류 단계 개선 방향 검토 목적

- 대분류 체계를 통해 개념화 된 대분류 범주 내 문화재 세부 유형 각각의 성격과 속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정보관리 기준을 수립
- 기준의 수립 결과 유사한 성격과 속성을 공유하는 동질적 군집 간 개체들을 범주화 하여 관리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 문화재를 둘러싼 다양한 전문적 활동(즉 보존, 관리, 활용, 연구 등)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확장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5) 중분류 이하의 세부 분류체계에서의 문화재 유형은 각종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문화재 유형별로 구성되고 있는 현황임(문화재정책연구소, 2016: .12)

○ 검토 내용

- 국내·외 문화재 중분류 체계 운영현황 파악
- 문화재 중분류 관련 쟁점 및 모순점 검토
- 문화재 중분류 관련 내·외적 환경변화 현황 검토

○ 검토 방법

- 자료 수집 및 정리
 - 선행연구, 환경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중분류 운영 상 쟁점 및 모순점 도출
 - 국내·외 중분류 체계 운영현황 파악하여 도출된 쟁점 및 모순점의 극복 방안 및 시사점 도출
- 정리 및 분석 체계
 - 문화재의 성격과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중분류 체계 수립의 기본방향 수립
 - 향후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 방향의 시사점 도출

2. 문화재 분류체계의 중분류 구성 현황 및 쟁점

1) 법령 및 행정적 문화재 중분류체계 현황

(1)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중분류체계 현황

-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 체계인 「문화재보호법」은 입법 목적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²⁶⁾”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또한 동법에 따른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²⁷⁾”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문화재의 개념적 정의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문화재의 외연(外緣)로서의 ‘자연물과 인공물을 포괄’, ‘국가적·민족적·세계적으로 중요한 명성과 의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까지 계승되어온 “유산”으로서의 성격’,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의 각 관점에서 해석되는 가치’를 지니는 것
 - 다양한 가치 서술을 통해 문화재로서 분류되는 대상물이 갖추어야 할 ‘구분조건’으로서 속성(屬性)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 3-4]와 같음

[표 3-4] 문화재 속성 인식의 구분기준 표

구분	관련 조건			
보호 필요성	민족문화의 계승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
물리 속성	자연물		인공물	
명성	국가적 명성	민족적 명성		세계적 명성
의미 속성	과거로부터 현재에 까지 계승되어온 ‘유산’			
가치 판단 속성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로 정의되는 대상의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적 기준에서의 ‘문화재 대분류’로 파악할 수 있음

26)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

27)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표 3-5] 법률 상 문화재 분류 내용

구분	정의	예시 (임의적 중분류)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역사적 소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	<유형1>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 <유형2>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유형3> (생물학적 또는 지질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	<유형1>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시설물 <유형2> 관련 서술 없음 <유형3>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민속문화재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 「문화재보호법」은 위와 같이 문화재 대분류 유형을 범주화함과 동시에 그 예시를 밝히고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에서 그 세부 유형을 나열하고 있어 이를 문화재 중분류의 임의적 중분류로 파악하기도 함
- 엄밀한 의미에서 위의 표와 같은 예시는 대분류를 정의함에 있어 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본으로서의 서술에 불과함²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정기준 상의 문화재 중분류 예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음

[표 3-6] 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른 문화재 분류

대분류	중분류/ 내용
보물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28) 즉 법문 상의 예시와 동질적 속성을 띠는 개체와 집합을 이루는 대상을 해당 유형의 문화재로 인식하는 범주화

대분류	중분류/ 내용	
	무구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製作意匠)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사적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광물·지형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	
국가민속문화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즉, 생활문화관련)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漁獵具)·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즉, 수집·정리된 민속문화재)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 단 적 으 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대분류	중분류/ 내용	
	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집단민속문화재구역)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품이 현저한 곳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 의식	
	전통놀이·, 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2) 행정적 문화재분류체계 현황

- 다른 한편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재 지정기준을 통해 문화재 중분류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재청의 행정적 분류체계, 간행물, 기타 학자의 선행연구 등이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재 지정기준을 따르거나 다소 변용하여 문화재를 중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재 지정기준 역시 ‘분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지정’의 기준으로 대분류 이하 문화재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범주화의 도구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문화재 정보의 체계적 관리라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문화재청이 수립한 문화재 대분류-중분류 체계는 현행 문화재청 홈페이지상의 문화재 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3-7] 문화재청 홈페이지 검색체계에 따른 문화재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유적건조물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근대주거
	정치국방	궁궐관아
		성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적지
		근대정치국방
	교통·통신	교통
		통신
		근대교통
		통신시설
	교육문화	교육기관
		근대교육문화
	유물분포지, 유적산포지	육상유물산포지
		수중유물산포지
		유적분포지
	무덤	무덤
		왕실무덤
		근대무덤
	산업생산	농업
		어업·염업
		제조업
		요업
		광업
	종교신앙	근대산업생산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인물사건	민간신앙
		인물기념
		근대인물
유물	일반회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조화
		사군자
		근대회화
	기타종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불교조각	공양구
		기타
		복장품
		사리장치
		의식법구
		장엄구
	생활공예	목공예
		칠공예
		회각장공예
		초고공예
		지공예
		토도자공예
		금속공예
		옥속공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복식공예
		근대공예
	기타 종교 공예	유교공예
	불교회화	건칠조
		금속조
		목조
		석조
		소조
	일반조각	압벽조각
		능묘조각
		근대조각
	기타종교, 조각	유교조각
		민간신앙조각
	불교공예	의식법구
		공양구
		장엄구
		사리장치
		복장품
		기타
	과학기술	선사유물
		자연과학유물
		생업기술용구
		천문지리기구
		계측교역기용구
		이동운송기술
		공예기술용구
		음식제조용구
		인쇄기술용구
		놀이·유희용구
		무기병기류
기록유산	전적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서간류	서예
		간독류
		시고류
		탁본류
		근대서간류
	근대매체	시청각류
	문서류	국왕문서
		관부문서
		민간문서
		사찰문서
		서원향교문서
	서각류	목판각류
		금석각류
		근대서각류
무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	음악
		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연회
		종합예술
		그 밖의 공연예술 등
	전통지식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전통 생활관습	전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생활관습
	전통 놀이·무예	놀이
		축제
		기예
		무예
	전통기술	공예
		건축
		미술
	구전 전통 및 표현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표현
	의례·의식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인식의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지구과학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문화 및 자연결합성
		자연과학성
	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 위의 분류체계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문화재검색-유형분류 (검색일 : 2017.7.11.)’ 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문화재 정보의 검색과 이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구체성을 나타냄

(3) 국내 연구자의 문화재 중분류체계 해석

- 앞서 제시한 법률 및 행정적 문화재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나름의 중분류체계를 수립한 국내 선행연구를 인용하면 국내 중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① 『문화재 분류체계』(문화재청, 2005)

- 유형유산 : 이동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유적건조물과 유물을 중분류
- 유적건조물 : 이동 및 보장(保藏)²⁹⁾ 불가능한 유적 또는 건조물, 가시적 가치 요소가 남아있는 건조물(buildings)과 그렇지 않은 유적(sites)을 분리하지 않음
 - 용도, 속성(사회속성·설질)을 주요 변수로 세분류 : 주거생활, 무덤, 정치 국방, 산업생산, 교통통신, 종교신앙, 교육문화, 인물사건, 유물분포지·유적 산포지
 - 유물 : 이동 및 보장(保藏)이 가능한 유물
 - 형태를 주요 변수로 세분류 : 회화, 조각, 공예, 기술
- 기록유산 : 기록물 매체와 내용의 사회적 속성(성격) 또는 형태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중분류
- 전적류 : 필사, 목판 또는 활자로 발간된 고전(古典)
 - 문서류 : 공적 또는 사적 문서
 - 서간류 : 수신인에 소식과 용건을 적어 알리는 글 또는 그러한 형식의 글 (message)
 - 서각류 : 목재 또는 석재에 판각
 - 근대매체 : 근대 이후 영상매체 (즉, 뉴미디어)
- 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용도, 속성(사회속성·성격)을 주요 변수로 중분류
- 전통연행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무예 등의 예능
 - 공예기술 : 도자, 금속, 목칠, 섬유, 피모, 지, 석 등의 기능
 - 음식제도 : 궁중, 의례, 민가에 사용된 전통적 음식 제조기술
- 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유래, 속성, 성질, 분포, 공간 단위 등을 주요 변수로 중분류

29) 물건을 모아 안전하게 저장, 박물관 수장 등을 통해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

- 천연기념물 : 문화현상, 생물과학, 지구과학 등에 관련된 자연물 표본
- 천연보호구역 : 일정 구역 내에 천연기념물 요소가 복합적으로 분포
- 명승 : 문화적 또는 자연적으로 의미 깊은 경관지

○ 보조분류 : 앞의 분류와 병행하여 시대, 지역, 지정(지정유형)을 보조분류로 적용

②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문화재 분류에서 국가유산³⁰⁾의 용어를 세계유산에 대비되는 국내적 수준의 유산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인문적 가치와 인공적 가공을 기준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최대 분류함

○ 이하 문화유산을 형태 및 전승방법을 기준으로 유형과 무형으로, 자연유산을 경관성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각각 대분류

○ 유형문화재 : 형태, 사회적 속성(성질), 가치유래,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중분류

- 사적 :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
- 건축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 미술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
- 기록 :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 민속 : 한국인의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전통 민속물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의 용도, 속성(사회속성)을 기준으로 중분류

- 기능 : 기술로서의 무형유산
- 예능 : 예술로서의 무형유산

○ 천연기념물 : 속성(자연속성), 공간단위, 복합성 등을 기준으로 중분류

- 동물 : 보호가치 있는 동물 자연과학 표본
- 식물 : 보호가치 있는 식물 자연과학 표본
- 지형, 지질 : 보호가치 있는 지구과학 표본
- 천연보호구역 : 천연기념물이 복합적으로 밀집한 구역

30) 세계유산에 대비되는 국내적 유산(heritage) 개념, 즉 National Heritage

2) 현황 분석의 시사점 및 쟁점

(1)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 지정기준의 체계를 기준으로 중분류가 해석됨
 - 현행 문화재 보호법제가 비록 일본 문화재보호제도의 영향(이준우 외, 2004) 하에 최초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50년 이상 자체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제도만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음
 - 중분류 특성은 지정기준의 운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현행의 문화재 지정기준은 국내 관계전문가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 지정기준 등의 근거로 운영 및 해석되고 있는 문화재 중분류 체계 역시 국내 관계 전문가의 학술적 성과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화재 중분류는 각 분야 전문가의 협력적 연구를 통해 마련된 기준임
 - 현재 문화재 분류 관련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문화재 중분류 체계 역시 ‘지정기준’의 기반 위에 관계전문가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어 수립된 전문가적인 분류체계로 평가됨
- 특히, 문화재청의 실질적 문화재 중분류인 ‘홈페이지 상의 분류’는 상당히 과학적인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문화재 ‘정보의 코드화를 통한 전산화 체계’를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수한 분류체계라 할 수 있음
 - 해당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청(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음
 - 관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엄밀하게 선정된 단어로 문화재 분류 명칭을 구성
 - 분류를 위한 방법과 종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형태·재질·용도·속성·유래·가치 등 다양한 분류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 주요 분류의 한계 상 문화재의 복합적 성격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시대·지역·지정구분’을 기준으로 삼은 보완적 분류 체계를 구성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시한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의 안 역시 세계 유산에 대비되는 국내적 개념으로 ‘국가유산’을 제시하는 등 세계적 시류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안은 지정기준과 적절히 부합하는

구조를 견지하는 동시에 문화재 정보의 DB구축, 국제적 표준 등의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하는 문화재 관리의 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임

(2) 쟁점

○ 문화재 지정기준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법적 판단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라 보기 어려움

- 지정기준의 서술은 지정의 요건을 간추려 제시한 것이고, 해당 서술에서의 언급된 유형은 지정대상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지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상호 배타적으로 세부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다수의 행정문서와 선행연구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지정기준을 준용 또는 변용해 문화재 중분류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됨
- 법적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문화재유형(예를 들어 목조문화재, 석조문화재, 건축문화재 등)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상위 분류유형에 대한 정의가 하위 분류유형을 아우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문화재 분류는 다층구조로 이루어짐(문화재청, 2005: 34)

- 문화재청(2005)은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의 분류방식은 다르고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든 복합문화재를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며 분류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즉, 문화재는 각 범주에 완벽히 포함되어 배타적으로 분류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형태·재질·용도·속성·유래·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일률적인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시대·지역·지정구분 등의 보완적 기준을 적용한 문화재청(2005)의 체계는 한계를 내포한다 할 것임

○ 대분류 문화재 유형마다 일관된 하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현재 국내 문화재에 대한 중분류체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정기준 상의 서술에 따른 분류는 문화재 유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하위 구분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유형문화재(보물·국보)는 이하 세부 유형을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로 구분하여 지정 대상 사물의 형태 또는 용도를

통해 대체로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적은 ‘선사시대 유적, 정치국방유적, 주거생활유적,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등 시대, 용도, 기념성 등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
 -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광물·지형,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은 생물여부, 면적단위, 복합성, 한시성 등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움
 - 국가민속문화재는 ‘생활문화에 관련된 것’, ‘수집·정리된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적 변천의 증거물, 시대적·지역적 특성을 띠는 것,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집단민속문화재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보기는 어려움
 - 국가무형문화재는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행위 전승 대상의 쓰임새, 유래, 의미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역시 나열에 불과하여 분류의 기준을 찾기는 어려움
 - 문화재청의 행정적 분류 역시 같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즉, 시기, 재료, 용도, 위치, 내용, 형태, 불교 관련 여부, 역사성의 성격 등으로 하나의 분류 위계에 지나치게 많은 변수가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 따라서 문화재 중분류 체계의 분류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분류 기준의 적용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제도상의 분류와 실제 관리상의 분류 간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문화재 분류의 복잡성이 가중된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지정기준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분류상의 문화재 분류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있음
- 현행 문화재 중분류는 실용적인 분류라기보다는 다른 유사 영역에서의 분류를 문화재 영역에 준용한 형식적인 분류로서의 성격이 강함
 - 면적 단위의 문화재로서 유물이 포함된 지층(즉, 유적지)과 시설물을 포함하는 문화재 유형인 사적은 유적지와 시설물의 관리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양자를 분류하는 것이 실용적임

- 그러나 양자의 관리방법상의 분류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역사적 관점에서 각 문화재 대상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
- 이러한 현황은 다른 문화재 대분류 유형에 대한 중분류 단계에서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실용 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측면이 크다 할 것임
- 문화재를 ‘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학술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에서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즉,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민속학 등 문화재 관련 연구의 성과와 영향력에 따라 문화재 중분류 체계가 구성되어 각 영역의 연구 대상을 구분하는 관점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임
- 따라서 학술 연구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반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중분류체계가 구성되어 당시의 필요에 따라 ‘건축문화재, 목조 문화재, 동산문화재’ 등의 문화재 분류 기준 및 용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의 문화재 중분류는 확장성이 매우 제한되는 상태임

- 문화재의 중분류 역시 각 유형을 요약된 형식으로 표현(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체가 특정 유형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즉, 분류의 원리(기준)을 어떤 목적이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 인위적 분류 방식임(문화재청, 2005: 32)
- 이러한 판단은 문화재 지정의 신청자 또는 심의자(문화재 위원)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문화재는 각 범주에 완벽히 포함되어 배타적으로 분류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함
-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범주라 할지라도 하나 이상의 문화재를 완벽히 정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하나의 문화재 중분류를 위한 판단은 그 판단 주체에 따라 유동적이게 됨
- 즉, 문화재는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자연적 분류의 대상이나 편의를 위해 고전적 분류의 방식으로 구분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개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임
- 즉, 현행의 문화재 중분류 방법은 확장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못한 것

3. 중분류 구성 해외 사례 및 구성의 유형 분석

1) 유네스코(UNESCO)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1) 세계유산 중분류 체계 현황

-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동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 보호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보호제도는 인류 문명과 지구 역사의 소산인 세계유산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구분하고 양자간의 가치를 함께 갖는 복합적 유형의 유산을 복합유산(Mixed Heritage)로 정의하여 대분류하는 3개 유형의 병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르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각각 3개 세부유형으로 구분됨
 - 문화유산 : 기념물³¹⁾; 건조물군³²⁾; 유적지³³⁾
 - 자연유산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 또는 과학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 문화경관 : 문화유산의 유적지의 일종이나 자연과 인문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가치 부여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독립적 중요성을 가진 문화유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2005: 44)
- 또한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대륙별-국가별로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

31)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32)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33)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 관상, 민족학 또는 인류학 등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2017.10.15.)

- 다른 한편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특히 보존상의 위협에 직면한 대상을 따로 분류하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Dang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인류무형문화유산 중분류 체계 현황

- 인류무형유산제도는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모체로 하는 제도
 - 유형적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삼은 세계유산 보호제도와 대비되는 무형의 인류문화 소산을 대상으로 삼은 국제적 보호전승제도라 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장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의 제2조에서 무형유산을 “공동체 ·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 표상 · 표현 · 지식 ·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 물품 · 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이 “①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예술, ③ 사회적 관습 · 의식 및 제전,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 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이는 엄밀한 구분이 아니며 제안된 각 범위에 제한되지 않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함(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 검색일 : 2017.10.11)

- 다른 한편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는 전승위험에 직면한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전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무형유산을 각각 따로 구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각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유산보호 모범사례 목록’임

(3) 세계기록유산 중분류 체계 현황

-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 이래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추진하는 세계의 기억 프로그램(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에 따라 작성되는 중요 기록물 목록에 등재된 기록물을 지칭함
 - 면적단위의 문화 또는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 제도와 달리 세계

기록유산은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로서 중요성을 띠는 기록물³⁴⁾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02년 ‘기록유산보호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2.6.4에서 기록유산은 단독기록일수도, 기록의 모음이 될 수도 있음을 밝힘

- 기록의 모음(Collection or Archival Fonds)는 전체로서 가치 있는 기록유산으로서의 복합적 대상을 지칭
- 단독 기록(Single Document)은 단일 개체로서 가치 있는 기록유산의 개별적 대상을 지칭

○ 또한 지침의 2.6.3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Textual Items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 Non-Textual Items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Virutal Document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Audiovisual Items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데이터

(4) 유네스코 유산 중분류 제도의 시사점

○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제도 체계와 국내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는 그 대상³⁵⁾과 범위³⁶⁾, 접근법³⁷⁾ 등 모든 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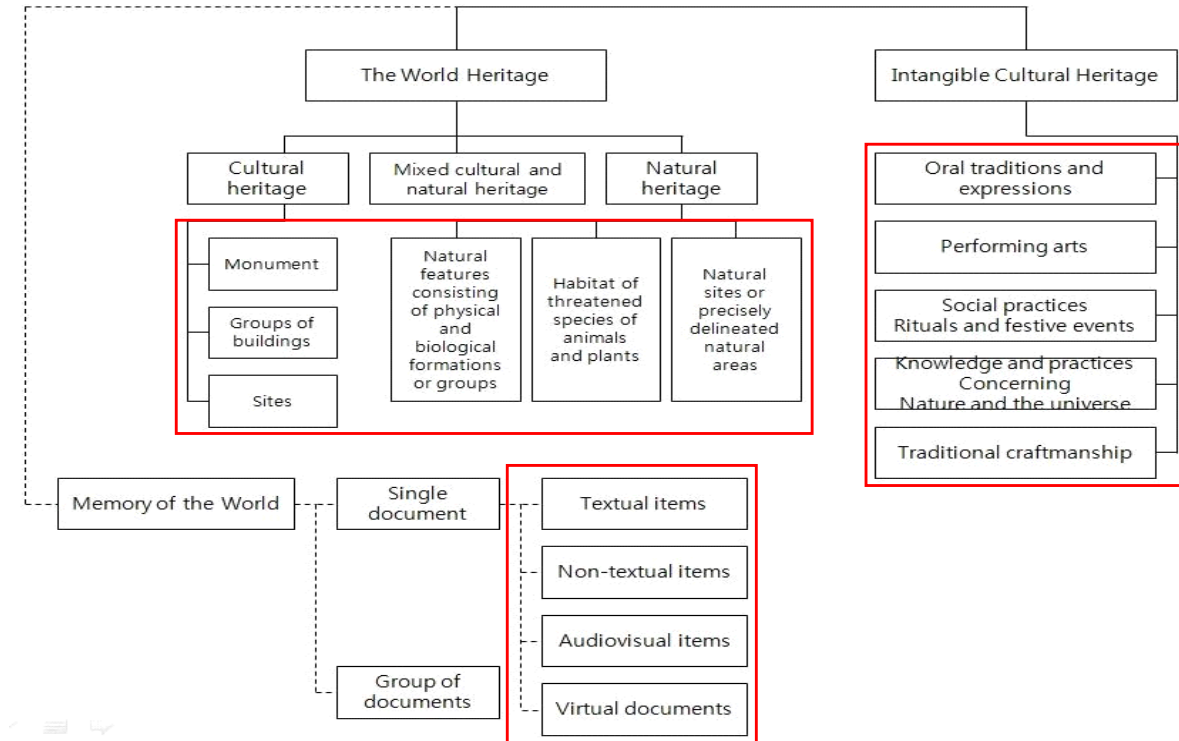
○ 다만, 유네스코의 유산(heritage) 개념을 문화재(cultural property)에 대응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상정한다면 [그림 3-1]과 같은 분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34) 문화재적 관점에서 세계의 기억은 유형문화재, 그 중에서도 특히 기록물 문화재(전적, 서간, 문서, 서각 등의 고문서와 비디오 녹화물, 필름 촬영물, 프린트 인쇄물 등의 뉴미디어 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

35)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을 대한민국은 문화재(Cultural Property)를 보호대상으로 각각 인식함

36) 유네스코는 유산으로서 인식되는 대상의 복합적 총체를, 대한민국은 문화재로서 인식되는 대상의 개별 개체를 보호대상의 범위로 인식함

37) 유네스코는 유산 소유자(또는 소재국가)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장주의적 접근을, 대한민국은 문화국가원리에 의거한 국가(즉, 공권)의 대승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점보호주의적 접근을 전제함



[그림 3-1]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분류 체계 모식도

자료 : 문화재청, 2016b: 25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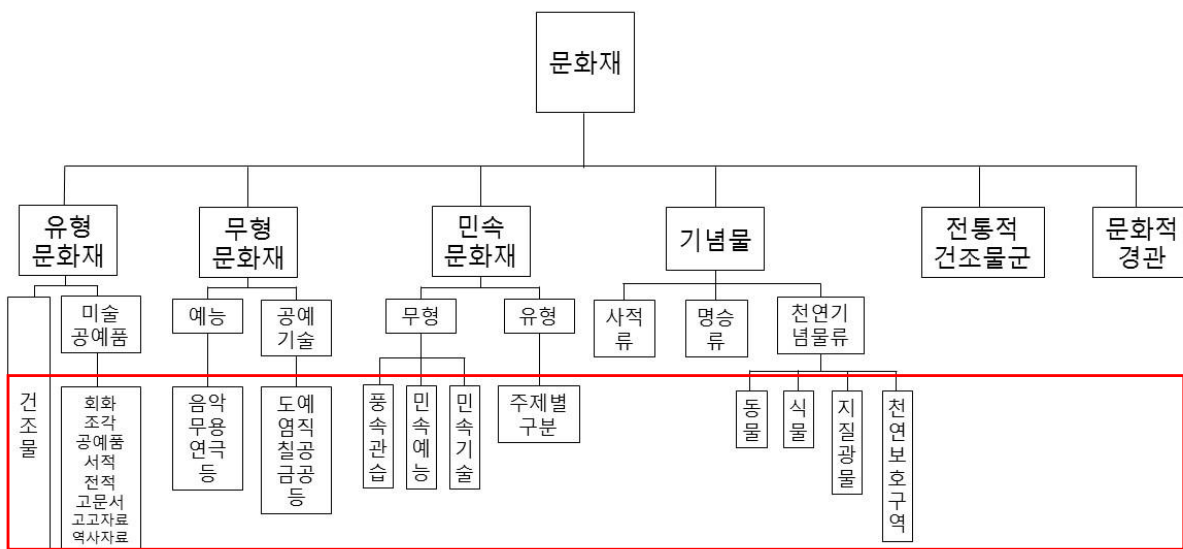
- 각 유산 보호제도는 대분류 이하 중분류 단계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그림 상 붉은색 표시 부분)
-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 상기의 중분류 단계는 큰 의미를 갖지 않으며, 대분류 단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일종의 예시로서 기능함
 - 즉, 어떠한 세계유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본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이하 기념물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쓰임새 보다는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 등의 유산을 지칭한다”라는 쓰임새에 가까운 것
 - 특히,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의 경우 위의 구분이 엄밀한 분류가 아니며 유산의 성격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음(문화재청, 2016b: 256)
 - 따라서 나무 구조 형식의 임의적 분류체계 형식을 갖춘다는 측면 외에 실용적인 기능을 지닌 분류라 보기 어려움
- 실제에 있어서는 상기의 분류보다 지역별(대륙별) 분류, 위험여부에 근거한 분류³⁸⁾ 등이 유의미하게 적용됨

38)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

2) 일본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1) 일본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현황

- 일본은 자국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건조물군 의 6개 유형으로 구분
- 일본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분류 이하 세부 중분류 체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행정명령, 성령 및 고시, 문화청의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문화재 중분류를 추정할 수 있음(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235)



[그림 3-2] 일본 문화재 중분류 체계 모식도

자료 : 문화재청, 2016b: 235 재구성

(2) 일본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시사점

- 일본의 문화재 중분류체계는 하위분류가 상위분류의 범주를 확정하는 부모-자식 관계의 나무구조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현 문화재 분류체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쟁점 사항이 포착되며 다음과 같음
 - 확장성이 제한된 문화재 분류구조로 인해 시대적 변화에 의해 요구되는 문화재 유형을 기존 유형 아래에서 포함하지 못하고 새로운 유형을 신설함
 - 전통적건조물군과 문화적 경관은 각각 Buildings와 Cultural Landscape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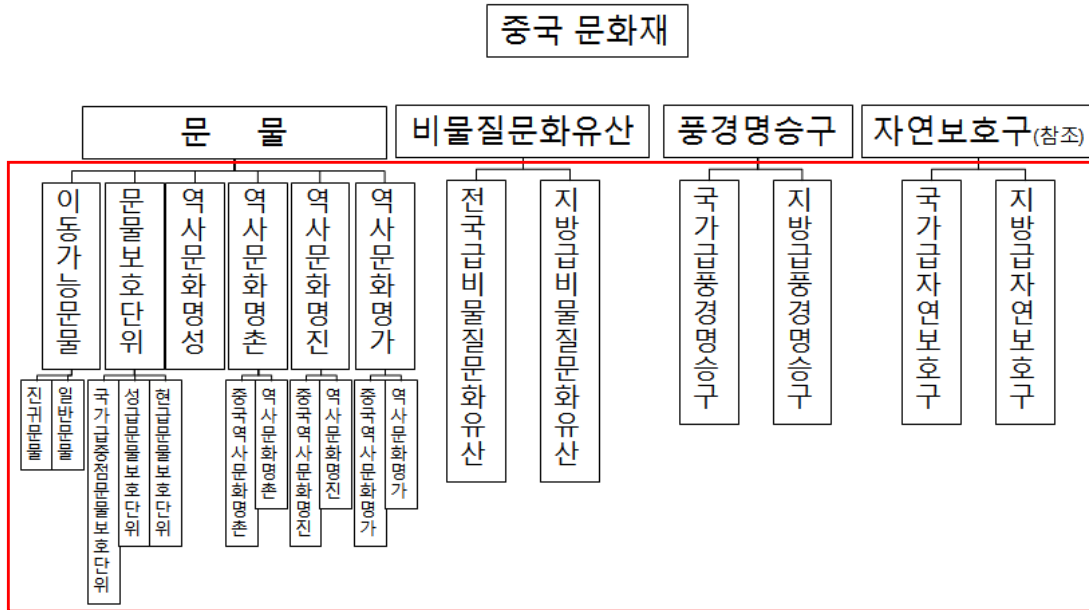
하는 문화재 개념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제도에 따른 국제적 표준이 대두함에 따라 중요성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문화재 유형임

- 일본은 문화재 중분류의 세분화 대신 문화재 대분류의 수평적 확장을 통해 문화재 개념 내에 포함하였음
- 명목상의 문화재 분류와 실무상의 문화재 분류가 괴리됨
 - 규범상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고고자료, 역사자료로 중분류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건조물(즉, 부동산)과 미술공예품(즉, 동산)으로 분류

3) 중국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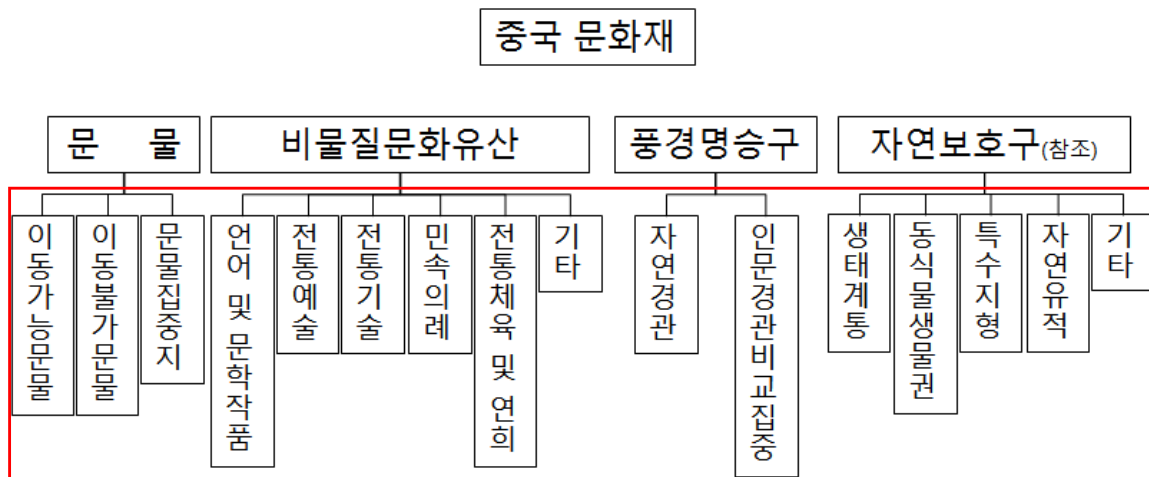
(1) 중국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 현황

- 중국은 문화재 관련 법제가 모두 분리되어 있어 총괄적인 문화재 분류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화재’ 개념 하에 문화재 제도의 1차적 목적인 “보존을 통한 원형계승”과 더불어 2차적 또는 3차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현세대를 위한 활용”을 두루 전제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
 - 따라서 문물, 비물질문화유산, ‘풍경명승구’ 그리고 ‘자연보호구’의 4개 유형이 확인됨
- 중국의 경우 문화재 분류에 있어 관리 및 운영적 특성을 강조한 공식적 성격의 ‘행정적 분류’와 문화재 유형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적 분류’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3] 중국 문화재 행정적 중분류 체계 모식도

자료 : 문화재청, 2016b: 235 재구성



[그림 3-4] 중국 문화재 내용적 중분류 체계 모식도

자료 : 문화재청, 2016b: 235 재구성

○ 중국의 행정적 문화재 중분류 이하 체계는 위 그림의 붉은 박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문물의 경우 동산(이동가능문화재), 부동산(문화재보호단위) 그리고 대단위 복합 문화재구역(역사문화명성, 명진, 명촌, 명가)을 우선 구분하고 이하 국가급과 지방급을 나누는 2단계 구조를 보임
- 그 외 비물질문화유산,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의 경우 국가급(또는 전국급)과

지방급으로 1단계 구분

- 국가급과 지방급은 가치의 범위(즉, 전국적 범위의 가치인지 지역적 범위의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구분됨

○ 중국의 내용적 문화재 중분류 이하 체계는 [그림 3-4]의 붉은 박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문물은 이동가능문물(동산), 이동불가문물(부동산), 문물집중지(대단위 복합 문화재구역)로 구분됨
- 비물질문화유산은 그 내용에 따라 언어 및 문학작품, 전통예술, 전통기술, 민속의례, 전통체육 및 연희, 기타 등으로 구분됨
- 풍경명승구는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 구분됨
- 자연보호구는 생태계통, 동식물생물권, 특수지역, 자연유적 기타로 구분됨

(2) 중국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의 시사점

○ 중국의 행정적 문화재 분류는 철저히 실용적 목적을 위한 분류로 파악됨

- 중국의 경우 문화재의 가치의 보존 뿐 아니라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을 두루 지향하고 있는데 ‘이동가능성’, ‘이동불가능성’, ‘복합문화재 구역의 규모’, ‘가치범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체계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와 더불어 활용가치를 두루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의 내용적 분류체계는 현 대한민국의 분류체계와 유사한 면이 있음

- 특히, 비물질문화유산,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 등은 문화재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현 중분류 체계와 유사한 측면을 보임

○ 특히, 문물의 중분류체계의 경우 ‘이동가능성’, ‘이동불가능성’, ‘대단위 복합문화재 구역 여부’ 등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기준할 뿐 세세한 구분을 하지 않아 실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구분 하에 이동가능문물은 ‘수장이 가능한 문물(可守藏文物)’로 취급하고³⁹⁾, 이동불가문물과 문물집중지의 규모⁴⁰⁾에 따라 관리체계를 달리하는 등 분류체계와 행정체계가 연동되는 특성을 보임

39) 이동가능문물은 박물관 등 문물수장단위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0) 문물집중지의 규모에 따라 국가, 성, 현, 촌 단위에서 각각 관리체계를 마련함

4) 문화재 분류체계 중분류 구성의 유형 분석

(1) 문화재 분류체계 대분류 구성 분석의 기준과 방법

○ 중분류 구성 종합 분석의 방법

- 중분류 구성 유형에 대한 분석은 법, 규정 행정문서 등을 참조한 추정으로 이루어짐
 - 국내 및 해외 문화재 분류체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대분류 이하 중분류 체계를 명확히 구석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문화재 분류체계에 있어서의 중분류는 상위 대분류의 내용을 형성하는 예시로서의 언급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선행 연구가 구성한 문화재 분류체계 역시 법, 규정, 행정문서 등의 설명에 근거하여 그 나름에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문화재 중분류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의 목적에서 문화재 중분류 분석은 실용 가능한 문화재 중분류의 체계를 구성을 위한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는 것임
- 따라서 대분류 이하의 공식적 성격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문화재 분류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문화재 대분류의 각 항목의 구성요소로서의 문화재 분류를 문화재 중분류로 기준을 설정하고 구성체계, 내용, 분류방법을 각각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음

(2) 문화재 분류체계 중분류체계 구성의 비교

[표 3-8] 국가/단체 별 문화재 중분류 체계 종합비교표

		한국	유네스코	일본	중국
중분류의 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유네스코 협약문 및 가이드라인	법률 및 행정문서	각 관련 법
중분류 구조		나무구조	나무구조	나무구조	나무구조
내용	유형분류	○	○	○	○
	가치분류	○	×	○	○
분류 방법		임의 분류	임의 분류	임의 분류	임의 분류 자연 분류

	한국	유네스코	일본	중국
보조적 분류체계 운영 여부	×	○	×	○

○ 중분류의 근거

- 한국과 일본은 중분류의 근거를 제도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 상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행정문서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문서에서 언급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이 문화재 중분류와 혼용되어 해석되고 있음
- 유네스코는 각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협약문과 가이드라인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의 중분류를 언급하고 있음
- 중국은 각 관련법⁴¹⁾에 문화재 유형의 중분류를 명시하고 있음

○ 중분류의 구조

- 조사 대상인 한국, 유네스코, 일본 그리고 중국의 문화재 중분류는 모두 하위 분류가 상위분류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모-자식(母-子)관계의 나무구조로 나타남

○ 중분류의 내용과 방법

- 한국, 유네스코, 일본은 중분류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유형을 임의로 나열하는 유형의 임의적 방법의 분류
- 중국은 행정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가 병행되고 있는데 행정적 분류는 유형에 대한 가치의 고저와 관계없이 가치의 영향 범위, 대단위 복합문화재 규모 등의 객관적 정보를 근거로 유형 각각에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자연적 방법 분류로 나타남
- 한편, 내용적 분류는 대체로 대분류 유형 각각의 정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열하는 임의적 방법의 분류로 나타남
- 한국, 일본, 중국은 가치의 높고 낮음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으나 유네스코는 구분 방식이 다름
 - 한국, 일본, 중국은 가치의 고저를 따져 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낮은 문화재를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예_한국·일본 : 국보/ 보물의

41) 「문물보호법」, 「비물질문화유산법」, 「풍경명승구조례」, 「자연보호구조례」 등.

구분 등, 중국 : 국가급(전국급)과 지방급의 구분)

- 반면, 유네스코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유산과 그렇지 아니한 유산을 구분하지 않음

○ 보조적 분류체계의 운영여부

- 유네스코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유산보호 모범사례 목록’ 등 유산 보호의 실용적 목적에 근거한 보완적 성격의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중국의 행정적 분류는 문화재 정보를 ‘이동가능성’, ‘이동불가능성’, ‘복합문화재 구역의 규모’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자연분류함하도록 함으로써 내용적 분류의 한계를 보완

4. 문화재 분류체계 중분류 구성의 시사점

1) 중분류 체계 수립의 필요성

- 국내를 비롯한 각국 문화재 행정청 중 다수는 공식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문화재 중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각 기관이 편의와 필요에 따라 각각 중분류 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중분류를 통한 문화재의 분류의 수립의 이점 역시 존재함
 - 따라서 중분류 체계를 개선(사실상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1) 공식적 문화재 중분류의 필요성

- 문화재 중분류 체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모종의 조치에 대상이 되는 문화재 집합을 보다 쉽게 특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추진하는 실용적인 목적에 있음
 - 예를 들어, 만일 문화재 중분류 체계상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중분류 유형이 구분되어 있다면 문화재 방염처리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대상을 특정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임
 - 만일, 소재 지역별 문화재 분류가 중분류 체계에 적용되어 있다면 각 지역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관리 인력을 수급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추진하기 용이할 것임
 - 또한,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도 시대별, 유래별, 용도별 분류가 중분류 체계에 적용되어 있다면 각 범주의 문화재를 활용 콘텐츠를 구성하여 추진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분류 체계는 통일성과 위계적 특성을 요구하는 집권적인의 문화재 관리체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 상위 부서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반 조치의 계획을 기획하여 하위 부서에 전달하고, 하위 부서가 구체화 하여 다시 하위 부서에 하달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경우임
 - 즉, 상위 부서가 전체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의 대상을 조기에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요한 문화재를 별도로 지정하여 국가의 공공기관이 문화재의 보존·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실행하는 중점보호주의 방식의 문화재보호체계에 있어 중분류 체계를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2) 공식적 문화재 중분류의 불필요성

- 각 문화재 현장이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활용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규제의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집권적인 문화재보호체계의 경우임
 - 각 문화재 현장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자세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중분류체계가 그 중요성이 덜할 수 있음
 - 즉,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본위의 문화재 보호·관리·활용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중분류체계는 큰 의의를 갖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재 정책적 입장에서 지정 또는 등재된 문화재의 면면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중분류 체계의 필요성은 쉽게 간과할 수 없음

2) 중분류 체계 수립의 방향

(1) 속성에 근거해 문화재를 자연 분류함으로써 실용성을 극대화

- 문화재는 가치에 대한 판단과 속성에 대한 구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음
 - ‘가치’란 해당 대상물이 문화재로 지정·분류되어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음
 - 즉, “자연물을 문화재로 보존할 것인가?”, “민속물이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 “가시적 가치요소가 남아있지 않은 유적지가 보호될 필요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등이 그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가치에 대한 판단은 문화재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특정하고 그 외연을 확정하기 위한 판단으로 총괄판단과 대분류 단계에서 다를 필요가 있음
- 속성이란 철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한 인식⁴²⁾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이 문화재는 이동가능한가?’, ‘이 문화재는 개방되어있는가?’, ‘이

42) 즉, 단순한 정보처리적 수단으로서의 판단

문화재는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등이 그 예시임

- 중분류 단계에서는 문화재의 인식적 속성을 기준으로 문화재를 구분하여 관련된 제반 행위의 실용성을 더해야 할 것임

-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각 행위의 연장선에서 문화재 ‘속성’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복합적인 성격을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다축 분류체계를 수립

- 문화재는 매우 복합적인 성질을 동시에 갖는 복합물임
 - 사적과 유형문화재를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의 ‘시설물’과 유형문화재의 ‘건조물’의 개념이 서로 중복됨
 - 사적인 ‘합천 해인사’와 명승인 ‘가야산 해인사’가 범보사찰 해인사를 두고 서로 중복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임
 - 중복적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엄밀하고 정교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즉, 상위 분류 유형에 하위 분류유형이 상호 배타적으로 포함되는 나무구조의 문화재 분류체계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분류를 위한 다수의 기준 축을 마련해 문화재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축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필요에 따라 유연한 범주화가 가능해야 할 것

- 문화재 관리 과정상의 필요로 다른 집합에 속한 개체를 임의로 포괄하여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방염처리를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민속문화재로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으로 분류되는 민속마을, 보물 또는 국보로 분류되는 건조물, 사적의 시설물이 하나의 ‘목조 건축문화재’라는 하나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임
 - 결국, 문화재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분도 절대적일 수 없으므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범주화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

(4)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것

- 문화재 관리는 과거의 것을 다루는 행위로 인식되기 쉬우나,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것을 다루는 행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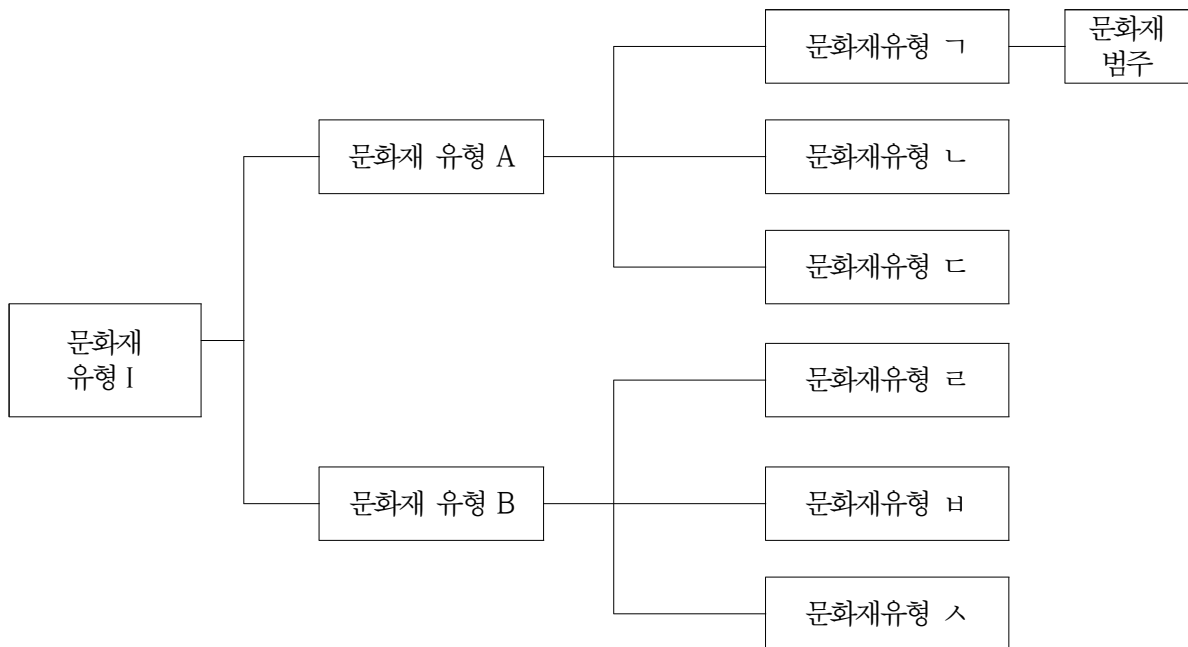
- 문화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까지 이어져 온 유산(遺産), 즉, 현재에 실존하는 물질임
-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는 문화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대상이 문화재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트, 박지성의 축구화 등은 현재에 있어서는 문화재로 여겨지지 않으나, 50년 이후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
- 그 때는 유형문화재 이하 중분류에 ‘스포츠 용품’이라는 분류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의 다양화와 확장적인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全方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확장성이 극히 제한된 현행의 분류체계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큼
- 따라서 문화재의 확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의 중분류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임

5.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수립)의 구체화 방안

1) 다축분류체계 수립의 의의

- 다축분류는 복합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그 정보를 포함하는 분류 기준으로서의 축을 다수로 마련하고, 각 축의 성질에 따라 각각 문화재 정보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임
 - 상위 단계에서 의해 특정 분류기준에 따라 선행 분류될 경우 다른 분류 기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중복 적용될 수 없는 현행 나무 구조와 달리 축마다 마련된 분류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유형에 중복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즉, 문화재 중분류에 다축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여러 범주에 걸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복합적인 문화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다축분류체계는 기존의 나무구조의 열거식 분류와 정 반대의 방식으로 적용됨
 - 기존의 열거식 분류가 정의된 기준에 문화재를 끼워 맞추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음
 - 다축분류체계의 분류는 하나의 문화재에 각 분류 축에 속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다축분류체계는 문화재 분류기준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로서 기존의 분류체계보다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여 가변적인 범주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존의 나무구조 분류체계가 하위분류로 갈수록 더욱 협소하고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였음
 - 다축분류체계에 의한 문화재 분류는 하위분류로 갈수록 더욱 다양하고 입체적인 문화재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때에 따라 필요한 분류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기준에 따른 범주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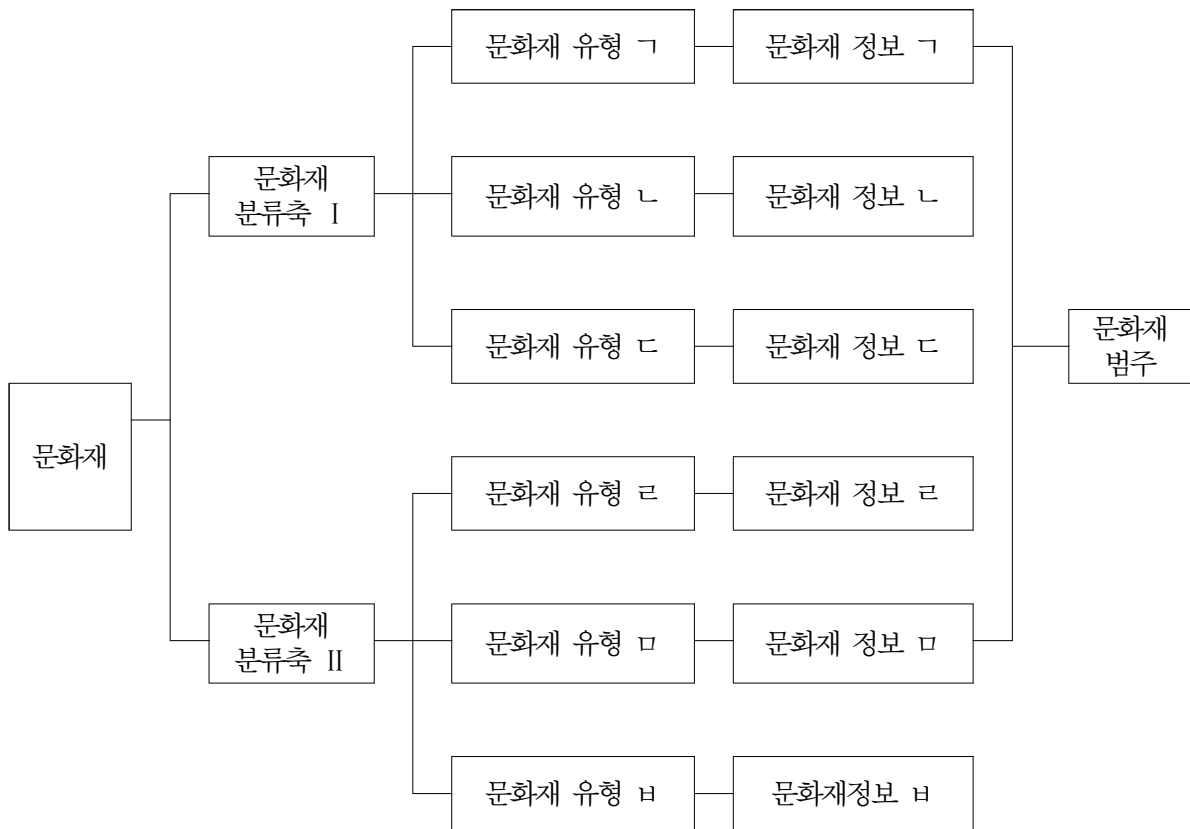
○ 기존 나무구조 문화재 분류체계 운영



[그림 3-5] 기존(나무구조)의 문화재 분류 흐름

- 위의 [그림 3-5]와 같은 기존 문화재 분류의 흐름에 따르면 문화재는 문화재 ‘유형 I’에 속한 문화재 ‘유형 A’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 ㄱ’에 속함
- 즉, 문화재는 ‘유형 I’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는 ‘유형 A’에 해당하는 ‘유형 ㄱ’에 부합하는 문화재로 범주화 됨
- 문화재 ‘유형 A’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문화재 ‘유형 B’에 이하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범주는 고정되었으므로 조정될 수 없음

○ 다축분류체계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운영



[그림 3-6] 다축분류체계에 의한 문화재 분류의 흐름

- 다축분류체계에 의할 경우 각 분류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문화재는 ‘분류축 I’에 따른 ‘문화재 유형 1’에 해당하는 동시에 문화재 ‘분류축 II’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 ㅁ’에 해당할 수 있음
 - 각 분류 축 이하의 유형은 그에 해당하는 문화재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그에 해당하는 문화재 정보를 지님을 의미함
 - 즉, 문화재가 ‘분류 축 I - 유형 ㄱ’과 ‘분류 축 II-유형 ㅁ’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시에 가질 경우 이를 합성한 문화재 범주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임
- 다축분류체계의 장점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가 불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의 대상물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데 있음
- 그러나 복잡성으로 인해 분류 정보의 작성과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함
-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일반화된 현재는 정보 작성과 유지가 매우 용이해졌으므로 장점만을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2) 다축분류체계 수립의 사례

- 다축분류체계는 기존의 나무구조에 의한 분류체계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음
- 특히, 정신보건영역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대상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 체계임
 -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정신과학회의 다축진단체계가 있음
 - 정신보건 영역에 있어 질병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으나 신체와 정신,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 현실적으로 하나의 분류 기준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여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함
 - 미국정신과학회에서는 정신보건 영역의 진단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5개 평가 축에 따라 분류된 진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하는 다축진단체계를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표 3-9] 미국정신과학회 <DSM IV>에 따른 다축진단체계

축 I	: 임상적 장애 및 임상학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기타 상태 분류
축 II	: 성격장애 및 정신지체 분류
축 III	: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분류
축 IV	: 심리사회적 환경적 문제 분류
축 V	: 전반적 기능평가 분류

자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재구성

- 국내 문화재 분야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분류체계가 다축분류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품 1건에 ‘국적·시대 기준’, ‘재질 기준’, ‘용도·기능 기준’, ‘문양·장식 기준’, ‘출토지 기준’, ‘소장구분 기준’의 6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각 기준은 각각 독자적으로 분류되며, 각각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체계를 선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즉, 6개의 축으로 각각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를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된 일종의 다축분류체계라 할 수 있음

[표 3-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다축분류체계

분류 축	분류 기준	분류 유형
국적/시대	한국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 삼국, 통일신라, 발해, 라말여초, 고려, 려말선초,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 광복이후, 시대미상
	중국	구석기, 신석기, 상, 서주, 춘추, 전국, 진, 전한, 신, 후한, 삼국, 동진, 남진, 남북조, 수, 당, 오대, 송, 원, 명, 청, 근/현대, 시대미상
	일본	선토기, 승문, 미생, 고분, 비조, 백봉, 내량, 평안, 겸장, 실정, 도산, 강호, 근/현대, 시대미상
	아시아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몰디브, 캄보디아, 통가, 휘지, 서사모아,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라오스, 미얀마, 파푸아뉴기, 스리랑카, 솔로몬군도, 투발루, 나우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파키스탄, 브루나이, 부탄, 방글라데시, 몽골, 마셜군도, 마이크로네, 베트남, 싱가포르, 기타
	중동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 이란, 튀니지, 아프카니스, 오만, 카타르, 바레인, 수단, 모리타니, 쿠웨이트, 아랍에미리, 리비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알제리아, 이집트, 시리아, 기타
	아프리카	코트디브와, 니제르, 베냉, 차드, 카메룬, 콩고, 부르키나파, 마다가스칼, 시에라리온, 가봉, 세네갈, 르완다, 우간다, 자이르, 토고, 중앙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케냐, 라이베리아, 감비아,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모리셔스, 세이셸, 가나, 지부티, 기니, 코모로,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기니비쏘, 소말리아, 상투메프린,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잠비아, 말리, 부룬디, 앙골라,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기타
	유럽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터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 몰타, 핀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몰도바, 키르기즈, 투르크메니,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슬로베니아, 그루지야,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 보스헤르체, 사이프러스, 마케도니아,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기타
	아메리카	미국, 브라질, 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칠레,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아이티, 파나마, 에콰도르, 자메이카, 과테말라, 캐나다, 페루,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그레나다, 수리남, 바베이도스,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 세인트빈센, 안타구아바, 세인트컷츠, 바하마, 트리니다드, 벨리세, 쿠바, 기타
	기타	기타
재질	금속	금제, 은제, 금동제, 동합금제, 철제, 복합금속, 주석, 기타
	토제	질, 와질, 경질, 소조, 기타
	도자기	청자, 분청자, 백자, 흑유, 연유, 백태청유자, 청백자, 백탁유, 잡유, 갈유, 석간주, 천목, 삼채, 오채, 기타
	석	화강암, 섬록암, 안산암, 현무암, 응회암, 사암, 혈암, 점판암, 석회암, 편마암, 대리석, 기타
	유리/보석	유리, 수정, 마노, 호박, 비취, 천하석, 밀화, 옥, 진주, 산호, 금과, 기타
	초제	초제
	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가죽나무, 감나무, 개오동나무, 갯버들, 고로쇠나무, 고리버들, 고욤나무, 굴피나무, 평평나무, 꾸지뽕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대추나무, 매죽나무, 모과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불가시나무, 분비나무, 비자나무, 뽕나무, 소나무, 싸리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앞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참나무, 참죽나무, 팽나무, 피나무, 향나무, 호도나무, 회양목, 자단목, 기타

분류 축	분류 기준	분류 유형
	골각패갑	인골, 수골, 조골, 어골, 수각, 상아, 패각, 대모, 나전, 화각, 알껍질, 기타
	지	저지, 마지, 고정지, 상지, 면지, 죽지, 안피지, 삼아지, 양지, 기타
	피모	호피, 양피, 우피, 어피, 양모, 황모, 저모, 말총, 인모, 기타
	사직	견, 마, 면, 저, 모직, 합성섬유, 기타
	종자	곡물, 과일, 기타
	기타	합성고무, 합성수지, 기타
용도/기능	의	관모, 의류, 대/구, 신발, 장신구, 관/복합, 관련도서, 기타
	식	음식기, 취사, 가공, 관련도서, 기타
	주	건축물, 건축부재, 생활용품, 기타
	산업/생업	선사생활, 농업, 어업, 임업, 축산, 양잠봉, 광업, 수렵, 공업, 상업, 관련도서, 기타
	교통/통신	교통운송, 마구, 수레부속구, 통신, 관련도서, 기타
	과학기술	천문, 지리, 의료, 인쇄, 인장, 판류, 기타
	사회생활	의례생활, 사회제도, 기념, 의전, 기타
	종교신앙	불교, 유교, 민간신앙, 기독교, 기타
	문화예술	문헌, 음악, 서화, 조각, 공예, 무용/극, 놀이, 기타
	군사	근력무기, 화약무기, 장비, 복식, 표식제식, 기치, 문서/서적, 기타
	기타	자료, 모형, 용도불명, 기타도서, 기타
문양/장식	인물문	인물문, 인면문, 신체문, 신선문, 비천문, 동자문, 불/보살문, 신장문, 귀문, 기타
	동물문	도철문, 용문, 용호문, 용봉문, 기린문, 봉황문, 주작문, 현무문, 사신문, 사자문, 공작문, 해사문, 가룡빈기문, 상문, 서문, 우문, 호문, 토문, 마문, 양문, 원문, 견문, 저문, 녹문, 편복문, 앵무문, 원앙문, 학문, 작문, 계문, 안문, 압문, 안압문, 어문, 사문, 외문, 구문, 어하문, 호접문, 봉문, 선문, 십이지문, 오문, 경문, 해태문, 수금문, 잉어문, 조문, 기타
	식물문	인동문, 보상화문, 연화문, 마엽문, 껌수문, 송문, 죽문, 매화문, 국화문, 난초문, 수목문, 양류문, 포도문, 석류문, 노화문, 모란문, 모란절지문, 초화문, 포류문, 화훼문, 파초문, 하엽문, 연판문, 이화문, 도리문, 당초문, 인동당초문, 보상당초문, 포도당초문, 연당초문, 모란당초문, 국당초문, 엽맥문, 여지문, 영지문, 초문, 초화당초문, 화문, 화판문, 연화절지문, 국화절지문, 국판문, 도문, 삼엽문, 추계문, 매죽문, 사군자문, 율문, 불수감문, 도류불수문, 엽문, 죽절문, 기타
	기하문	형선문, 종선문, 사선문, 단사선문, 집선문, 사선문대, 유충문, 점열문, 공열문, 조문, 어골문, 능형문, 삼각형문, 사각형문, 거치문, 뇌문, 원문, 반원문, 동심원문, 껌수문, 파문, 파상문, 구갑문, 용기문, 주름문, 격쇠문, 태극문, 점문, 공문, 팔괘문, 십자문, 그물문, 외문, 태사문, 귀목문, 기타교통운송, 마구, 수레부속구, 통신, 관련도서, 기타
	물상문	칠보문, 연환문, 연주문, 여의두문, 영락문, 연리문, 승석문, 화염문, 격자문, 포목문, 유두문, 기타
	복합문	십장생문, 포도동자문, 운룡문, 운학문, 포류수금문, 위로수금문, 연당초봉황, 화조문, 화접문, 매조문, 영지운문, 해수포도문, 석죽문, 산수인물문, 운봉문, 초충문, 송호문, 파어문, 어로문, 연지수금, 기타
	산수문	일문, 월문, 운문, 운무문, 우점문, 산경문, 산수문, 석문, 성운문, 성좌문, 기타
	문자문	수자문, 복자문, 수복자문, 강녕자문, 수복강녕자, 덕자문, 녹자문, 만자문, 아자문, 다남다자, 희/희자문, 만수무강문, 수복다남자, 범자문, 부귀문, 만수무강, 연년익수, 기타
	기타문	
출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

분류 축	분류 기준	분류 유형
		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 강화군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군,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군,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 송탄시, 성남시, 광주군,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개성부근일문, 월문, 운문, 운무문, 우점문, 산경문, 산수문, 석문, 성운문, 성좌문, 기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양산군, 밀양시, 마산시, 창원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군, 삼천포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성주군, 울릉군
	전라남도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전라북도	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제주도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소장구분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 천안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당진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국립1	중앙, 경주, 부여, 공주, 광주, 진주, 청주, 전주, 대구, 김해
	국립2	민속, 이충무공, 체신, 우정, 현대, 산림, 철도, 서울과학, 중앙과학, 진주산림, 궁중유물, 외교, 해양유물, 국악, 경주문화원, 부여문화원, 창원문화원, 문화재연구
	공립	인천시립, 옥진각, 밀양시립, 오죽헌, 부산시립, 충익사, 담양죽물, 군위송덕, 목포향토, 제주민자, 충주, 경기도립, 광주민속, 거창, 강화역사, 몽촌역사, 대전향토, 청주고인쇄, 안동민속, 나주배, 강릉시립, 한밭교육, 김포덕포, 의령, 전남농업, 서울시립, 제주교육, 창덕궁, 미륵사유물, 부산시복천, 서울교육사, 문경새재박, 강진청자, 삼척시립, 동해시, 경북고령, 청와대, 국사편찬, 양구선사, 가평군청
	법인/사립	부봉, 간송, 제주민속, 절두산순교, 에밀레, 윤고산유물, 안중근의사, 부원, 세종대왕, 한독의약, 성암고서, 강원향토, 한국미술관, 온양민속, 서산대사, 충렬사유물, 금정민속, 한국자수, 태평양, 대가야유물, 행주대첩, 모충관, 서울미술관, 태정민속, 호암, 모덕사유물, 한국순교자, 호림, 조흥은행, 선교장민속, 동진수리민, 제암순국, 영일민속, 암사동선사, 위커힐, 항공전시관, 장기갑등대, 청풍문화재, 풀무원김치, 한전자료관, 천일민속, 제주신천지, 독립기념관, 통도사성보, 농업, 제천향토, 마사, 화폐, 제일은행, 윤봉길의사, 롯데민속, 효행기념관, 기독교순교, 남진, 건들바우, 법주사유물, 모란, 해강도자, 한국은행, 삼성출판, 한국스키, 중문민속, 거제, 사명대사, 월전, 선재, 사경유물, 대관령, 송암, 환기, 참소리축음, 한국잡지, 문신, 짚풀생활사, 웅기민속, 전쟁기념관, 목아불교, 한국가구, 한원, 홍산, 한국통신, 한국

분류 축	분류 기준	분류 유형
		불교, 한국현대의, 목암, 토탈아외, 중남미, 소전, 서봉의약, 삼성어린이, 신세계상업, 한국민속촌, 성읍민속, 운향, 피어리스, 전통공예, 경주무속, 보령석탄, 동방유기, 방송사, 문화재보호, 영남매장문, 토지박물관, 기전문, 경북문화연, 중원문화연, 예술의전당, 도로공사, 서울디자인
	학교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전남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건국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성신여대, 홍익대, 제주대, 단국대중앙, 숭실대, 원광대, 충남대, 청주대, 이대자연사, 공주대, 충북대, 덕성여대, 경성대, 숙명여대, 관동대, 서강대, 국민대, 강릉대, 전주교대, 공주교대, 세종대, 대구교대, 해사, 경남대, 대구효성가, 동덕여대, 계명대, 경희대자연, 한양대, 강원대, 명지대, 안동대, 청주산업대, 청주교대, 단대석주선, 목포대, 인하대, 조선대, 한남대, 동신실전, 동국대경주, 한남대자연, 장로회신학, 부산여전, 경기대, 경상대, 서울시립대, 전주대, 부경대, 군산대, 충주공전, 대전대, 신라대, 육군사관, 공군사관, 수원대, 창원대, 동의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순천대, 한림대, 진주산업대, 영남대, 조선대미술, 한신대, 한성대, 이주대, 대구대, 서원대, 경산대, 인제대, 울산대, 한국의국어, 상명대, 대전보건, 선문대, 배재대, 경주대
	기타	개인수장가
	외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지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기타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소장품 검색 디렉토리, 검색일 : 2016.09.) 재구성

3) 문화재 중분류 체계 개선(수립) 및 운영 방안

(1) 문화재 다축분류체계 구성 방안

- 다축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기준은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분류 체계의 설정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 문화재 중분류는 문화재 관리활동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실용성 있게 구성되어야 함은 앞서 강조한 바 있음
 - 다축분류체계를 수립하고도 그 축을 무의미하게 구성한다면 복잡성만 더할 뿐 장점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임
 - 따라서 문화재 중분류를 위한 문화재 다축분류체계의 축, 즉 기준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문화재 관리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중분류를 위한 다축분류체계의 축을 문화재 관리 활동의 4 가지 주요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여기에서 의미하는 문화재 관리 활동의 네 가지 목적은 ① 보존, ② 관리, ③ 활용, ④ 연구(학술)로 요약됨
 - 문화재 보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승되어온 문화재의 역사적 원형을

- 복원해 후대에 까지 물려주는 것(즉 유증)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의 소재, 상태, 소유관계 등 현상(現像)을 파악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해 현 세대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반 활동을 의미함
 - 문화재 연구는 문화재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창출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함
 - 주요 활동을 목적으로 삼아 각각의 활동에 관련된 속성을 분류하여 기준으로 분류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 활동과 일체화된 문화재 분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재 관리 활동의 기준으로 아래의 [표 3-11]과 같은 형식의 분류축 설정과 세부 분류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표 3-11] 문화재 다축 분류체계 구성(안)

분류 목적	보존						관리				활용			연구				
분류축	문화재 보존 상태			외부 위협 요인의 존재			관리주체		소재지		문화재 장르/ 콘텐츠	이용 형태		자연· 과학 연구 관련	공학· 기술 연구 관련	인문· 역사 연구 관련		
분류 기준	양 호	보 통	취 약	위 협	보 통	미 미	국 가·	지 자 체	민 간· 단 체	국 외 지 역 별	국 내 기 타	문화재 대분류 이하 세부 장르 및 콘텐츠 별 구분	영 리 목 적	비 영 리	비 공 개	자연 과학 관련 연구 분야 별 구분	공학·기술 관련 연구 분야 별 구분	인문·역사 관련 연구 분야 별 구분

(2) 문화재 중분류 체계 운영 방안

① 문화재 중분류 다축체계 수립 추진방안

-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논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분류축과 세부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분류체계 수립
- 다축분류체계에 의한 문화재 중분류는 목적 지향적이며 철학적 문답을 배제한 구체적 내용을 담게 되어야 함
 - 각 분류축에 관계된 문화재 연구자, 관리자, 실무자, 전문가, 행정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합의 도출 필요
 - 중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패널 회의는 각계 전문가가 분류기준을 제안하고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준 적용의 구체성과 공신력을 확

보해야 할 것임

-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준으로는 보존위험성 여부, 보수 및 수리 이력의 존재, 복원필요성 등을 고려
- 문화재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는 소재지, 소장처, 소유관계, 공개여부, 재질 등을 고려
- 문화재 활용에 관한 기준으로는 관광지 여부, 향유방법, 콘텐츠의 성격, 용도, 장르 등을 고려
- 문화재 연구에 관한 기준으로는 시대, 관련 기록의 존재여부, 연구 자료 활용도 등을 고려

○ 중분류를 위한 다축분류체계의 분류 축과 분류기준의 적용은 총괄과 대분류 단계에서 구분된 문화재 분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될 필요가 있음

- 모든 문화재 대분류 유형에 똑같은 중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함
- 문화재 대분류 유형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 중분류의 다축분류체계를 구성·적용해야 할 것임

② 문화재 중분류 다축체계 수립 후 운영 방안

○ 수립된 체계에 따라 문화재 정보를 수집·정리

- 보존, 관리, 활용 그리고 연구의 4개 분야에 해당하는 각 분류축과 이하 분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간단한 형식의 문답지를 작성
- 또한 각 문화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배부, 해당 내용을 응답하도록 하여 분류체계 변화에 따른 문화재 분류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각 문화재 분류기준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면 문화재 관리에 활동에 대한 실무적 역량을 갖춘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음
- 설문지 형식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전문가 응답지 분석으로 문화재의 중분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임

○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DB를 구축하여 문화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연구의 4개의 축은 문화재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활동

이므로 만일 문화재 분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기준의 적용은 관계 분야 패널 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결과를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회부해 의결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음

6. 중분류 체계 개선의 시사점

- 문화재의 중분류 단계에서는 문화재의 실제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한 분류 방식 필요
 - 개별 문화재의 물리적 속성에 근거하여 문화재를 분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 필요
- 문화재의 복합적인 특성과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 방안 도입 필요
 - 문화재 분류의 배타적인 구분에 포함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화재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문화재 유형의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적인 문화재 분류방식 필요
 - 향후 새로운 문화재의 도입과 지정을 위한 유연한 문화재 분류 방안을 도입하여 문화재의 내연과 외연의 확장 필요
-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상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축분류 체계 혹은 다차원 분류체계의 도입과 활용 필요
 - 기존의 분류체계는 단편적인 문화재의 정보를 기록하는 분류체계였으나 다축 분류체계 혹은 다차원 분류체계는 대상물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

제3절 세분류 체계 분석

1. 행정명령에 의한 분류체계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종별(보물·국보·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 지정기준 규정
-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와, 지정을 위한 가치평가 기준을 함께 적고 있음
 - 문화재 분류 예시: 전적류의 하위 항목으로, ‘사본류, 판본류, 활자본류’
 - 지정의 기준 예시: 서적류의 하위 항목으로, ‘~등(종류 나열)으로서 대표적이거나 사료적 가치가 큰 것’

[표 3-1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한 분류 현황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보물	건조물	목조건축물류	당탑(堂塔),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塹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분묘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전적·서적·문서	전적류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 서예 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회화·조각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공예품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 기법이 우수한 것	
	고고자료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무구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국보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製作意匠)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사적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명승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천연기념물	동물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곳,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지형·지물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천연기념물	동물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식물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지질·광물·지형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와 그 분포지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사화석과 그 산지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狀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 지형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변(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얼음골, 풍혈
			샘: 온천, 냉천, 광천
			특이한 해양 현상 등
	천연보호구역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자연현상	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	
국가 민속문화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형적인 것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漁獵具)·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자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라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함
- 세분류 없이 중분류에 따른 문화재의 종류를 나열한 정도와, 구체적인 세분류 모두 확인됨
 - 문화재 종류 나열 예시: 기록회화의 하위 항목으로,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 등’
 - 구체적인 세분류 예시: 금속공예의 하위 항목으로, ‘청동용구, 장신구, 생활용구, 무속구, 마구’

[표 3-13]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난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삽도 등
불교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접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조사도(16·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룽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 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등) 등
일반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단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계수리, 경상, 관대함, 반진고리, 벼루집, 앞단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 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잡,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단집, 불갑,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도자공예	토·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도기(호, 병, 시루, 두루,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순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래틀,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재(호, 병, 주자, 풍주 등)
		잡유재(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사경(목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윤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路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홀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품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통고류(훈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목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탁본류	탁본 등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고고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등
자연사 자료	자연과학유물	인골류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자료	생업기술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측교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우표 등)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 기술용구	이동용구 등
		운송용구 등
	공예기술용구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유희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외국 문화재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자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2.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기본정보’ 상 분류체계

1)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검색’ 서비스

- 2017.07.20. 기준 부속문화재를 포함한 13,032개의 문화재의 정보 검색됨
- 각 검색결과 페이지에서는 지정 종목과 명칭, 지정일, 소재지 등과 함께 문화재 분류 항목을 두어 각 문화재별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유형분류’ 페이지에서는 문화재 대분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음
- 반면, ‘문화재검색’의 문화재 기본정보에서는 등록문화재 또한 대분류 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유형분류’ : 유적건조물/유물/기록유산/무형문화재/자연유산
 - ‘문화재 기본정보’ : 유적건조물/유물/기록유산/무형문화재(무형유산)/자연유산/등록문화재
- 대분류를 포함하여 최대 4단계까지의 분류 단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수의 문화재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4단계의 세분류까지 이루어진 문화재는 전체 13,032개 중 10,576개
 - 유적건조물 5,154개, 유물 2,689개, 기록유산 1,625개, 무형유산 423개, 자연유산 685개, 등록문화재 698개

분류 구분	해당 단계에서 분류되지 않은 문화재 개수 (단위: 개)
1단계(대분류)	277
2단계	312
3단계	252
4단계	1,615
합계	2,456 (총 13,032)

2) 분류별 문화재 현황

(1) 유적건조물 (총 5,154개)

[표 3-14]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유적건조물)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유적건조물	교육문화	교육기관	서당	95
			서원	181
			성균관	2
			향교	221
		근대교육문화	사회문화시설	2
			의료시설	3
			학교시설	21
	교통통신	교통	교량	25
			도로	1
			수상교통	3
		근대교통·통신시설	교량	1
			우정	1
			철도	2
			해운	3
		통신	봉수	66
		근대무덤	근대무덤	2
	무덤	무덤	고분군	116
			기타	121
			봉토묘	197
			분구묘	16
			적석묘	8
			지석묘	163
		왕실무덤	고대	39
			고려시대	7
			조선시대	45
			금속광산	2
	산업생산	광업	야금	1
			금용업	5
		근대산업생산	숙박·음식업	0
			전기·수도업	4
			관개시설	9
		농업	저장가공시설	4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요업	기와가마	4
			기타가마	2
			도자기가마	51
			토기가마	11
	유물산포지 유적산포지	제조업	조선소	2
		수중유물	유물매장해역	3
		유적분포지	유적분포지	36
		육상유물산포지	선사유물	42
			역사유물	3
	인물사건	근대사건	근대사건	6
		근대인물	광복운동	6
			문예	1
			사상	2
		역사사건	역사사건	73
		인물기념	사우	288
			생활유적	36
			순절지	23
			탄생지	60
	정치국방	궁궐·관아	관아	86
			궁궐	30
			궁궐터	5
			사고	3
			사우	5
			재단	3
			천문관측	1
		근대정치국방	국방	5
			기타	9
			외교	3
			정치	0
			행정	3
		성	성곽	328
			성곽시설	42
			성지	61
		전적지	기타전적지	2
			동학전적지	5
			임란전적지	5
	종교신앙	개신교	교회	4
			부속건물	4
		구비전승지	구비전승지	5
		민간신앙	기타	6
			마을신앙	77
			무속	2
		민족종교	천도교	3
		불교	각루	32
			기타	56
			당간	46
			당우	22
			문	19
			불전	227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사찰	172
			석등	44
			탑	572
		제사유적	산신당	9
			성황당	10
			제사터	40
		천주교	부속건물	4
			성당	27
	주거생활	근대주거	근대가옥	6
			근대도시	1
		조경건축	누정	261
			원	9
		주거건축	가옥	819
			건물지	13
			마을	8
			주거시설	31
		주거지	주거지	14
합계				5,154

(2) 유물 (총 2,689개)

[표 3-15]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유물)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유물	과학기술	계측교역기술용구	계산용구	1
			도량형	9
		공예기술용구	금속공예용구	1
		놀이유희용구	놀이기구	2
			악기	5
		무기병기류	무기무구류	5
			병장기류	18
		생업기술용구	농경	9
			수렵	1
		선사유물	골각기	0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1
		이동운송기술용구	이동용구	1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	1
		천문지리기구	기상	1
			지리	62
			천문	13
	기타종교공예	유교공예	의례용구	10
	기타종교조각	민간신앙조각	목조	7
			석조	57
		유교조각	유교조각	7
	기타종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7
		유교회화	유교회화	1
	불교공예	공양구	공양구	21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기타	기타	32
		복장품	복장품	7
		사리장치	사리장치	9
		의식법구	의식법구	112
		장엄구	장엄구	16
	불교조각	건칠조	보살상	4
			불상	5
		금속조	보살상	39
			불상	71
		목조	나한상	4
			동자상	3
			명부상	12
			보살상	75
			불상	199
		석조	귀부이수	14
			나한상	6
			대좌	6
			명부상	4
			보살상	69
			불상	497
			천부상	2
		소조	나한상	3
			명부상	10
			보살상	5
			불상	16
	불교회화	패불화	노사나불도	4
			미륵불도	2
			사불회도	2
			삼세불도	2
			삼신불도	7
			석가불도	22
			오불회도	2
		벽화	석벽화	1
			토벽화	10
			판벽화	1
		사경화	사경화	8
		탱화	기타	131
			나한조사도	27
			보살도	75
			불도	206
		판화	판화	1
	생활공예	금속공예	마구	2
			무구	5
			무속구	3
			생활용구	21
			장신구	44
			청동용구	9
		목공예	가구류	8
		복식공예	관모	3
			의복	79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옥석공예	석공예	3	
			옥공예	1	
		지공예	지공예	2	
		칠공예	칠공예	1	
		토도자공예	녹유	2	
			도기	1	
			백자	80	
			분청	32	
			와전	1	
			청자	90	
			토기	12	
		일반조각	능묘조각	기타	7
				석수	1
	석인			5	
	암벽조각		각석	12	
			암각화	13	
	일반회화	근대회화	동양화	1	
		기록화	계회도	31	
			궁궐도	8	
			순절도	2	
			행렬도	4	
		민화	민화	3	
		사군자	란도	1	
			매도	0	
		산수화	산수화	23	
		영모화조화	동물화	1	
			영모화	2	
			초충도	1	
			화조화	5	
		인물화	인물화	5	
			초상화	195	
		풍속화	풍속화	9	
		합계			

(3) 기록유산 (총 1,625개)

[표 3-16]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기록유산)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기록유산	문서류	관부문서	단자류	2
			소지류	5
			소차장계류	1
			시권류	2
			증빙류	10
			첩관통보류	3
			호적류	3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국왕문서	교령류	73	
		근대문서류	근대문서류	2	
		문서류	문서류	78	
		민간문서	기타류	14	
			명문류	5	
			분재기류	10	
			서간통고류	2	
			시문류	1	
			치부기록류	1	
			사찰문서	기문류	12
				기타류	23
		소지류		1	
		치부기록류		1	
		서원향교문서	기타류	1	
			소지류	2	
			좌목	1	
		서각류	근대서각류	근대금석각	1
			금석각류	명문류	1
				비	396
				석각류	6
	지석			4	
	목판각류		판목류	105	
			현판류	8	
	서간류	간독류	간독	6	
		서예	서예	78	
		시고류	시고	5	
		탁본류	탁본	1	
	전적류	목판본	간경도감본	31	
			관판본	62	
			기복도감	1	
			대장도감본	43	
			사간본	43	
			사찰본	213	
			서원본	2	
			왕실본	28	
		전적류	전적류	107	
		필사본	고본	35	
			기타류	4	
			등록류	3	
			사경	54	
			사본류	34	
			일기류	17	
		활자본	금속활자본	69	
			기타활자본류	1	
	목활자본		14		
합계				1,625	

(4) 무형유산 (총 423개)

- 대분류 단계에서 무형문화재와 무형유산을 혼용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분류 1)는 3단계까지만 분류하고 있어 제외함

[표 3-17]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무형유산)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무형유산	공예기술	금속공예	금속공예	22
		도자공예	도기공예	7
			자기공예	7
		목칠공예	목공예	49
			죽공예	6
			칠공예	25
		석공예	석공예	10
		섬유공예	수매듭공예	5
			직물공예	6
			침선공예	5
		지공예	지공예	11
		피모공예	피모공예	8
	음식제조	민가음식	향토술빚기	21
		의례음식	의례음식	3
	전통연행	놀이	대동놀이	9
			세시놀이	22
		무예	맨손무예	1
			무기술	3
		무용	궁중무용	1
			민속무용	25
		연희	탈놀이	2
		음악	궁중음악	1
			민속음악	122
			풍류방음악	4
		의식	공동체의식	19
			국가의식	2
			무속의식	26
			불교의식	1
합계				423

(5) 자연유산 (총 685개)

- 자연유산은 2단계 분류에서 명승/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명승(분류2)은 3단계까지만 분류하고 있어 제외함

[표 3-18]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자연유산)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해당 문화재 개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기념	35
			민속	96
			생활	31
			역사	13
			종교	15
		생물과학기념물	대표성	25
			분류학	4
			분포학	53
			생물상	211
			유전학	13
			진귀성	37
			특수성	9
			지구과학기념물	고생물
		생물		6
		자연현상		1
		지질지형		46
		천연동굴		39
	천연보호구역	문화및자연결합성	경관및과학성	5
			영도적상징성	2
		자연과학성	특수생물상	7
			해양생물상	3
합계				685

(6) 등록문화재

- 1단계 분류 중 등록문화재의 경우, 3단계 분류까지만 구성하고 있으나, 2단계의 분류가 한 가지로 무의미함

[표 3-19]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체계 (등록문화재)

분류 1	분류 2	분류 3
등록문화재	기타	공공용시설
		교육시설
		기타 시설물
		동산
		동산(미술품)
		동산(영화)
		문화집회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인물기념시설
		전쟁관련시설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

3)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기본정보’ 상 분류의 단계별 기준

○ 유적건조물

- 2단계 분류에서 유적지 또는 건조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
- 3단계 분류에서 ‘주거생활’의 경우 주거생활을 구성하는 요소 단위와 시기에 따라, ‘무덤’의 경우 무덤의 주인 및 시기에 따라, ‘정치국방’의 경우 건조물의 용도에 따라, ‘산업생산’의 경우 산업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교통통신’의 경우 건조물의 용도에 따라, ‘종교신앙’의 경우 종교의 종류에 따라, ‘교육문화’와 ‘인물사건’의 경우 시기에 따라, ‘유물분포지, 유적산포지’의 경우 유물 및 유적의 위치에 따라 구분
- 4단계 분류에서는 대체로 건조물의 용도에 따라 세분류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덤’의 경우 그 재료와 형태에 따라, ‘왕실무덤’의 경우 시대에 따라 ‘불교’의 경우 사찰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 따라 구분한 점이 특징적임

○ 유물

- 2단계 분류에서 회화·조각·공예의 배경이 된 종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외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하나의 분류 항목으로 설정
- 3단계 분류에서 ‘과학기술’의 경우 기술의 종류, 유물의 용도에 따라, ‘일반회화’의 경우 그림의 대상 및 내용, 시기에 따라, ‘불교회화’의 경우 회화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 ‘기타종교회화’의 경우 종교의 종류에 따라, ‘일반조각’의 경우 조각의 위치 및 용도, 시기에 따라, ‘불교조각’의 경우 재료에 따라, ‘기타종교조각’의 경우 종교의 종류에 따라, ‘생활공예’의 경우 공예품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불교공예’의 경우 공예품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기타종교공예’의 경우 구분 없음
- 4단계 분류에서는 대체로 세분류 구분 없이 하나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으나, ‘불교공예·조각·회화’의 경우 내용에 담긴 대상(부처/보살/동자/불경 등), ‘생활공예’의 경우 재료, ‘일반회화’의 경우 그림의 대상(인물/동물/식물 등)에 따라 구분

○ 기록유산

- 2단계 분류에서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및 내용에 따라 문서/서각/서간/전적류로 구분

- 3단계 분류에서는 ‘문서류’의 경우 문서 작성의 주체에 따라, ‘서각류’의 경우 시대 및 서각의 재료에 따라, ‘서간류’의 경우 서간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전적류’의 경우 제작 방식에 따라 구분함
- 4단계 분류에서는 각 기록물의 내용, 형태, 작성 주체, 활자의 종류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류

○ 무형유산

- 2단계 분류에서 행위의 종류에 따라 공예기술/음식제조/전통연행으로 구분
- 3단계 분류에서는 ‘공예기술’의 경우 공예품의 재료에 따라, ‘음식제조’의 경우 음식 제조의 주체 및 목적에 따라, ‘전통연행’의 경우 연행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구분
- 4단계 분류에서는 각 유산의 결과물의 형태, 재료, 행위의 목적과 주체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류

○ 자연유산

- 2단계 분류에서 문화재의 지정종목에 따라 명승/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
- 3단계 분류에서는 ‘명승’의 경우 주요 자원의 자연/인공 여부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경우 기념 대상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천연보호구역’의 경우 문화 및 자연결합성/자연과학성으로 구분하나 구분이 모호함 (마라도천 천연보호구역-문화및자연결합성 / 차귀도천연보호구역-자연과학성)
- 4단계 분류에서는 대체로 기념의 주요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유산의 기념할만한 가치는 복합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류가 모호하며(원성 대안리 느티나무-생활 /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민속 /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기념), 이외에 ‘지구과학기념물’의 경우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 2단계 분류에서 ‘기타’ 이외에 분류 항목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
- 3단계 분류에서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시설)에 따라 구분하며 이 외에 동산인 경우 동산 일반, 미술품, 영화로 구분
- 4단계 분류는 없음

3.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현황

1) 국립무형유산원의 분류체계

-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문화재청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단일 종목이 복수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의 경우, 문화재청의 분류와 동일하게 ‘전통 공연·예술 - 음악’에 해당되는 동시에, ‘사회적 의식 - 그 밖의 의식·의례’에 해당되기도 함
- 범주화의 복합적인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문화재청의 분류에 더해 추가적인 분류 구성을 하는 경우 확인됨
 - 국가무형문화재 136개(국립무형유산원에 분류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해녀’ 제외) 중 52개 문화재의 경우 복수의 범주에 속함
 - 문화재의 속성을 단일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3-20]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문화재 분류 현황 비교

번호	명칭	문화재청 분류	국립무형유산원 분류	비교
제1호	종묘제례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추가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3호	남사당놀이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추가
제4호	갯일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5호	판소리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6호	통영오광대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7호	고성오광대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8호	강강술래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9호	은산별신제	무형문화재/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동일
제10호	나전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11-2호	평택농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번호	명칭	문화재청 분류	국립무형유산원 분류	비고
제11-3호	이리농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11-4호	강릉농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11-6호	구례진수농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12호	진주검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추가
제13호	강릉단오제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축제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축제 전통적 공연예술/연회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추가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회	전통적 공연예술/연회	동일
제16호	거문고산조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17호	봉산탈춤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회	전통적 공연예술/연회	동일
제18호	동래야류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회	전통적 공연예술/연회	동일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20호	대금정악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21호	승전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동일
제22호	매듭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23호	가야금산조및 병창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24호	안동차전놀이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동일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동일
제27호	승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동일
제28호	나주의셋글나이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29호	서도소리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30호	가곡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31호	낙죽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32호	곡성의돌살나이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34호	강령탈춤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회	전통적 공연예술/연회	동일
제35호	조각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번호	명칭	문화재청 분류	국립무형유산원 분류	비고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무형문화재/전통 생활관습/식생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동일
제39호	처용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동일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동일
제41호	가사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42호	악기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43호	수영아류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축제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축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45호	대금산조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47호	궁시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48호	단청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50호	영산재	무형문화재/의례·의식/종교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종교의례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추가
제51호	남도들노래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53호	채상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55호	소목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56호	종묘제례	무형문화재/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동일
제57호	경기민요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58호	줄타기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기예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기예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추가
제60호	장도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61호	은율탈춤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62호	좌수영아방놀이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64호	두석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65호	백동연죽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66호	망건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67호	탕건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추가

번호	명칭	문화재청 분류	국립무형유산원 분류	비고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추가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72호	진도씻김굿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73호	가산오광대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74호	대목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건축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건축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주생활	추가
제75호	가지시줄다리 기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동일
제76호	택견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무예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무예	동일
제77호	유기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78호	입사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79호	발탈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동일
제80호	자수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연희	전통적 공연예술/연희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일생의례	추가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2-2호	서해안배연신 굿맞대동굿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2-3호	위도띠뽀놀이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동일
제84-1호	고성농요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5호	석전대제	무형문화재/의례·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86-1호	문배주	무형문화재/전통 생활관습/식생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동일
제86-2호	면천두견주	무형문화재/전통 생활관습/식생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동일
제86-3호	경주교동법주	무형문화재/전통 생활관습/식생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동일

번호	명칭	문화재청 분류	국립무형유산원 분류	비고
제87호	명주짜기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88호	바디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추가
제89호	침선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90호	황해도평산소 놀이굿	무형문화재/의례 · 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추가
제91호	제외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건축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건축	동일
제92호	태평무	무형문화재/전통 공연 · 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동일
제93호	전통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95호	제주민요	무형문화재/전통 공연 · 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96호	옹기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추가
제97호	살풀이춤	무형문화재/전통 공연 · 예술/춤	전통적 공연예술/춤	동일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무형문화재/의례 · 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99호	소반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추가
제100호	옥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01호	금속활자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02호	배첩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103호	완초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04호	서울새남굿	무형문화재/의례 · 의식/민간신앙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민간신앙의례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105호	사기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06호	각자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107호	누비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108호	목조각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109호	화각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10호	윤도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그 밖의 전통지식	추가
제111호	사직대제	무형문화재/의례 · 의식/그 밖의 의식 · 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그 밖의 의식 · 의례	동일
제112호	주철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13호	철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그 밖의 전통지식	추가

번호	명칭	문화재청 분류	국립무형유산원 분류	비고
제114호	염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15호	염색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116호	화혜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117호	한지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18호	불화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미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미술	동일
제119호	금박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의생활	추가
제120호	석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21호	번와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건축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건축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주생활	추가
제122호	연등회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축제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축제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그 밖의 의식·의례	추가
제123호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축제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축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절기풍속	추가
제124호	궁중채화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25호	삼화사 수륙제	무형문화재/의례·의식/종교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종교의례	동일
제126호	진관사 수륙제	무형문화재/의례·의식/종교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종교의례	동일
제127호	아랫녘 수륙제	무형문화재/의례·의식/종교의례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종교의례	동일
제128호	선자장	무형문화재/전통기술/공예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공예	동일
제129호	아리랑	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음악	전통적 공연예술/음악 구전전통 및 표현/구비전승	추가
제130호	제다	무형문화재/전통 생활관습/식생활	의식주 및 전통적 생활 관습/식생활	동일
제131호	씨름	무형문화재/전통 놀이·무예/놀이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놀이	동일
제132호	해녀	무형문화재/전통지식/생산지식	-	-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분류체계

- 문화재청에 소속된 국립 기관으로, 우리나라 바다의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활동
- 수중문화재를 ‘바다, 하천, 강, 호수 등 수중에 남겨진 인류의 흔적 중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 라 정의
- 침몰한 고선박, 선박에 실려 있던 선적물과 선상생활용품, 물 아래 잠긴 도시나 항구 등이 대표적이라 명시
-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보존 활동의 대상은 수중발굴 난파선, 수침고목재, 금속

유물, 도자기이며, 연구소의 소장품은 지정문화재, 난파선, 난파선 문화재, 해양민속품, 전통 선박으로 구분

- 명확한 세분류 방식은 발견되지 않지만, [그림 3-7]과 같이 발굴문화재의 성격을 선박, 금제장신구류, 청자, 백자, 선원생활용품 등으로 적고 있음

연번	발굴유적	발굴연도	발굴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신안선 발굴	1976~84	문화재관리국, 해군합동	14C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ton, 도자기 등 22,000여점
2	제주 신창리	1980, 1983, 1996	문화재관리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C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3	태안반도	1981~87	문화재청관리국, 해군합동	고려청자 40여점, 조선백자 등 14~17C 유물
4	완도 어두리 안도선	1983~84	문화재관리국	12C 고려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5	진도 벽파리 진도선	1991~9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C 중국 통나무배 1척
6	무안 도리포	1995~9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C 고려상감청자 638점
7	목포 달리도선	199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C 고려선박 1척
8	군산 비안도	2002~0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C 고려청자 등 2,939점
9	군산 십이통파도선	2003~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보령 원산도	2004~0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C 청자향로편 등
11	신안 안좌도선	200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C 고려선박 1척, 상감청자 등 4 점
12	군산 야미도	2006~09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청자 4,547 점
13	안산 대부도선	20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C 선체편 일괄수습
14	태안 태안선	2007~0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5,043 점
15	태안 마도1호선(1,2차)	2008~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4.6 명칭변경)	13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40 점
16	태안 마도2호선(3차)	2009~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74 점
17	태안 원안해수욕장 해역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13C 고려청자 531 점
18	태안 마도3호선(4차)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C 고려청자 등 336 점
19	태안 마도해역(5차)	2011~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667 점
20	인천 영흥도선	2010, 2012~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23 점
21	진도명량대첩로해역(1~3차)	2012~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총통 등 589점
22	태안 마도해역(6차)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백자 등 289점
23	태안 마도4호선(7차)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C 조운선, 분청사기 등 400점
24	안산 대부도2호선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6점
25	진도명량대첩로해역(4차)	201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71점(조사중)

[그림 3-7] 한국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연표

자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200

3) 천연기념물센터의 분류체계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내의 천연기념물센터로 개관한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
- 센터 내 전시 구성으로 생물/무생물, 서식지별, 지정종별 등으로 세분

[표 3-21] 천연기념물센터의 전시 구성

전시 구분	전시 대상	구분 기준
우리마을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희귀식물, 진돗개, 삽살개 등	- 생물(동·식물)의 서식지별
숲속의 천연기념물	호랑이, 참매 등	
습지/들판/강바다의 천연기념물	독수리, 풀벌레, 노랑부리저어새 등	
지질, 광물 천연기념물	화석, 광물, 암석, 동굴 등	- 무생물
독도 천연보호구역	독도와 그 안의 동·식물, 해양 생물 등	- 공간적 구분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제주도와 그 안의 동·식물 등	
명승, 천연보호구역	전국의 명승과 천연보호구역	- 지정종별

자료: 천연기념물센터 홈페이지

4) 목간연구센터의 분류체계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내에 설립된 목간연구센터
- 홈페이지 상에 목간의 기원, 사용배경, 종류 등 명시하고 있음
 - 목간의 종류에 대해 중국의 분류 기준으로 설명
- 목간의 종류를 구분 짓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개념별 설명에 따르면 대체로 목간의 모양 또는 형태, 용도, 내용 등으로 구분

[표 3-22] 목간의 종류

구분	설명
簡(간)	엄밀한 의미에서 글이 기록된 대나무 조각인 죽찰(竹札) 또는 죽첩(竹牒)으로서 일반적으로 죽간(竹簡)을 가리키고, 이와 유사한 형태와 크기를 취하면서 대나무가 아닌 일반 나무 조각에 글을 기록한 것을 목간(木簡)으로 칭한다.
牘(독)	일반적 죽목간(竹木簡)에 비해 폭이 약간 더 넓은 것으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서판(書版)」으로 풀이하듯이 글을 쓰는 나무판이다. 길이는 일반 죽목간과 유사하지만 폭이 더 넓으며, 끈으로 엮지 않고 독(牘)의 상단부에 구멍을 뚫어 끈을 끼워 사용하거나 아예 구멍이 없는 경우도 있다.
簡(고)	다각형의 나무토막 형태로서 3-4면 드물게는 7-8면까지 단면을 내어 글을 쓰도록 하였다. 많아야 두 면까지 쓸 수 있는 일반 목간에 비해 훨씬 많은 글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고(敍)는 비교적 특수한 용도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檢(검)	주로 관청에서 문서나 물건을 우송하는데 사용되는 목독(木牘)의 한 형태로서 용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일명 서검(書檢)으로서 주로 관청에서 문서나 서신을 우송할 상대방 관청의 이름과 주소 및 전달 방식 등을 기록하는 목독으로서 문서 꾸러미의 제일 겉면에 부착하였다. 둘째는 기밀을 요하는 문서 꾸러미나 물건을 우송하는 데 쓰이는 일명 봉검(封檢)으로서, 내용물의 외부 노출 또는 타인이 내용물을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楊(갈)	오늘날 화물의 꼬리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발굴된 하찰간(荷札簡) 또는 부찰간(付札簡)과 흡사한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둥그스름하게 깎은 상단부에 먹(墨)으로 검게 칠하거나 거품문양의 빚금이 쳐져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갈(楊)의 윗면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또는 두개씩 뚫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형태의 갈(楊)은 상단부 또는 하단부를 삼각형 또는 반원형 모양으로 깎고, 바로 아래 부분의 양 측면을 요(凹)자형 또는 삼각형의 홈을 낸 형태로서 이 역시 각종 물품을 담은 상자 또는 바구니에 갈을 꽂아두거나 끈으로 묶어 두기 위한 것이다.

符(부)	사신이나 여행자가 관소(關所)를 통과하거나 관청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표의 일종으로서 원칙상 대나무로 제작되었으나[竹符] 일반 나무로 제작된 것[木符]도 있다.
券(권)	符(부)와 유사한 형태와 용도로 사용되었고, ‘약속을 단단히 묶는다’는 의미로서, 증명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였다.
符(별)	符(부)와 유사한 형태와 용도로 사용되었고, 목판의 중앙에 큰 글자를 기재한 후 글자의 중간 부분을 관통하도록 목판을 양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 역시 넓게는 符(부)와 券(권)과 마찬가지로 내용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枯(폐)	죽목간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이다.
槧(참)	글자가 기록되지 않은 백지 상태의 목간이다.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홈페이지

5) 국립 박물관의 분류체계

-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6c)에 수록된 문화기반 시설 중 주요 국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분류 현황 조사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소장품의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시를 위한 유물의 분류에 해당

[표 3-23] 전국 국립박물관 목록

시도	시군구	기관명	소장자료	홈페이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금속, 토도, 서화탁본 등	http://www.museum.go.kr/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전적류, 고문서류, 서화류, 민속품 등	www.hangeul.go.kr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유물	www.gogung.go.kr
	중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공연예술자료	http://www.museum.ntok.go.kr
	강남구	관세박물관	관인, 상징기념 등	www.customs.go.kr/seoul/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품 등	http://www.nfm.go.kr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	한국경찰관련유물	www.policemuseum.go.kr
	서초구	국악박물관	고고, 민속품 등	www.gugak.go.kr
	서초구	외교사 전시실	조약문서, 외교용품 등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종로구	우정총국/휴관 (체신기념관)	승정원 일기 등 우정사료(복제품)	http://www.koreapost.go.kr/ujeongcho ngguk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자료 등	http://www.much.go.kr/
	노원구	육군박물관	군사유물	http://museum.kma.ac.kr

시도	시군구	기관명	소장자료	홈페이지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서책, 회화류 등	http://sejong.cha.go.kr
	수원시	지도박물관	고지도 류	http://www.ngii.go.kr/map
	고양시	국립여성사전시관	근현대 생활용품 등	http://eherstory.mogef.go.kr
	포천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고문서, 민속품, 산림관련자료 등	http://www.kna.go.kr/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고고, 고미술, 민속 등	http://chuncheon.museum.go.kr/html/kr
	춘천시	강원경찰박물관	고문서 및 경찰장비류 등	http://www.gwpolice.go.kr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고고, 민속품 등	www.nmm.go.kr
광주	북구	국립광주박물관	고고, 미술품 등	www.gwangju.museum.go.kr
대구	수성구	국립대구박물관	고고, 민속품 등	daegu.museum.go.kr/
세종		조세박물관	고문서, 국세청자료 등	www.nts.go.kr/museum
충북	청주시	국립청주박물관	고고, 역사자료 등	cheongju.museum.go.kr
	청주시	공군박물관	항공기 등	www.afa.ac.kr/museum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고고, 미술품 등	http://gongju.museum.go.kr/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고고, 미술품 등	http://buyeo.museum.go.kr/
	금산군	칠백의충관리소(기념관)	기록화, 고문서 등	http://700.cha.go.kr
	아산시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고문서, 무기 등	http://hcs.cha.go.kr/
	천안시	우정박물관	우정(체신)사업 관련	www.postmuseum.go.kr
전북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고고, 민속품 등	http://jeonju.museum.go.kr
	익산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고고, 민속품 등	www.mireuksaji.org
	무주군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문헌, 영상 등	www.tkdwon.kr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박물관	고고, 미술품 등	http://naju.museum.go.kr/
	목포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고, 공예유물 등	www.seamuse.go.kr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고고, 미술품 등	gyeongju.museum.go.kr
	포항시	국립등대박물관	금속, 지류, 목재류 등	http://www.lighthouse-museum.or.kr/
경남	김해시	국립김해박물관	고고품 등	www.gimhae.museum.go.kr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고고, 서화, 고문서 등	http://jinju.museum.go.kr/html/kr/
	진주시	남부산림과학관	표본(나무, 곤충)	
제주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	고고, 역사품 등	http://jeju.museum.go.kr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c: 224-571 재구성

(1)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소장품-주요 소장품 검색에서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 제공
- 대분류 단계에서 국적/시대, 재질, 용도/기능, 모양/장식, 출토지, 소장처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체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 유물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립 박물관 등에서 대체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체계를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따르고 있음

[표 3-24]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적/시대	한국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고려말,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 광복이후
	중국	구석기, 신석기, 상, 서주, 춘추, 전국, 진, 전한, 신, 후한, 삼국, 동진, 남진, 남북조, 수, 당, 오대, 송, 원, 명, 청, 근현대
	일본	조몬, 아즈카, 하쿠호,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모모야마, 에도, 근현대
	아시아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탄, 몽골, 베트남, 기타
	중동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예멘, 카타르, 기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 니제르, 베냉, 차드, 카메룬, 콩고, 부르키나파,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가봉, 세네갈, 르완다, 우간다, 자이르, 토고, 중앙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케냐, 라이베리아, 감비아,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모리셔스, 세이셸, 가나, 지부티, 기니, 코모로,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기니비소, 소말리아, 상투메프린,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잠비아, 말리, 부룬디, 앙골라,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기타
	유럽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터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 몰타, 핀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키르기즈, 투르크메니,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슬로베니아, 그루지야,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 보스니아, 사이프러스, 마케도니아,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기타
	아메리카	미국, 브라질, 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칠레,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아이티, 파나마, 에콰도르, 자메이카, 과테말라, 카나다, 페루,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그레나다, 수리남, 바베이도스,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 세인트빈센, 안티구아바, 세인트킷츠, 바하마, 트리니다드, 벨리제, 쿠바, 기타
	기타	기타
재질	금속	금제, 은제, 금동제, 동합금제, 철제, 복합금속, 주석, 기타
	토제	연질, 와제, 경질, 소조
	도자기	청자, 분청, 백자, 흑유, 연유, 청백자, 백탁유, 잡유, 갈유, 삼채
	석	화강암, 섬록암, 안산암, 현무암, 응회암, 사암, 혈암, 점판암, 석회암, 편마암, 대리석, 기타
	유리/보석	유리, 수정, 마노, 호박, 비취, 천하석, 밀화, 옥, 진주, 산호, 금파, 기타
	초제	초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가죽나무, 감나무, 개오동나무, 갯버들, 고로쇠나무, 고리버들, 고욤나무, 굴피나무, 꿩나무, 꾸지뽕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대추나무, 매죽나무, 모과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붉가시나무, 분비나무, 비자나무, 뽕나무, 소나무, 싸리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잎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참나무, 참죽나무, 팽나무, 피나무, 향나무, 호도나무, 회양목, 자단목, 기타
	골각패갑	인골, 수골, 조골, 어골, 수각, 상아, 패각, 대모, 나전, 화각, 알껍질, 기타
	지	저지, 마지, 고정지, 상지, 면지, 죽지, 안피지, 삼아지, 양지, 기타
	피모	호피, 양피, 우피, 어피, 양모, 황모, 저모, 말총, 인모, 기타
	사직	견, 마, 면, 저, 모직, 합성섬유, 기타
	종자	곡물, 과실, 기타
	기타	합성고무, 합성수지, 기타
용도/기능	의	관모, 의류, 대/구, 신발, 장신구, 관/복합, 관련도서, 기타
	식	음식기, 취사, 가공, 관련도서, 기타
	주	건축물, 건축부재, 생활용품, 기타
	산업/생업	선사생활, 농업, 어업, 임업, 축산, 양잠봉, 광업, 수렵, 공업, 상업, 관련도서, 기타
	교통/통신	교통운송, 마구, 수레부속구, 통신, 관련도서, 기타
	과학기술	천문, 지리, 의료, 인쇄, 인장, 판류, 기타
	사회생활	의례생활, 사회제도, 기념, 의전, 기타
	종교신앙	불교, 유교, 민간신앙, 기독교, 기타
	문화예술	문헌, 음악, 서화, 조각, 공예, 무용/극, 놀이, 기타
	군사	군력무기, 화약무기, 장비, 복식, 포식제식, 기치, 문서/서적, 기타
	기타	자료, 모형, 용도불명, 기타도서, 기타
문양/장식	인물문	인물문, 인면문, 신체문, 신선문, 비천문, 동자문, 불/보살문, 신장문, 귀문, 기타
	동물문	도철문, 용문, 용호문, 용봉문, 기린문, 봉황문, 주작문, 현무문, 사신문, 사자문, 공작문, 해사문, 가룡빈가문, 상문, 서문, 우문, 호문, 토문, 마문, 양문, 원문, 견문, 저문, 녹문, 편복문, 앵무문, 원앙문, 학문, 작문, 계문, 안문, 압문, 안압문, 어문, 사문, 와문, 구문, 어허문, 호접문, 봉문, 선문, 십이지문, 오문, 경문, 해태문, 수금문, 잉어문, 조문, 기타
	식물문	인동문, 보상화문, 연화문, 마염문, 쉼수문, 송문, 죽문, 매화문, 국화문, 난초문, 수목문, 양류문, 포도문, 석류문, 노화문, 모란문, 모란절지문, 초화문, 포류문, 화훼문, 파초문, 하엽문, 연판문, 이화문, 도리문, 당초문, 인동당초문, 보상당초문, 포도당초문, 연당초문, 모란당초문, 국당초문, 엽맥문, 여지문, 영지문, 초문, 초화당초문, 화문, 화판문, 연화절지문, 국화절지문, 국판문, 도문, 삼엽문, 추계문, 매죽문, 사군자문, 율문, 불수감문, 도류불수문, 엽문, 죽절문, 기타
	기하문	횡선문, 종선문, 사선문, 단사선문, 집선문, 사선문대, 유충문, 점열문, 공열문, 조문, 어골문, 능형문, 삼각형문, 사각형문, 거치문, 뇌문, 원문, 반원문, 동심원문, 쉼수문, 파문, 파상문, 구갑문, 용기문, 주름문, 꺾쇠문, 태극문, 점문, 공문, 팔괘문, 십자문, 그물문, 외문, 태사문, 귀목문, 기타교통운송, 마구, 수레부속구, 통신, 관련도서, 기타
	물상문	칠보문, 연환문, 연주문, 여의두문, 영락문, 연리문, 승석문, 화염문, 격자문, 포목문, 유두문, 기타
	복합문	십장생문, 포도동자문, 운룡문, 운학문, 포류수금문, 위로수금문, 연당초봉황문, 화조문, 화접문, 매조문, 영지운문, 해수포도문, 석죽문, 산수인물문, 운봉문, 초충문, 송호문, 파어문, 어로문, 연지수금문, 기타
	산수문	일문, 월문, 운문, 운무문, 우점문, 산경문, 산수문, 석문, 성운문, 성좌문, 기타
	문자문	수자문, 복자문, 수복자문, 강녕자문, 수복강녕자, 덕자문, 녹자문, 만자문, 아자문, 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남다자자, 회/회자문, 만수무강문, 수복다남자, 범자문, 부귀문, 만수무강, 연년익수, 기타
	기타문	
출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 강화군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군,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군,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 송탄시, 성남시, 광주군,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개성북근일문, 월문, 운문, 운무문, 우점문, 산경문, 산수문, 석문, 성운문, 성좌문, 기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양산군, 밀양시, 마산시, 창원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군, 삼천포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울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성주군, 울릉군
	전라남도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제주도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 천안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당진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소장구분	국립1	중앙, 경주, 부여, 공주, 광주, 진주, 청주, 전주, 대구, 김해
	국립2	민속, 이충무공, 채신, 우정, 현대, 산림, 철도, 서울과학, 중앙과학, 진주산림, 궁중유물, 외교, 해양유물, 국악, 경주문화원, 부여문화원, 창원문화원, 문화재연구
	공립	인천시립, 옥진각, 밀양시립, 오죽헌, 부산시립, 충익사, 담양죽물, 군위송덕, 목포향토, 제주민자, 충주, 경기도립, 광주민속, 거창, 강화역사, 몽촌역사, 대전향토, 청주 고인쇄, 안동민속, 나주배, 강릉시립, 한밭교육, 김포덕포, 의령, 전남농업, 서울시립, 제주교육, 창덕궁, 미륵사유물, 부산시복천, 서울교육사, 문경새재박, 강진청자, 삼척시립, 동해시, 경북고령, 청와대, 국사편찬, 양구선사, 가평군청
	법인/사립	부봉, 간송, 제주민속, 절두산순교, 에밀레, 윤고산유물, 안중근의사, 부원, 세종대왕, 한독의약, 성암고서, 강원향토, 한국미술관, 온양민속, 서산대사, 충렬사유물, 금정민속, 한국자수, 태평양, 대가야유물, 행주대첩, 모충관, 서울미술관, 태정민속, 호암, 모택사유물, 한국순교자, 호림, 조흥은행, 선교장민속, 동진수리민, 제암순국, 영일민속, 암사동선사, 위커힐, 항공전시관, 장기갑등대, 청풍문화재, 풀무원김치, 한전자료관, 천일민속, 제주신천지, 독립기념관, 통도사성보, 농업, 제천향토, 마사, 화폐, 제일은행, 윤봉길의사, 롯데민속, 효행기념관, 기독교순교, 남진, 건들바우, 법주사유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란, 해강도자, 한국은행, 삼성출판, 한국스키, 중문민속, 거제, 사명대사, 월전, 선재, 사경유물, 대관령, 송암, 환기, 참소리축음, 한국잡지, 문신, 짚풀생활사, 옹기민속, 전쟁기념관, 목아불교, 한국가구, 한원, 홍산, 한국통신, 한국불교, 한국현대의, 목암, 토탈아외, 중남미, 소전, 서봉의약, 삼성어린이, 신세계상업, 한국민속촌, 성읍민속, 운향, 피어리스, 전통공예, 경주무속, 보령석탄, 동방유기, 방송사, 문화재보호, 영남매장문, 토지박물관, 기전문, 경북문화원, 중원문화원, 예술의전당, 도로공사, 서울디자인
	학교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전남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전국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성신여대, 홍익대, 제주대, 단국대중앙, 숭실대, 원광대, 충남대, 청주대, 이대자연사, 공주대, 충북대, 덕성여대, 경성대, 숙명여대, 관동대, 서강대, 국민대, 강릉대, 전주교대, 공주교대, 세종대, 대구교대, 해사, 경남대, 대구효성기독교대, 동덕여대, 계명대, 경희대자연, 한양대, 강원대, 명지대, 안동대, 청주산업대, 청주교대, 단대석주선대, 목포대, 인하대, 조선대, 한남대, 동신실전, 경주동국대, 한남대자연, 장로회신학, 부산여전, 경기대, 경상대, 서울시립대, 전주대, 부경대, 군산대, 충주공전, 대전대, 신라대, 육군사관, 공군사관, 수원대, 창원대, 동의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순천대, 한림대, 진주산업대, 영남대, 조선대미술, 한신대, 한성대, 아주대, 대구대, 서원대, 경산대, 인제대, 울산대, 한국외국어, 상명대, 대전보건, 선문대, 배재대, 경주대
	기타	개인수장가
	외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지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기타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2)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의 ‘소장품검색’에서 복수의 분류 단계 없이 하나의 단계로 구성

[표 3-25]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검색’상 분류체계

분류 구분
회화, 서예, 악기, 어보, 어책, 현판, 제구, 금속공예, 의상, 장신구, 고문서, 전적, 조각, 가구, 도자기, 무구, 노부, 과학기기, 피지초직, 기탁, 구입, 기타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 소장품 관리는 「유물취급규정」에 따라 재질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적고 있으나⁴³⁾, 규정의 내용과 분류가 동일하지는 않음

[표 3-26]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상 분류체계

분류 구분
회화류, 서예류, 악기류, 어보류, 어책류, 현판류, 제구류, 의상류, 장신구류, 고문서류, 전적류, 조각류, 가구류, 도자류, 토기류, 무구류, 노부류, 과학기기류, 피지초직류, 금속공예류, 기타류, 국가귀속유물, 구입유물, 기탁유물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2016: 107 재구성

43) 『국립고궁박물관 연보 제5호 2014-2015』, 국립고궁박물관, 2016, p.106.

- 박물관내 수장고는 18개실로 소장품의 재질별로 분류 및 운영하고 있음

[표 3-27]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재질별 보존환경 기준

구분	항목	온도(℃)	상대습도(RH%)
수장공간	금속(철기)류	20±4	45이하
	금속(비철금속)류	20±4	45이하
	도·토기, 토제류	20±4	45이하
	석재, 유리, 옥류	20±4	45이하
	서화·전적류	20±4	50-60
	직물류	20±4	50-60
	목기류, 골각류	20±4	50-60
	철기류	20±4	55-65
	흑백필름	15이하	30-50
	컬러필름	2이하	30-50
	인화지	상온	30-50
전시공간	금속, 도·토기, 석재, 유리, 옥류	20±4	40-60
	목기, 철기, 골각류	20±4	50-60
	서화, 전적, 직물류	20±4	50-60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2016: 108 재구성

[표 3-28]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별 보존환경 현황

구분	유물내용	온도(℃)	상대습도(RH%)
제1수장고	지류	20±4	50-60
제2수장고	지류(회화 및 전적)	20±4	50-60
제3수장고	목제·피지초직류	20±4	50-60
제4수장고	목제·섬유류	20±4	50-60
제5수장고	노부류	20±4	50-60
제6수장고	목재류	20±4	50-60
제7수장고	도·토기류	20±4	40-50
제8수장고	도자기류	20±4	40-50
제9수장고	금속류(제기)	20±4	40-50
제10수장고	금속 및 옥석류	20±4	50-60
제11수장고	목제류(현판, 노부)	20±4	50-60
제12수장고	목제류(가구)	20±4	50-60
제13수장고	목제류(가구)	20±4	50-60
제14수장고	목제류(악기)	20±4	50-60
제15수장고	금속류	20±4	50-60
제16수장고	섬유류	20±4	50-60
제17수장고	석제류	20±4	45이하
제18수장고	마차 등	20±4	50-60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2016: 108 재구성

(3)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자료이용의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에서 공연예술자료에 대한 분류 및 내용 제공

- 대분류 단계에서 크게 분류유형(공연예술의 성격)/자료유형/공연단체로 구분

[표 3-29]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분류 구분	분류 1	분류 2
분류유형(성격)	연극	일반연극
		인형극
		퍼포먼스
		서커스
		마임
		아동극
		대중쇼
		기타
	연희	전통연희
		세계연희
		창작연희
	무용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세계무용
		기타
		대중무용
	음악	서양음악
		한국음악
		음악극
		세계민속음악
		기타
		대중음악
	공연일반	융합장르
		종합공연
		기타
	무대일반	무대기술
		무대미술
	기타	교육
		축제
		행사
		전시
		기타
		연구
자료유형	영상	HDCAM
		BETACAM

분류 구분	분류 1	분류 2
		DVCAM
		DVCAM
		UMATIC
		VHS
		DVD
		VOD
		8mm
		디지털파일
		기타
	음향	
	이미지	사진
		필름
		그림
		기타
	복합	포스터
		프로그램
		전단지
		기타
	디자인	
	서지	
	물품	공연물품
		개인물품
		기타
	기타	기타
공연단체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교향악단	
	국립현대무용단	
	기타	

자료: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4)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 국악유물과 악기를 전시한 국악 전문 박물관이며, 복수의 분류 단계 없이 다 음과 같이 각 실 구분

[표 3-30] 국악박물관의 전시 구성

분류 항목
궁중음악실, 원류음악실, 서민음악실, 선비음악실, 세종음악실, 궁중음악인실, 근현대음악실, 입체영상실, 기획전시, 악기연구전시
자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5) 외교부 외교사료관 온라인 전시

- 19세기말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문서와 영상물 등 외교사료를 전시
- 온라인 전시는 크게 시대별·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3-31] 외교부 외교사료관의 온라인 전시 구성

분류 구분	분류 항목
시대별	1876~1945 : 근대외교의 성립과 민족수난
	1945~1960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란기 안보외교
	1960~1980 : 냉전기 한국의 생존번영외교
	1980~ : 한반도 평화정착외교
	Memorial Hall(기념품, 훈장 등)
유형별	조약
	문서
	서신
	책자
	신분증
	훈장
	사진
	신임장
	기념품
	외교용품

자료: 외교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계기·사건 관련 자료들 수집·보존·전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소장자료의 ‘소장자료 검색’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를 시대 순으로 구분

[표 3-3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소장품 분류

분류 항목
개항~대한제국(1910), 일제강점기(1910~1945), 광복~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연도미상
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6) 기타 박물관 및 온라인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아카이브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38,000여장을 디지털 스캔하여 제공하는 아카이브
- 분류체계를 분야와 지역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공

[표 3-33]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분류 구분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분야별	고고	선사	유적	주거, 무덤, 패총, 유물산포지, 기타
			유물	토제, 석, 골각패갑, 금속, 나무, 기타
		부여/삼한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사당), 성곽, 패총 및 유물산포지, 기타
			유물	토제, 석,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낙랑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 성곽, 패총 및 유물산포지, 기타
			유물	토제, 석,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고구려/발해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사당), 성곽, 사지, 기타
			유물	토제·도자기, 석기,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백제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사당), 성곽, 사지, 기타
			유물	토제·도자기, 석기,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가야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사당), 성곽, 사지, 기타
			유물	토제, 석,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신라/통일신라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사당), 성곽, 사지, 기타
			유물	토제·도자기, 석기,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기타	유적	생산 및 주거, 무덤 및 제사(사당), 성곽, 사지, 기타
			유물	토제·도자기, 석기, 골각패갑, 금속, 유리/보석, 나무, 기타
	미술	회화	일반	기록화, 산수화, 영모·화훼·화조화, 인물화, 일본회화, 풍속화, 기타
			불교	
		조각	일반	석수, 석인, 소조상, 장승, 기타
			불교	불상, 보살상, 천부상, 기타

분류 구분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공예	일반	가구, 군사용구, 기명, 동경, 문방구, 생활용구, 의례용구, 장신구, 기타	
			불교	경상, 경패, 금강저·금강령, 금고, 범종, 불감, 사리장엄구, 소탑, 정병, 철화, 향로, 기타	
		도자	청자		
			백자		
			분청사기		
			중국도자		
			기타		
		건축	건물	일반건축	객사·관아, 궁궐, 궁지, 근대건축, 누정, 비각, 주택, 학교, 기타
				종교건축	사우·사묘, 사찰, 사지
			능묘	신라왕릉	
	고려왕릉				
	조선왕릉				
	기타왕릉				
	일반무덤				
	성곽		성·성지		
			성문·성문지		
			성벽		
			성내시설		
	석조건축물		일반	석교, 석빙고, 천문·지리기구, 기타	
			불교	당간지주, 석등, 석비, 석조, 석탑, 승탑, 전탑, 기타	
	기타		건축부재		
			기타		
	문자자료		문서류	고문서	국왕·관부문서, 민간문서, 사찰문서, 탑본, 기타
				근대문서	도서자료, 지도·도면, 기타
		서각류	금석각류	묘지석, 석각, 석비, 기타	
			목판각류	경판, 기타	
	인류·민속	인물	체격측정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인물·기념사진		
		자연	식물		
			동물		
			경관		
		풍속			
		기타			
		기타	사료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박물관사				
	아시아자료				
	기타				
지역별	(괄호 안은 하위분류 항목인 지역의 개수) 강원도(24), 경기도(24), 경상남도(20), 경상북도(25), 광주광역시(2), 대구광역시(8), 대전광역시(2), 부산광역시(9), 서울특별시(16), 울산광역시(2), 인천광역시(5), 전라남도(24), 전라북도(13), 제주도(4), 충청남도(16), 충청북도(13), 평안남도(16), 평안북도(16), 함경남도(17), 함경북도(15), 황해도(18)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아카이브 홈페이지

-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보관한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아카이브

[표 3-34]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분류 1	분류 2
기부	기부원
	평가서
	행정문서
	포상
진열	물품청구서
	구입품목록대장
	송부서
	진열품목록
구입	평가서
	행정문서
	청구서
	지출결의서
발견	평가서
	발견물보고
	청구서
	지출결의서
지정	고적용지 조사
	자문안
	지정대장
	지정 통지
고적조사	고적조사위원회
	복명서
	조사보고
	고적·유물 목록
	사진·도면
보존	공사비 청원
	수리계획서
	준공 보고
	도면
국유림	지적 대장
	국유임야 양여원
	보존 예정 국유림 조사 문서
	보존 해제 신청 문서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 홈페이지

- (3) 서울특별시 서울사진아카이브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950~1980년대 서울의 사진 아카이브
 - 분류체계를 시기와 주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공

[표 3-35] 서울특별시 사진아카이브의 분류체계

분류 구분	분류 1	분류 2
시기 분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주제 분류	경제	경제 일자리
	교통·건설	교통 건설
	문화·체육	문화 체육
	보건·복지	보건 복지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여성·가족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환경 공원녹지 치수
	정치/외교	집회시위 선거 외교
	일반행정	시장일반 행정사무 시의회 기념식 기타행정
	전경·인물·기타	전경 인물 기타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사진아카이브 홈페이지

(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목록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목록을 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음
 - 유물번호, 분야, 명칭, 시대, 수량을 기록
- 복수의 분류 단계 없이 하나의 단계로 구성

[표 3-36]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

분류 항목
전적류, 근대문물, 서화류, 고문서류, 고지도, 근대지도, 화폐류, 민속품, 가구류, 복식류, 도량형기, 무구류, 토기류, 도토류, 과학사, 금속공예, 와질류, 외국지도, 공예류, 근대문물(기념물), 근대문물(올림픽), 근대문물(카메라), 근대문물(서적), 근대, 고문서, 서화류(백운문), 서화류(기), 서화류(지석영), 서화류(필), 서화류(첩), 서화류(서), 근대서적, 화보, 사진, 인장, 근대문서, 화구, 전통유물, 근대문물Ⅰ, 근대문물Ⅱ, 042-009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5)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공연·연구 등 자료를 포함하여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국악에 이르는 국악자원을 조사·수집·관리·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 1단계 분류에서 정악/민속악/창작음악/무용/연희/기타로 구분하여 세분류 구성하고 있으나, 대분류 항목 중 ‘기타’의 하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외함

[표 3-37]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의 국악분류

분류 1	분류 2	분류 3
정악	기악	기타
		낙양춘
		보허자
		여민락
		영산회상
		자진한잎
		정읍
		취타
	성악	가곡
		가사
		기타
		시조
	종교음악	경모궁제례악
		기타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민속악	기악	기타
		농악
		봉장취
		산조
		삼현육각
		시나위
		취타
	성악	광대소리
		민요
		병창
		시창송서
		잡가
		판소리

분류 1	분류 2	분류 3
창작음악	종교음악	무속음악
		불교음악
	기악	관현악
		독주
		사물놀이
		중주
		합주(관악/현악)
		협주곡
	기타	
	성악	독창
		성악과 관현악
		성악과 실내악
		창작판소리
		합창
	종교음악	기독교
		기타
무용	전통무용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	기타
		무용극
		전통적창작
		현대적창작
연희	전통연희	광대굿놀이
		기타
		인형놀이
		줄타기
		탈놀이
	창극	국극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
		홍보가
	창작연희	기타
		노래극
		마당놀이

자료: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

- (6) 국립국악원 국악기 및 국악자료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연구/자료의 ‘국악기 음원’ 및 ‘국악자료검색’에서 국악기와 국악자료의 분류체계 확인 할 수 있음

[표 3-38] 국립국악원의 국악기 분류

분류 구분	분류 1	분류 2
국악기	현악기	거문고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정악아쟁
		산조아쟁
	관악기	해금
		정악대금
		소금
		향피리
		당피리
	타악기	태평소
		정악장구

자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표 3-39] 국립국악원의 국악자료 분류

분류 구분	분류 1
국악자료	도서
	음향
	영상
	악보
	팜플렛
	포스터
	신문스크랩
	이미지

자료: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 (7)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대분류 단계에서 크게 고도서/고문서/사진·회화/음성자료/사전·공구자료로 구분하여 복수의 분류기준을 두고 분류하고 있음
 - 상위의 분류체계는 다음 표와 같으며, 하위에 보다 구체적인 세분류를 두고 있음

[표 3-40]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분류

분류 1	분류 2	분류 3	분류 4
고도서	원문이미지	형태별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제목별	
	본문텍스트	장르별	산문, 운문
		제목별	
		의례자료	
해제			
고문서	문중고문서	원문이미지	형태별
			제목별
			가문별
		본문텍스트	
	해제		
왕실고문서			
사진·회화	의례도설자료	해제	
		전도별	전각도, 연회도, 반차도, 배열도, 괴수도, 진설도, 위차도, 전도, 전도기타
		물품도별	기명, 의장, 상석배합, 여연, 악·무, 복식, 감인, 산릉석물, 기기, 관직
		제목별	
	보소당인존 인장		
음성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권책별	미분류, 1집, 2집, 3집, 4집, 5집, 6집, 7집, 8집, 9집
		소재별	천문, 지리, 인간
		유형별	설화, 민요, 무가, 민속, 미분류, 설화 각색
		지역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제목별	
	한국방언자료집	지역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제목별	
	한국민요대관	기능별	유희요, 의식요, 미상 노동요
		지역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도
		제목별	
		전체해제	
		지역해제	

자료: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그림 3-8]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세분류 예시
자료: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4.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운영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발 사례

1)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운영·관리 규정

(1) 문화재청 소속/산하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청 이하 기관들의 훈령, 예규, 지침 검토
 - 대상 기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관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시행 2013.4.8] [문화재청훈령 제291호, 2013.4.8., 타법개정]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문화재 실측 기록, 옛도서·옛문서·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문화재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영인기록 등 문화재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
 - 기록화사업 대상으로서의 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기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특징에 집중



[그림 3-9]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범주

자료: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첨 1]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국립고궁박물관예규 제69호, 2016.1.5., 개정]
-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재를 소장품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및 이후의 소장품에 관한 관리 사항 등은 내부 시스템인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4.12.29] [국립무형유산원훈령 제6호, 2014.12.29., 제정]
-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기록물 생산 및 기록물, 물품 등의 수집, 관리, 기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중요무형문화재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무형유산의 기록생산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록물 관리체계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서비스하도록 함

제18조(무형유산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 ① 기록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 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기록관장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무형유산 기록물을 무형유산 기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를 진행한다.

1. 체계적인 무형유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무형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2. 제15조에 따른 수집 기록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무형유산 기록물의 원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거나 업무에 활용.
 3. 무형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지속 구축
 4. 제2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때에는 구축데이터의 원본을 하드디스크, DVD 등 보존기록물에 적합한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관리
 5. 제2항에 따른 무형유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기관들의 훈령, 예규, 지침 검토

- 대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해외문화홍보원

○ 「국립국악원 자료 관리 규정」

- [시행 2014.12.1.] [국립국악원예규 제219호, 2014.12.1., 일부개정]
-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이며,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의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
- 본 규정의 ‘자료’를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보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여러 유형의 자료’라 정의하며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함

[표 3-41] 국립국악원 자료 유형의 구분

번호	자료 유형
1	“동영상자료”란 움직이는 영상이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2	“음향자료”란 음성을 비롯한 각종의 소리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텍스트자료”란 도서·악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이미지자료”란 그림·사진·필름과 같이 정지영상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복합자료”란 포스터·팸플릿과 같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자료가 두 종류이상 포함되어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6	“기타자료”란 가목부터 5번까지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7	“아날로그자료”란 종이·자성기록매체·LP·필름 등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매체에 기록된 비전자 파일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8	“디지털자료”란 광디스크·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방식의 저장매체에 기록된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자료: 「국립국악원 자료 관리 규정」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 [시행 2017.1.17.]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36호, 2017.1.17., 일부개정]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등 소속기관에도 적용
- 신규 자료에 대해 분류기호, 도서기호, 별치기호 등으로 청구기호 부여함

제5조(분류기호)

① 분류기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1. 동양서: 한국십진분류법(KDC)
2. 서양서: 듀이십진분류법(DDC)
3. 고서: 한국십진분류표 박봉석편(KDCP)
4. 비도서: 한국십진분류법(KDC)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 중 분류기호(Class Stem)를 부여한다.
5. 온라인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제6조(도서기호)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
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

3. 고 서: 수입순
4.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 중 도서기호(Book Number)를 부여한다.

제7조(별치기호)

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별치기호는 KOLIS 부호관리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른다.

[표 3-4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별치기호 부여 기준

구 분	자 료	
	종 류	자 료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정책자료	일반도서, 잡지
	서양자료	일반도서(서양서)
	열람제한도서	특수자료, 열람제한도서
	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서양서), 박사학위논문(서양서)
	정부간행물	입법부간행물, 사법부간행물, 행정부간행물, 정부간행물(서양서)
	만화	만화
	귀중자료	일반도서(동양서), 일반도서(서양서), 잡지, 신문, 비도서자료
	국제기구 간행물	유엔자료
	실물자료	실물(Realia) · 박제(Specimen), 견본(Sample), 유물(Remains)
		오브젝트(Object) · 투시화(Diorama), 모형(Model), 플라네타륨(Planetarium)
		시각 및 그래픽자료 · 미술품(Art original), 미술복제품(Artreproduction), 미술인쇄물(Artist's print), 플래시카드(Flash card), 플립도표(Flipchart), 사진(Photograph), 그림(Picture), 그림엽서(Post card), 입체카드(Stereographcard), 입체릴(Stereograph reel), 포스트(Poster), Hologram film, Hologram plate
		키트(Kit) · Constructional set, Game, Jigsaw puzzle, Kit, laboratory kit
	지도	날장지도(Map), 벽지도(Wall map), 지구의(Globe)
	악보	총보(Score), 피스(Part)
	컴퓨터 매체 자료	Digital tape, Digital disc, Digital cassette, Digital cartridge CD-I, CD-G, Combined A&V material, (Video CD), Digital video disc(DVD), 블루레이디스크
		릴테이프(오픈)
	음향자료	음향카트리지(Sound cartridge), 음향카세트(Sound cassette), Digital audio tape,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음향테이프(Sound reel), 음향트랙필름(Sound track film), 음반(Sound disc)
	영상자료	필름 카트리지(Cine cartridge), 필름 카세트(Cine cassette), 필름 루우프(Cine loop)
	영상자료	필름 릴(Cine reel), Video cartridge, Video cassette, Video disc, Video reel, Laser disc
	마이크로자료	마이크로 피쉬(Microfiche), 마이크로 카트리지(Micro cartridge), 마이크로 카세트(Micro cassette), 마이크로투영물(Micro-opaque), 마이크로릴(Microreel), 마이크로 슬립(Microslip), 마이크로필름 : 고서, 마이크로필름 : 기타, 현미경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줄슬라이드(Film strip), 필름 슬립(Film slip), 슬라이드(Slid), 투영물(Transparency)

구 분	자 료	
	종 류	자 료
아동자료 (점자자료 제외)	아동자료	아동서(동양서), 아동서(서양서), 아동비도서, 만화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참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자자료	일반자료	일반도서
	아동자료	아동도서
고서		고서
		고문서
		고서귀중
개인문고	위창문고	위창귀중고서
	일산문고	일산귀중고서
	우촌문고	우촌귀중고서
	승계문고	승계귀중고서
	의산문고	의산귀중고서
	무구재문고	무구재, 귀중고서
	동곡문고	동곡귀중고서
		영해문고
		허균문고
	백암문고	백암일반자료, 백암고서
	일모문고	일모일반자료, 일모고서, 일모귀중고서
	미륵문고	미륵문고 일반도서, 미륵문고 비도서
		히로시마문고
	고바우문고	고바우 일반도서, 고바우 아동서
		박항섭문고
		청강문고
	성호문고	성호고서, 성호귀중
	강소천문고	강소천 일반도서, 강소천 아동서
	윤석중문고	윤석중 일반도서, 윤석중 아동서, 윤석중 비도서
		박흥근문고
	강신재	강신재 일반도서, 강신재 비도서
	박동규	박동규 일반도서, 박동규 비도서
	황문평	황문평 일반도서, 황문평 비도서
	송방송	송방송 문고, 송방송 문고 비도서, 송방송문고 고서
	마해송	마해송 일반도서, 마해송 아동서, 마해송 비도서
	조훈파	조훈파 일반도서, 조훈파 아동서, 조훈파 비도서
	강원용	강원용목사 일반서, 강원용 문고고서
	노용필	노용필 일반도서, 노용필 정부간행물, 노용필 아동서
기증도서	미국대사관	미국대사관기증 일반도서, 미국대사관기증 비도서
	중국의창	중국의창 아동서, 중국의창 일반서, 중국의창 아동비도서, 중국의창 일반비도서
	터키대사관	터키대사관 기증일반서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기준」 [별표 1] ‘별칭기호’

2)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개발·도입 사례

(1)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의 항목분류와 코드분류』(국립중앙박물관, 1993)
 - 유물분류표준화를 위한 기본안
-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방안』(국립중앙박물관, 1995)
 - 박물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전산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국립·대학·공사립 박물관 등 유물 분류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분류체계안을 제시한 연구
 - 박물관 소장 유물의 분류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국립중앙박물관, 1995: 2-3)
 - 수집 / 보존관리 / 전시 / 연구(학술자료 활용) / 교육자료 활용
 - 국립중앙박물관(1995)에서 제안한 분류체계 안은 크게 전국박물관의 공통항목과 고유항목으로 구성됨
 - 고유항목(장르별항목)에서는 도자기, 회화, 고문서, 복식, 불상, 불교회화, 탑, 승탑, 비, 석등, 가구, 화살촉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분류체계 마련
 - 제안한 분류체계의 한계로 장르를 어느 범주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 ‘유물분류의 표준화 전담반’과 ‘유물분류의 표준화 자문위원회’ 구성 및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국립중앙박물관, 1996)
- 2001년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유물관리시스템(Standards Antiquities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고도화 진행
- 2014년 4월 ‘국가문화유산 정보관리 선진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5년~2018년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 DB구축 사업’ 추진(권혁산, 2014: 12-23)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유물분류 표준화의 확대 및 개선과 유물관리 표준시스템 개발(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리)
 - 1996년에 개발되고, 2003년에 개정된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

분류표준화』는 고고·역사·미술사·민속분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근·현대, 전문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에 부적합(권혁산, 2014: 27)

-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 DB구축 사업’에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한 보완 시도
 - 기존 물질 중심의 분류체계 뿐 아니라 소장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주제별 분류항목 신설
 - 특정 분야의 소장품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 박물관을 위하여 자율분류 항목 신설

	기존 방식 (AS-IS)	⇒	국가문화유산 통합 관리 (TO-BE)
표준화	고고·역사·미술사 중심의 관리체계		자연사·민속 등 전체 포괄
관리	기관별 관리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 제공
서비스	기관별 공급자 중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그림 3-10]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 DB구축 사업’의
시스템 개선 방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3

(2) 국립고궁박물관

- 2005년 각 궁·능 소장유물 4만여 점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이관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유물정리 작업 실시(국립고궁박물관, 2010: 78)
 - 소장유물의 성격별·재질별로 재분류 및 원 소장처 기준으로 유물번호 부여하여 번호체계와 분류체계 재정립
- 2007~2009년 자체적으로 웹기반 ‘e-고궁시스템’ 개발 및 2013년 고도화 사업 수행(국립고궁박물관, 2010: 78)

(3) 대한민국의사박물관

- 『디지털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박물관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10)
 -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의 디지털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기반 박물관 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박물관 특성에 맞는 자료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개발을 통해 디지털

- 아카이브 구축 계획 및 시스템 설계 수행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분류체계 정리 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10: 196)
 - 역사자료에 대한 분류체계인 만큼 기존의 역사관련 박물관의 주제분류 형태를 수용해야 함
 - 그러나 주제가 한국 근현대사에 국한되는 만큼 기존의 역사관련 박물관의 주제분류를 전적으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근현대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 가지 위계의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다중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표 3-43]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 (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정치행정	정치	교육과학	교육
	법률		학술
	행정		역사
	사법		과학
	외교		기술
	군사		의학
	통일(안보)		통신
	민주화운동		교통
	독립운동	문화예술	문화
	식민통치		예술
경제산업	경제		체육
	산업		종교
	건설(토목)		언론
	금융		방송
	무역		문학
	재정		음악
	기업		민속
	공산품		
	노동운동		
사회환경	사회		
	치안		
	여성		
	환경		
	자연		
	사회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202

(4) 국립한글박물관

○ 『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12)

-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에 앞서 개관 시점부터 5년간의 운영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마련 목적
- 국립한글박물관의 중장기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설정하였으며, 한글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의 세부 사업으로서 한글자료 분류 체계 구축 사업 설정
 - 한글박물관은 문자박물관이므로 전시·연구·관리를 위해 유물의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 확립 필요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문화체육관광부, 2014b)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글자료 분류체계의 구축과 한글자료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목적
- 국내 한글자료 현황 조사 및 분석, 한글자료 분류체계 개발 및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 한글자료 분류체계의 일반적 개념, 기본 요건, 분류를 위한 일반규정, 분류원칙 및 분류원리, 분류기준 제안
- 한글자료 분류표는 본표와 보조기호표, 부차적 기호표로 구성하고, 본표는 다시 주류표, 강목표, 요목표로 구성

[표 3-44] 한글자료 분류표(주류표) 예시

기호	주제	내용
000	총류	아래의 류(類)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총류적 성격의 자료를 여기에 분류
100	문학류	문학에 관련된 주제를 여기에 분류 장르별, 시대별, 지역별 문학 자료는 문학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200	종교류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종교별 자료는 종교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300	국가정책	- 국가 차원의 현황, 정책 등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특정 사안별, 시대별, 지역별 관련 자료는 국가정책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400	교화, 학술류	교화나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교화 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종류별 학습관련 자료는 교화, 학술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기호	주제	내용
500	기술류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종류별 기술 관련 자료는 기술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하고, 시대별, 지역별 자료는 시대구분표와 지역구분표를 활용하여 전개 기술별 정책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정책(300)의 세부 주제별 요목표에 분류함
600	문화, 예술류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문화 예술의 종류별 자료는 문화, 예술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700	국어(우리말, 우리글)	한글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여기에 분류하되, 특정 주제분야에서 사용된 한글은 그 주제 분야에 분류 한글의 구성, 글꼴, 산업화 등 한글의 활용과 관련된 자료는 국어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800	연구 및 규범류	한글 연구와 한글로 작성된 규범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기술별 연구 자료는 기술류(500)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900	역사 및 생활류	역사와 생활류에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시대적 생활상 등의 자료는 역사 및 생활류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

자료: 국립한글박물관, 2014: 269

[표 3-45] 한글자료 분류표(강목표-문학류(100)) 예시

기호	주제	내용
100	문학류	문학류의 자료는 아래의 요목, 세목표에 따라 분류하고, 시대별, 지역별 자료는 필요에 따라 시대구분표와 지역구분표를 활용하여 전개 일반적인 문학을 포함하거나, 아래의 강목을 3개 이상 포함하는 문학류 자료를 여기에 분류
110	시, 시조	시, 시조 자료를 여기에 분류
120	희곡	희곡 자료를 여기에 분류
130	소설	소설 자료를 여기에 분류 소설은 요목표를 이용하여 세분화하거나 혹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요목표를 확장하여 사용함.
140	수필, 소품	수필, 소품 자료를 여기에 분류
150		향후 새로운 주제의 확장시 사용
160	일기, 서간, 기행	일기, 서간, 기행 자료를 여기에 분류 다만 개인 편지 등은 한글편지(940)에 분류
170	풍자	풍자나 해학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분류
180	전기, 일대기	- 전기나 일대기 등의 자료를 여기에 분류 특정 주제(분야)를 포함하는 전기나 일대기는 해당 주제 분야에 분류할 수 있음.<표준구분표 참조> 분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기나 일대기를 여기에 분류하여도 무방함. 다만 일관성은 유지
190	기타(르포르타주 등)	기타 상기 강목에 포함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여기에 분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b: 271

[표 3-46] 한글자료 분류표(요목표-문학류(100)) 예시

100 문학류	110 시
101 문학이론	111
102 문장작법, 수사학	112 가사(내방가사, 조선가요 등)
103 문학사전	113 시조
104 수필집, 강연집	114 민요, 속요
105 연속간행물	115
106 학회, 단체, 기관, 회의	116
107 지도법, 연구법, 교육, 교육자료	117 동요, 동시
108 전집, 총서	118 한시(과시(科時) 포함)
109 문학사, 평론	119 기타
120 희곡	130 소설
121	131
122	132
123 조선시대(산대도감 희곡, 판소리)	133 조선시대
124	134
125	135 20세기
126 현대(단막극, 일인극 등)	136
127	137 21세기
128 아동극	138 동화
129 기타	139 기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b: 280

(5) 국립해양박물관

○ 2012년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유물의 체계적 관리와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위한 유물관리 시스템 도입 목적
- 주요 사업 내용은 박물관 구입·수집 등 유물관리 시스템 개발, 일반기록물 단위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표준 유물정보 DB화 등
- 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성한 표준유물 표준화 방안을 적용하고,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기능을 참조하여 개발하도록 함

○ 2013년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실시

- 국립해양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된 소장유물정보 중 중요 유물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대민 서비스 제공 및 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목적
- 주요 사업 내용은 아카이브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도화, 아카이브자료에 대한 대민 서비스 개발, 유물관리시스템의 통계·출력 개선의 고도화 등

○ 2014년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시

- 국립해양박물관의 유물등록 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등록환경 및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한 사업

- 주요 사업 내용은 유물등록 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등록환경 개선 및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동 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검색기능 고도화 등
 - 현 유물관리시스템 내 반영되어있지 않은 유물과 자료의 분류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 구축 포함

(6) 서울역사박물관

○ 2012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시

- 사용되고 있는 표준유물관리 프로그램의 분류체계가 소장유물의 성격과 맞지 않아, 박물관 성격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 수립하고 종합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분류체계 : 전통유물(일제강점기 이전)과 근현대유물의 경우 유물의 종류와 성격이 많이 다르나 같은 분류체계를 유지
 - 유물 등록에서 필요한 기능이 누락되어 있음(예: 연유, 시대, 재질, 장르, 주제어 등)
 - 이와 같은 분류 오류는 유물의 부정확한 현황 파악, 관리에 2차 오류를 발생시킴
- 주요 과업 내용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신 분류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현대 유물 및 향후 서울 미래유산을 포함할 수 있는 분류 체계 수립
- 전체 소장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재분류하여 유물분류 체계 개편

○ 2013년 개발된 유물관리시스템 실무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단계 거친 뒤, 2014년 RFID 출납시스템 구축 및 유물 자동 출납시스템 구축

5. 문화재 유형별 세분류 체계 개선 관련 연구

- 『국가유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한국문화정보센터, 2013)
 - 전국의 문화재 및 박물관 소장 유물 등 문화유산정보의 종합적 관리 기틀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수행
 - 국가유물관리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분석 수행 및 문제점 도출
 - 표준유물분류체계 기관별 특징 반영 미흡
 - 개별 박물관별 유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정보구조의 다양화
 - 개인 등 민간소유 국가유물관리체계 부재 등
 - 표준유물분류체계는 고고·회화·도자 등의 고미술품을 주요 유물로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관리 체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용도와 기능에 중점적 가치를 두는 민속계 박물관의 유물관리 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 기관의 특성 반영하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웹 기반 유물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하는 상황
-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등록문화재 분류 및 잠정목록 대상 발굴을 중심으로』(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근대 동산문화유산 분류방안을 토대로 근대 건축·명승·유적·사적·기념물·생활유품 등 근대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분류방안 제시한 연구
 - 국내외 분류방안 조사 분석 수행
 - 분류이론으로서 정부기능분류법(BRM), 한국 십진분류법(KDC), 학술연구분야 분류방안, 한국표준산업 분류방안 조사 분석
 - 기관별 사례로서 국가기록원, 문화재청(동산, 건조물), 총무처 기록물 분류방안,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 국립박물관, 지역별 근대박물관 전시 및 분류방안을 조사 분석
 - 분류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분류방안별 공통적인 항목 및 동산·건조물의 성격에 맞는 분류방안 위계 도출

■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_동산부분

대분류	중, 소분류					
01. 정치·외교	01-1 행정·외교	01-2 정치	01-3 외교	* 분류방안 기준 - 1차년도 분류방안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용도 기능 분류를 기준으로 대·중분류를 재정의함 -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를 기준으로 근대문화유산 건축물의 분류방안을 마련함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일부 편역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시설(근린생활시설 내 500㎡의 의원, 파출소, 우체국 등)은 해당 용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대·중분류체계 내에 재구분 함		
	01-1 행정·외교	01-2 정치	01-3 외교			
02. 산업·경제	02-1 전통업(1차)	02-2 제조업(2차)	02-3 교통·통신(3차)	02-4 건설·환경(3차)	02-5 상업·금융(3차)	02-6 정보서비스(4차)
	02-1 전통업(1차)	02-2 제조업(2차)	02-3 교통·통신(3차)	02-4 건설·환경(3차)	02-5 상업·금융(3차)	02-6 정보서비스(4차)
03. 사회·생활	03-1 의·복식·생활	03-2 식·음식·생활	03-3 주거·주거·생활	03-4 의·예·생활	03-5 종교	03-6 교육
	03-1 의·복식·생활	03-2 식·음식·생활	03-3 주거·주거·생활	03-4 의·예·생활	03-5 종교	03-6 교육
04. 문화·예술	04-1 문학	04-2 시각·예술	04-3 공연·예술	04-4 디자인	04-5 대중문화	04-6 체육
	04-1 문학	04-2 시각·예술	04-3 공연·예술	04-4 디자인	04-5 대중문화	04-6 체육
05. 과학·기술	05-1 천문·우주	05-2 지리·지구과학	05-3 의료	05-4 인체·인장·환류	05-5 기계	05-6 전자·정보통신
	05-1 천문·우주	05-2 지리·지구과학	05-3 의료	05-4 인체·인장·환류	05-5 기계	05-6 전자·정보통신
06. 군사·치안	06-1 군복·무기	06-2 화약·무기	06-3 군사장비	06-4 표적·장비	06-5 치안	06-6 안전·방위
	06-1 군복·무기	06-2 화약·무기	06-3 군사장비	06-4 표적·장비	06-5 치안	06-6 안전·방위

[그림 3-11] 근대문화유산(동산) 분류안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90

■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_건조물부분

대분류	중, 소분류					
01. 정치·외교	01-1 공공시설	* 분류방안 기준 - 1차년도 분류방안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용도 기능 분류를 기준으로 대·중분류 체계 재정의함 -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를 기준으로 근대문화유산 건조물의 분류방안을 마련함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일부 편역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시설(근린생활시설 내 500㎡의 의원, 파출소, 우체국 등)은 해당 용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대·중분류체계 내에 재구분 함				
	01-1 공공시설					
02. 산업·경제	02-1 업무시설	02-2 생산시설	02-3 운수시설	02-4 산업·발전시설	02-5 상업시설	02-6 숙박시설
	02-1 업무시설	02-2 생산시설	02-3 운수시설	02-4 산업·발전시설	02-5 상업시설	02-6 숙박시설
03. 사회·생활	03-1 주거시설	03-2 종교시설	03-3 교육시설	03-4 근린생활시설	03-5 점액 및 묘지시설	
	03-1 주거시설	03-2 종교시설	03-3 교육시설	03-4 근린생활시설	03-5 점액 및 묘지시설	
04. 문화·예술	04-1 문화전시시설	04-2 관광휴게시설	04-3 체육시설			
	04-1 문화전시시설	04-2 관광휴게시설	04-3 체육시설			
05. 과학·기술	05-1 의료시설	05-2 연구시설	05-3 과학기술시설			
	05-1 의료시설	05-2 연구시설	05-3 과학기술시설			
06. 군사·치안	06-1 군사시설	06-2 치안시설	06-3 교정시설			
	06-1 군사시설	06-2 치안시설	06-3 교정시설			

[그림 3-12] 근대문화유산(건조물) 분류안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91

○ 『보호지역의 재분류 및 협력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환경부, 2011)

- 환경부 및 산림청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 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 현황 검토와 보호지역 유형의 재분류 및 협력적 관리방안 제시
- 대상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총 6개 유형의 보호지역

[표 3-47] 보호지역 재분류 (1안)

관리권한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지역 구분		육상			해양			육상			해양		
관리지역		핵심	완충	전이	핵심	완충	전이	핵심	완충	전이	핵심	완충	전이
보호지역 재분류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 보전	자연 환경	공원 마을, 공원 문화	자연 보전	자연 환경	공원 마을, 공원 문화	-	-	-	-	-	-
	자연공원 (도립, 군립)	-	-	-	-	-	-	자연 보전	자연 환경	공원 마을, 공원 문화	자연 보전	자연 환경	공원 마을, 공원 문화
	생태경관 보전지역	○	○	-	○	○	-	-	-	○	-	-	○
	습지 보호지역	○	-	-	(국토해양부)			-	○ (습 지주 변관 리)	○ (습 지개 선관 리)	(국토해양부)		
	야생동식 물보호구 역 (특별보호)	○	-	-	○	-	-	-	-	-	-	-	-
	야생동식 물보호구 역 (시도 및 시군구)	-	-	-	-	-	-	-	○	○	-	○	○
	특정도서	○	○	-	○	○	-	-	-	-	○	-	○
행위 제한	시설설치	X	●	○	X	●	○	X	●	○	X	●	○
	이용	X	X	○	X	X	○	X	X	○	X	X	○
	개발	X	X	●	X	X	●	X	X	●	X	X	●
	자연 훼손	X	X	●	X	X	●	X	X	●	X	X	●
주민지원		X	○	○	X	○	○	X	○	○	X	○	○
과학연구		○	○	○	○	○	○	○	○	○	○	○	○
생태관광		X	●	○	X	●	○	X	●	○	X	●	○
입장		X	●	○	X	●	○	X	●	○	X	●	○

법제) ○ : 지정가능 및 허용, ● : 제한적 허용, X : 불가능

자료: 환경부, 2011: 115

[표 3-48] 보호지역 재분류(2안)

공간적 구분 지정목적 구분	육 지				해양
	산지	하천	습지	도시	
국토보전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해 상)
경관보전(문화)	자연공원(육상)			자연공원(문화)	
경관보전(자연)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종서식지 보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권한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역		핵심	완충	전이	관리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자연공원(공원자연보전지구) 생태자연경관보전지역(핵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완충) 자연공원(자연환경보전지구) 생태자연경관보전지역(완충) 습지보호지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공원마을지구) 생태자연경관보전지 역(전이)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공원(공원문 화유산지구) 습지개선지역
행 위 제 한	시설설치	X	●	○	●
	이용	X	X	○	●
	개발	X	X	●	●
	자연훼손	X	X	●	●
주민지원		X	○	○	○
과학연구		○	○	○	○
생태관광		X	●	○	○
입장		X	●	○	○

범례) ○ : 허용, ● : 제한적 허용, X : 불가능

자료: 환경부, 2011: 117

○ 『박물관 소장품 관리 일반과 실제』(국립민속박물관, 2010)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소장품 정리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박물관 소장품 관리 일반, 소장품 정리 및 등록 실제,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
- 박물관 소장품의 용도·기능을 분류하는 것으로 소장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기능의 분류가 필요
- 박물관마다 미리 정한 기능 분류 있을 시 그에 따르고, 아닌 경우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 표준화 방안』에 따라 분류하도록 함
- 복수의 용도로 사용된 소장품의 경우 복수의 분류 표기하도록 함
 - 병풍의 경우, 기능의 측면에서는 ‘주생활-생활용품-장식용구’, 병풍 안

민화의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서화-회화-민화’로 분류

-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문화재청, 2009b)
 -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의 분류체계에 따라 새롭게 재분류하고 새로운 종목 발굴

[표 3-49] ‘구전 전통 및 표현’ 분야의 분류 (안)

영역	구분	ICH	유형	한국의 사례
구전 전통 및 표현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말 language	역사, 전설, 신화, 표현	설화형	신화, 전설, 민담
			담화형	속담, 욕설, 금기어
			문답형	수수께끼
			낭송형	독경
	말+음악	시가	가창형	항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민요, 판소리
	말+음악+연극	연행 및 공적인 표현	연극형	가면극, 인형극, 가장극
	말+음악+무용		가무형	민속무용
	말+음악+노동		노동형	노동요
	말+음악+의례		제의형	무가, 굿놀이

자료: 문화재청, 2009b: 22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8)
 - 건축물의 용도와 업종간 분석을 통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
 - 1단계-건축법과 개별법령간의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
 - 2단계-여러 관련 개별법령 및 관련 정부부처에 과장이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분류 기준의 재정립과 각 법령기준간 상호 제·개정 필요항목에 대한 개선을 제안
-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 관리방안 연구』(문화재청, 2004b)
 - 중요무형문화재의 각 분야 및 종목에 대해 지정 명칭, 단위, 범위 등 합리성 검토 및 각 분야 및 종목에 대한 문화 특성 파악하여 분야별 합리적 분류체계

개선안 제안

- 문화재청의 일반 분류 기준에 따라 음악/무용/연극/놀이와 의식/공예기술/음식/무예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전승 특성과 기존의 지원·관리 실태 분석 후, 분류체계 및 지원·관리 방안 제시

[표 3-50] 무형문화재(음악 분야) 종전의 분류체계 및 개선안

지정번호	종목명	지정단위	전승지	지정번호	종목명	지정단위	전승지
제 1호	종묘제례악	단체	서울	제30호	가 곡	개인	전국
제 5호	판소리	개인	전국	제41호	가 사	개인	서울
제11호	농 악			제45호	대금산조	개인	전국
-가	진주삼천포농악	단체	경남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단체	서울
-나	평택농악	단체	경기	제51호	남도들노래	단체	전남
-다	이리농악	단체	전북	제57호	경기민요	개인	서울
-라	강릉농악	단체	강원	제83호	향제줄풍류		
-마	임실필봉농악	단체	전북	-가	구례향제줄풍류	단체	전남
제16호	거문고산조	개인	서울	-나	이리향제줄풍류	단체	전북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단체	서울	제84호	농 요		
제20호	대금정악	개인	서울	-가	고성농요	단체	경남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개인	전국	-나	예천통명농요	단체	경북
제29호	서도소리	개인	서울	제95호	제주민요	개인	제주
비고	단체-7종 13단체, 개인-10종목, 전국-4종목(개인), 지방-13종목(13단체, 6개인)						



종목명	지정단위	전승지	종목명	지정단위	전승지
종묘제례악	단체	서울	정악 -가 대금정악	단체	서울
판소리	개인	전국	-나 피리정악	단체	서울
농악-가 진주삼천포농악	단체	경남	민요 -가 서도민요	단체	서울
-나 평택농악	단체	경기	-나 경기민요	단체	서울경기
-다 이리농악	단체	전북	-다 제주민요	단체	제주
-라 강릉농악	단체	강릉	가곡과 가사	단체	서울(전국)
-마 임실농악	단체	전북	대취타	단체	서울
산조 -가 가야금산조	개인	전국	농요 -가 진도들노래	단체	전남
-나 거문고산조	개인	전국	-나 고성농요	단체	경남
-다 대금산조	개인	전국	-다 예천농요	단체	경북
선소리산타령	단체	서울	향제줄풍류-가 구례향제줄풍류	단체	전남
병창	단체	서울	-나 이리향제줄풍류	단체	전북
비고	볼드체는 기존의 것에서 변한 것을 의미. 단체 : 10종목 20단체, 개인 : 2종목 4개 부문. 전국 : 2 혹은 3종목. 지방 : 9 혹은 10종목				

자료: 문화재청, 2004b: 330

6. 문화재 세분류 체계 현황의 특징 및 시사점

1) 현황 종합 및 특징

○ 행정명령에 의한 분류체계의 특징

- 법률 및 행정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 유형별 분류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평가 기준과 혼용되고 있음
- 세분류 단계에서의 분류 항목은 상위 항목의 종류(사례)의 나열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 각 유형별 분류 단계 구성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음

○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기본정보’ 상 분류체계의 특징

- 세분류 단계의 항목 구분 기준이 동일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상황
- 분류의 위계가 낮아짐에 따라 문화재 유형이 구체화되며, 각 유형의 특징적인 요소를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

[표 3-51] 문화재 유형별·분류위계별 분류의 기준

분류 1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재
분류 2 기준	- 유적지 또는 건조물의 용도	- 회화·조각· 공예의 배경이 된 종교의 종류 - 과학기술	-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및 내용	- 무형적 행위의 종류	- 문화재의 지정 종목	- 구분 없음
분류 3 기준	- 주거생활 구성 요소 단위 - 무덤의 주인 건조물의 용도 - 산업의 종류 - 종교의 종류 - 유물 및 유적의 위치 - 시기	- 기술의 종류 - 유물의 용도 - 그림의 대상 및 내용 - 종교의 종류 - 위치 및 용도 - 재료 - 시기	- 작성 주체 - 시대 및 재료 - 내용과 형태 - 제작 방식	- 재료 - 행위 주체 - 목적 - 형태	- 자연/인공 - 기념 대상의 종류 - 문화 및 자연 결합성/자연 과학성	- 건축물의 용도 - 형태
분류 4 기준	- 건조물의 용도 - 무덤의 재료와 형태 - 시대 - 사찰 구성 요소	- 대상의 종류	- 내용 - 형태 - 작성 주체 - 활자의 종류	- 결과물의 형태 - 재료 - 행위의 목적 과 주체	- 기념의 주요 목적 - 물리적 형태	- 구분 없음

○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현황의 특징

- 박물관, 연구소 등 문화재 관리기관의 설립·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의 구성 원리에 차이를 보임
 - 동일 유물이더라도 박물관 내 전시 구성에서의 분류와 아카이브 내 분류 체계에서의 분류가 상이함
 - 각 기관의 운영과 문화재의 관리 방식 또한 기관별 세분류 구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일 것이며 이는 기관별 업무 분장과의 연계됨
 - 전시를 위한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각 전시의 목적 및 콘텐츠 구성에 따라 동일 문화재가 다양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또는 유물 검색 서비스에서는 복수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세분류 항목이 매우 다양하게 확인됨
 - 국립중앙박물관: 국적·시대, 재질, 용도·기능, 모양·장식, 출토지, 소장처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분류유형(공연예술의 성격), 자료유형, 공연단체
 - 외교부 외교사료관: 시대, 사료의 유형

○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운영 관련 규정의 특징

- 문화재의 기록화사업, 문화재 관리 기관의 소장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
 - 기록을 위한 자료의 관점에서 정리의 기준과 분류를 구성
 - 문화재로서가 아닌 자료적 속성에 따라 분류
- 문화재 세분류 단계까지의 분류 기준 또는 분류 항목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각 관리기관별 분류의 목적에 맞게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문화재 관리기관별 분류체계 개발·도입 사례의 특징

- 1990년대 이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전국의 공·사립 박물관에서 독자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유물 관리 프로그램 개발하여 사용(국립중앙박물관, 1996: 1)
- 통일되지 않는 데이터 정리 및 검색 등의 문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3년부터 유물 분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 유물 분류안 마련

- 현재까지 유물의 표준 분류체계에 대한 보완 및 확대 작업 진행 중
- 그러나 박물관 등 문화재 관리기관의 성격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각 관리기관별 설립 및 운영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을 발주 후, 대학교·학회 등 학술기관에서 용역 수행 및 분류체계 개선방향 또는 개선안 제안하여 별도의 분류체계 구성하는 상황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 기타 문화재 유형별 분류체계 개선 관련 연구의 특징

- 문화재 대분류 유형 또는 지정 종목을 기준으로 하위의 세분류체계 재구성에 대한 연구 다수 수행됨
-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기관의 관리 현황, 문화재 개별 사례의 내용 및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각 성격에 맞게 재분류 구성

2) 세분류 체계의 종합 시사점

○ 문화재의 세분류체계는 문화재의 운영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분류 기준 및 항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분석결과, 문화재 유형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리기관별로 세분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이미 문화재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관리기관의 수준에서 세분류체계가 다양하게 구성됨
- 따라서 각 기관 또는 세분류체계 운영의 목적에 따라 분류의 기준과 항목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문화재 유형별로 상이한 세분류 기준 및 위계의 수준

- 문화재 유형에 따라 분류체계 구성에 필요한 위계 설정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음
- 또한 상위 분류체계와 비교되는 세분류의 기준이 모호하여, 문화재 유형에 따라서는 세분류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함

○ 개별적으로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기관별 세분류 체계 구성이 필요

-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의 종류 또는 목적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활용·전시 등으로 다양하며, 문화재의 종류 또한 상위 위계의 분류 항목과는 달리 세분류 위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화됨
-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관리의 목적 및 방식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의 분류 기준을 적용할지, 분류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문화재 관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류체계 필요
- 즉, 세분류 유형 구분은 문화재 전반을 포괄하는 분류체계에서 제도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각 관리기관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에 적합한 자율규제형 세분류 체계 운영 필요함
- 자율규제는 본래 공유재가 존재하는 상황(Common Pool Resources Situation)에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 패턴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어 서로를 감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율관리(self-governing)의 개념(Ostrom, 1990)
- 따라서 문화재의 관리에서 자율규제는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화재라는 공유재를 자율관리를 통해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제4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개념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정의

제2절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분석

제3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시사점

제4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개념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정의

1.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현황

(1) 「문화재보호법」의 규정 현황

-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서 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종별에 대한 가치평가용어를 규정
 - 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의 각 종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가치평가 개념을 부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중략)
-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가치평가용어 기술의 내용

- 문화재에 대하여 제2조 1항에서 규정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이외에 각 문화재 종별로 추가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가치평가용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재 :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 유형문화재 : 문화적 가치 (“문화적 소산으로서”)
 - 무형문화재 : 전승가치(“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문화적 가치 (“문화적 유산 중”)
 - 기념물(사적) : 문화적 가치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 기념물(명승) : (경관의) 심미적 가치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 기념물(천연기념물) : 추가 없음
 - 민속문화재 : 문화적 가치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2.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

○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계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가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를 위한 기준 마련의 토대 구축

○ 사전적 정의 분석의 방법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⁴⁴⁾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⁴⁵⁾에서 각 용어의 명사형과 관형사적 파생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고 정의 내용을 분석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어대사전
- 17년간의 연구와 편찬으로 이루어 낸 만큼 ‘ㄱ’부터 ‘ㅎ’까지 전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짐
- 국내 최초로 모든 복합어 표제어에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유의어, 반의어 등 20여 종의 관련어 정보를 뜻풀이마다 각각 제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공공기관에서 편찬한 국어사전으로 1999년 10월 1일 초판본이 출판
- 국가에서 편찬을 하는 까닭에 수정이나 새로운 말의 등재 등이 민간 사전에 비해 신중하게 이루어짐

44)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참고.

45)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참고.

(1) ‘역사’ 및 ‘역사적’ 용어의 사전적 정의와 용례

○ ‘역사’ 및 ‘역사적’의 사전적 정의

[표 4-1] ‘역사’ 및 ‘역사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용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역사’	(1)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1)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2)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이 진행되거나 존재해 온 과정이나 추이.	(2)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3)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3)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4) 인류 사회 변천을 연구하는 학문.	(4) [같은 말] 역사학 :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역사적’	(1)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1)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2)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이 진행되거나 존재해 온 과정이나 추이.	(2)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3)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3)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4) 인류 사회 변천을 연구하는 학문.	(4) [같은 말] 역사학 :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 사전별 대표 정의 채택의 비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1번 뜻으로 삼아, 역사의 ‘흥/망’을 모두 포함하였음 ▶ **춘추¹**의 뜻 채택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을 1번 뜻으로 삼아, 개념 규정 상 역사의 ‘발전’과 관련된 측면에 상대적으로 치중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사⁸**의 뜻 채택
 - 유의어에 춘추¹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표 뜻이라 할 수 있는 1번 뜻에는 ‘발전’적인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역사적’은 ‘역사’의 하위어이므로 상위어의 중점 의미에서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며, 상위어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 상위어 ‘역사’에 관련된/관한 ▶ 연관성, 연결성, 관계, 상관물
 - 상위어 ‘역사’에 남을/기록될 만큼 중요한 ▶ 가치, 의미, 의의
 - 오랜 시대/세월을 거쳐 전해지는 ▶ 유구한, 전통, 현재까지 영향이 미치는

[표 4-2] ‘역사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용어	세부 정의	용례
‘역사적’	(1)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나 기록과 관련된 또는 그러한 것의 입장에서 보는.	㉠ 역사적 <u>고찰</u> ㉡ 역사적 <u>기록</u> ㉢ 이분들은 역사적 <u>희생자</u> 입니다. ㉣ 역사적 사건이나 유물은 <u>옛날의 것</u> 이면서 <u>오늘날에도 그 영향력</u> 을 발휘하고 있다. ㉤ 역사적인 <u>실존 인물</u> ㉥ 역사적인 <u>관점</u> ㉦ 이곳은 <u>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요한</u> 곳이다. ㉧ 나는 신화(神話)에는 역사적인 <u>측면</u> 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역사에 남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 80년대라는 <u>시대 구분</u> 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 ㉡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3) 오랜 시대를 거쳐 전해지는.	㉠ 우리 학교는 역사적 전통이 깊다. ㉡ 언어는 역사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2) ‘예술’ 및 ‘예술적’ 용어의 사전적 정의와 용례

○ ‘예술’ 및 ‘예술적’의 사전적 정의

[표 4-3] ‘예술’ 및 ‘예술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용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예술’	(1)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어떤 재주나 능력이 탁월하여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
	(3) 학예(學藝)와 기술(技術)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술적’	(1) 예술의 특성을 지닌.	(1) 예술의 특성을 지닌.
	(2) 예술의 면에서 보는.	(2) 예술의 면에서 본.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 사전별 대표 정의 채택의 비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1번 뜻으로 삼음
 - 여기서의 ‘기예²’는 “예술로 승화될 정도로 갈고닦은 기술이나 재주”,

- ‘학술’은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함
- 재주, 기술, 학문 등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됨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1번 뜻으로 삼음
 - 대표 정의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판단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산물로 정의됨
 - ‘예술적’은 상위어인 ‘예술’의 “특성을 지닌”과 “면에서 보는”이라 정의됨
 - ‘특성’은 “한 대상을 특징짓는 고유한 성질”로서 배타적 구분 기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면’은 “일의 어떤 부분이나 측면”으로 관점, 연관성, 관계를 의미함
 - 따라서 ‘예술적’은 ‘예술’로 지칭되거나, 관련된 것들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됨

[표 4-4] ‘예술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용어	세부 정의	용례
‘예술적’	(1) 예술의 특성을 지닌	㉠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도 이를 계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예술적 작품들도 때로는 선정성 여부로 논란이 될 수 있다. ㉢ 윤동주 시인은 삶 자체가 예술적이다. ㉣ 외딴섬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예술적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2) 예술의 면에서 보는	㉠ 이상의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 요즘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연극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그의 작품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3) ‘학술’ 및 ‘학술적’ 용어의 사전적 정의

○ ‘학술’ 및 ‘학술적’의 사전적 정의

[표 4-5] ‘학술’ 및 ‘학술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용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학술’	(1) 학문과 관계되는 기술이나 방법, 또는 그 이론	(1)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학술적’	(1) 학문과 기술의 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1) 학술에 관한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 사전별 대표 정의 채택의 비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1번 뜻으로 삼음
 - ‘학문¹’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의미하며, ‘기술¹’은 “원리나 지식을 적용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단”을 의미함
 - 따라서 ‘학술’은 지식과 그를 이용한 수단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학문과 관계되는 기술이나 방법, 또는 그 이론”으로 정의함
 - 여기에서 ‘학술’의 지칭 대상은 기술, 방법, 또는 이론
- ‘학술적’은 두 사전 모두 ‘학술’에 관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용례 분석 결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 가능

[표 4-6] ‘학술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용어	세부 정의	용례
‘학술적’	학문과 기술의 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또는 그런 것.	㉠ 올해 학술 대회에서 연변의 조선족 여성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 두 선생님은 만나면 항상 학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열을 올린다.
		㉢ 이 지역은 홍적세의 빙하 흔적이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 그 발표자의 주장은 기존의 관점을 뒤집을 만한 학술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 그는 단군의 실체가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실존성이 희박한 신화 속의 시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4) ‘경관’ 및 ‘경관적’ 용어의 사전적 정의

○ ‘경관’ 및 ‘경관적’의 사전적 정의

[표 4-7] ‘경관’ 및 ‘경관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용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경관’	(1) 자연의 모습.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2) [지리] 지형, 기후, 토양, 생물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정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 또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지역.	(2) <지리>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한다.
‘경관적’	(없음)	(없음)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 사전별 대표 정의 채택의 비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산,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1번 뜻으로 삼음
 - 여기서의 ‘경관’에 대한 정의는 자연 또는 지역의 ‘풍경’에 집중하고 있으며, ‘풍경¹’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나 세상의 모습”이라 정의되어 ‘감상’이라는 가치평가 측면의 의미 포함하고 있음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1번 뜻으로 삼음
 - 국립국어원의 정의에서는 ‘지역’의 풍경까지 포함한 반면, 여기서의 ‘경관’은 대표 정의에서 ‘자연’만 언급하였으며, 그것의 ‘모습’을 의미함으로써 객관적인 형태, 모양의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음
- ‘경관적’은 두 사전에서 모두 정의하고 있지 않음

[표 4-8] ‘경관’의 하위어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어휘	세부 정의	용례
‘자연 경관’	1. [지리] 사람이 개조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 2. 원시림(原始林)이나 빙하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수려했던 자연 경관이 파괴되면 국립 공원을 찾던 탐방객은 발 길을 돌리고 말 것이다. ㉡ 그곳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 관광 도시로 육성하기에 적격지이다. ㉢ 나는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경관에 취해, 민족의 영산(靈山)이란 말이 한갓 분석된 말이 아님을 절감했다. ㉣ 만폭동 계곡의 아름다움과 외금강 만물상의 경관은 금강산 풍경의 극치라 할 수 있다. ㉤ 지선이는 늠름하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성인봉의 빼어난 경관을 낮을 잃고 쳐다보았다.
‘문화 경관’	[지리] 자연 경관에 인공을 가하여 이룩한 논밭, 광공업, 교통, 도시 등의 경관	㉠ 자연공원법은 국립 공원을 우리나라의 생태계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도시 경관’	[사회]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등의 구성물이 만들어 내는 경관	㉠ 우리는 그 별장의 주변 경관이 너무 좋아서 가격과 상관없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 우리는 전망대에 마련된 망원경으로 주변 경관과 밤하늘의 천체를 감상했다. ㉢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한강에 인접해 있어서 경관이 매우 좋다.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5) ‘문화’ 및 ‘문화적’ 용어의 사전적 정의

○ ‘문화’ 및 ‘문화적’의 사전적 정의

[표 4-9] ‘문화’ 및 ‘문화적’의 사전별 정의 내용

용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화’	(1)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1)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2)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또는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 따위와 관계된 일체의 생활양식.	(2)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3) 현대적 편리성을 갖춘 생활양식의 총체.	(3) 학문을 통하여 인지(人智)가 깨어 밝게 되는 것
	(4) 학문이 진보되어서 사람이 깨어 밝게 되는 일.	-
	(5) 문덕(文德)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
‘문화적’	(1) 사회 전체 구성원의 생활양식과 행동 양식 및 그 기반이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소산과 관련이 있는. 또는 그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는.	(1) 문화와 관련된.
	(2) 한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누리는. 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있는.	(2) 높은 문화 수준에 있는.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 사전별 대표 정의 채택의 비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1번 뜻으로 삼음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

틀어 이르는 말”을 1번 뜻으로 삼음

- ‘문화’는 두 사전에서 모두 그 목적, 형성 방식, 지칭 대상 등이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문화 형성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음
- ‘문화적’은 두 사전의 대표 정의에서 모두, 상위어인 ‘문화’와 ‘관련이 있는’이라 정의하고 있음
 - 2번 뜻에서는 문화를 누리는 ‘주체’ 또는 그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

[표 4-10] ‘문화적’의 세부 뜻과 그에 따른 용례 분류

용어	세부 정의	용례
‘문화적’	사회 전체 구성원의 생활양식과 행동 양식 및 그 기반이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소산과 관련이 있는. 또는 그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는.	㉮ 대전 엑스포는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교류의 차원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 나라가 공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로 지리적 요소와 함께 문화적 유산을 꼽을 수가 있다.
	한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누리는 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있는.	㉮ 고려 가요는 상층과 하층이 두루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통로였다. ㉮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주고자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자료: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및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3.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개념

-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용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용어의 세부 정의 중, 문화재에 대한 가치판단적 성격을 지닌 뜻과 그에 따른 핵심 개념을 도출
- ‘역사’ 및 ‘역사적’ 용어의 사전적 정의 분류 및 핵심 개념
 - ‘역사’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의 3가지 세부 정의로 구분하여 분석⁴⁶⁾
 - (1) 인식 : 정신적 가치 / 사료적 / 흥망 및 변천의 과정
 - (2) 내력/연혁
 - (3) 자연의 변천 자취
 - ‘역사적’의 사전적 정의는 개념 상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의 의미를 적용하여 분석

[표 4-11] ‘역사’ 및 ‘역사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용어	번호	뜻	핵심 개념
‘역사’	(1)	인간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사 ⁸ [史])	- 인식 : 정신적 가치
		인류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겪어 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천이나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춘추 [春秋])	- 기록으로서의 : 사료적 - 흥망 및 변천의 과정 : 역사적 사건 자체
	(2)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이 진행되거나 존재해 온 과정이나 추이	- 내력/연혁
	(3)	자연 현상이 변하여 온 자취	- 자연의 변천 자취
‘역사적’	(1)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나 기록과 관련된. 또는 그러한 것의 입장에서 보는	- 역사와 관련된, 또는 그 상관물 (인물, 자료) -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 역사의 측면/관점에서 본
	(2)	역사에 남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 시대의 기점이 될 만큼 역사상 중요한 - 어떤 분야에서 최초의
	(3)	오랜 시대를 거쳐 전해지는	- 전통/유구한 - 시간에 따른 변천

- ‘예술’ 및 ‘예술적’ 용어의 세부 정의 및 핵심 개념
 - ‘예술’의 사전적 정의는 2가지 세부 정의와 그에 따른 하위분류로 분석⁴⁷⁾

46) 세부 정의 (4)인 “해당 분야의 역사학적”은 학술적 가치와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제외

47) 세부 정의 (2)인 “어떤 재주나 능력이 탁월하여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예

- (1)-① 인간활동
 - (1)-② 산물
 - (3)-① 예능
 - (3)-② 학문
 - (3)-③ 기술
- ‘예술적’의 사전적 정의는 개념 상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의 의미를 적용하여 분석

[표 4-12] ‘예술’ 및 ‘예술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용어	번호	뜻	세부 분류			핵심 개념
‘예술’	(1)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①	인간 활동		- 아름다움/창조
			②	산물		
	(3)	학예와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①	예능	연예	- 연예
					기능	- 기량과 재능
					기예	- 기술/솜씨 - 재주/솜씨 - 연예
			②	학문		- 학문/지식/과학
			③	기술		- 기술/솜씨
‘예술적’	(1)	예술의 특성을 지닌	- 예술을 통해 느끼는 감각, 정서 등의 영향력 · 감수성(자극, 느낌) · 감흥(흥취) - 예술과 관련된 작품/인물 등에 관한			
	(2)	예술의 면에서 보는	- 대중성 및 여타 성질과는 별개로, 예술의 측면에서 인정되는 - 완성도가 높은			

○ ‘학술’ 및 ‘학술적’ 용어의 세부 정의 및 핵심 개념

- ‘학술’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의 1가지 세부 정의로 분석⁴⁸⁾
- (1) 학문 관련 기술/방법

술적 가치와 중복되는 부분으므로 제외

48) 세부 정의 (4) “학문이 진보되어서 사람이 깨어 밝게 되는 일” 과, (5) “문턱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은 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제외

- ‘학술적’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의 2가지 세부 정의로 분석⁴⁹⁾
 -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표 4-13] ‘학술’ 및 ‘학술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용어	번호	뜻	핵심 개념
‘학술’	(1)	학문과 관계되는 기술이나 방법, 또는 그 이론	- 학문 관련 기술/방법
‘학술적’	(1)	학문과 기술의 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또는 그런 것	- 학문과 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 학문과 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을 규명할 근거가 되는

○ ‘경관’ 및 ‘경관적’ 용어의 세부 정의 및 핵심 개념

- ‘경관’의 정의 및 이에 따른 ‘경관적 가치’라는 용어는 사전적 정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치판단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경관’의 하위 개념을 기준으로 분석
 - (1) 자연 경관
 - (2) 문화 경관
 - (3) 도시 경관

[표 4-14] ‘경관’ 및 ‘경관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용어	번호	뜻	핵심 개념
‘자연 경관’	(1)	1. [지리] 사람이 개조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 2. 원시림(原始林)이나 빙하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자연 그대로의 모습
‘문화 경관’	(1)	[지리] 자연 경관에 인공을 가하여 이룩한 논밭, 광공업, 교통, 도시 등의 경관	- 자연+인공의 모습
‘도시 경관’	(1)	[사회]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등의 구성물이 만들어 내는 경관	- 도시 구성물의 모습

○ ‘문화’ 및 ‘문화적’ 용어의 세부 정의 및 핵심 개념

-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의 3가지 세부 정의로 구분하여 분석⁵⁰⁾

49) ‘학술적’에 대한 세부 정의는 한 가지이나 용례 분석 결과 두 가지 의미 도출

50) 세부 정의 (4) “학문이 진보되어서 사람이 깨어 밝게 되는 일” 과, (5) “문턱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은 문

-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 (3) 현대적·편리한 생활양식
- ‘문화적’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의 2가지 세부 정의로 구분하여 분석⁵¹⁾
 - (1) 문화와 관련 있는
 - (2) 문화를 누리는 주체/수준

[표 4-15] ‘문화’ 및 ‘문화적’ 용어의 세부 정의에 따른 핵심 개념

용어	번호	뜻	핵심 개념
‘문화’	(1)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물질적·정신적 소산
	(2)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또는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품의 요소 따위와 관계된 일체의 생활 양식.	- 교양·지식·예술 등과 관계된 생활 양식
	(3)	현대적 편리성을 갖춘 생활 양식의 총체.	- 현대적·편리한 생활 양식
‘문화적’	(1)	사회 전체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 및 그 기반이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소산과 관련이 있는. 또는 그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는.	- 문화와 관련이 있는
	(2)	한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누리는. 또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있는.	- 문화를 누리는 주체 -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수준

화재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제외

51) 세부 정의 (4)인 “해당 분야의 역사학적”은 학술적 가치와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제외

제2절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분석

1. 법령 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규정 현황

(1) 「문화재보호법」 및 행정규칙 상의 관련 규정

-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을 적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보물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국보
 -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국가무형문화재
 - 기념물 중 ‘중요한 것’ →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

- 시행령 제1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6., 2017.6.13.>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의 규정 내용

-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보물,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규정

① 보물

- 보물은 크게 건조물/전적·서적·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음
- 보물 중 건조물에 해당되는 문화재(목조건축물류/석조건축물류/분묘/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기술적 가치’를 지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보물 중 전적·서적·문서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전적류, 서적류, 문서류로 다시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음
 - 전적류 중 사본류의 지정 대상은 ‘원본,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등으로 한정하며, 판본류는 ‘역사적·판본학적 가치’를, 활자본류는 ‘역사적·인쇄사적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서적류는 ‘역사적(서예사상 대표적인)·금석학적·사료적 가치’를 가치

평가요소로 규정

- 문서류는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가치평가 요소로 규정
- 보물 중 회화·조각과 공예품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공통적으로 ‘특이성·우수성, 문화사적·역사적(회화사적, 조각사적, 공예사적)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보물 중 고고자료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제작상의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보물 중 무구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역사적·군사적 가치 및 희귀성·대표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② 국보

- 국보는 공통적으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치평가 및 대상 한정 기준을 적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 연대, 시대 대표성, 보존가치, 우수성, 희귀성, 특이성, 저명한 인물과의 관련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③ 사적

- 사적은 제2호에서 문화재 유형별로 우선 분류한 뒤, 그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제1호에 명시된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
- ‘과거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상의 중요성, 시대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 저명한 인물과의 관련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④ 명승

- 명승은 지정이 가능한 대상과 기준을 함께 적고 있음
- ‘경관의 우수성(뛰어남), 저명함, 역사문화경관적·관상적·자연의 미관적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⑤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은 크게 동물 / 식물 / 지질·광물·지형 / 천연보호구역 / 자연현상으로 구분되어 지정 기준 규정

- 천연기념물 중 동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기본 요소인 ‘학술적 가치’와 함께 ‘한국 특유성, 저명함, 과학적 가치 및 한정적 분포 범위’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천연기념물 중 식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저명함, 지역·환경의 특수성, 대표성, 생활문화적·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천연기념물 중 지질·광물·지형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암석·지질구조의 분포지·지질 경계선/화석·산지/지질구조·퇴적구조·암석/자연지형/그 밖의 지표·지질현상으로 구분되어 규정
 - 암석·지질구조의 분포지·지질 경계선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지질계통의 ‘대표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대 대표성(전형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화석·산지는 ‘학술적 가치, 시대 대표성(표준), 다양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지질구조·퇴적구조·암석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자연지형 및 그 밖의 지표·지질현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자연지형은 ‘한국 대표성(전형성)’을, 해양 현상은 ‘특이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천연기념물 중 천연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과 ‘대표성’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천연기념물 중 자연현상에 해당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상적·과학적·교육적 가치’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⑥ 국가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는 크게 일반 민속문화재/이를 수집·정리한 것/집만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구분되어 지정 기준 규정
- 우선 ‘한국민족의 생활문화적 특색, 전형적’을 국가민속문화재로의 기본적인 지정 기준으로 규정
- 이를 수집·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변천)·시대적·지역적·생활계층의 특색’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에 대해서는 ‘전통적, 민속적, 학술적(한국건축사 연구),

고품’을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 상의 관련 규정

-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별도로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을 적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크게 7가지(전통적 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의례,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분류와는 별개로 지정 기준 마련하여 규정되고 있음
 - ‘역사적(지속성)· 학술적· 예술적(전통성, 고유성) 가치, 대표성(전통문화)· 전형의 유지’를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그 외에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위한 조사지표 등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에서 정함

-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전승능력, 참여도 등에 따라 종목 및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지정 조사 지표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가치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으로 구분하여 전승 기간,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고유성 수준 등을 측정 및 평가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은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지속성 정도, 기여 수준,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 발현 기여도 등을 측정 및 평가
- ‘[별첨 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종목([문화재청고시 제2016-19호] 기준)의 종목별 조사지표와 측정기준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의 경우, 악사, 악장, 일무로 구분하여 연주법의 전통성, 가락·장단의 정확도, 춤의 정확성 등을 측정 및 평가

2.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에 문화재 종별로 규정된 조문을 분석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치평가요소 도출 및 각 요소에 대한 세부 개념 검토
- 개념적 용어 도출 및 검토의 방법
 - 각 조문의 내용 중 가치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개념적 용어로 치환 및 사전적 개념 검토
 - ① 상위요소: 상위 가치평가용어(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용어의 세부 정의 중 해당 사항을 파악하되, 천연기념물과 명승에서의 문화적 가치는 추가요소에 해당함 (예시: ‘역사적 의의’, ‘학술적 가치’)
 - ② 추가요소(상위개념): 상위 가치평가용어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출된 용어 이지만 조문 내용 상 상위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상위요소 및 세부 정의 파악 (예시: ‘판본학적 가치’, ‘인쇄사적 가치’)
 - ③ 추가요소: 이외 상위 가치평가용어에 포함될 수 없는 추가 도출 요소인 경우, 당해 또는 관련 용어의 사전적 정의 검토 (예시: ‘희귀성’, ‘원본’)
 - 가치평가 관련 내용이 아닌, 대상 한정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
 - 예시 :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과 같은 기술 내용은 구체적인 가치 판단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외

[표 4-16] 문화재 관련 상위 가치평가용어 및 개념

어휘	번호	개념	어휘	번호	개념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역사적’	(1)	역사와 관련된/측면에서 본
	(1)-②	사료적		(2)	역사상 중요한
	(1)-③	홍망 및 변천의 과정		(3)	유구함/변천
	(2)	내력/연혁			
	(3)	자연의 변천/자취			
‘예술’	(1)-①	인간활동	‘예술적’	(1)	예술의 특성을 지닌
	(1)-②	산물		(2)	예술의 면에서 보는
	(3)-①	예능			
	(3)-②	학문			
	(3)-③	기술			
‘학술’	(1)	학문 관련 기술/방법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어휘	번호	개념	어휘	번호	개념
‘경관’	(1)	자연 경관	‘경관적’	-	(‘경관’의 하위어로 적용)
	(2)	문화 경관			
	(3)	도시 경관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문화적’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2)	문화를 누리는 주체/누릴 수 있는 수준
	(3)	현대적·편리한 생활양식			

(1) 보물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17] 보물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건조물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예술적 가치	예술	(1)-② 산물 (3)-③ 기술	상위요소
			기술적 가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3) 현대적·편리한 생활양식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적·서적·문서	전적류	사본류	원본	원형	원본 : 베끼거나 고치거나 번역한 것 등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서류나 그림 또는 책	추가요소
			우수한 고사본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추가요소 (상위개념)
				역사적	(3) 유구함/변천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역사	(2) 내력/연혁	추가요소 (상위개념)
		판본류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판본학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활자본류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인쇄사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서적류	서예사상 대표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금석학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사료적 가치	역사	(1)-(2) 사료적	추가요소 (상위개념)
	문서류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사료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2) 내력/연혁	추가요소 (상위개념)
회화·조각		형태·품질·기법·제작 등 특이성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문화사적으로 귀중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제작기법 우수한	예술	(1)-① 인간활동 (3)-③ 기술	추가요소 (상위개념)
		회화사적으로 귀중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조각사적으로 귀중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특수한 작가/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공예품		형태·품질·기법·용도 특성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문화사적으로 귀중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공예사적으로 귀중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제작기법 우수한	예술	(1)-① 인간활동 (3)-③ 기술	추가요소 (상위개념)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고 고 자 료	선사시대 유물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고분·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 출토품	학술적 중요한 자료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전세품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	역사적 의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학술적 자료로 중요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제작상 가치	예술	(1)-① 인간활동 (3)-③ 기술	추가요소 (상위개념)
무 구	전사상 사용된 무기	희귀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사상 대표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역사적 명장이 사용한 무구류	군사적 의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추가요소 (상위개념)

(2) 국보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18] 국보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예술적 가치	예술	(1)-② 산물 (3)-③ 기술	상위요소
	제작연대 오래된	역사적	(3) 유구한/변천	추 가 요 소 (상위개념)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추 가 요 소 (상위개념)
	보존가치	보존가치	-	추가요소
	제작의장·기술 우수한	예술	(1)-① 인간활동 (3)-③ 기술	추 가 요 소 (상위개념)
	유레가 적은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 가 요 소 (상위개념)
	형태·품질·제재·용도 특이한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 가 요 소 (상위개념)
	저명한 인물과 관련 깊은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 가 요 소 (상위개념)

(3) 사적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19] 사적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사회·문화생활 이해에 중요한 정보 가진	학술적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시대 대표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추가요소 (상위개념)
	희소성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상징성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추가요소 (상위개념)
	국가의 역사적 사건과 연관성	역사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상위요소
	국가의 저명한 인물 삶과 연관성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4) 명승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20] 명승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섬 등		자연경관 뛰어난	경관	(1) 자연 경관	상위요소
동·식물·서식지	아름다운 식물의 군락지	경관 뛰어난	경관	(1) 자연 경관	상위요소
		저명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서식지	경관 뛰어난	경관	(1) 자연 경관	상위요소
		저명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저명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저명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명산, 협곡, 해협, 꽃, 급류, 심연, 폭포, 호수와 늪, 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 대, 바위, 동굴 등		역사적	역사	(3) 자연의 변천/자취	상위요소
		경관적	경관	(1) 자연 경관	상위요소
		문화적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경승지	전설지	저명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5)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2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동물	동물 및 서식지·번식지	한국 특유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저명함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특수 환경의 동물(군) 및 서식지·번식지 ·도래지	특수환경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 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문화 관련 보존 필요한 동물 및 서식지·번식지	문화 관련 보존 필요한	보존가치	-	추가요소
	축양동물과 산지	한국 특유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동물자원· 표본·자료	한국 특유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과학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 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 거가 되는	상위요소
	분포 범위 한정된 동물(군) 및 서식지·번식지	분포 범위 한정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 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식물	한국 자생식물	저명함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식물·식물군 ·식물군락· 숲	특수지역·환경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 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문화·민속· 관상·과학 등 관련 보존 필요한 식물 및 생육지·자생지	보존 필요한	보존가치	-	추가요소
	인공 수림지	생활문화 관련 가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추가요소 (상위개념)
	수림, 명목, 노거수, 기형목	문화적 가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과학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 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경관적 가치	경관	(1) 자연 경관	상위요소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원시림·고산 식물지대, 식물상	대표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생활·민속· 의식주·신앙 등 관련 유용식물·생 육지	생활·민속·의식주· 신앙 등 관련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유용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 질 · 광 물 · 지 형	암석 · 지질 구조 의 분포 지· 지질 경계 선	지질 구조, 암석	지판 이동 증거	학술적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노두 및 분포 지	지질시대 대표하는	역사	(3) 자연의 변천/지취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형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질 경계 선	전형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화석 · 산지	표준 화석, 산지	지질시대 대표하는	역사	(3) 자연의 변천/지취	추가요소 (상위개념)
		시상 화석, 산지	퇴적 환경 해석하는데 주요한	학술적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화석 의 모식 표본, 산지	보존가치	보존가치	-	추가요소
		기타 화석, 산지	다양한 화석 산출되는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지질 구조 · 퇴적 구조 · 암석	암석	특이한 구조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자연지형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한국 대표하는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형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표·지질 현상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상위요소
		특이한 현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천연보호구역		생물적 특성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구과학적 특성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문화적 특성	문화적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역사적 특성	역사	(3) 자연의 변천/지취	상위요소
		경관적 특성	경관	(1) 자연 경관	상위요소
		대표적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구의 주요 진화단계 대표하는	역사	(3) 자연의 변천/지취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질학적 과정·생물학적 진화·인간자연 상호작용 대표하는	역사	(3) 자연의 변천/지취	추가요소 (상위개념)
자연현상		관상적 가치	경관	(1) 자연 경관	추가요소 (상위개념)
		과학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교육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추가요소 (상위개념)

(6)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22]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일반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 나타내는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형적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민속 문화재를 수집·정리 한 것	역사적 변천 나타내는	역사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상위요소
	시대적 특색 나타내는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지역적 특색 나타내는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생활계층 특색 나타내는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	전통적 생활양식 보존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민속적 풍경 보존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제공하는 민가군 있는	학술적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통적 전원생활 면모 간직한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역사적 사실·전설·설화와 관련 있는	역사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상위요소
	고풍이 현저한	경관	(2) 문화 경관 (3) 도시 경관	추가요소 (상위개념)

(7)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표 4-23]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상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	문화적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상위요소
	역사적 가치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상위요소
	학술적 가치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상위요소

세부 대상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상위가치 평가용어	가치평가요소의 세부 개념	비고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예술적 가치	예술	(1)-① 인간활동 (3)-① 예능	상위요소
	전통문화의 고유성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추가요소 (상위개념)
	기술적 가치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통성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추가요소 (상위개념)
	대표성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추가요소 (상위개념)
	전형 유지	원형	전형 : 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	추가요소

○ 추가 도출 요소의 검토 및 분류

- 문화재 지정기준 조문 검토 결과, 31가지 가치평가 관련 용어가 5가지 상위 가치평가요소 이외에 추가적인 가치평가 관련 용어로 확인
 - ‘고사본’, ‘우수성’, ‘공예사적’ 등 28개 용어는 그 의미상 상위 가치평가용어에 포함될 수 있는 하위개념으로 판단되며, 위의 표에 사전적 정의에 따른 세부 개념 기입
- 상위 가치평가용어에 개념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추가 요소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의 적용 대상 및 내용 분석
 - ‘보존가치’, ‘원형’의 2가지 개념은 상위 가치평가요소와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가치평가요소로 판단

[표 4-24] 문화재 가치평가 관련 추가 도출 요소 및 개념 분류

추가 도출 요소	가치평가요소 개념화 및 하위 세부 용어	
계통적, 고사본, 고풍, 공예사적, 과학적, 관상적, 교육적, 군사적, 금석학적, 기술적, 대표성, 문화사적, 민속적, 보존가치, 사료적, 생물적, 생활문화, 오래됨, 우수성, 원본, 유용성, 인쇄사적, 저명함, 전형적, 조각사적, 지구과학적, 특이성, 판본학적, 한국성, 회화사적, 회귀성	상위 가치 평가 요소	역사적 : 고사본, 계통적, 군사적, 대표성(시대/단계), 사료적, 오래됨
		예술적 : 우수성(제작/기법/형태)
		학술적 : 공예사적, 과학적, 교육적, 금석학적, 대표성(종/구역/유파/계통 등), 문화사적, 생물적, 인쇄사적, 조각사적, 지구과학적, 특이성, 판본학적, 회화사적, 회귀성
		경관적 : 고풍, 관상적
		문화적 : 기술적, 대표성(지역), 민속적, 생활문화, 유용성, 저명함, 한국성
추가 요소	보존가치	
	원형 : 원본, 전형적	

○ 추가 가치평가요소의 개념 및 평가 대상

- ‘보존가치’의 경우, 국보와 천연기념물 중 동·식물의 서식지, 화석과 산지 등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문화·민속·관상·신앙·과학 등과 관련된 보존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됨
 - 평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객관적인 가치평가지표로 사용되기 어려움
- ‘원형’의 경우, 보물 중 전적류(사본류)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모두 문화재 자체의 원본 또는 전형 유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됨

[표 4-25] 추가 가치평가요소의 평가대상

가치 평가용어	문화재 구분			가치평가 관련 조문 내용	추가요소의 평가대상
보존 가치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가치	(문화재 자체)
	천연 기념물	동물	문화 관련 보존 필요한 동물 및 서식지·번식지	문화 관련 보존 필요한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 관련)
		식물	문화·민속·관상·과학 등 관련 보존 필요한 식물 및 생육지·자생지	보존 필요한	(문화·민속·관상·과학 등 관련)
		지질·광물·지형	화석·산지	보존가치	종(種)
원형	보물	전적·사적·문서	전적류	원본	(문화재 자체)
	국가무형문화재			전형 유지	(문화재 자체)

3. 문화재 세분류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관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가치평가요소를 문화재 종목별로 검토한 후, 각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관계 분석
 - 문화재 종별 지정기준에 명시된 가치평가요소를 종합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각 평가요소 및 문화재 지정 종목별로 규정 사항이 다르게 나타남
 -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모든 문화재 지정 종목에서 가치평가요소로 규정되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는 명승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평가기준으로 규정되고 있음
 - 그밖에 예술적·경관적·보존가치·원형의 요소는 문화재 지정종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있는 상황
 - 그러나 동일한 가치평가요소를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세부 개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문화재 종별로 주요하게 평가하는 가치의 종류가 다를 것을 의미

[표 4-26]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현황 종합

구분	상위 가치평가요소					추가 가치평가요소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문화적	보존가치	원형
보물	○	○	○		○		○
국보	○	○	○		○	○	
사적	○		○		○		
명승	○			○	○		
천기	○		○	○	○	○	
민속	○		○	○	○		
무형	○	○	○		○		○

- 상위 가치평가요소의 문화재 종별 사용 관계
 - 역사적 가치의 경우, 문화재 종목 모두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치평가요소이지만, 세부 개념의 측면에서는 ‘역사’의 (1)-①/②/③, (2), (3)번 뜻과 ‘역사적’의 (3)번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역사’의 (1), (2)번 뜻은 대체로 보물·국보·사적·국가민속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에서 채택되어 쓰이고 있으며,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역사’의 (3)번 뜻인 ‘자연의 변천/자취’를 의미
 - 예술적 가치의 경우, 보물·국보·국가무형문화재에서 평가되는 요소이며, 보물과 국보에서는 동일하게 ‘예술’의 (1)-①/②, (3)-③번 뜻으로 사용되고

-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에서는 (3)-①번 ‘예능’의 의미로 사용됨
- 학술적 가치의 경우, 명승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치평가 요소이며, ‘학술적’의 (1), (2)번 뜻으로 사용됨
 - 보물·국보·사적·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모두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경관적 가치의 경우, 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에서 평가되는 요소이며, 명승과 천연기념물에서는 (1)번 뜻인 ‘자연 경관’, 국가민속문화재에서는 ‘문화 경관’ 및 ‘도시 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의미함
 - 문화적 가치의 경우, 국보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치평가 요소이며, ‘문화’의 (1), (2), (3)번 뜻과 ‘문화적’의 (1)번 뜻으로 사용됨
 - 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에서 동일하게 (1)번 뜻인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을 채택하여 쓰고 있으며, (2)번 뜻인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은 보물·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에서, (3)번 뜻인 ‘현대적·편리한 생활양식’은 보물에서만 사용됨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정기준상에서는 명시하고 있어 불일치함

[표 4-27] 가치평가용어의 세부 개념별 사용 현황

구분	역사					역사적	예술				학술적		경관			문화			문화적	보존 가치	원형
	(1)- ①	(1)- ②	(1)- ③	(2)	(3)	(3)	(1)- ①	(1)- ②	(3)- ①	(3)- ③	(1)	(2)	(1)	(2)	(3)	(1)	(2)	(3)	(1)		
보물	○	○	○	○		○	○	○		○	○	○				○	○	○			○
국보	○	○	○	○		○	○	○		○	○	○				○				○	
사적	○	○	○	○							○	○				○					
명승					○								○			○					
천기					○						○	○	○			○	○		○	○	
민속			○								○	○		○	○	○					
무형	○	○	○	○			○		○		○	○				○	○				○

비고	역사	(1)-① 정신적 가치, (1)-② 사료적, (1)-③ 흥망 및 변천의 과정, (2) 내력/연혁, (3) 자연의 변천/자취
	역사적	(3) 유구함/변천
	예술	(1)-① 인간활동, (1)-② 산물, (3)-① 예능, (3)-③ 기술
	학술적	(1)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에 관한, (2) 학문·기술의 이론/방법론 상 본질 규명 근거가 되는
	경관	(1) 자연 경관, (2) 문화 경관, (3) 도시 경관
	문화	(1) 행동·생활양식과 과정 및 소산, (2) 교양·지식·예술 관련 생활양식, (3) 현대적·편리한 생활양식
	문화적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제3절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시사점

-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유형에 대한 가치평가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적 설명이 부족
 - 법 제2조(정의)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재를 분류하는 기준과는 성격이 다름
- 문화재 지정기준에 규정된 가치평가 관련 다양한 용어의 사용 및 각 용어간의 통일성 부재함
 - 지정기준 내 가치평가 관련 용어는 총 130여개로 확인되었으나, 그 중 30여개 사례에서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문화적 가치’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외 90여개의 가치평가용어는 그 의미상 상기의 5가지 가치평가용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계통적·고사본·고품·공예사적·과학적·관상적’ 등 다양한 위계의 30여 종류 단어로 기술되고 있음
 - 즉, 문화재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세분류 유형 혹은 단일 종별로 모호하고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지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재 가치평가 관련 추가 도출 요소와 개념을 분류하였으나 지정기준 및 인정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제한적이어서 문화재 대상물에 대한 가치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
- 상위 가치평가요소와 추가 가치평가요소를 통하여 문화재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단순한 유형 구분에는 적합하나 문화재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
 - 단편적인 문화재 가치평가요소로 인하여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 발생
-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세부 개념과 무관한 포괄적 사용 및 부적절한 용어 채택함으로써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나타내는데 한계 발생

- 현재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주로 ‘~적(的)’ 또는 ‘~성(性)’ 과 같은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경관적’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평가용어임
 - 또한, 관련 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세부 개념별로 검토하였을 때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가치평가용어의 해석에 주관적 기준이 개입될 우려
 - 추가로 도출된 용어인 ‘보존가치’와 ‘원형’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기준 또는 지정기준으로 사용하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
- 「문화재보호법」 및 하위 지정기준 내 규정된 가치평가용어의 위계가 불일치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치평가요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상위 가치평가요소, 추가 가치평가요소, 하위 가치평가요소 등을 명문화할 필요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가치평가요소에 대해 개념적인 용어 사용과 설명을 하고 있어 명확한 문화재의 유형구분과 분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요소에 대한 설명과 기준 필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문화재에 대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이라 규정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의 네 가지 요소를 문화재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문화재 대분류 유형별(유형/무형/기념물/민속) 구체적인 종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 기념물 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제외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추가 가치평가요소로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에서는 보다 세분된 문화재 종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 유형에서 ‘문화적’을 가치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제2조의 문화재 정의에 대한 내용과 불일치함
- 즉,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치평가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재 유형 및 종목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성적인 가치판단의

측면에 있어 각 문화재별 배타적인 분류의 기준과 틀이 구성될 필요

- 즉, 가치평가용어를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치평가용어의 사용과 개발이 필요

제5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DB 구축 및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요소의 DB 구축 현황

제2절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DB 분석

제3절 가치평가요소 DB 분석의 시사점

제5장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DB 구축 및 분석

제1절 문화재 가치평가요소의 DB 구축 현황

○ 문화재 가치평가요소 DB 구축 개요

- 조사기간
 - 2017년 5월 ~ 9월
- 조사대상
 - 총 3,713건의 지정문화재 현황(2017년 5월 지정기준)
 - 국보 (320건)
 - 보물 (1935건)
 - 국가무형문화재 (126건)
 - 국가민속문화재 (286건)
 - 사적 (479건)
 - 천연기념물 (457건)
 - 명승 (110건)
- 조사방법
 - 지정조사보고서, 지정사유서, 가치조사보고서, 기록화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및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서 해당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리함(한글문서)
 - 해당 문화재의 가치평가내용 중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Excel DB 구축

[표 5-1]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 관련 한글 DB 예시

문화재명	보물	제2호	옛 보신각 동종
지정일시(연도)	1963년 01월 21일	자료출처	지정문화재해설-국보·보물 편(문화재관리국, 1968)
가치평가내용	이 종은 양식상 특이한 점이나 조식에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덕대왕신종에 비견되는 대종 이다. …생략… 이 종은 두 번이나 불에 타서 원형에 손상을 입고 음향의 변질도 있었음은 유감인 주종연대(鑄鐘年代)가 뚜렷한 대종으로 주목되어야 할 유품 이다.		

[표 5-2]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 관련 엑셀 DB 예시

연번	종목	번호	세부 종목	명칭	지정일	평가 요소	가치평가 관련 주요 기술 내용
1	보물	제1호	건조물	서울 흥인지문	1963-01-21		
2	보물	제2호	공예품	옛 보신각 동종	1963-01-21	대표성	성덕대왕신종에 비견되는 대종
3	보물	제2호	공예품	옛 보신각 동종	1963-01-21	진정성	주종연대(鑄鐘年代)가 뚜렷한 대종으로 주목되어야 할 유품
4	보물	제3호	전적/ 서적/ 문서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1963-01-21		
5	보물	제4호	건조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1963-01-21	진정성	섬세한 조식은 없어도 단아한 형태로서 조성연대가 뚜렷한 귀중한 일례
6	보물	제6호	건조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1963-01-21	전형성	그 거대성과 사실성에서 여조초(麗朝初)의 기풍과 발랄(潑刺)한 이상 규지 가능
7	보물	제6호	건조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1963-01-21	예술성	사족과 조단의 조형은 사실적이고도 예리하나 귀두와 면모는 흔히 볼수 있는 용형이며 면상의 조출은 그 거대성과 비례하여 기위(奇偉)
8	보물	제7호	건조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1963-01-21	전형성	고려초기를 대표할 수 있는 걸작의 하나
9	보물	제7호	건조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1963-01-21	예술성	수법이 매우 정돈. 조화도 우려(優麗). 麗하다. 기단부에서 약간의 비대감이 없지 않으나 좋은 비례를 보여줌
10	보물	제8호	회화/ 조각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1963-01-21	전형성	이런 수법은 주로 고려에 들면서 유행 하던 것
11	보물	제9호	건조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1963-01-21	전형성	여말석비의 새 계류를 형성하는 호례(好例)
12	보물	제10호	건조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1963-01-21		
13	보물	제11-1~8호	공예품	사인비구 제작 동종-포항 보경사 서운암동종, 문경 김룡사 동종, 홍천 수타사 동종, 안성 청룡사 동종, 서울 화계사 동종, 통도사 동종, 의왕 청계사 동종, 강화 동종	2000-02-15	전형성	조선 후기 종과 장인사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14	보물	제11-1~8호	공예품	사인비구 제작 동종-포항 보경사 서운암동종, 문경 김룡사 동종, 홍천 수타사 동종, 안성 청룡사 동종, 서울 화계사 동종, 통도사 동종, 의왕 청계사 동종, 강화 동종	2000-02-15	진정성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지닌 형태를 합해 종을 만든 승려 사인비구
15	보물	제12호	건조물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1963-01-21	예술성	각부 결구에 있어 규율성이 있고 탑신부의 각층 비례도 조화를 얻어 아직도 격을 잃지 않은 우작(優作)

제2절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DB 분석

1. 국보

1) 국보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

(1) 총괄분석

○ 세부유형 및 시기별 지정 경향

[표 5-3] 세부 유형 및 시기별 국보지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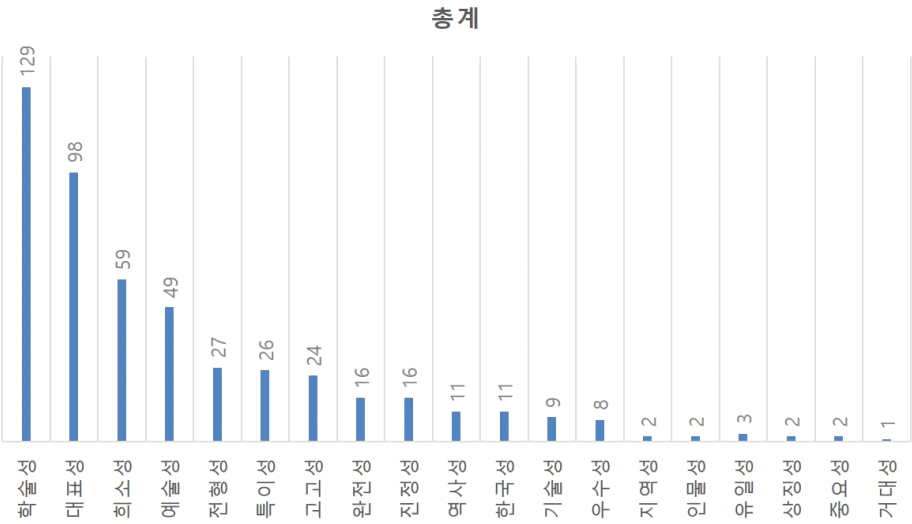
	건조물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문서	고고자료
1960년대	64	28	33	8	0
1970년대	3	12	37	16	6
1980년대	10	13	8	17	2
1990년대	3	11	19	19	1
2000년대	3	5	2	2	0
2010년대	3	2	0	4	0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 검색(2017.9. 기준)

-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문화재 지정이 처음 이루어진 1960년대에는 건조물의 지정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1970년대에는 고분에서 나온 금속공예품과 도자기류의 문화재가 다수 지정되어 공예품의 지정 건수가 높았음
- 1980년대는 고문서가 다수 지정됨에 따라 전적/서적/문서의 지정 건수가 높았음
- 1990년대는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문서 유형의 국보지정이 고루 이루어 졌음
- 2000년대에 들어서 국보지정 건수는 눈이 띄게 줄었으며 회화/조각이 5건 지정되어 가장 많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됨
- 2010년대에는 전적/서적/문서가 가장 많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

○ 가치평가요소 총괄 빈도

- 국보지정에 나타난 가치평가요소는 총 19개로 그중 학술성(26.1%)이 문화재 지정에 있어 가장 많은 가치평가요소로 사용된 것 확인
- 그다음으로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등의 순으로 확인



[그림 5-1] 국보 가치평가요소 총계표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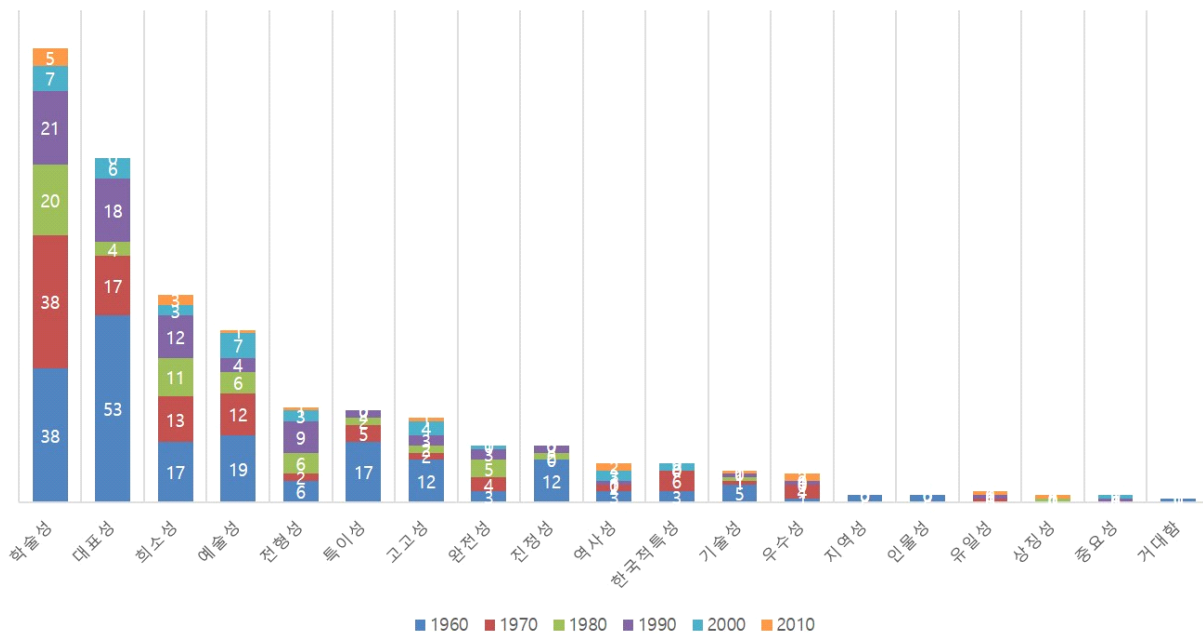
[표 4-4] 국보 지정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음영 표시: 요소별 가장 높은 빈도)

평가요소 \ 년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총계
학술성	38	38	20	21	7	5	129
대표성	53	17	4	18	6	0	98
희소성	17	13	11	12	3	3	59
예술성	19	12	6	4	7	1	49
전형성	6	2	6	9	3	1	27
특이성	17	5	2	2	0	0	26
고고성	12	2	2	3	4	1	24
완전성	3	4	5	3	1	0	16
진정성	12	0	2	2	0	0	16
역사성	3	2	0	1	3	2	11
한국성	3	6	0	0	2	0	11
기술성	5	1	1	1	0	1	9

평가요소 \ 년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총계
우수성	1	4	0	1	0	2	8
지역성	2	0	0	0	0	0	2
인물성	2	0	0	0	0	0	2
유일성	0	1	0	1	0	1	3
상징성	0	0	1	0	0	1	2
중요성	0	0	0	1	1	0	2
거대성	1	0	0	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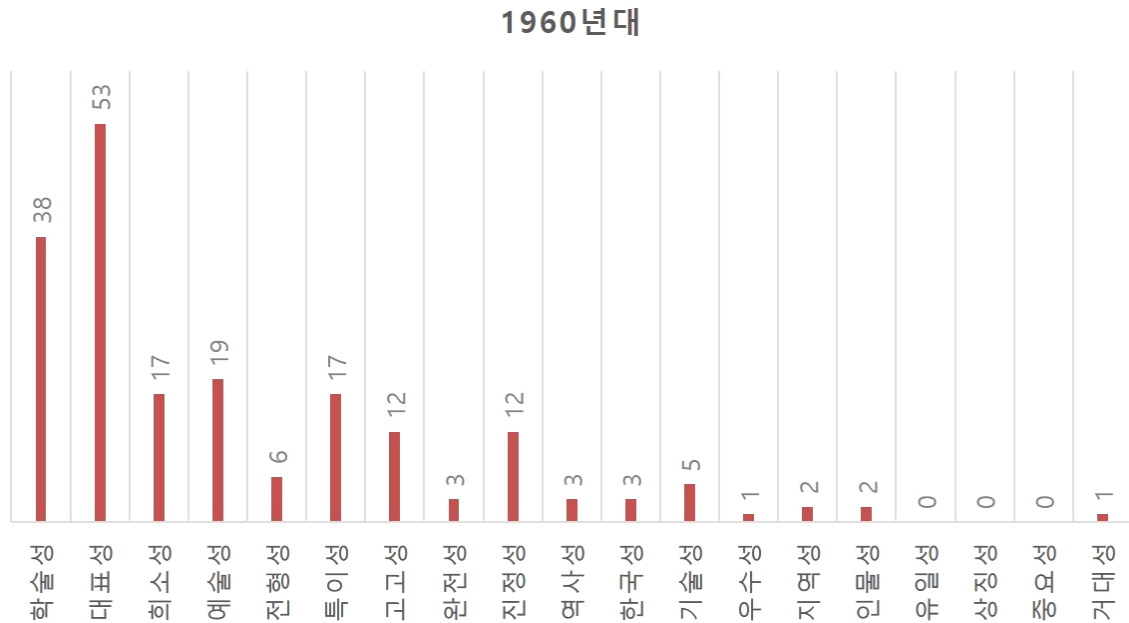
총계



[그림 5-2] 국보 가치평가요소별 시기누적 빈도표

- 문화재의 국보지정 관련 가치평가용어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학술성과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등에 집중되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학술성의 경우 1960년대 38건과 1970년대 38건으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대표성의 경우는 1960년대 53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 17건, 1990년대에 18건 등으로 나타남
- 희소성, 예술성, 전형성 특이성, 고고성, 진정성 등도 1960년대에 많이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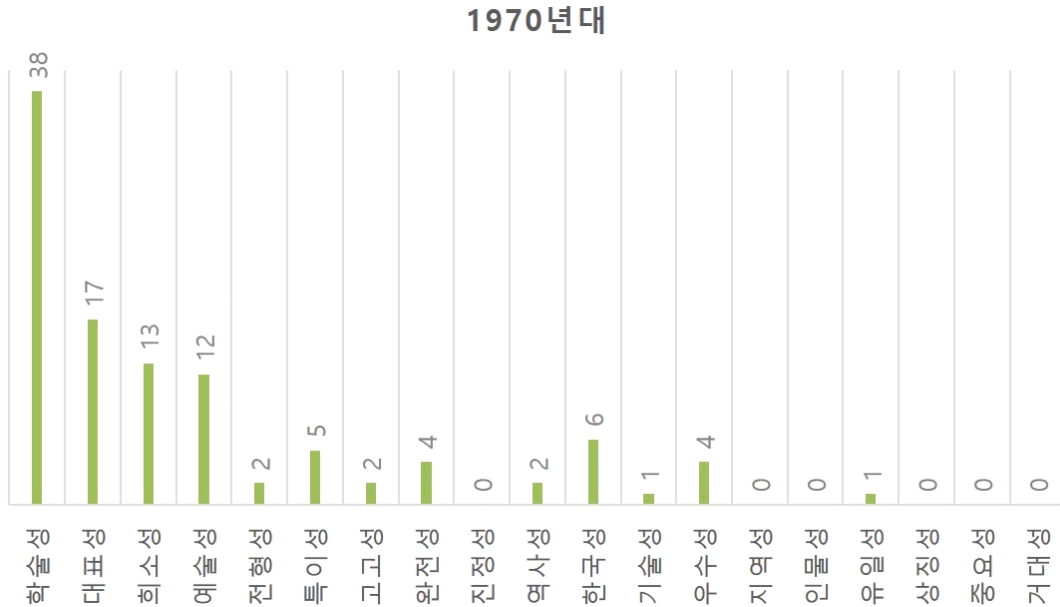
○ 1960년대



[그림 5-3] 국보 196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60년대의 경우 대표성이 53건으로 국보로 지정되는 데 가장 크게 평가요소로 작용한 것 확인
- 1960년대에는 학술성이 38건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
- 지역성, 인물성, 거대성은 1960년대에만 확인되는 가치평가 요소
- 진정성의 경우 전체 시기 중 1960년대에 가장 많이 고려됨(전체 16번 중 12번)
-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기술성에 대한 고려가 높았음
- 1960년대는 법상의 가치평가 용어인 학술성, 대표성, 회성, 예술성 등이 가치평가용어로 빈번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특이성, 고고성, 진정성, 전형성 등도 가치평가용어로 사용되어 일반적인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밖에 완전성, 역사성, 기술성, 우수성, 지역성, 인물성, 거대성 등이 가치평가 용어로 사용되었음
-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빈도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치평가용어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1960년대는 법률상의 가치평가용어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문화재의 가치평가에서도 제한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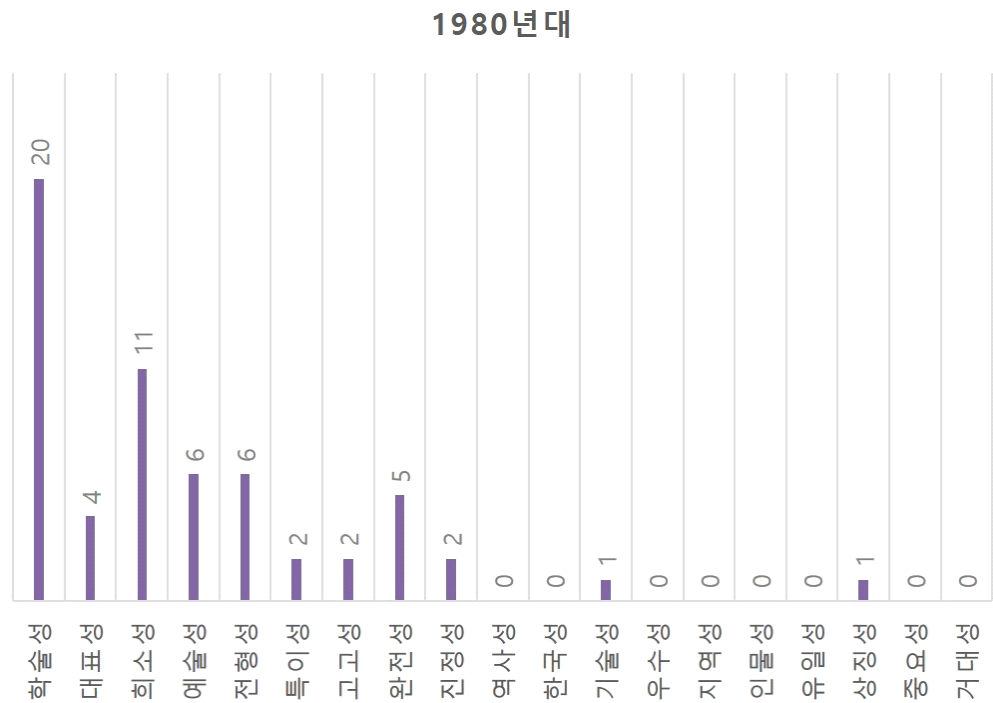
○ 1970년대



[그림 5-4] 국보 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70년대에는 학술성이 38건으로 가장 많이 고려된 가치평가요소로 확인
- 대표성 17건, 희소성 13건, 예술성 12건, 특이성이 5건으로 그 다음 순이며, 고고성과 진정성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
- 특히, 한국성과 우수성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1970년대에 두드러지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
- 공통적으로 가치평가요소는 학술성,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등이 주로 나타났다
- 또한 한국성의 경우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가치평가용어의 올바른 사용과 내용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평가용어의 개념정의를 필요
- 그러나 1970년대는 가치평가 용어의 법률상의 용어 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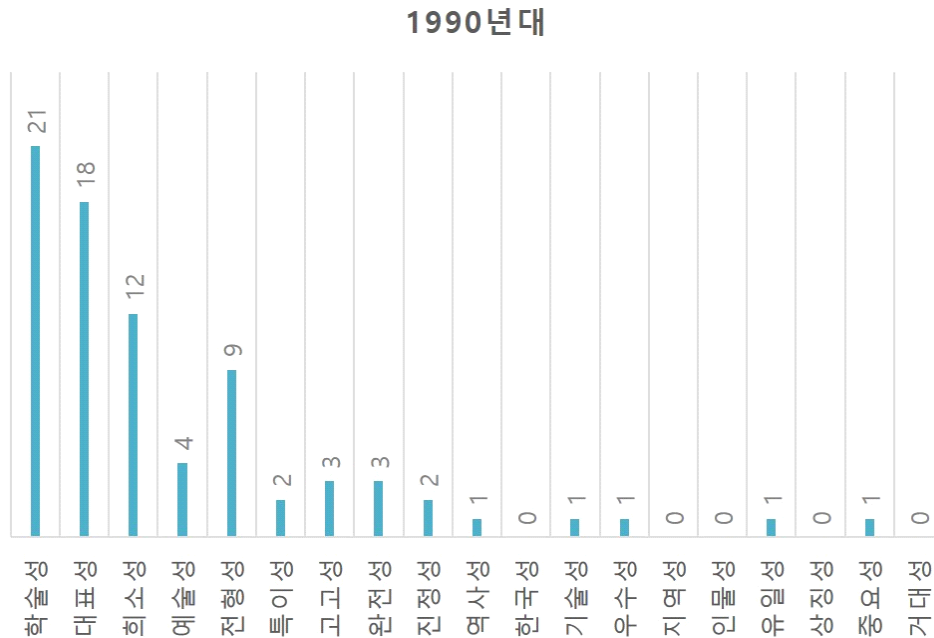
○ 1980년대



[그림 5-5] 국보 198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80년대에도 역시 학술성이 20건으로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되나, 1960~1970년대와는 달리 희소성이 11건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을 확인
- 그 다음으로는 예술성 6건, 전형성이 6건으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
- 완전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 이시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
-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도 학술성,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전형성, 완전성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1980년대의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치평가용어의 일반적 사용 이외에 상징성 등의 사용으로 가치평가용어의 다양화가 시작됨
- 그러나 1980년대 까지는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학술성,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전형성 등에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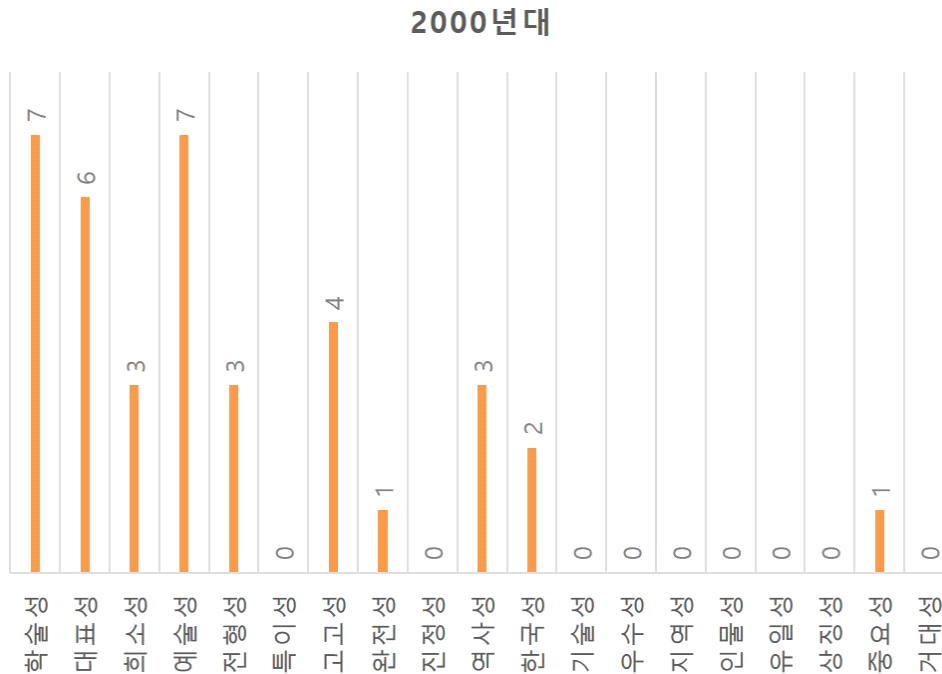
○ 1990년대



[그림 5-6] 국보 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90년대는 학술성 21건, 대표성 18건, 희소성 12건, 전형성 9건의 순으로 국보지정에 있어 가치평가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확인
- 1990년대 전형성이 9건으로 예술성 4건 보다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1990년대는 가치평가용어의 다양화에 따라 고고성, 완전성, 특이성, 유일성 등의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학술성, 대표성, 희소성, 전형성 등의 가치평가용어의 빈도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외에 기술성, 우수성, 역사성, 중요성 등은 빈도수가 1건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 따라서 1990년대 까지는 일반적인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변화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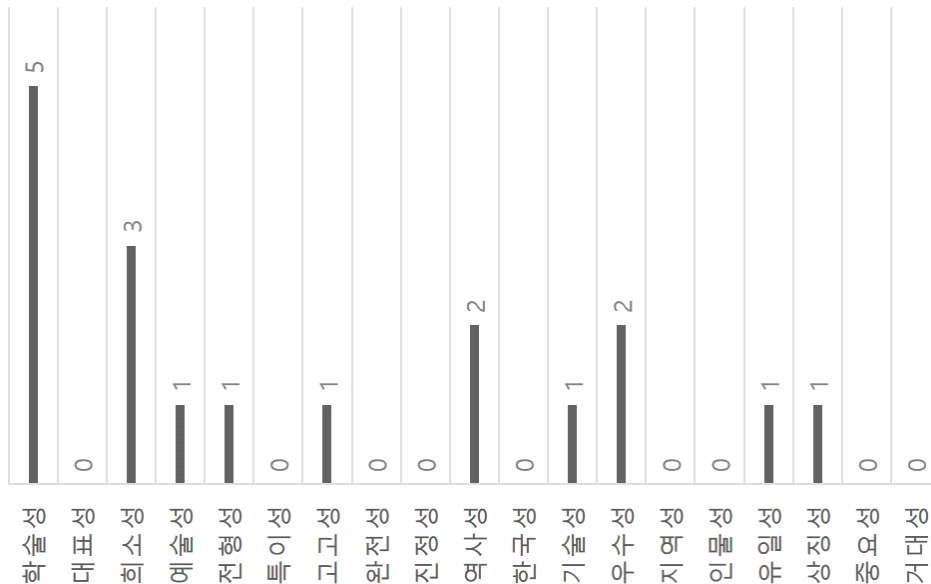


[그림 5-7] 국보 200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2000년대 전체적으로 국보지정 건수가 줄었으며, 이시기에 학술성과 예술성, 대표성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임
- 2000년대에는 회화/조각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학술성과 예술성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 가능
- 2000년대에도 여전히 학술성,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전형성 등의 가치평가 용어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그 외에 고고성, 역사성, 한국성, 중요성 등의 가치평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가치평가용어가 다르게 사용된 이유는 2000년대부터 가치평가용어의 다양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즉,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기존의 용어와는 다른 가치평가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의 인식변화를 나타내는 것임

○ 2010년대

2010년대



[그림 5-8] 국보 201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학술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음. 이는 2010년대에 전적/서적/문서 유형의 국보가 6건이 지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다른 시기에 비해 지정건수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확인
- 즉, 2010년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화재 지정이 있었지만,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다양화된 경향을 나타냄
- 기존의 학술성에 대한 가치평가 용어의 수가 가장 많은 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소성도 3개로 나타남
- 또한 예술성, 전형성 등도 1건의 빈도를 나타내어 기본적인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2010년대는 문화재의 지정 건수가 적은 반면에 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다양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다양화에 따라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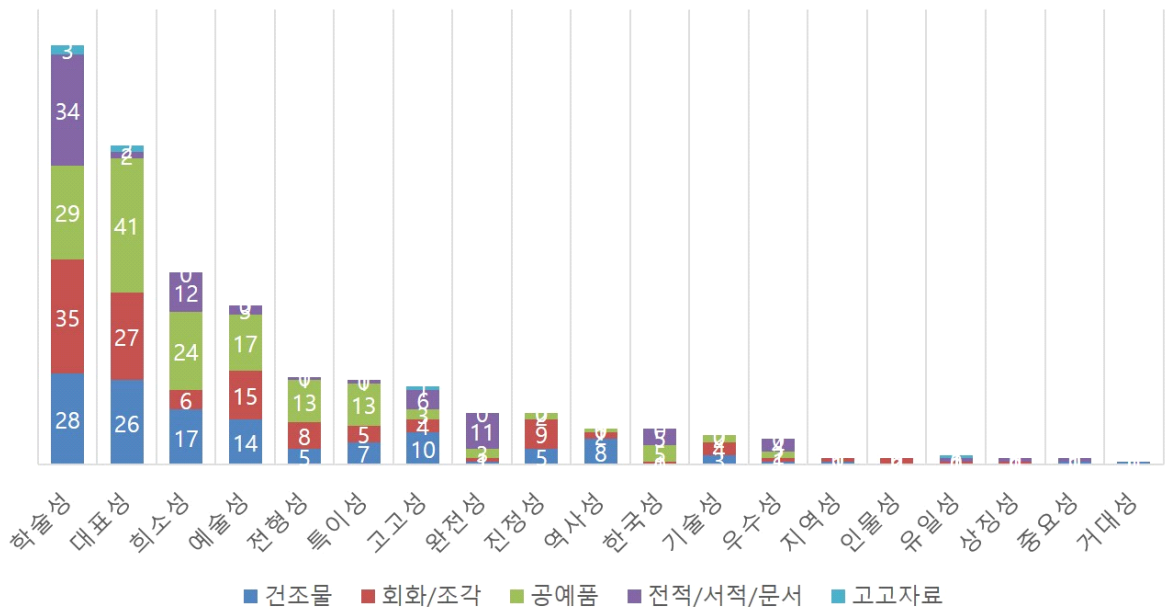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

[표 4-5] 국보 지정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붉은 색 표시: 요소별 가장 높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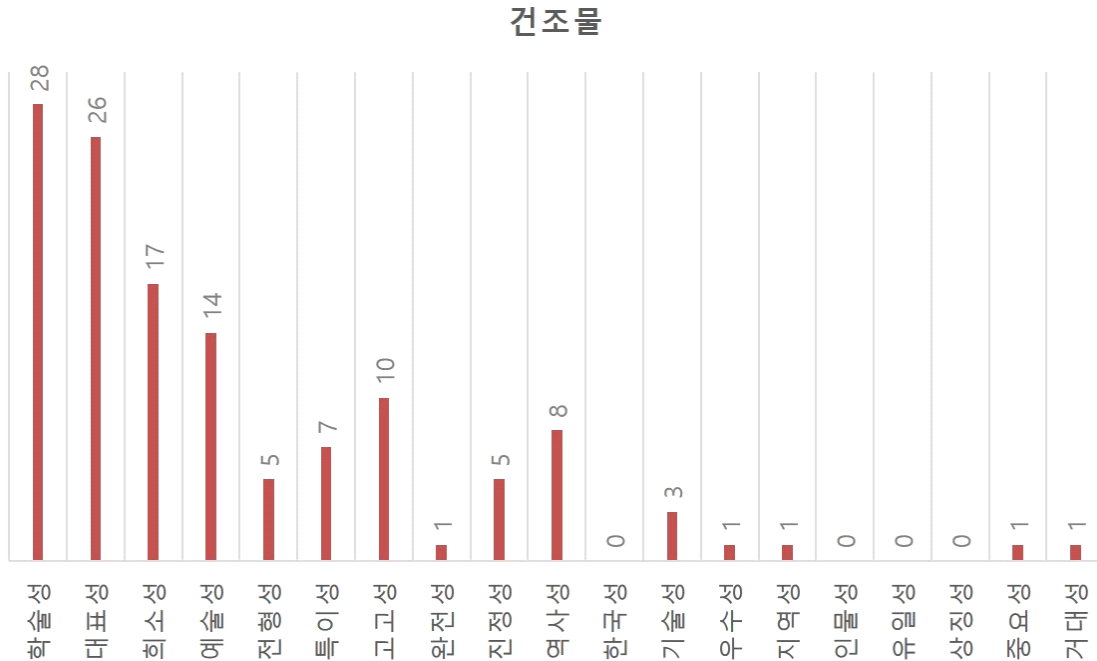
평가요소 \ 년도	건조물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문서	고고자료	총계
학술성	28	35	29	34	3	129
대표성	26	27	41	2	2	98
희소성	17	6	24	12	0	59
예술성	14	15	17	3	0	49
전형성	5	8	13	1	0	27
특이성	7	5	13	1	0	26
고고성	10	4	3	6	1	24
완전성	1	1	3	11	0	16
진정성	5	9	2	0	0	16
역사성	8	2	1	0	0	11
한국성	0	1	5	5	0	11
기술성	3	4	2	0	0	9
우수성	1	1	2	4	0	8
지역성	1	1	0	0	0	2
인물성	0	2	0	0	0	2
유일성	0	1	0	1	1	3
상징성	0	1	0	1	0	2
중요성	1	0	0	1	0	2
거대성	1	0	0	0	0	1

유형별 종합



[그림 5-9] 국보 지정 가치평가요소별 세부유형 누적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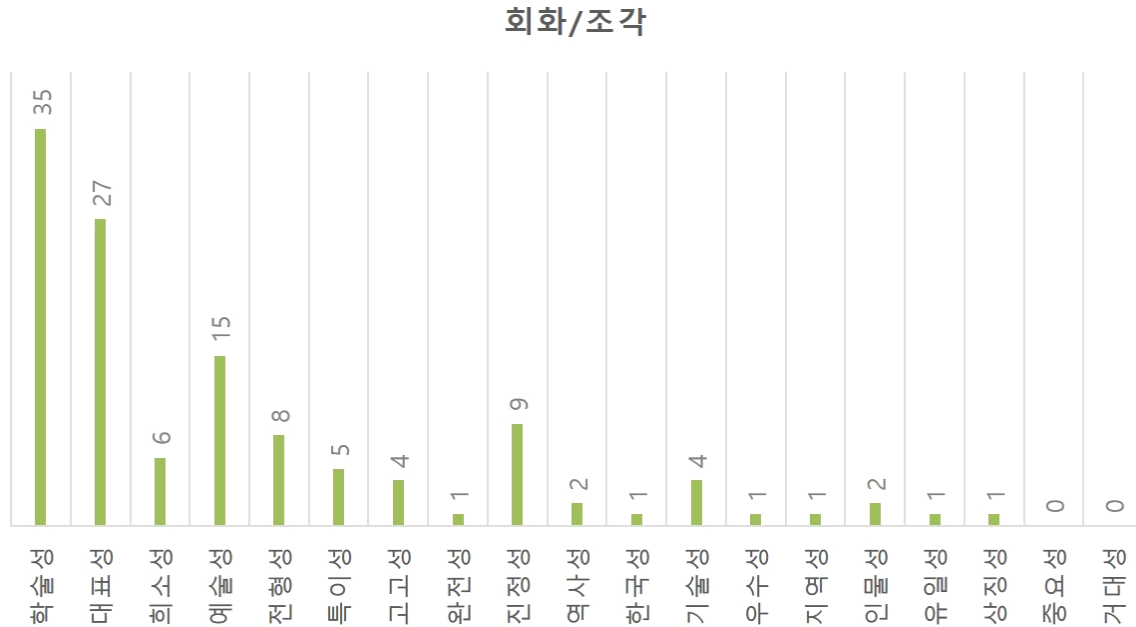
○ 건조물



[그림 5-10] 국보 건조물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건조물 유형의 경우 학술성 28건과 대표성 26건으로 가장 많은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 확인
- 고고성과 역사성은 다른 유형에 비해 건조물 유형에서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
- 그 밖에서 전형성, 진정성, 특이성 등이 건조물에서 가치평가용어로 빈번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완전성, 기술성, 우수성, 지역성, 중요성, 거대성 등이 각각 3건과 1건 등으로 나타났음
- 가치평가의 다른 용어가 나타난 결과는 문화재로서 건조물의 다양한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빈도를 나타내는 것임
- 건조물의 경우도 일반적인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경향을 나타내지만 예술성, 기술성, 희소성 등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 즉, 건조물의 경우 학술성과 같은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이외에도 건조물에 사용되는 가치평가용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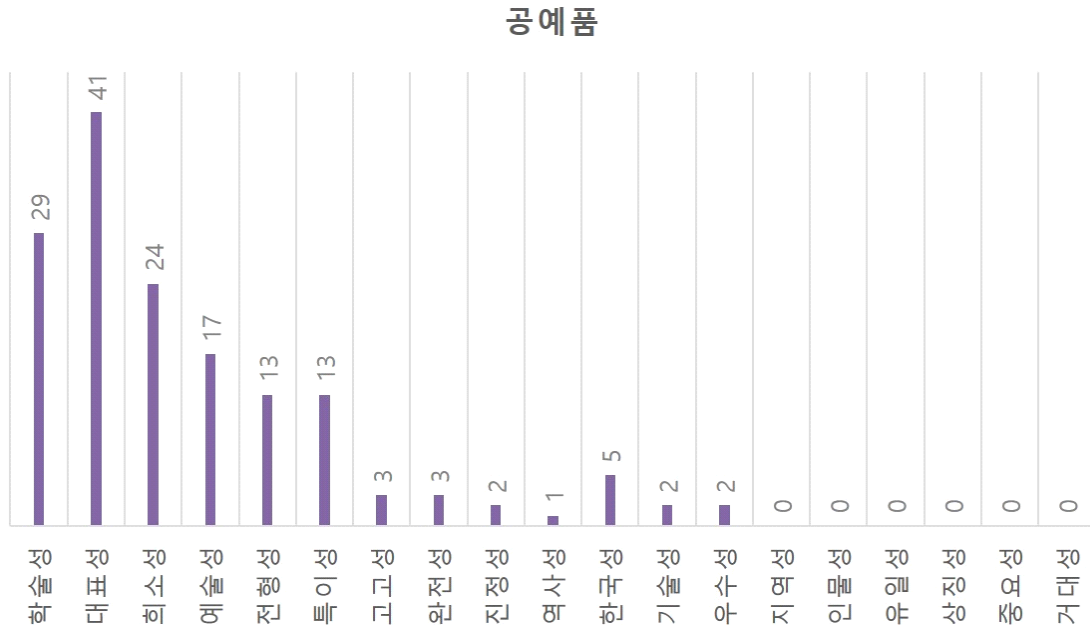
○ 회화/조각



[그림 5-11] 국보 회화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회화/조각 유형의 경우에도 역시 학술성 35건과 대표성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확인
- 그 다음으로는 예술성이 15건으로 많이 고려되었음
- 진정성과 기술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
- 회화/조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향인 학술성과 대표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회화/조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성, 전형성, 희소성, 특이성, 고고성, 진정성 등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회화/조각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성의 특징이 4건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그 밖에 완전성, 한국성, 우수성, 지역성, 인물성, 유일성, 상징성 등이 각각 1건과 2건으로 나타났음
- 즉, 회화/조각의 가치평가용어 사용에서는 다양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술성과 대표성, 그리고 예술성이 가장 보편화된 가치평가용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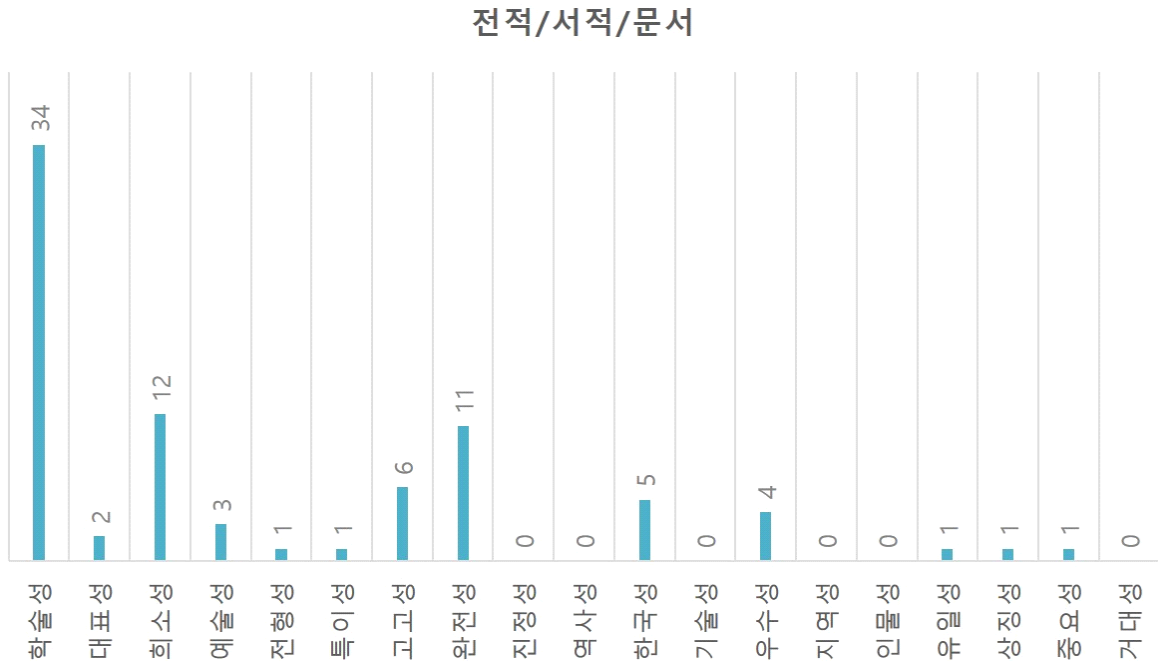
○ 공예품



[그림 5-12] 국보 공예품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공예품의 경우 대표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은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 확인할 수 있음
- 대표성, 희소성, 예술성, 전형성, 특이성, 한국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공예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로 확인
- 공예품의 경우 다른 가치평가용어 보다 대표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다음으로는 학술성과 회소성이 각각 29건과 24건을 나타내고 있어 공예품에 대한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예술성, 전형성, 특이성 등이 각각 17건, 13건, 13건 등으로 나타나 공예품의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나타남
- 그 밖에 고고성 3건, 완전성 3건, 한국성 5건, 기술성 2건, 우수성 2건, 역사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가치평가용어의 집중 경향은 공예품의 경우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대표성, 학술성, 희소성, 예술성 등 일반적인 가치평가 용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따라서 전형성 13건, 특이성 13건, 한국성 5건 등과 같이 기존의 가치평가용어와는 다른 용어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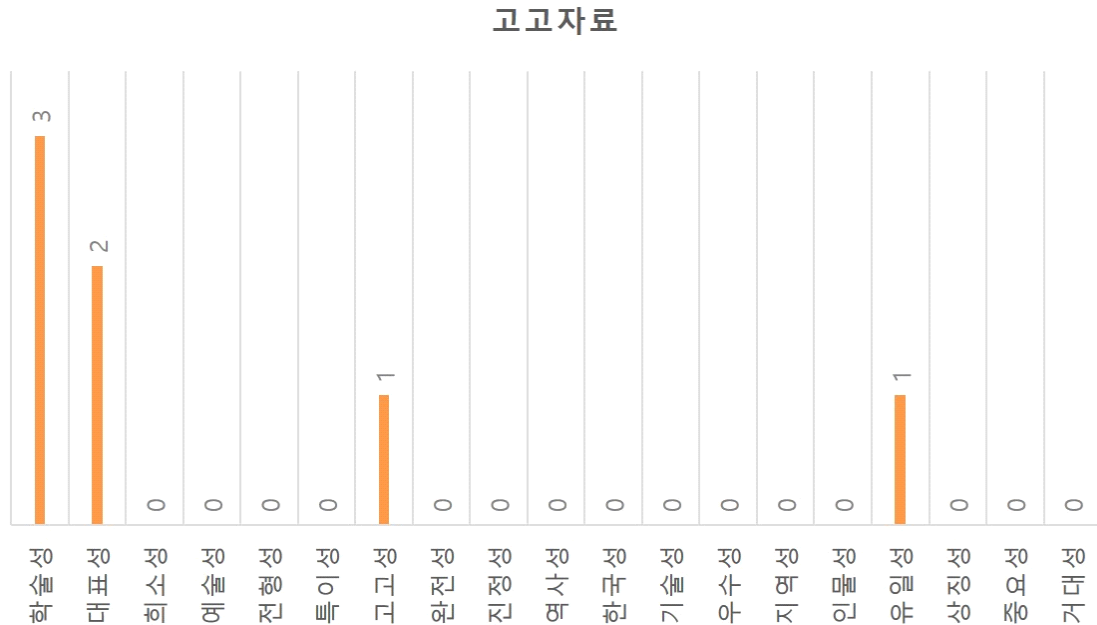
○ 전적/서적/문서



[그림 5-13] 국보 전적/서적/문서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전적/서적/문서 유형의 경우에는 학술성이 34건으로 가장 많은 가치평가 요소로 확인
- 학술성 34건, 희소성 12건, 완전성 11건이 다른 가치평가요소에 비해 전적/서적/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
- 학술성의 경우 전적/서적/문서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로 고려된 가치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즉, 전적/서적/문서의 가치평가용어에서의 사용은 학술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밖에 희소성, 12건, 완전성 11건, 고고성 6건, 우수성 4건 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표성 2건, 예술성 3건, 전형성 1건, 특이성 1건, 유일성 1건, 상징성 1건, 중요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적/서적/문서의 경우 문화재의 특성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에 집중된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고자료



[그림 5-14] 국보 고고자료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고고자료는 국보 지정 건수가 매우 적고, 학술성이 가장 많이 고려 된 것으로 확인
- 학술성, 대표성, 고고성, 유일성만이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됨
- 고고자료의 경우 다른 문화재의 경우보다 전체 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석 자료가 사용됨
- 고고자료에서는 학술성이 가장 많은 3건으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대표성 2건, 고고성 1건, 유일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즉, 고고자료의 경우 문화재의 특성상 학술적 가치에 집중한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용과는 다른 고고자료만의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현황을 알 수 있음

○ 무구

- 무구는 국보로 지정된 건이 없음

(2) 국보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대표성, 희소성 가치의 적용

-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지정 됨
- 즉 보물 중에서도 대표성과 희소성을 띤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는 것으로 이중에서도 대표성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국보 지정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유형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인물성의 경우 회화/조각에서만 확인되는 가치평가요소
- 규모와 관련 있는 거대성 또한 건조물에서만 확인되는 가치평가요소
- 특정유형에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는 분류체계 구성에 있어 구분 변수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법령 상 명시된 가치평가 요소의 두드러진 사용 확인

- 법령상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유사한 기준의 고고자료’로 정의
- 법적 정의 상 확인되는 가치평가 요소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경관성을 꼽을 수 있고, 면적인 특성이 내포된 경관성을 제외하고, 유형문화재인 국보의 가치평가에 있어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이 모두 적용된 것 확인
- 특히, 학술성과 예술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 가능
- 법령 상 명시된 가치요소가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법령 상 가치요소를 명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

2. 보물

1) 보물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

(1) 총괄분석

○ 세부유형 및 시기별 지정 경향

[표 5-6] 세부 유형 및 시기별 보물지정 건수

	건조물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문서	고고자료	무구
1960년대	302	115	47	32	0	0
1970년대	37	33	36	30	2	3
1980년대	69	78	31	158	0	13
1990년대	27	61	48	142	1	1
2000년대	38	141	60	122	0	0
2010년대	45	142	26	155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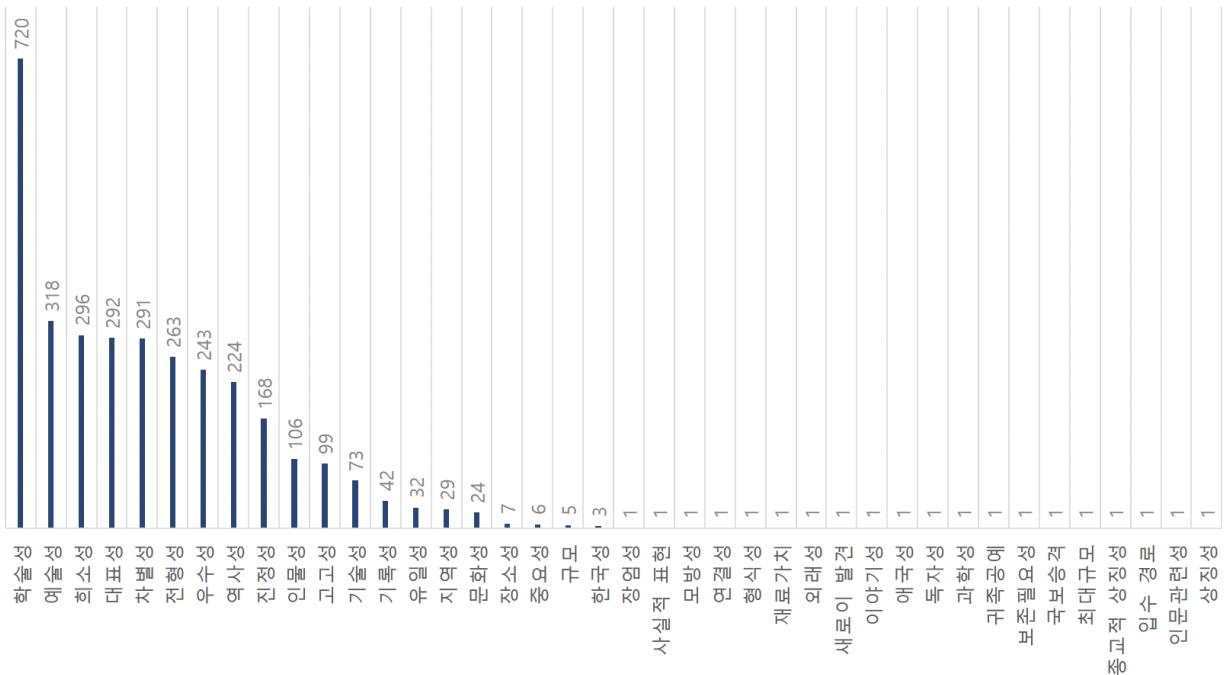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 검색(2017.9. 기준)

- 보물이 가장 많이 지정된 1960년대에는 건조물이 가장 많이 지정
- 1970년대에도 건조물이 가장 많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시기 건조물과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문서가 모두 고르게 지정된 것으로 확인
- 1980~1990년대에는 전적/서적/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물로 지정
- 특히 1980년대에는 무구의 지정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나타남
- 2000년대 이후에는 회화/조각과 전적/서적/문서의 보물 지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가치평가요소 전체 빈도

- 총 55개의 가치평가요소 확인
- 학술성이 720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의 가치평가요소로 확인
- 그 다음으로는 예술성, 희소성, 대표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보물의 경우 전형성, 우수성, 역사성, 진정성, 인물성 등이 100건 이상의 높은 빈도를 나타냄

총계



[그림 5-15] 보물 가치평가요소 총계표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

[표 5-7] 보물 지정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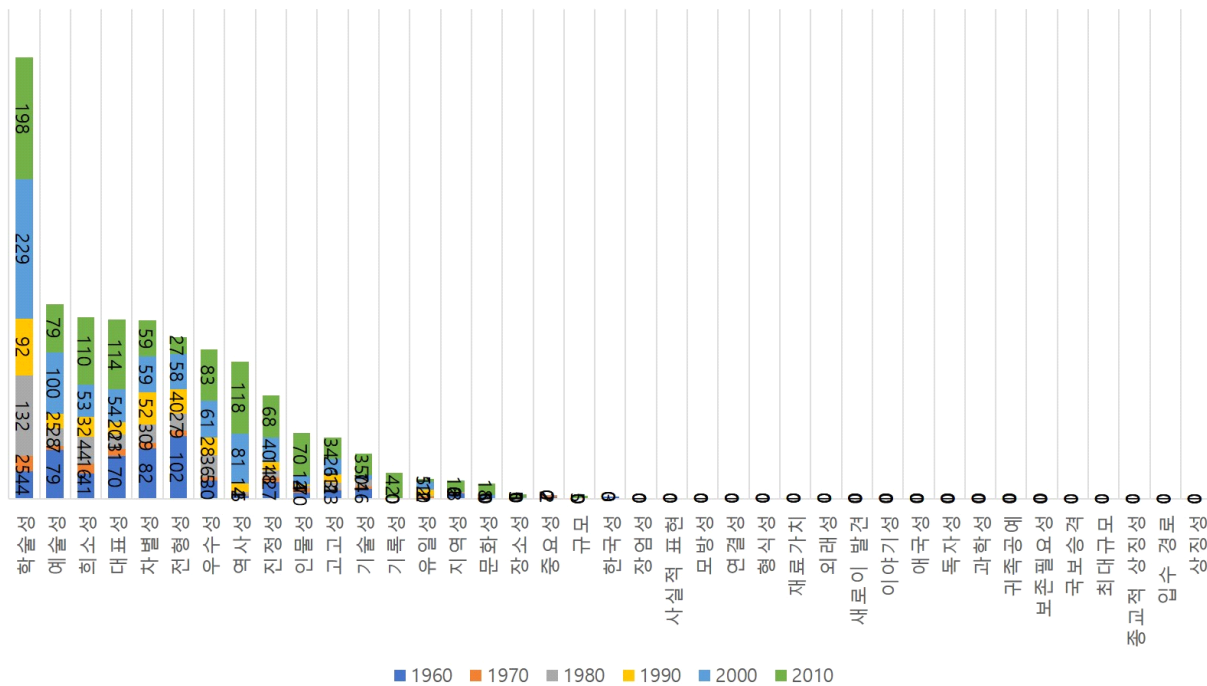
(붉은 색 표시: 요소별 가장 높은 빈도)

평가요소 \ 년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총계
학술성	44	25	132	92	229	198	720
예술성	79	7	28	25	100	79	318
희소성	41	16	44	32	53	110	296
대표성	70	11	23	20	54	114	292
차별성	82	9	30	52	59	59	291
전형성	102	9	27	40	58	27	263
우수성	30	5	36	28	61	83	243
역사성	5	2	4	14	81	118	224
진정성	27	8	11	14	40	68	168
인물성	10	7	4	2	14	70	107
고고성	13	2	11	13	26	34	99
기술성	16	4	11	0	7	35	73
기록성	0	0	0	0	0	42	42
유일성	1	2	2	10	12	5	32
지역성	8	2	1	0	0	18	29
문화성	0	0	1	0	5	18	24
장소성	1	0	1	0	0	5	7
중요성	2	2	2	0	0	0	6
규모	0	0	0	0	0	5	5

(붉은 색 표시: 요소별 가장 높은 빈도)

평가요소 \ 년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총계
한국성	3	0	0	0	0	0	3
장엄성	1	0	0	0	0	0	1
사실적 표현	1	0	0	0	0	0	1
모방성	1	0	0	0	0	0	1
연결성	1	0	0	0	0	0	1
형식성	1	0	0	0	0	0	1
재료가치	1	0	0	0	0	0	1
외래성	1	0	0	0	0	0	1
새로이 발견	0	1	0	0	0	0	1
이야기성	0	1	0	0	0	0	1
애국성	0	1	0	0	0	0	1
독자성	0	0	1	0	0	0	1
과학성	0	0	1	0	0	0	1
귀족공예	0	0	1	0	0	0	1
보존필요성	0	0	0	0	1	0	1
국보승격	0	0	0	0	0	1	1
최대규모	0	0	0	0	0	1	1
종교적 상징성	0	0	0	0	0	1	1
입수 경로	0	0	0	0	0	1	1
상징성	0	0	0	0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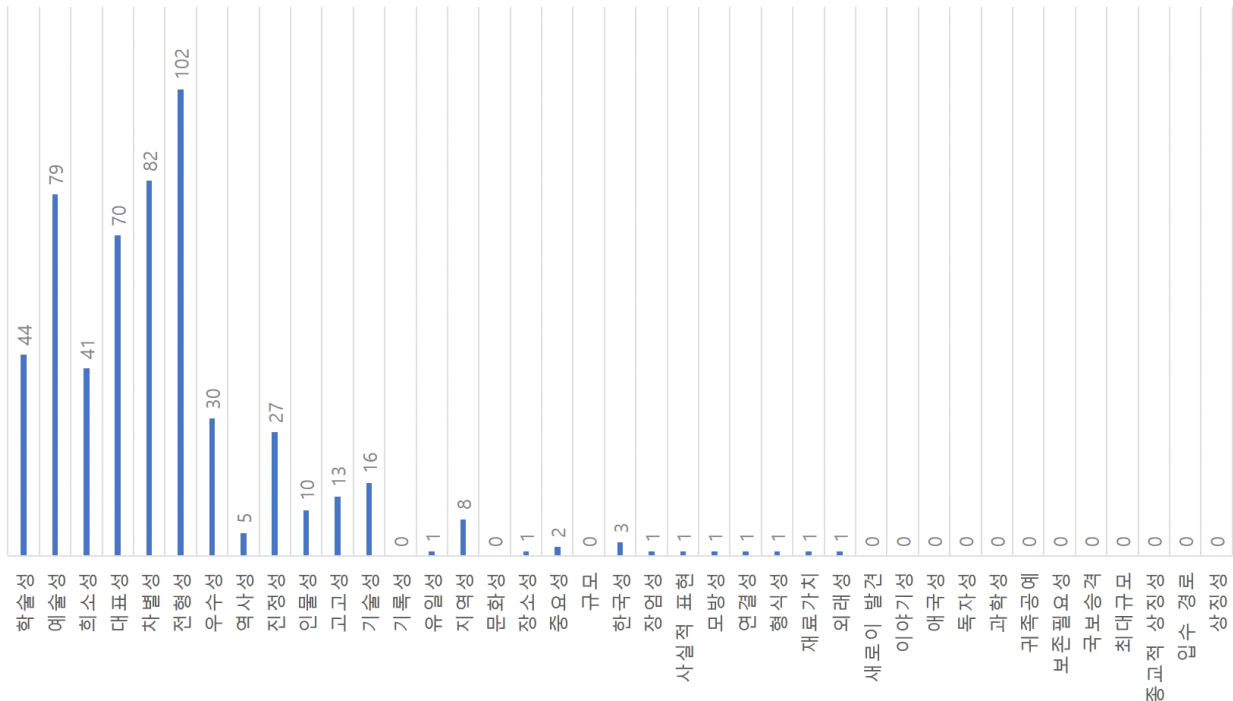
가치평가요소별 시기 누적표



[그림 5-16] 보물 가치평가요소별 시기누적 빈도표

○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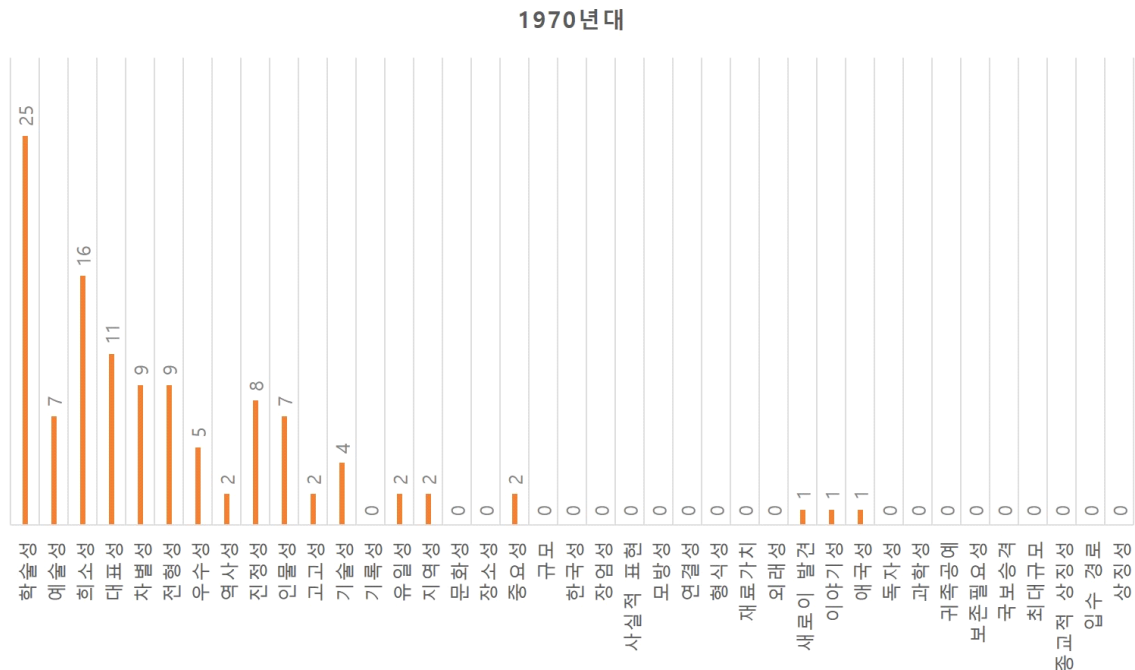
1960년대



[그림 5-17] 보물 196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60년대는 전형성이 102건으로 가장 많은 가치평가요소로서 고려된 것 확인됨
- 그 다음으로 차별성 82건, 예술성 79건, 대표성 70건의 순으로 고려됨
- 1960년대 건조물 유형의 보물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는데, 건조물의 가치평가가 시 전형성을 크게 고려했음이 추정 가능
- 장엄성, 사실적 표현, 모방성, 연결성, 형식성, 재료가치, 외래성 등이 이 시기 유일하게 나타난 가치평가요소
- 1960대의 경우 보물은 전형성이 102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시대적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특성을 나타냄
- 또한 차별성은 82건, 예술성은 79건, 대표성 70건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학술성이 44건, 희소성이 41건, 우수성 30건, 진정성 27건 등의 빈도로 나타남
- 그밖에 기술성 16건, 고고성 13건, 인물성 10건, 역사성 5건, 한국성 3건, 중요성 2건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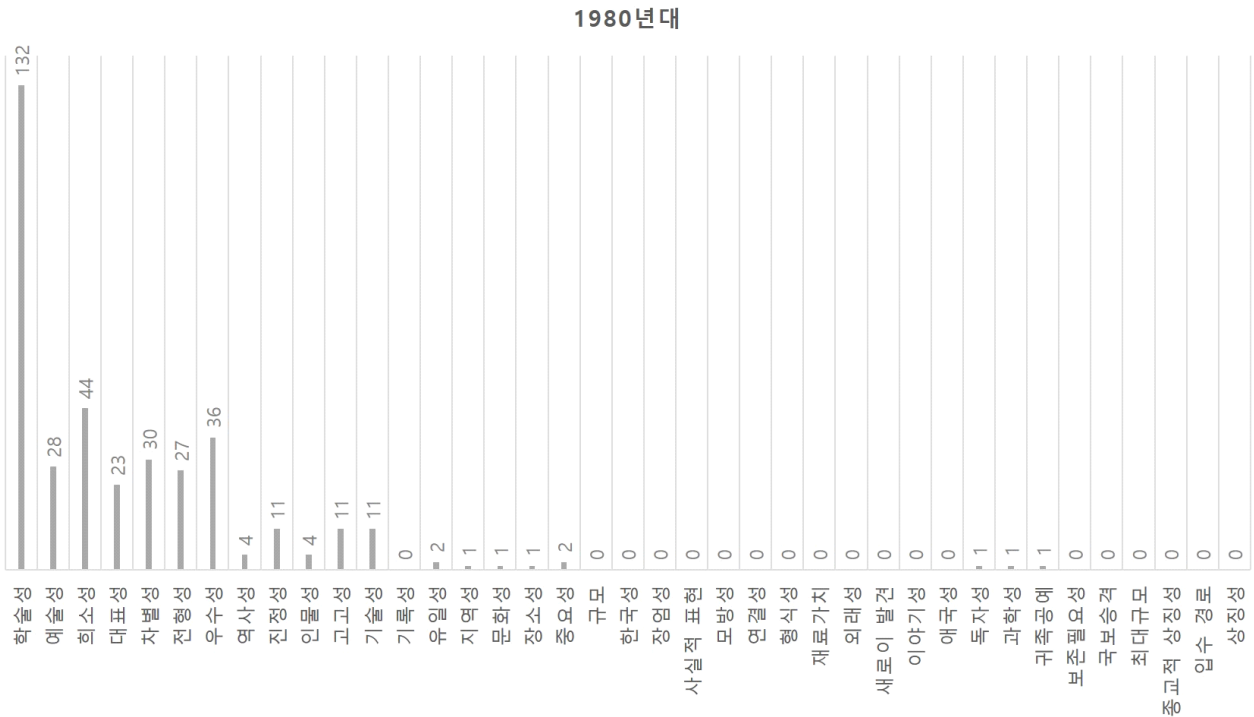
○ 1970년대



[그림 5-18] 보물 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70년대에는 학술성이 25건으로 가장 많이 고려됨
- 그 다음으로 희소성, 대표성 순으로 나타남
- 1070년대에 새로이 발견, 이야기성, 애국성 등이 유일하게 나타난 가치평가요소로 확인됨
- 1970년대의 경우는 보물에서 학술성의 빈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을 나타냄
- 다음으로는 희소성 16건, 대표성 11건, 차별성 9건, 전형성 9건, 인물성 7건, 예술성 7건 등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우수성 5건, 기술성 4건, 역사성 2건, 고고성 2건, 유일성 2건, 지역성 2건, 중요성 2건 등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새로이 발견 1건, 이야기성 1건, 애국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1970년대 보물의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학술성, 희소성, 대표성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1970년대의 경우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법률에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가치평가용어의 다양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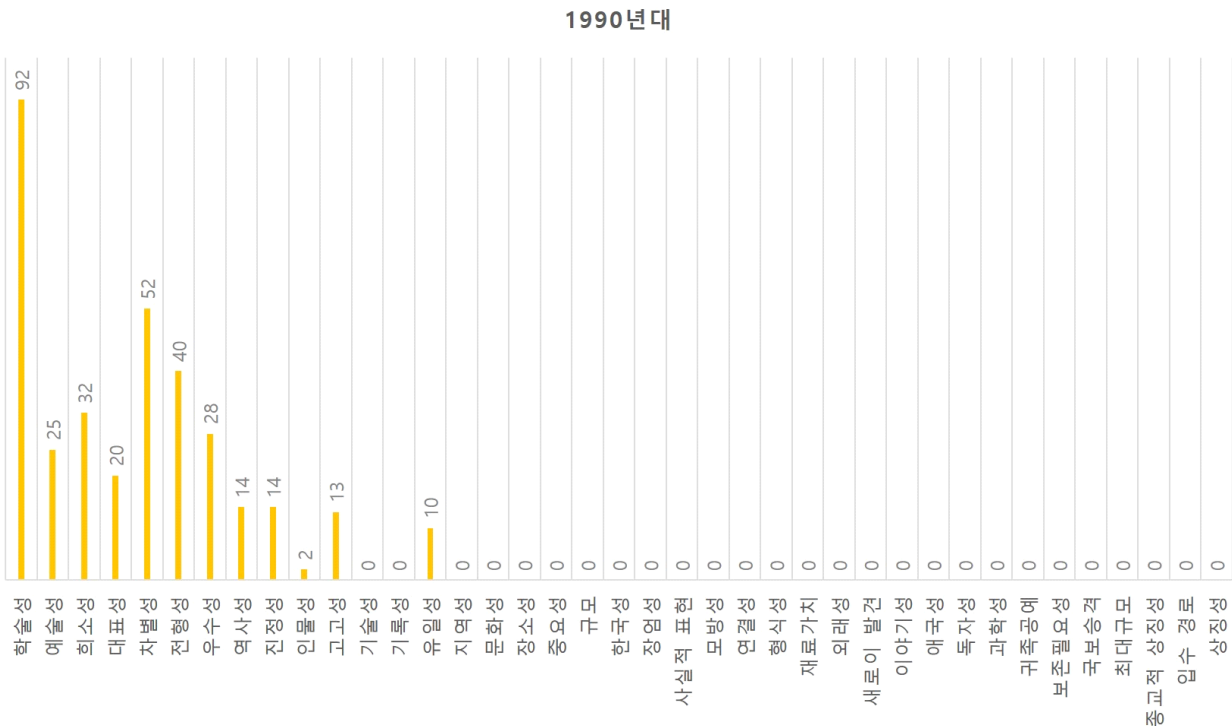
○ 1980년대



[그림 5-19] 보물 198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80년대는 학술성이 13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고려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시기 전적/서적/문서류의 보물이 158건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이들 유형의 문화재 지정에 있어 학술성이 많이 고려됨을 추정 가능
- 또한 독자성, 과학성, 귀족공예 가치평가요소가 이 시기에만 나타난 것으로 확인
- 1980년대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은 학술성이 132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희소성 44건, 우수성 36건, 차별성, 30건, 예술성 28건, 전형성 27건 등으로 나타남
- 그리고 전형성 11건, 고고성 11건, 기술성 11건, 역사성 4건, 인물성 4건 등으로 나타남
- 그밖에 역사성 4건, 인물성 4건, 유일성 2건, 중요성 2건, 지역성 1건, 문화성 1건, 장소성 1건, 독자성 1건, 과학성 1건, 귀족공예 1건 등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1980년대의 경우는 학술성, 희소성, 우수성, 예술성, 대표성, 전형성 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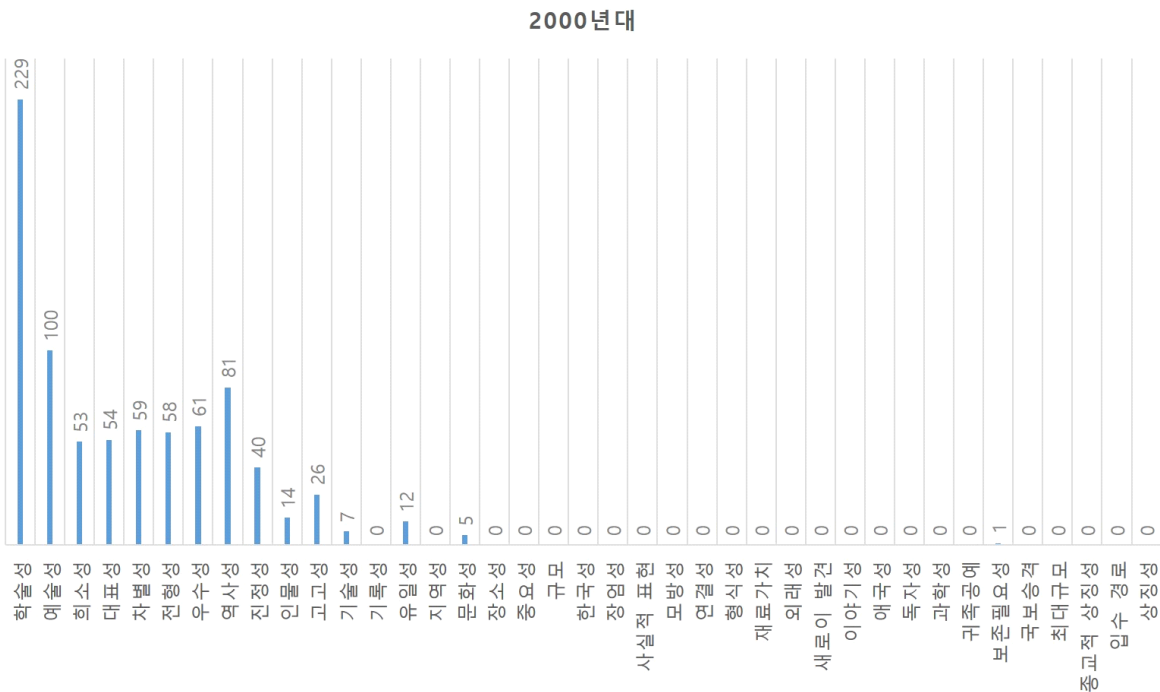
○ 1990년대



[그림 5-20] 보물 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1990년대 또한 학술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고려되었음이 확인 가능
- 1990년대에도 전적/서적/문서류의 보물이 대거 지정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유형의 문화재 지정 시 학술성이 크게 고려됨이 추정 가능함
- 1990년대에도 학술성이 92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차별성 52건, 전형성 40건, 희소성 32건 등으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그밖에 우수성 28건, 예술성 25건, 대표성 20건, 역사성 14건, 전형성 14건, 고고성 13건, 유일성 10건, 인물성 2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1990년대의 경우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학술성, 차별성, 전형성, 희소성, 예술성, 대표성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법률적 사용에 한정되어 있고,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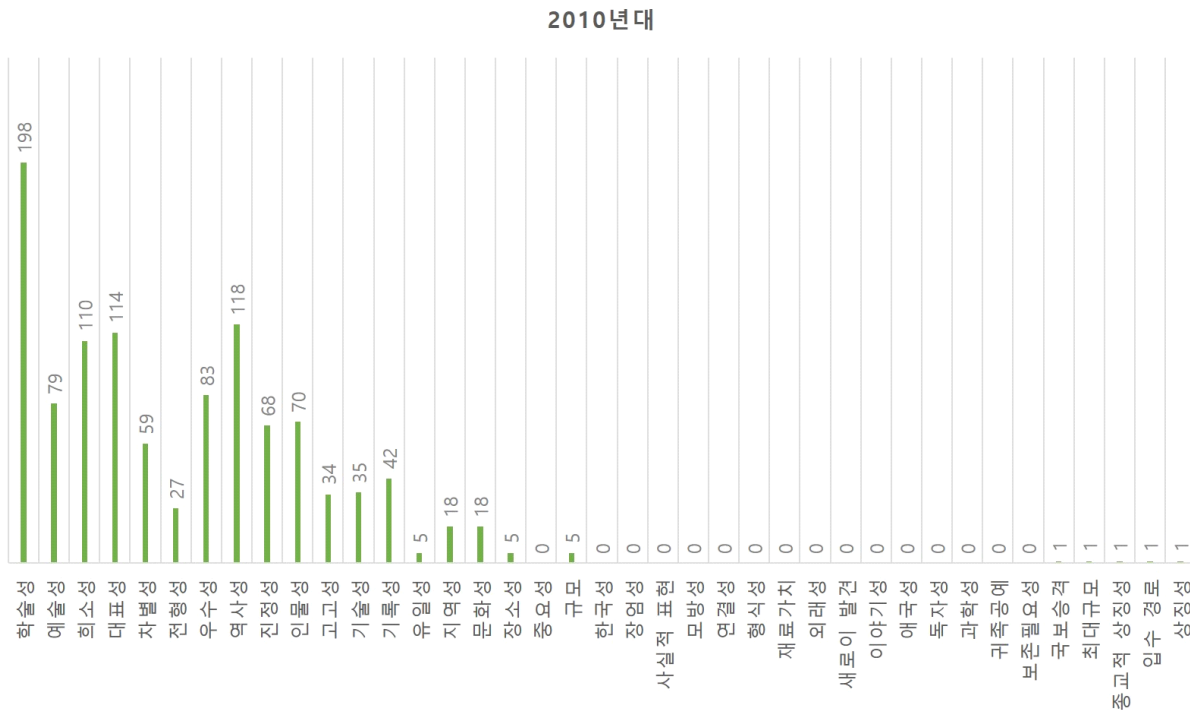
○ 2000년대



[그림 5-21] 보물 200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2000년대 또한 학술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고려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성, 역사성이 많이 고려된 것이 확인 가능
- 2000년대의 경우 회화/조각류의 보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었으며, 예술성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이시기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회화/조각 유형의 보물 지정 시 예술성이 크게 고려되는 것으로 추정 가능
-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2000년대는 학술성이 229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예술성 100건, 역사성 81건, 우수성 61건, 차별성 59건, 전형성 58건, 대표성 54건, 희소성 53건으로 나타남
- 그리고 진정성 40건, 고고성 26건, 인물성 14건, 유일성 12건, 기술성 7건, 문화성 5건 등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2000년대의 경우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 학술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역사성, 우수성, 차별성, 전형성, 희소성, 대표성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2000년대 까지는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2010년대



[그림 5-22] 보물 201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2010년대에도 또한 학술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역사성, 대표성, 희소성 순으로 나타남
- 가치평가요소로서 희소성은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많이 고려되었음
-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문화재가 발굴 및 지정되었고, 이제는 그 중에서도 희소한 가치를 갖는 문화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한 것의 일환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즉, 문화재의 보호에 있어 보편성 보다는 지정 및 보호해야 할 것을 최소한으로 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
- 2010년의 문화재 가치평가용어 사용 경향은 학술성이 19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 역사성 118건, 대표성 114건, 희소성, 110건, 우수성 83건, 예술성 79건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인물성 70건, 진정성 68건, 차별성 59건, 기록성 42건, 기술성 35건, 고고성 34건, 전형성 27건, 지역성 18건, 문화성 18건, 유일성 5건, 장소성 5건, 규모 5건 등으로 나타남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

[표 5-8] 보물 지정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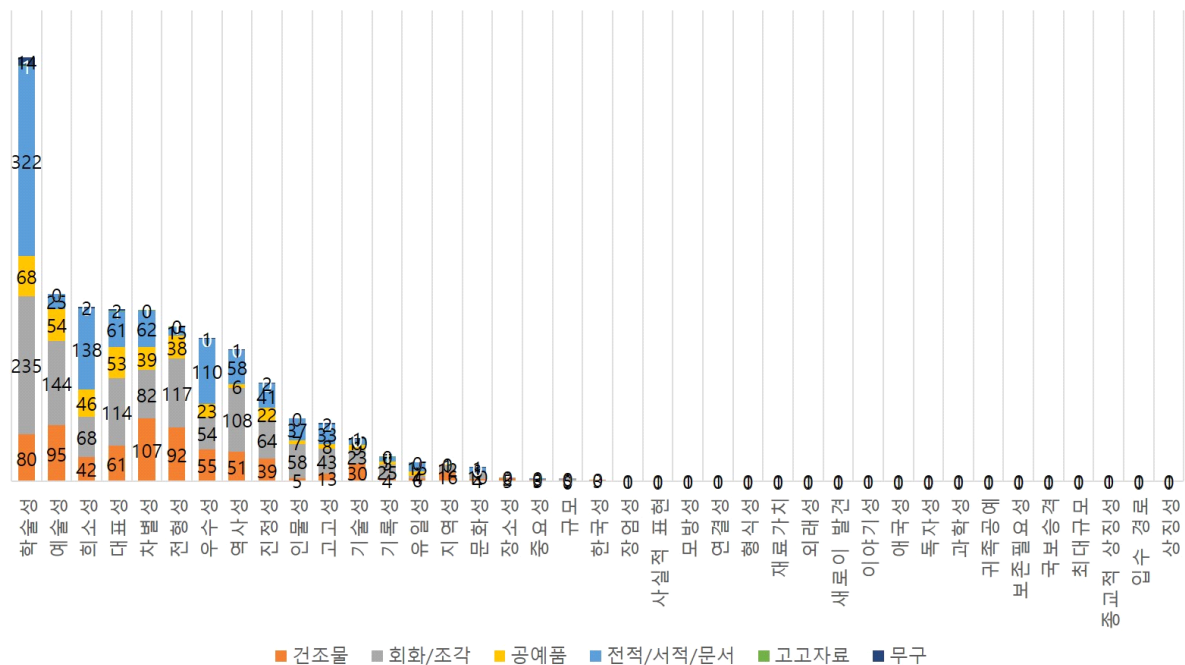
(음영 표시: 요소별 가장 높은 빈도)

평가요소 \ 년도	건조물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 문서	고고자료	무구	총계
학술성	80	235	68	322	1	14	720
예술성	95	144	54	25	0	0	318
희소성	42	68	46	138	0	2	296
대표성	61	114	53	61	1	2	292
차별성	107	82	39	62	1	0	291
전형성	92	117	38	15	1	0	263
우수성	55	54	23	110	0	1	243
역사성	51	108	6	58	0	1	224
진정성	39	64	22	41	0	2	168
인물성	5	58	7	36	0	0	106
고고성	13	43	8	33	0	2	99
기술성	30	23	9	10	0	1	73
기록성	4	25	5	7	1	0	42
유일성	6	4	7	15	0	0	32
지역성	16	12	1	0	0	0	29
문화성	4	10	1	8	0	1	24
장소성	5	2	0	0	0	0	7
중요성	3	0	0	3	0	0	6
규모	0	5	0	0	0	0	5
한국성	3	0	0	0	0	0	3
장엄성	1	0	0	0	0	0	1
사실적 표현	0	1	0	0	0	0	1
모방성	1	0	0	0	0	0	1
연결성	1	0	0	0	0	0	1
형식성	0	1	0	0	0	0	1
재료가치	0	0	1	0	0	0	1
외래성	0	0	1	0	0	0	1
새로이 발견	0	0	0	1	0	0	1
이야기성	1	0	0	0	0	0	1
애국성	0	0	0	1	0	0	1
독자성	0	0	0	1	0	0	1

(음영 표시: 요소별 가장 높은 빈도)

평가요소 \ 년도	건조물	회화/조각	공예품	전적/서적/문서	고고자료	무구	총계
과학성	0	0	1	0	0	0	1
귀족공예	0	0	1	0	0	0	1
보존필요성	0	0	0	1	0	0	1
국보승격	0	0	0	1	0	0	1
최대규모	0	1	0	0	0	0	1
종교적 상징성	1	0	0	0	0	0	1
입수 경로	0	1	0	0	0	0	1
인문관련성	0	0	0	1	0	0	1
상징성	0	1	0	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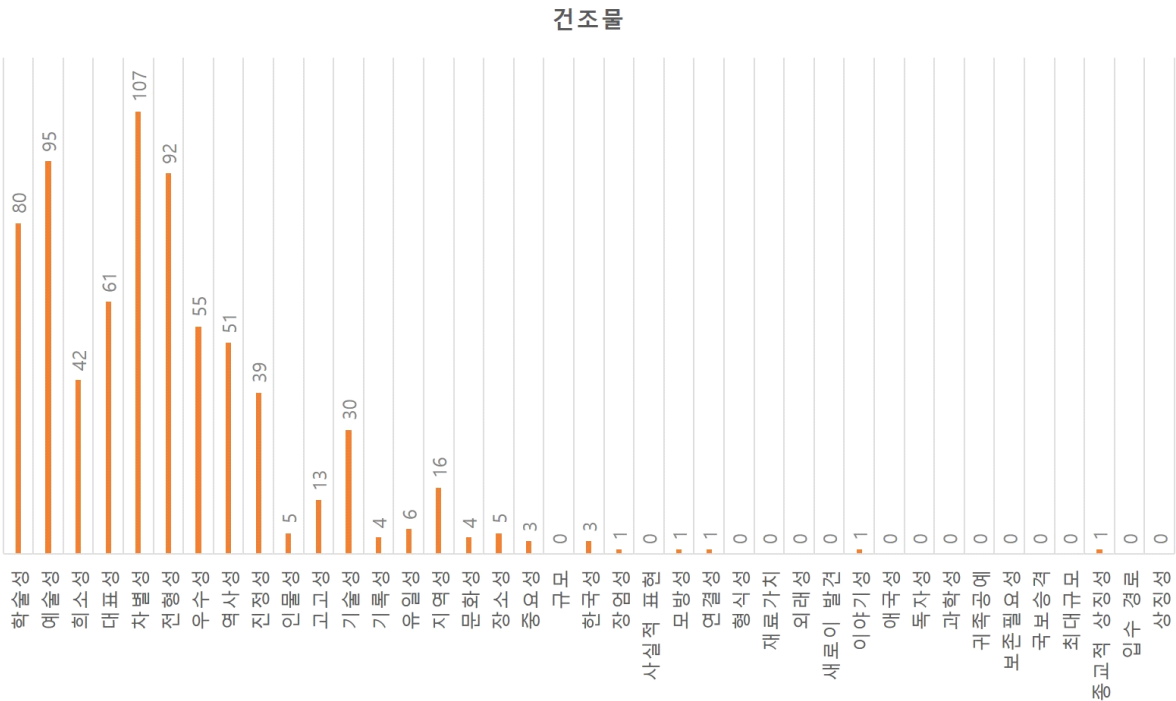
유형별 종합



[그림 5-23] 보물 지정 가치평가요소별 세부유형 누적빈도

- 보물에 대한 유형별 가치평가용어 사용 빈도를 종합한 결과를 나타낸 것임
- 전반적으로 학술성에서는 전적/사적/문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다음으로는 회화/조각/, 건조물, 공예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즉, 유형별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는 각각의 유형에서도 학술성, 예술성, 희소성, 대표성, 차별성, 전형성 등이 높은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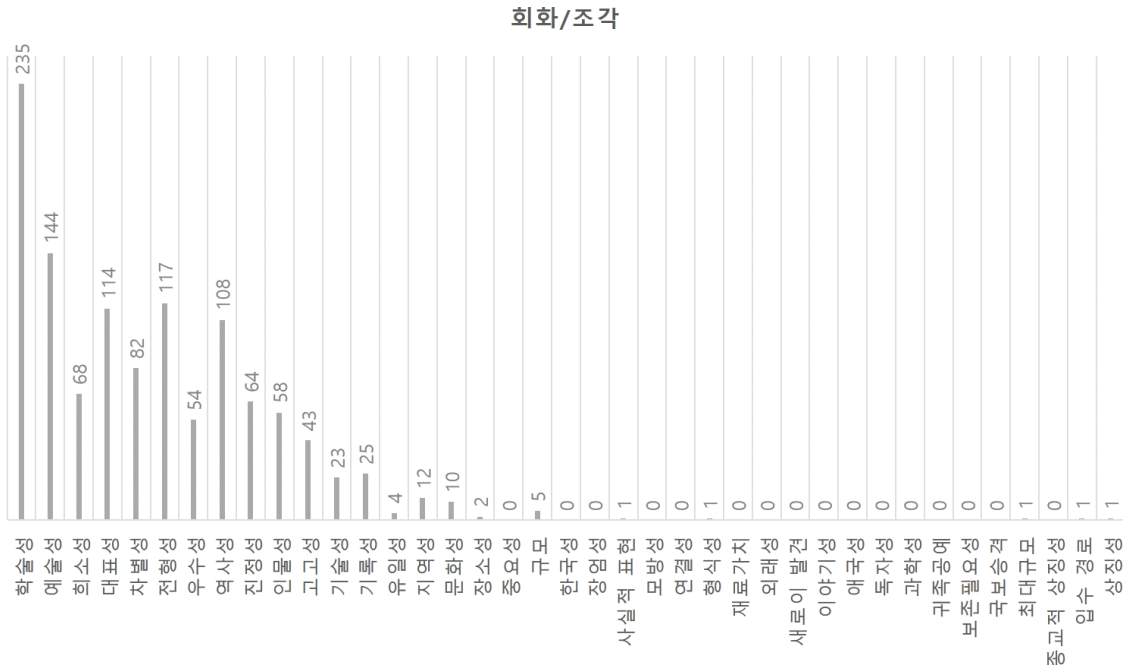
○ 건조물



[그림 5-24] 보물 건조물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건조물의 경우 차별성이 107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평가요소 빈도 나타냄
- 그 다음으로 학술성 80건, 예술성 95건, 전형성 92건 등의 가치평가요소가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
- 차별성, 기술성, 지역성, 장소성, 한국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건조물에서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됨
- 즉, 건조물에서는 차별성이 107건으로 가장 높은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다름으로는 예술성 95건, 전형성 92건, 학술성 80건, 대표성 61건, 우수성 55건, 역사성 51건, 예술성 42건, 기술성 30건 등으로 나타남
- 그밖에 지역성 16건, 고고성 13건, 유일성 6건, 인물성 5건, 장소성 5건, 기록성 4건, 문화성 4건, 중요성 3건, 한국성 3건, 장엄성 1건, 새로이 발견 1건, 종교적 상징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건조물에서는 차별성, 예술성, 전형성 등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에서도 인물성, 기록성, 한국성 등의 가치평가용어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회화/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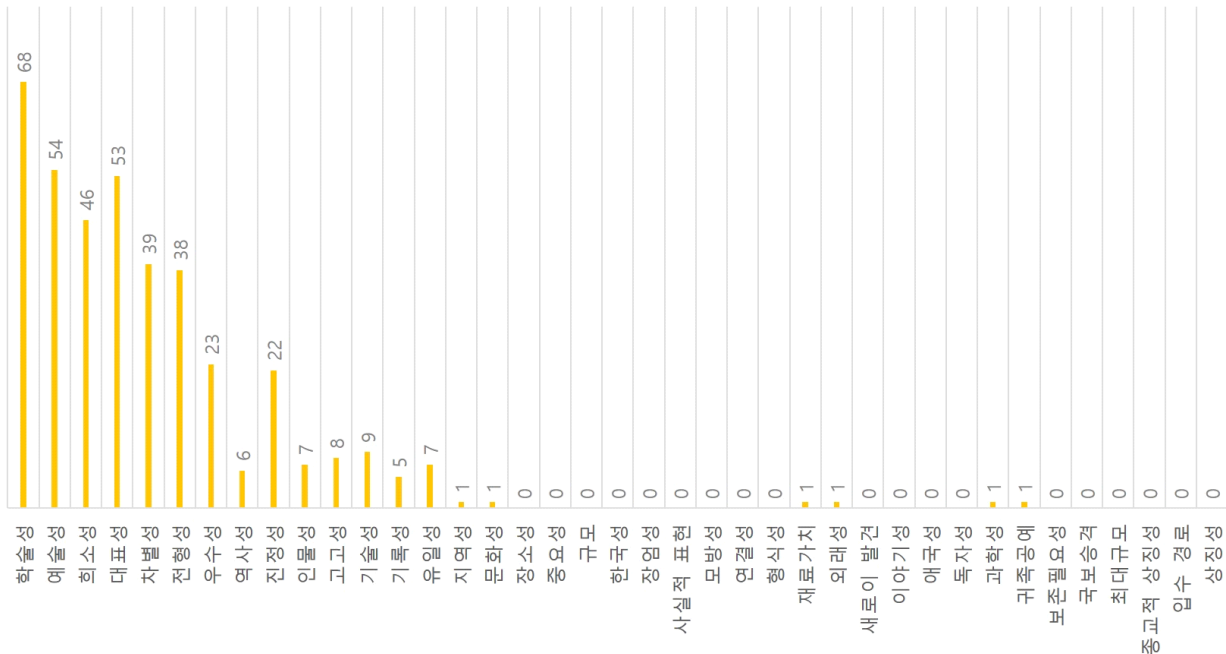


[그림 5-25] 보물 회화/조각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회화/조각 유형의 보물 지정에서 학술성이 235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냄
- 그 다음으로 예술성과 전형성, 대표성, 역사성 순으로 가치평가요소로 가장 자주 고려됨
- 예술성, 대표성, 전형성, 역사성, 진정성, 인물성, 고고성, 시대성, 기록성, 문화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회화/조각에서 많이 고려됨
- 즉, 회화/조각에서는 가치평가용어 중에서 학술성이 235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예술성 144건, 전형성, 117건, 대표성 114건, 역사성 108건, 차별성 82건, 희소성 68건, 진정성 64건, 인물성 58건, 우수성 54건 등으로 나타남
- 그밖에 고고성 43건, 기록성 25건, 기술성 23건, 지역성 12건, 문화성 10건 규모 5건, 유일성 4건, 장소성 2건, 사실적 표현 1건, 형식성 1건, 최대 규모 1건, 입수 경로 1건 상징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회화/조각의 가치평가용어 사용을 살펴보면, 학술성과 예술성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회화/조각에 대한 다른 가치평가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성, 고고성, 문화성, 지역성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용어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예품

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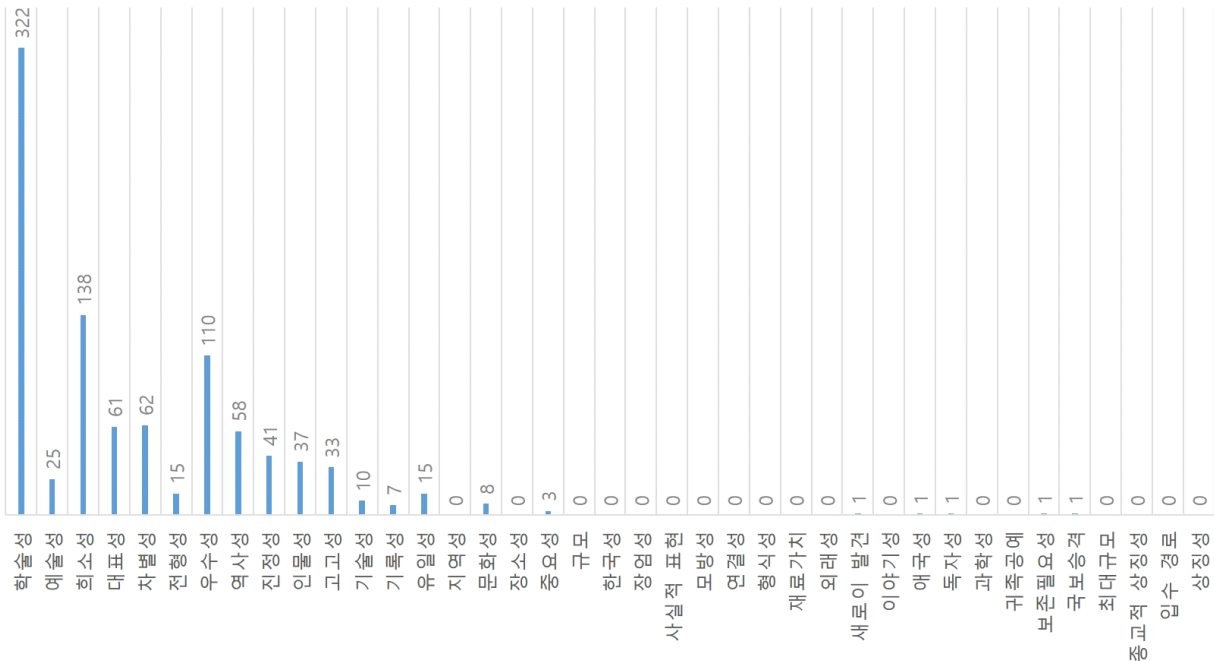


[그림 5-26] 보물 공예품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공예품의 경우 학술성이 가장 많은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이 확인되지만, 예술성, 대표성, 희소성 등도 고루 고려된 것 확인
- 재료가치, 외래성, 과학성, 귀족공예의 가치평가요소가 공예품의 유형에서 유일하게 적용
- 즉, 공예품에서는 가치평가용어 중에서 학술성이 6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예술성 54건, 대표성 53건, 희소성 46건, 차별성 39건, 전형성 38건, 우수성 23건, 진정성 22건 등으로 나타남
- 또한 기술성 9건, 고고성 8건, 인물성 7건, 유일성 7건, 역사성 6건, 기록성 5건, 지역성 1건, 재료가치 1건, 외래성 1건, 과학성 1건, 귀족공예 1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공예품의 경우 학술성 예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평가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인물성, 고고성, 기술성 기록성, 문화성 등의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되면서 공예품의 가치평가용어의 확장이 나타남

○ 전적/서적/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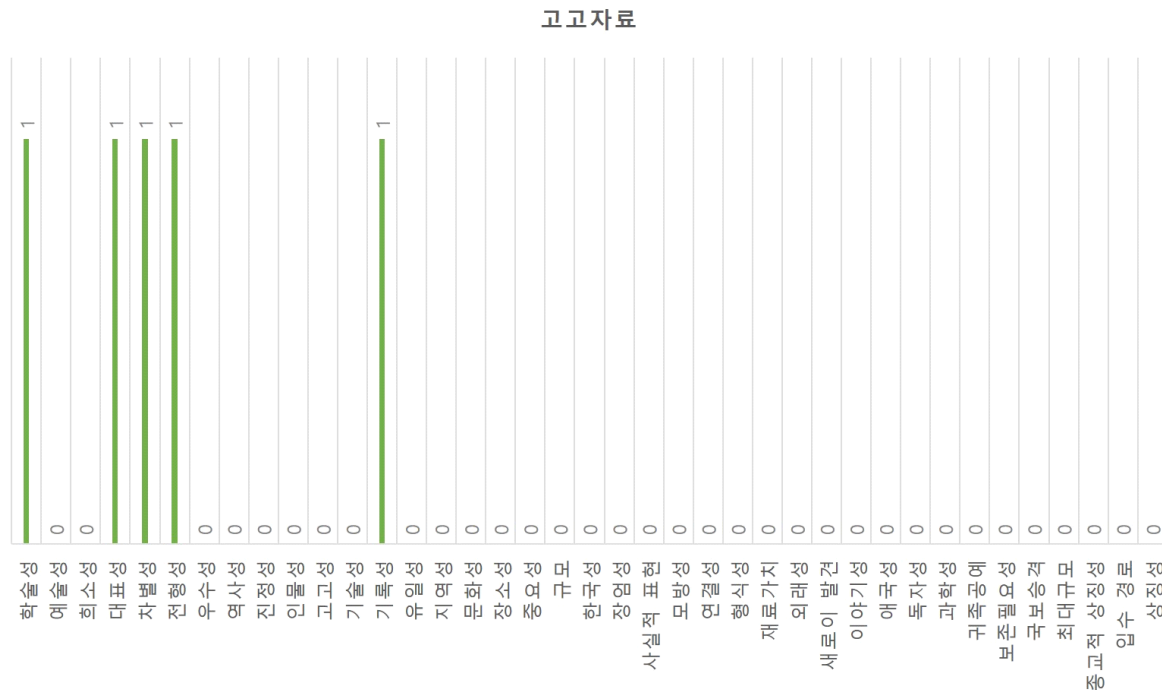
전적/서적/문서



[그림 5-27] 보물 전적/서적/문서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전적/서적/문서류의 경우 학술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
- 또한 희소성, 완전성 또한 특별히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
- 학술성, 희소성, 우수성, 유일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
- 새로이 발견, 애국성, 독자성, 보존필요성, 국보승격이 유일하게 전적/서적/문서에만 적용된 가치평가요소로 확인
- 즉, 전적/서적/문서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학술성이 322건으로 가치평가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희소성 138건, 우수성 110건, 차별성 62건, 대표성 61건, 역사성 58건, 전형성 41건, 인물성 37건, 고고성 33건, 예술성 25건, 유일성 15건, 전형성 15건 등으로 나타남
- 그 밖에 기술성 10건, 기록성 7건, 문화성 8건, 중요성 3건, 새로이 발견 1건, 보존필요성 1건, 애국성 1건, 독자성 1건, 국보승격 1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적/서적/문서에 사용된 가치평가용어는 학술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희소성과 우수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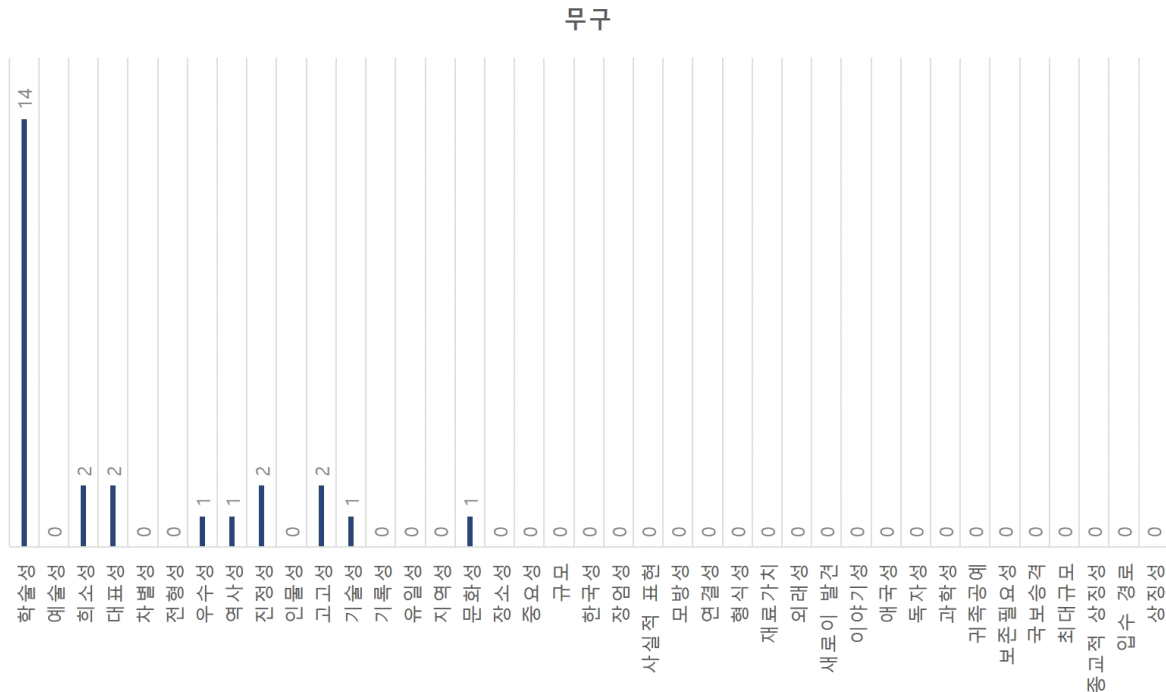
○ 고고자료



[그림 5-28] 보물 고고자료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고고자료에서는 학술성, 대표성, 차별성, 전형성, 기록성이 가치평가요소로 적용된 것이 확인됨
- 고고자료는 총 5건으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학술성 1건, 대표성 1건, 차별성 1건, 전형성 1건, 기록성 1건으로 나타남
- 즉, 고고자료의 경우 가치평가용어가 집중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비록 5건의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무구



[그림 5-29] 보물 무구 유형 가치평가요소 빈도표

- 무구류의 경우 학술성이 14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확인됨
- 즉, 무구류의 경우는 가치평가용어 중에서 학술성이 14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다음으로는 희소성 2건, 대표성 2건, 진정성 2건, 고고성 2건, 우수성 1건, 역사성 1건, 기술성 1건, 문화성 1건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무구류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가치평가용어 중에서 학술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무구류가 가지는 학술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희소성, 대표성, 진정성, 고고성 등의 가치평가용어 사용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분석대상이 된 대부분의 무구류는 학술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면에 우수성, 역사성, 기술성, 문화성 등의 다양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다양성도 확인 할 수 있음

2) 보물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특정유형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전적/서적/문서의 경우 학술성이 해당 문화재 유형의 전체 가치평가 요소 중 45%에 해당하는 빈도를 보임
 - 또한 우수성은 6가지 보물의 세부 유형 중 전적/서적/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 확인
- 특정유형에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예술성의 경우 고고자료, 무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만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 확인
 - 특정유형에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는 세부유형을 분류체계 상 상위 위계에서 그룹화 하고자 할 때 구분변수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분류체계 연구에 고려할 필요
- 상위 가치평가요소로 변환 작업 후 빈도 분석 필요
 - 현재 보물은 가지번호까지 포함하여 약 2000건이 지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보물 지정에 적용된 가치평가요소도 매우 다양한 것이 확인
 - 이번 분석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고 분석을 실시한 것을 한계점을 꼽을 수 있음
 - 일부 가치평가요소의 경우 도출된 다른 가치평가요소에 의미가 내포되는 경우도 있음
 - 가치평가 요소의 빈도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의 위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상위가치개념을 확인하여 일괄적으로 변환 후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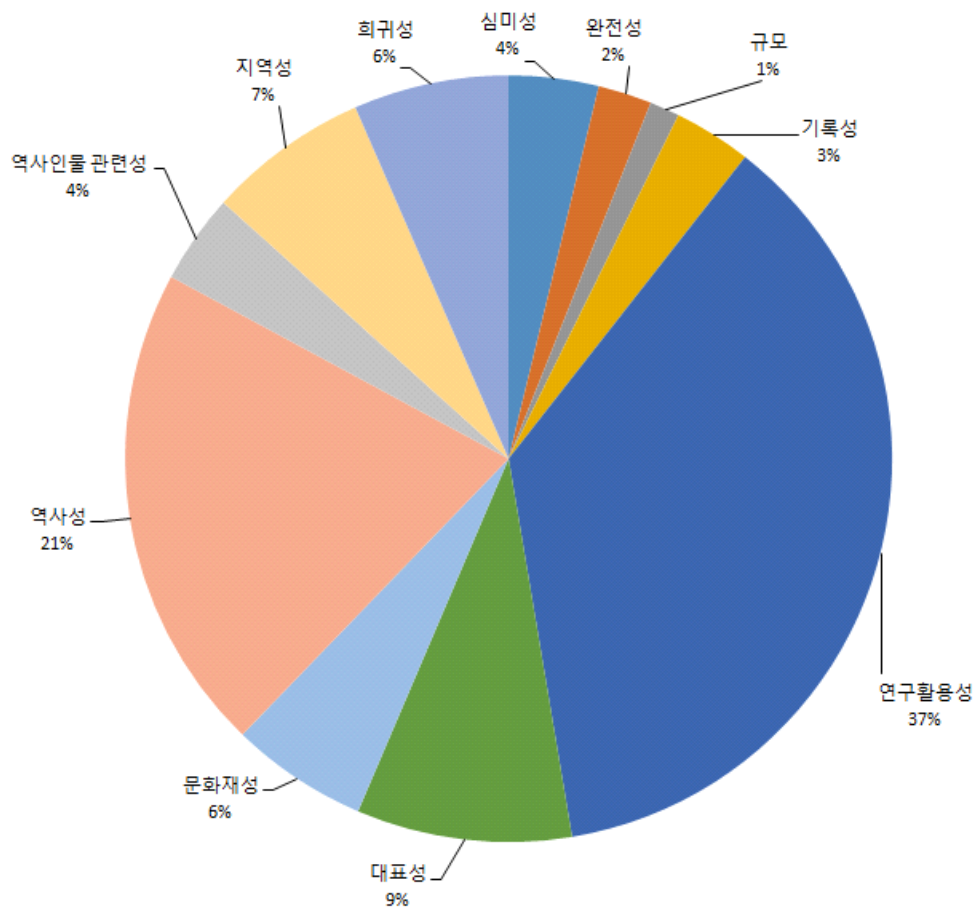
3. 사적

1) 사적 가치평가요소 분석

(1)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9] 사적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사적 가치평가요소		빈도	퍼센트
가치평가요소	심미성	15	3.78
	완전성	9	2.27
	규모	5	1.26
	기록성	13	3.27
	연구활용성	146	36.78
	대표성	36	9.07
	문화재성	23	5.79
	역사성	82	20.65
	역사인물 관련성	15	3.78
	지역성	27	6.80
합계		397	100



[그림 5-30] 사적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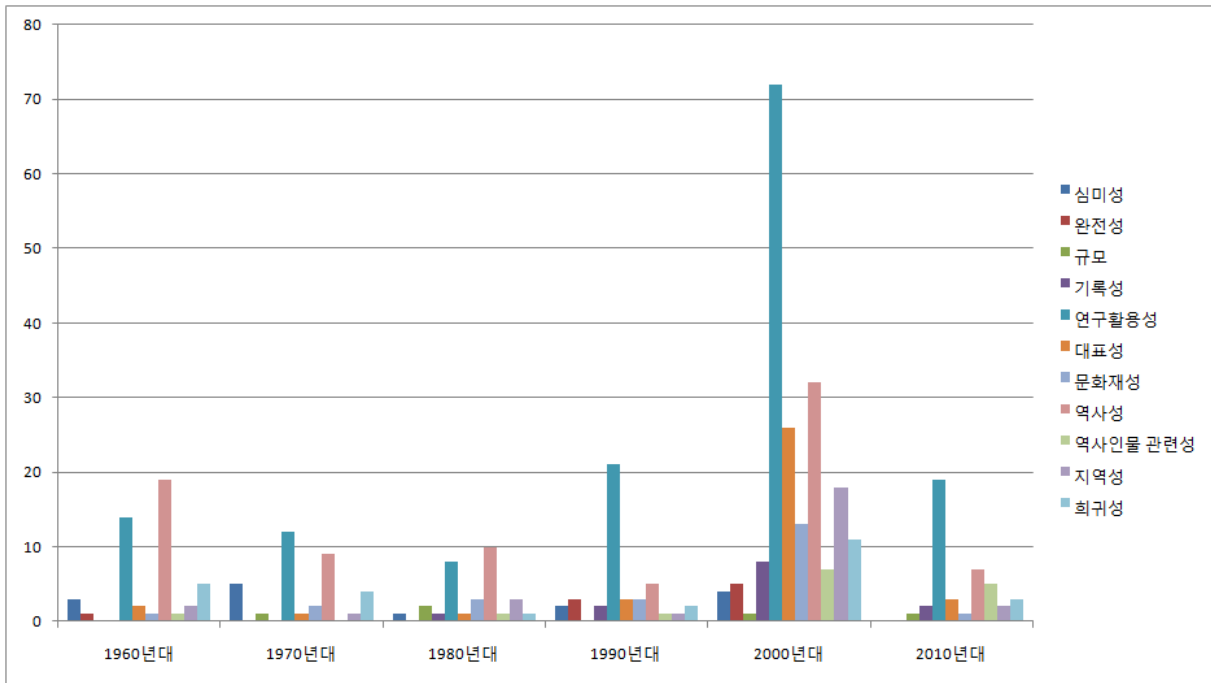
○ 가치평가요소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총499건의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재 지정 경위와 가치평가에 관해 서술한 문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202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였음
- 사적 한건 당 하나 이상의 가치평가 내용이 서술된 경우를 포함하여 202건에 대해 총 397개의 가치평가 서술의 사례가 파악됨
 - 사적의 경우 연구 활용성에 대한 가치평가 서술이 146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약 36.78%)이며 그 중에서도 “역사적 및 학술적 정보를 포함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주로 나타남
 - 역사성은 8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술이며, 역사인물에 대한 언급을 따로 집계한 “역사인물 관련성”을 포함할 경우 97건으로 약, 24.5% 수준
 -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명승의 가장 주된 평가요소로 꼽히는 것은 연구 활용성과 역사성의 두 가지 요소이며 사적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할 것임
 - 그 밖에 대표성(36건, 9.07%), 지역성(27건, 6.8%), 문화재성(23건, 5.79%), 희귀성(26건, 6.55%), 심미성(15건, 3.78%) 등에 대한 서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0] 사적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시기	사적 가치평가요소											전체
	심미성	완전성	규모	기록성	연구 활용성	대표성	문화재성	역사성	역사 인물 관련성	지역성	희귀성	
1960년대	3	1	0	0	14	2	1	19	1	2	5	48
1970년대	5	0	1	0	12	1	2	9	0	1	4	35
1980년대	1	0	2	1	8	1	3	10	1	3	1	31
1990년대	2	3	0	2	21	3	3	5	1	1	2	43
2000년대	4	5	1	8	72	26	13	32	7	18	11	197
2010년대	0	0	1	2	19	3	1	7	5	2	3	43
전체	15	9	5	13	146	36	23	82	15	27	26	397



[그림 5-31] 사적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1960~1970년대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전 일제에 의해 지정되었던 사적류 문화재를 재 지정함으로써 사적에 대한 현대적인 보존관리의 기틀이 마련됨
- 1960년대에는 총 159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는데 관아, 성곽 등의 정치국방에 관련된 문화재와 고분군에 대한 지정이 특히 두드러짐
- 1970년대에는 총 80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는데 조선 왕실의 능원 묘를 비롯한 무덤에 대한 지정이 33건으로 가장 두드러짐
- 이 시기의 문화재 지정에 관한 가치평가요소는 이후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연구활용성과 역사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1960년대의 경우 희귀성을 강조한 서술이 일부 두드러짐을 주목할 만 함(사적 제44호 부여군수리사지,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등)
- 1970년대의 경우 심미성을 강조한 서술이 비교적 두드러지며, 이 경우 사적 또는 사적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관의 심미성이 특히 강조됨

○ 1980~1990년대

- 1980년대는 특히 1981년에 사적 지정이 집중(24건)되어 있으며, 그 외 8년간의

지정 건수는 미미한 수준(21)임

- 80년대 역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정치국방 유적에 대한 지정이 가증 두드러지나(12건) 그 외 교육문화와 종교 신앙이 각각 11건으로 다소 평준화된 분포로 나타남
- 여기에서 교육문화 유형은 모두 근대교육문화시설에 해당함
- 80년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가치평가요소는 역사성으로 나타나며, 다른 전 시기와 비교할 때 역사성이 연구활용성보다 많이 언급된 유일한 시기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즉, 80년대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사적 제307호 완도 청해진 유적, 사적 제314호 조선벽자 요지 등 역사적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었거나, 역사적인 변곡점 또는 산업생산의 역사적 요충지 등에 대한 지정이 두루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1990년대의 경우 총 85건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중 정치국방 유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덤의 유형이 22건으로 집계됨.
- 1990년대 역시 연구 활용성과 역사성이 가장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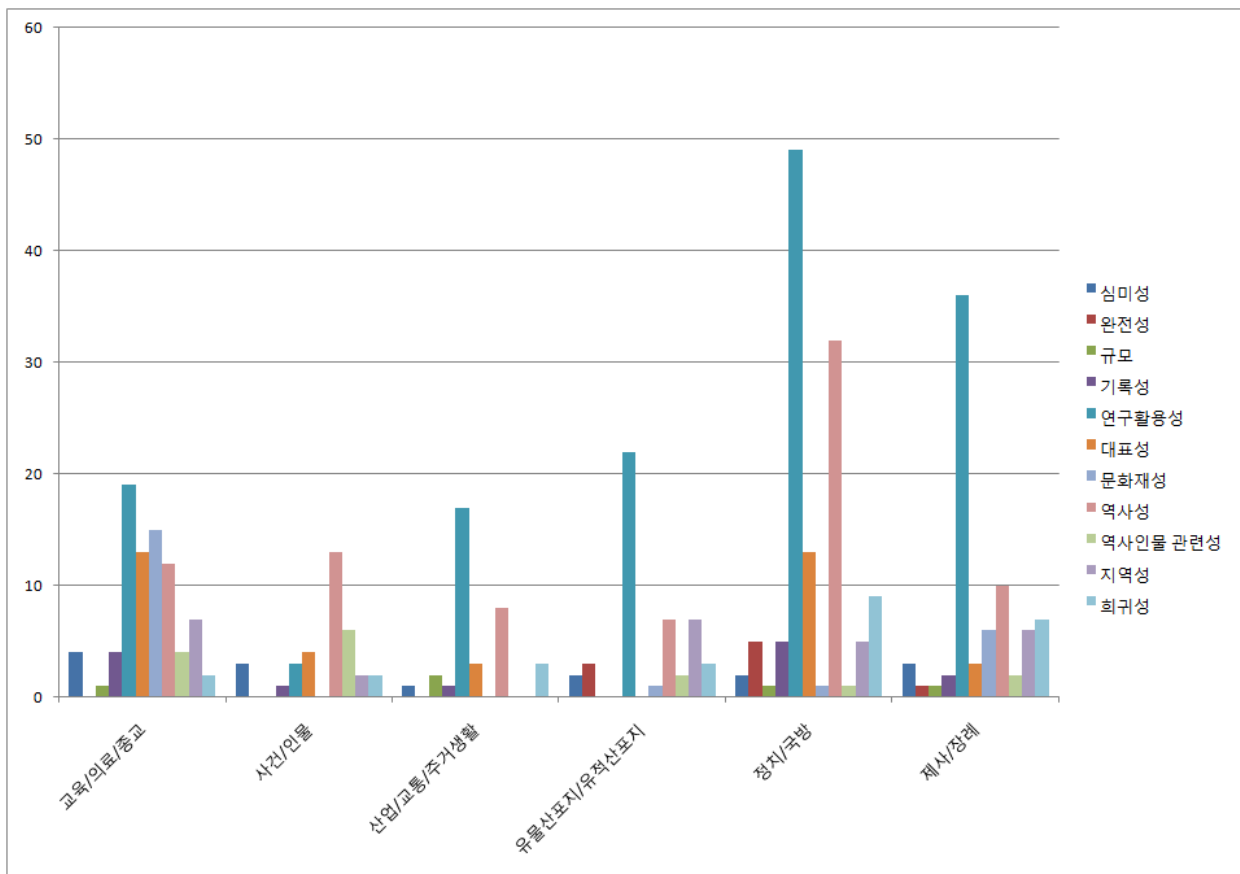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 2000년대에는 가장 많은 문화재 가치평가 요소가 추출되었는데 이는 2000년대에 이루어진 사적 지정의 건수가 88건으로 비교적 많았던 이유도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사적 지정에 관한 문헌이 비교적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기도 함
- 2000년대 이후의 추세에 있어 특이한 경향성은 대표성에 대한 서술이 다수 나타나는 것
- 즉, 특정 양식, 정신문화, 문화현상, 지역성 등에 대한 상징성 또는 전형성을 갖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임
- 기존의 단순하고 일반적인 문화재 가치평가에서 해당 문화재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1] 사적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유형	사적 가치평가요소											전체
	심미성	완전성	규모	기록성	연구 활용성	대표성	문화 재성	역사성	역사 인물 관련성	지역성	희귀성	
교육/의료 /종교	4	0	1	4	19	13	15	12	4	7	2	81
사건/인물	3	0	0	1	3	4	0	13	6	2	2	34
산업/교통 /주거생활	1	0	2	1	17	3	0	8	0	0	3	35
유물산포 지/유적산 포지	2	3	0	0	22	0	1	7	2	7	3	47
정치/국방	2	5	1	5	49	13	1	32	1	5	9	123
제사/장례	3	1	1	2	36	3	6	10	2	6	7	77
전체	15	9	5	13	146	36	23	82	15	27	26	397



[그림 5-32] 사적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현황

- 교육/의료/종교 유형의 사적에 대한 81건의 서술 중 연구활용성에 대한 서술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성(15건), 대표성(13)건이 다수 추출
- 사건/인물 유형의 사적에 대한 34건의 서술 중 역사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물관련성(6건), 대표성(4건)이 다수 추출
- 산업/교통/주거생활에 대한 35건의 서술 중 연구활용성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사성이 8건이었으나 그 외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님
- 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 유형에 대한 47건의 서술 중 연구활용성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사성과 지역성이 각각 7건으로 다수 추출
- 정치/국방에 대한 123건의 서술 중 연구활용성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사성(32), 대표성(13)이 다수임
- 제사/장례에 대한 77건의 서술 중 연구활용성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사성이 10건, 희귀성이 7건으로 나타남

2)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사적 유형의 문화재의 경우 정치/국방과 제사/장례 유형에 대한 지정이 집중되는데 이는 ‘역사적 건조물 또는 유적지’라는 사적의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생활문화에 관한 건조물군이 민속문화재 유형에서 다루어지고, 단일 개체 단위의 건축물이 보물로 지정되는 현 시점에 있어 사적의 지정은 비교적 대규모이며 정치사적 의의가 큰 정치/국방과 제사/장례 유형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근대 이후 대규모 산업시설이 노후화됨에도 이를 철거대신 보존할 경우 산업발전사 또는 경제사적 측면에서 시설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⁵²⁾
- 또한, 다양한 형태의 유적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유물산포지 또는 유적산포지 형태의 사적 지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짐

○ 대부분의 가치평가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함

- 사적의 역사성은 사적의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골자

52) 사적 추세에 대한 전망은 1980년대 나타난 근대 교육시설에 대한 사적지정 사례와 유사함.

이며, 이는 가치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확인됨

-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가치평가 서술의 경향은 거의 모든 유형과 시대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가장 많은 사례인 ‘연구 활용성’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적과 관련된 당대의 제도사, 정치사, 사회사, 인물사, 기술사 등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임
- 그러므로 ‘역사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예술성은 현재까지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연구 활용성’은 문화재 지정에 관한 의결권자의 입장이 반영된 서술일 것으로 생각됨

- 사적 유형에 있어 ‘연구 활용성’이 매우 주된 가치평가요소라 나타는 데 이러한 경향은 일종의 학술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재의 가치평가에 있어 학술성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결권자인 문화재 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 대부분 고학력의 연구직 또는 교수직에 있는 이들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직종과 관심분야를 고려할 때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 또는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는 것

○ 심미성에 대한 언급이 적음

- 시각적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오브제(object)로서 문화재가 갖는 가치 요소를 심미성 내지는 예술성이라 할 때, 사적은 심미성과 예술성에 대한 언급이 타 문화재 유형에 비해 적음
- 사적이 심미성과 관계없이 역사성이 있는 건조물, 유적 또는 그러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임에 따른 인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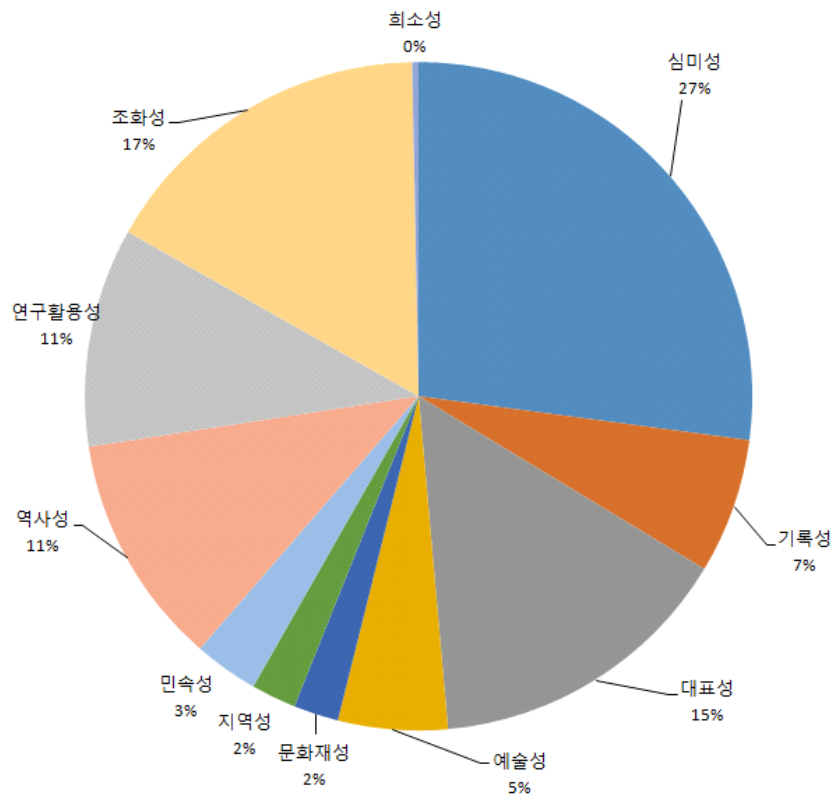
4. 명승

1) 명승 가치평가요소 분석

(1)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2] 명승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명승 가치평가요소		빈도	퍼센트
가치평가요소	심미성	87	27.10
	기록성	21	6.54
	대표성	48	14.95
	예술성	17	5.30
	문화재성	7	2.18
	지역성	7	2.18
	민속성	10	3.12
	역사성	36	11.21
	연구활용성	34	10.59
	조화성	53	16.51
	희소성	1	0.31
합계		321	100



[그림 5-33] 명승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가치평가요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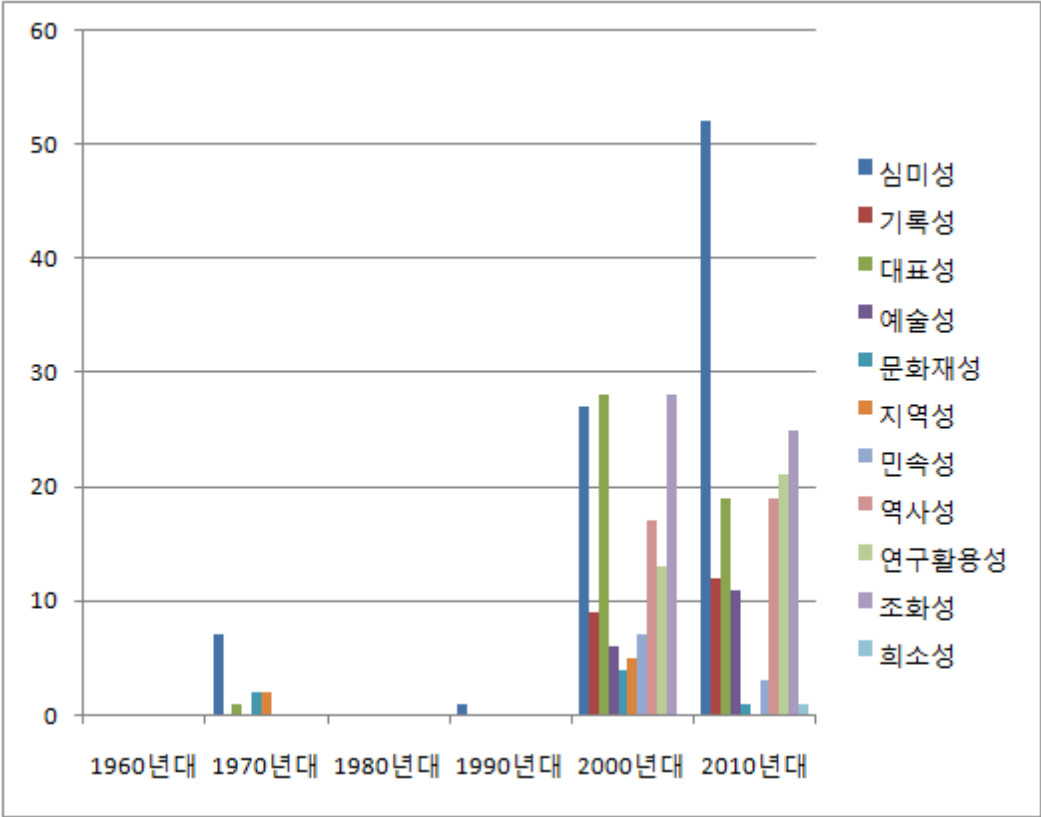
- 2017년 9월 기준 총112건의 문화재가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재 지정 경위와 가치평가에 관해 서술한 문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02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였음
- 명승 한건 당 하나 이상의 가치평가 요소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102건에 대해 총 321건의 유의미한 가치평가 서술을 추출
 - 명승의 경우 심미성에 대한 가치평가 서술이 8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약 27.1%)임
 - 심미성은 자연적 지형 및 환경의 아름다움, 전경(全景)의 어우러짐(즉, 회화적 조화미), 특정 지점에서 조망하는 경관의 아름다움(경관조망지점 심미성)을 포함하여 시각적 감상 요소로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 조화성에 대한 서술이 43건(16.51%)으로 그 뒤를 이었음
 - 조화성은 명승의 자연적 미관과 이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흔적(즉, 생활상 또는 인문적 증거)이 상호 조화로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판단요소로 문화경관에 대한 판단요소.
 - 대표성에 대한 서술은 48건으로 전체의 약 14.95%로 나타남
 - 대표성에서는 해당 명승이 특정 지역, 시대, 문화현상 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평가임
 - 그 밖에 역사성(36건, 11.21%), 연구활용성(34건, 10.59%), 기록성(21건, 6.54%) 등에 대한 서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3] 명승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시기	명승 가치평가요소											전체
	심미성	기록성	대표성	예술성	문화재성	지역성	민속성	역사성	연구 활용성	조화성	회화성	
1960년대	0	0	0	0	0	0	0	0	0	0	0	0
1970년대	7	0	1	0	2	2	0	0	0	0	0	12
1980년대	0	0	0	0	0	0	0	0	0	0	0	0

지정 시기	명승 가치평가요소											전체
	심미성	기록성	대표성	예술성	문화재성	지역성	민속성	역사성	연구 활용성	조화성	희소성	
1990년대	1	0	0	0	0	0	0	0	0	0	0	1
2000년대	27	9	28	6	4	5	7	17	13	28	0	144
2010년대	52	12	19	11	1	0	3	19	21	25	1	164
전체	87	21	48	17	7	7	10	36	34	53	1	321



[그림 5-34] 명승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1960~1970년대

- 명승 유형은 비교적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문화재 유형임
 - ‘명승’에 대한 인식 자체는 문화재 관련 초기 입법사례인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제정(1933)에서부터 확인되나(문화재청, 2016b: 61) 이를 독립적인 문화재 유형으로 인식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 1960~1970년대

- 1962년 「문화재보호법」과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명승을 기념물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 사례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된 5건 만⁵³⁾이 확인됨
 - 즉, 1960년대 당시 ‘명승’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었으며 실체가 없었던 것
- 1970년대 이후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을 시작으로 자연 경관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명승에 대한 지정이 시작됨
 - 1970년부터 1979년 까지 총 7건의 명승이 지정되었는데 이 시기 명승의 지정은 같은 기념물 유형의 문화재인 사적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1970년대의 문화재 가치평가요소 관련 서술로는 ‘심미성’에 관한 서술이 7건으로 가장 두드러짐
 - 이는 ‘명승’을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경관지로 보았던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것

○ 1980년대~1990년대

- 1980년대에는 명승이 단 한건도 지정되지 않음
- 1997년 ‘웅진 백령도 두무진’이 명승 제8호로 지정되었음. 이는 19년 만에 명승유형에 대한 추가지정이 나타난 것.
- 다른 한편으로 1998년 기존에 명승오리 지정되어있던 ‘해남 대둔산 일원(대흥사)’과 ‘승주 송광산 선암사 일원’이 지정 해제되고 사적 및 명승으로 재 지정된 바 있음
 - 이처럼 1990년대 이전까지 명승 유형에 대한 문화재 지정은 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그리고 ‘명승’의 네 가지 유형이 혼재한 기념물 유형에 있어 각 유형간의 개념의 정립과 영역의 확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탓
- 1990년대 지정된 ‘웅진 백령도 두무진’은 자연경관 자원이며, 지정에 대한 가치평가요소로서 심미성에 대한 서술이 파악됨
 - 이는 명승을 자연의 경관지로 보았던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음

53) 해당 시기 지정된 ‘사적 및 명승’은 명승과 다른 유형으로 운영되었으나 2009년 해당 유형이 폐지되면서 재정리 된 바 있음

○ 2000년대 이후

- 2001년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명승이 자연적 경관부터 인공적 경관을 아우르는 유형으로 확장⁵⁴⁾
 - 법 개정에 따라 2001년을 기점으로 명승의 지정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
 - ‘삼각산’, ‘마이산’, ‘채석강-적벽강 일원’, ‘예천 회룡포’, ‘부산 태종대’ 등 관광지점이나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과 같은 생활문화 경관에 대한 지정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자연경관에 국한되지 않은 명승의 특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해당 시기에 두드러지는 가치평가 요소는 여전히 심미성이 가장 많기는 하나, 조화성·대표성·역사성이 균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2000년대 이후 자연과 인문을 양립하는 ‘경관자원’으로서 입지를 다진 명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임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4] 명승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유형	명승 가치평가요소											전체
	삼각성	기록성	대표성	예술성	문화재성	지역성	민속성	역사성	연구활용성	조화성	희소성	
자연명승	62	8	30	5	5	4	3	9	22	8	0	156
역사문화명승	25	13	18	12	2	3	7	27	12	45	1	165
전체	87	21	48	17	7	7	10	36	34	53	1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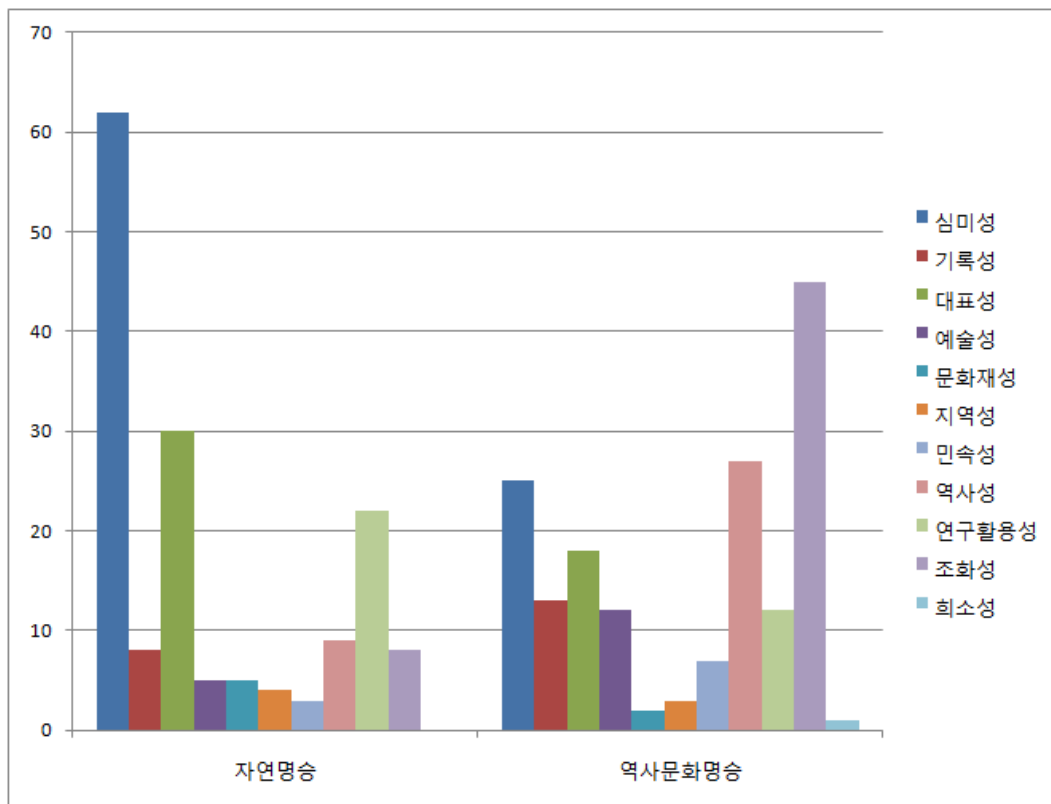
○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현황

- 본 연구에서는 명승을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구분하여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를 분석하였음
 - 명승 지정기준에 따르면 명승은 자연경관, 생물경관, 경관조망지, 역사문화경관, 인문경관 등으로 요약되지만,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인 명승의 특성 상 이와 같이 세분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유형 분류는

54) 당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명승 지정기준에 “7.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8.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추가되어 자연경관지 외에 ‘인문경관’ 내지는 ‘문화경관’에 대한 명승 지정이 가능해짐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분화 된 기준 대신 두드러지는 가치요소가 ‘자연’ 과 ‘인문’ 중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행정적 분류기준을 따라 명승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음
- 자연명승에 대한 156건의 가치평가 서술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평가요소는 심미성에서 찾을 수 있었음(62건, 약 39.74%). 그 외 대표성과 연구 활용성이 각각 30건(약 19.23%)과 22건(약 14.10%)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음
- 역사문화명승에 대한 165건의 가치평가 서술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평가요소는 조화성임(45건, 약 27.27%). 그 외에도 다양한 평가요소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는데 역사성(27건, 약 16.36%), 심미성(25건, 약 15.15%), 대표성(18건, 약 10.91%), 연구활용성(12건, 7.27%), 예술성⁵⁵⁾(12건, 7.27%)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그림 5-35] 사적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55) 예술성은 문학, 회화 등 예술작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서 나타나는 문화재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임

2)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명승 유형은 자연경관에 대한 문화재 유형으로서 지정되어왔으나, 2000년대 이후 역사문화명승에 대한 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과 인문이 양립되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따라서, 명승은 자연물과 인공물이 함께 다루어지면서도 양자간의 조화에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문화재 유형이라 할 것임
 - 명승의 개념은 2006년 ‘명승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2009년 ‘사적 및 명승’ 유형이 폐지 이후 지속되어온 추세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행 문화재 지정기준 상 명승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경관’의 가치를 강조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경향으로부터 견주어 볼 때, 명승에 대한 가치인식 역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인간 삶의 흔적으로부터 조화적 가치를 강조하는(즉, 조화성)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명승에 대한 가치평가는 ‘심미성’에 기초함

- 심미성은 인간이 오감에 대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 심미성 가치평가는 시각적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경관’이 갖는 의미와 부합하는 가치평가요소임
 - 문화재의 심미적 측면에서 경관 자원인 ‘명승’을 심미성에 기초하여 가치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짐
- 실제 문화재 가치평가 서술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심미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경관자원으로서의 명승의 의의를 보여주는 것

○ 명승의 심미성에 대하여는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명승의 심미성은 단순히 경관이 선사하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칭하기도 하나, 경관이 갖는 장소감(즉, 역사성, 인물성, 생활문화성 등)이 시각적 요소와 적극적으로 조화되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를 지칭하기도 함

- 명승이 ‘대표성을 갖는 경관’ 이라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것
 - 명승을 ‘대표성’ 으로 가치 평가하는 인식 역시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시대’, ‘문화현상’, ‘생활문화’ 등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서 명승이 갖는 가치를 나타내는 실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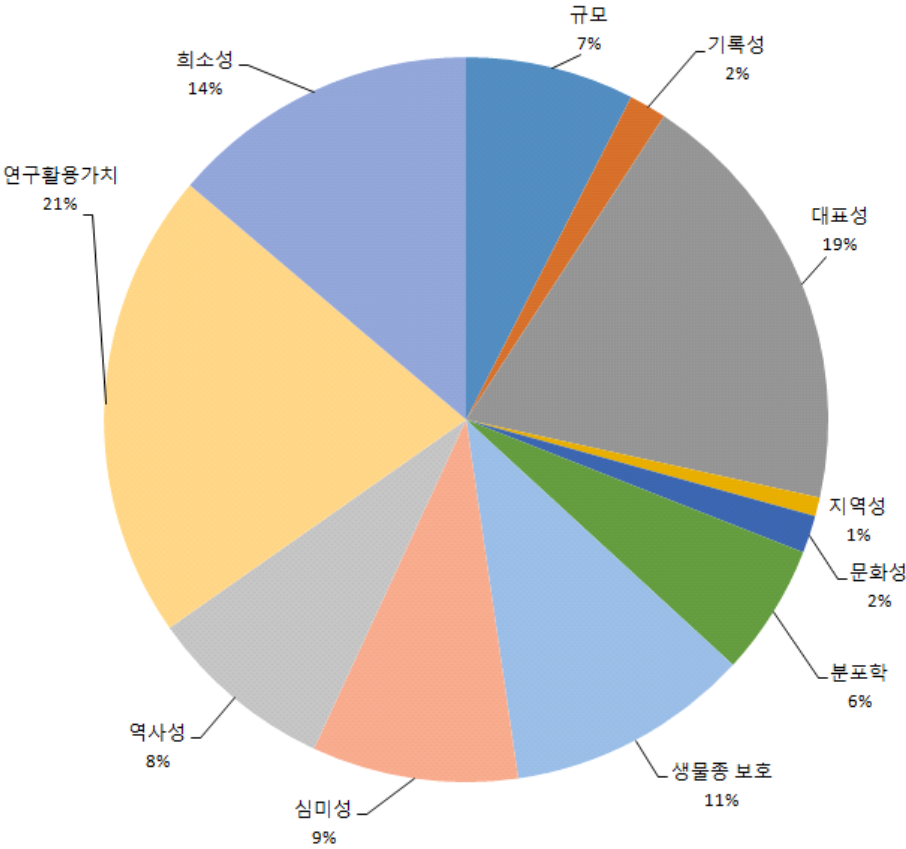
5. 천연기념물

1)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분석

(1)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5]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퍼센트
가치평가요소	규모	18	7.53
	기록성	4	1.67
	대표성	46	19.25
	지역성	2	.84
	문화성	4	1.67
	분포학	14	5.86
	생물종 보호	26	10.88
	심미성	22	9.21
	역사성	20	8.37
	연구활용가치	50	20.92
	희소성	33	13.81
합계		239	100



[그림 5-36]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2017.09. 기준)

○ 가치평가요소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총457건의 문화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재 지정 경위와 가치평가에 관해 서술한 문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139건을 분석해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였음
- 천연기념물 한건 당 하나 이상의 가치평가 요소가 적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139건에 대해 총 239건의 유의미한 가치평가 서술을 추출
 - 천연기념물의 경우 연구활용가치에 대한 가치평가서술이 5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약 20.92%)로 나타났음
 - 연구활용가치는 문화재에 관한 과학 및 인문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의미함
 - 대표성 역시 매우 높은 비율(46건, 약 19.25%)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지역, 종교, 문화현상 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 희소성(33건, 약 13.81%)과 생물종 보호(26건, 약 10.88%) 역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 희귀 자연물과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 천연기념물 보호제도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그 밖에 심미성(22건, 약 9.21%), 역사성(20건, 약 8.37%)에 대한 가치평가 서술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의할 정도로 높은 수치는 아님
 - 같은 기념물 유형인 사적(역사성이 강조⁵⁶⁾), 명승(심미성이 강조)과 차별화 되는 천연기념물의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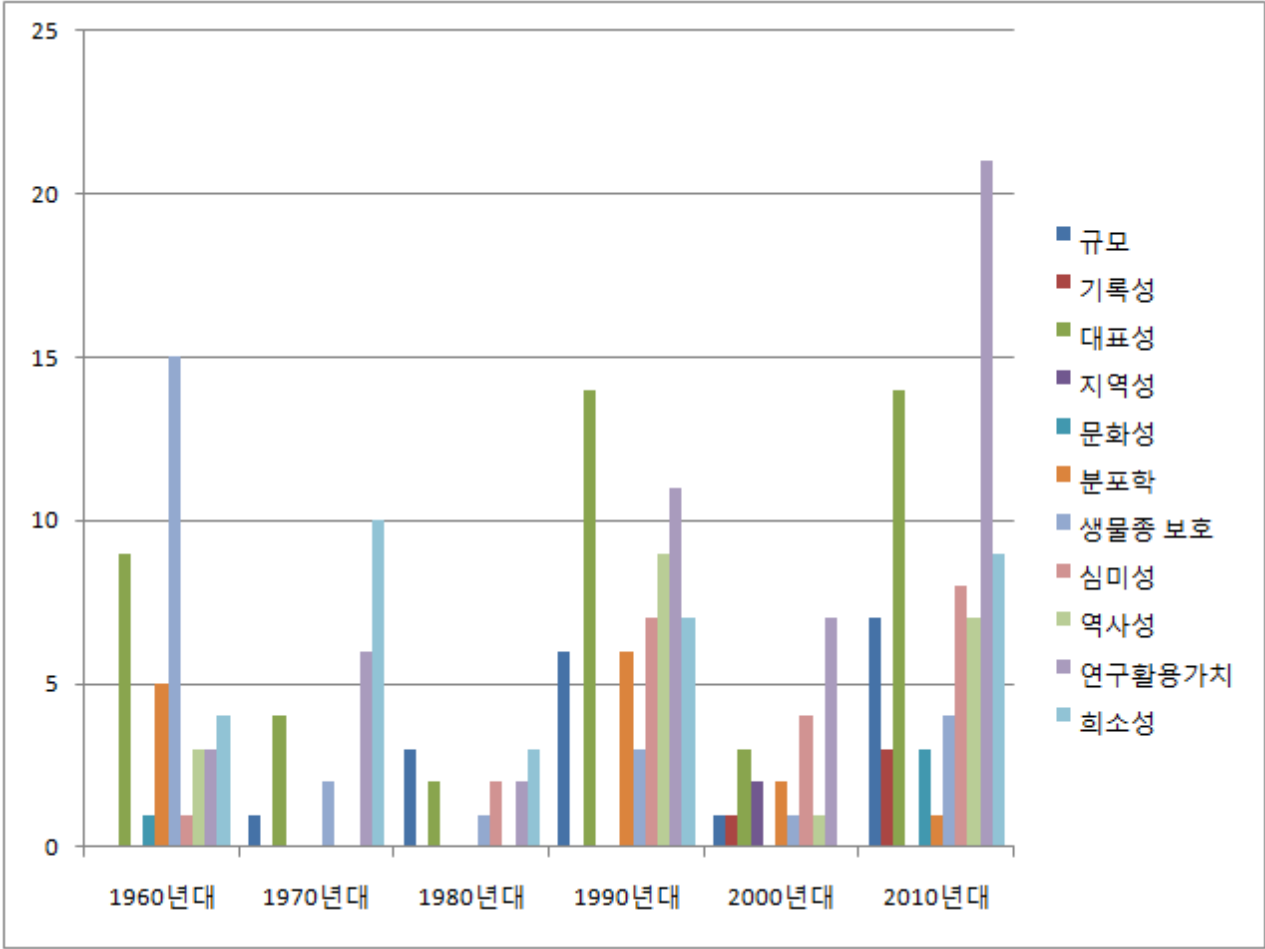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6] 천연기념물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시기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전체
	규모	기록성	대표성	지역성	문화성	분포학	생물종 보호	삼성	역사성	연구활용가치	희소성	
1960년대	0	0	9	0	1	5	15	1	3	3	4	41
1970년대	1	0	4	0	0	0	2	0	0	6	10	23
1980년대	3	0	2	0	0	0	1	2	0	2	3	13

56) 명승 역시 연구활용가치에 대한 서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나, 천연기념물과 달리 역사-인문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성이 강조됨. 반면 천연기념물은 지구과학 및 생물학(또는 분포학)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보다 강조됨

지정 시기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전체
	규모	기록성	대표성	지역성	문화성	분포학	생물종 보호	심미성	역사성	연구활용가치	희소성	
1990년대	6	0	14	0	0	6	3	7	9	11	7	63
2000년대	1	1	3	2	0	2	1	4	1	7	0	22
2010년대	7	3	14	0	3	1	4	8	7	21	9	77
전체	18	4	46	2	4	14	26	22	20	50	33	239



[그림 5-37] 천연기념물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1960~1970년대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관련 초기 입법사례인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 기념물보존령」에서부터 확인되는 오래된 문화재 유형이며, 입법 초기부터 “동물, 식물, 지질, 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되는 것”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왔음

-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의 제정(1962년) 이전 당시 법률을 근거로 1943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146건(문화재청, 2003: 57)인 것으로 확인됨
- 1960년대에는 총 223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제정 이전 제도에 근거해 지정관리하고 있던 천연기념물을 일괄 재지정한 것임⁵⁷⁾
- 1960년대 문화재 지정에 관한 가치평가는 대부분 ‘생물종 보호’에 집중되어 나타남
 - 또한, ‘대표성’에 대한 서술 역시 9건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확인됨
 - 즉, 특정 식물의 집중 생육지나 마을 당산목으로서의 노거수 등 식물 유형에 집중되었던 당시의 문화재 지정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보임
- 1970년대에는 총 48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음
 - 문화재청에 따르면 1972년부터 1974년 까지 조수보호를 위한 서식지 생태조사, 도래지 보호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업무가 정책적으로 추진된 바 있는데(문화재청, 2003: 26), 조류 보호와 관련된 지정이 다수 확인됨
 - 다만, 해당 지정 사례에 대한 문화재 가치평가 보고 내용이 누락된 관계로 가치평가요소 추출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은 진행되지 못하였음

○ 1980년대~1990년대

- 1980년대에는 총 100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바 있음
 - 1982년 11월 9일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전국의 노거수가 대거 지정되었으며, 동년 11월 20일에는 ‘매류’, ‘올빼미류’, ‘기러기류’ 등의 조류와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들’, ‘점박이 물범’ 등의 동물 종이 대거 지정됨
 - 다른 한편으로 독도가 영토적 상징성을 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음
 - 다만, 해당 시기의 역시 자료가 많이 누락된 탓에 유의미한 가치평가요소 추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희소성, 대표성 그리고 연구활용가치가 두드러지는 가치평가요소로 나타남

57) 당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대부분 식물개체, 식물종 분포지 등이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일괄 재지정 되었음. 이후 고사, 관리 불가(북한지역) 등을 이유로 대거 지정해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90년대에는 총 48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이루어졌으며 노거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1990년대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된 63개의 가치평가요소는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대표성과 희소성 그리고 연구활용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그 외에도 역사성, 심미성, 분포학, 규모 등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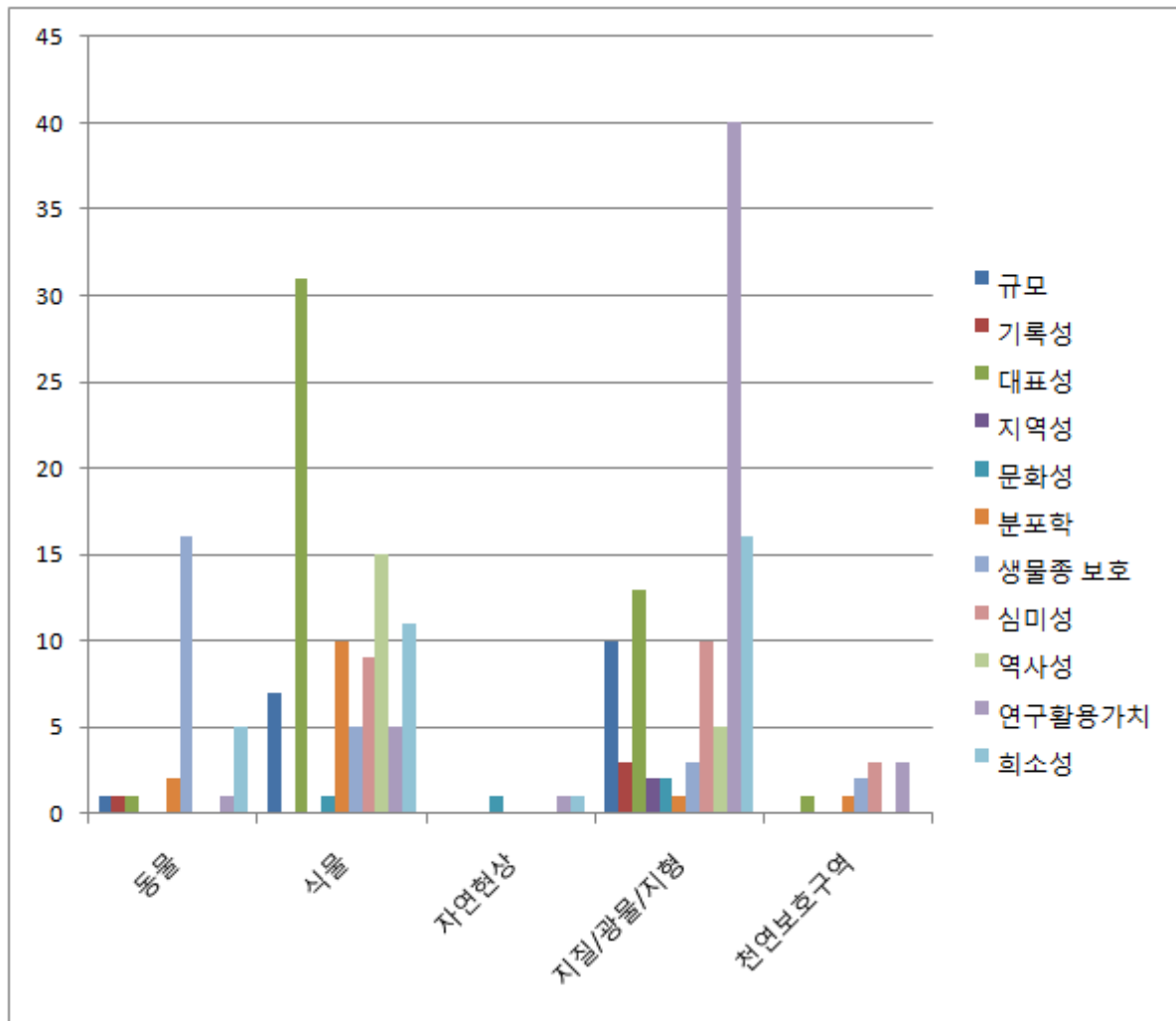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 2000년대 이후 천연기념물 지정의 경향은 동·식물 외에 천연보호구역, 지질/광물/지형, 자연현상 등 지정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2000년 성산일출봉, 문섬, 범섬, 차귀도, 마라도 등 제주도의 자연환경지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천연동굴이 다수 지정되었음
 - 또한 2011년 자연현상 유형에 해당하는 의성 빙계리 얼음골이 지정되기도 하였음
- 즉, 다양한 유형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추진었고, 관련된 가치평가의 서술에 언급되는 요소 또한 다양화 됨
 - 2000년대 이후 확인되는 99건의 가치평가용어 관련 서술은 여전히 연구활용가치, 희소성 그리고 대표성에 집중되었음
 - 그 밖에 규모, 기록성, 지역성, 문화성, 분포학, 생물종 보호, 심미성, 역사성 등의 요소에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7] 천연기념물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유형	천연기념물 가치평가요소											전체
	규모	기록성	대표성	지역성	문화성	분포학	생물종 보호	심미성	역사성	연구활용가치	희소성	
동물	1	1	1	0	0	2	16	0	0	1	5	27
식물	7	0	31	0	1	10	5	9	15	5	11	94
자연현상	0	0	0	0	1	0	0	0	0	1	1	3
지질/광물/지형	10	3	13	2	2	1	3	10	5	40	16	105
천연보호구역	0	0	1	0	0	1	2	3	0	3	0	10
전체	18	4	46	2	4	14	26	22	20	50	33	239



[그림 5-38] 천연기념물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현황

- 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자연현상, 지질/광물/지형, 천연보호구역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동물 유형 지정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생물종 보호(16건, 약 59.26%)’ 임 이는 위기종 또는 희귀종 동물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식을 위해 특별히 문화재로서 보호관리 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식물 유형에 있어 두드러지는 가치평가요소는 대표성(31건, 약32.98%)과 역사성(15건, 약 15.96%)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대표성은 지역, 종교, 문화현상 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개체 또는 구역에 대해 가치 부여되는 요소인데, 이 경우 당산목이나 마을숲과 같이 인간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학술적 관점에 있어 분포학적 가치가 고려되었는데 이는 특정 식물의 분포학상 한계지⁵⁸⁾에 학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임
- 자연현상유형의 천연기념물은 ‘얼음골’에 대한 지정사례가 유일한데 이에 대하여는 문화성, 연구활용가치, 희소성이 각각 1건씩(약, 33.33%) 나타남
- 지질/광물/지형 유형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평가요소는 연구활용가치(40건, 약 38.10)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해당 유형에 대한 가치평가가 학술연구적 관점에서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음
- 인문적 관점으로는 대표성에 대한 서술 13건(약 12.38%)을 확인할 수 있고, 신비로운 자연 경관지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문화적 및 지역적 상징성으로부터 가치를 인식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가치평가서술은 심미성과 연구활용가치가 각각 3건 씩 (약 30%)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가치평가요소로 대표성, 분포학, 생물종 보호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음

58) 지구 위도 상 특정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분포의 한계지

2)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관련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천연기념물 유형에 대한 지정은 2000년대 이후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와 조사사업의 확대로 약간의 증가폭으로 보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줄어든 모습을 보임
 - 천연기념물 지정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 자원이 고갈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에 대한 개념 확장과 새로운 자원의 발굴이 추진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지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식물 유형에 대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의 기후 변화에 따라 북방한계지 및 식물 생육지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 환경변화가 지속될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물 또는 대상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동물의 경우 희귀동물 및 멸종위기종이 아닌 축양동물에 대한 추가지정이 나타날 수 있음
 - 동물 유형에 있어 2012년 「축양동물 실태조사 및 천연기념물 지정방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2013년 제주 흑우가 지정되었고, 2015년 제주 흑돼지가 지정된 바 있음
 - 신규 지정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 멸종위기 생물종 뿐 아니라 한국인과 친숙한 축양동물에 대한 추가지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최근 지진으로 인한 활성단층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고려될 수 있음
 - 최근 지진이 다수 발생하는데 대한 영향으로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진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활성단층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은 지진 취약지에 대한 개발 활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인식할 수 있음
 - 지진으로 인한 한반도 내 활성단층을 천연기념물-지질/광물/지형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가치평가에 있어 인문학적 관점과 자연과학적 관점 양립됨

-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가치평가요소의 언급 빈도를 살펴보면 가치평가에

- 있어 인문학적 관점과 자연과학적 관점이 양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유형에 걸쳐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인데 예컨대 식물의 경우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대표성⁵⁹⁾, 역사성⁶⁰⁾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동물의 경우 한국인과 친숙한 동물종, 한반도를 대표하는 생물 등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인식과 철새도래지, 서식지 등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인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음
- 지질/광물/지형의 경우 대체로 자연과학적 관점이 우세하나 문화적 상징성을 갖는 지질활동 결과물에 대해 ‘대표성’을 언급하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음
- 천연보호구역 역시 일정한 구역 내에 자연환경 자원이 집중 분포하는 ‘자연과학’의 유형과 지정학적 특성으로부터 인문적 가치가 발생함⁶¹⁾을 인식하는 ‘문화 및 자연 결합성’의 유형이 양립하고 있음
- 즉, 천연기념물은 자연물과 그 환경을 보호 및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가치평가에 있어 인문학적 관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 멸종 위기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아님을 양지해야 할 것

- 일반적으로 천연기념물 제도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이기는 하나 이를 천연기념물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라 보기 어려움(환경부, 2001: 4)
- 천연기념물에 대한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동물 또는 동물군,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축양동물,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 등의 개체, 종, 서식지 및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즉, 한반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취약한 환경에 처한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 그럼에도 천연기념물 지정가치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멸종위기 생물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59) 마을 숲, 방풍림, 종교적 의미를 갖는 당산나무 등

60) 오래된 노거수, 역사사건 또는 인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연물

61) 예컨대 독도의 경우 한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땅이라는 점에서 영토적 상징성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자연물이 갖는 대표성의 의미

- 천연기념물 유형에 대한 가치평가 서술에 있어 ‘대표성’에 해당하는 서술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여기에서 대표성은 한반도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전형적이거나 특별한 표본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한국인의 문화, 종교, 생활, 역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포괄하는 요소임
- 따라서 노거수, 당산목, 마을 숲 등이 갖는 역사문화적 요소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문학적 가치를 제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6. 국가민속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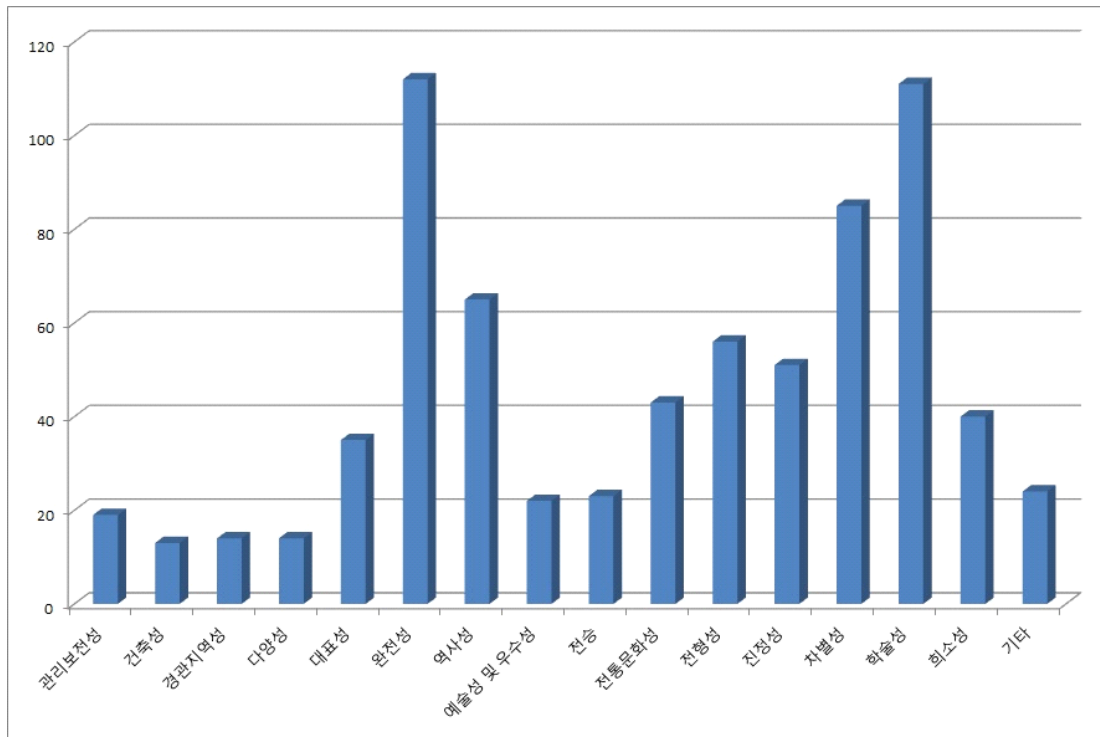
1)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분석

(1)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⁶²⁾

[표 5-18]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가치평 가요소	관리보전성	관리	1	2.6
		보존필요성	18	
	건축성	구조	5	1.8
		기술성	8	
	경관지역성	경관성	12	2.0
		조경	2	
	다양성	다양성	1	1.9
		유물	13	
	대표성	대표성	33	4.8
		상징성	2	
	완전성		112	15.4
	역사성	고고성	9	8.9
		역사성	56	
	예술성 및 우수성	예술성	18	3.1
		우수성	4	
	전승		23	3.2
	전통문화성	민속성	31	6.0
		전통문화성	12	
	전형성		56	7.7
	진정성	인물	13	7.0
		진정성	38	
	차별성		85	11.7
	학술성	교육성	1	15.2
		학술성	110	
	희소성		40	5.5
	기타	기증격려	1	3.2
		비교평가	23	
합계			727	100

62) 추출된 27개의 가치평가요소를 비슷한 성격의 범주 16개로 묶음.
관리보전성(관리, 보존필요성), 건축성(구조, 기술성), 경관지역성(경관성, 조경), 다양성(다양성, 유물), 대표성(대표성, 상징성), 완전성, 역사성(역사성, 고고성), 예술성 및 우수성, 전승, 전통문화성(민속성, 전통문화성), 전형성, 진정성(인물, 진정성), 차별성, 학술성(교육성, 학술성), 희소성, 기타(기증격려, 비교평가)



[그림 5-39]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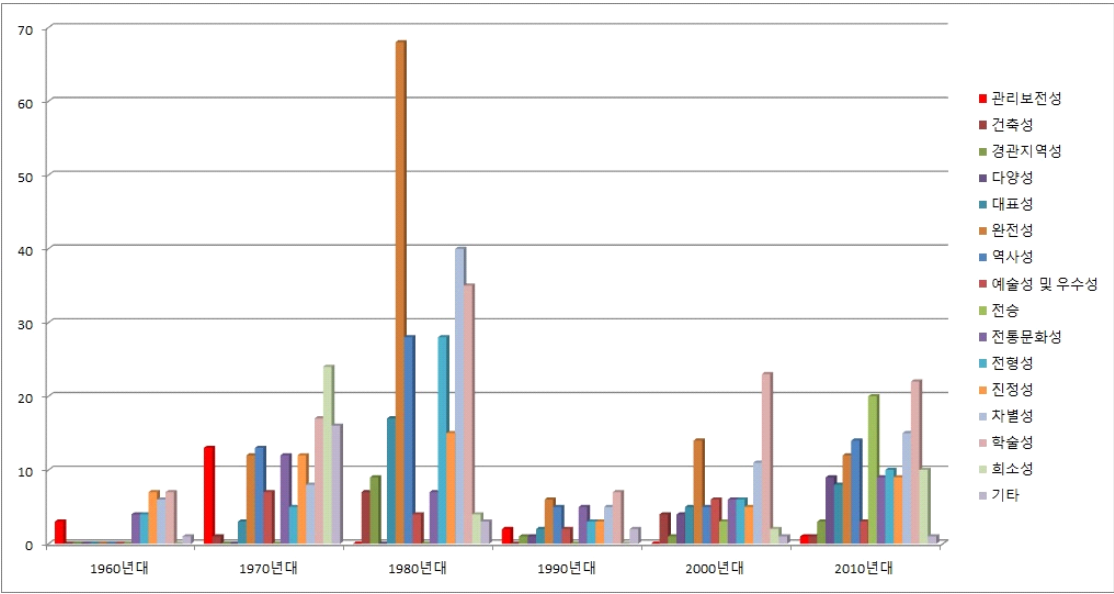
○ 가치평가요소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총293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으며, 44건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관련 문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249건에 대한 지정 관련 문헌을 통해 가치평가요소를 추출
- 국가민속문화재 한 건당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됨(ex.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 학술성, 진정성)
- 추출된 가치평가요소는 총 27개로 국가민속문화재 249건을 대상으로 총 727개가 추출됨
 - 그 중 ‘완전성’이 112건으로 전체에서 15.4%를 차지, ‘학술성’은 111건으로 15.2%로 가장 많이 추출된 가치평가요소들임
 - ‘차별성’은 85건으로 11.7%, ‘역사성’은 65건으로 8.9%, ‘전형성’은 56건으로 7.7%, ‘진정성’은 51건으로 7.0%를 차지
 - 전반적으로 가치평가요소는 학술성, 완전성, 역사성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밖에 관리보전성, 건축성, 경관지역성, 다양성, 예술성, 우수성, 전승 등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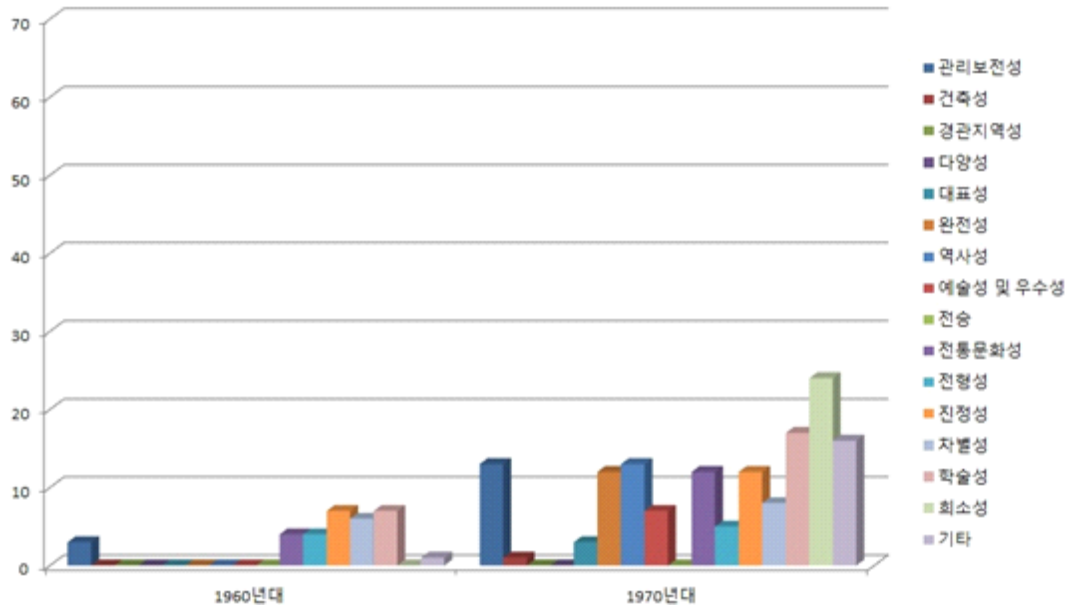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19] 국가민속문화재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시기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전체				
	관리 보전		건축		경관 지역		다양		대표		완 전 성	역사		예술 우수		전승	전통 문화		전형성	진정		차 별 성	학술		회 소 성	기타		
	관 리	보 존 필 요 성	구 조	기 술 성	경 관 성	조 경	다 양 성	유 물	대 표 성	상 징 성		고 고 성	역 사 성	예 술 성	우 수 성		민 속 성	전 통 문 화 화 성		인 물	진 정 성		교 육 성			학 술 성	기 증 격 려	비 교 평 가
1960 년대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4	0	7	6	0	7	0	0	1	32
1970 년대	0	13	0	1	0	0	0	0	3	0	12	2	11	7	0	0	11	1	5	1	11	8	0	17	24	0	16	143
1980 년대	0	0	2	5	8	1	0	0	17	0	68	6	22	2	2	0	5	2	28	5	10	40	1	34	4	0	3	265
1990 년대	1	1	0	0	0	1	0	1	2	0	6	0	5	2	0	0	4	1	3	2	1	5	0	7	0	0	2	44
2000 년대	0	0	3	1	1	0	1	3	4	1	14	1	4	4	2	3	4	2	6	2	3	11	0	23	2	1	0	96
2010 년대	0	1	0	1	3	0	0	9	7	1	12	0	14	3	0	20	3	6	10	3	6	15	0	22	10	0	1	148
전체	1	18	5	8	12	2	1	13	33	2	112	9	56	18	4	23	31	12	56	13	38	85	1	110	39	1	23	727



[그림 5-40] 국가민속문화재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그림 5-41] 국가민속문화재 1960-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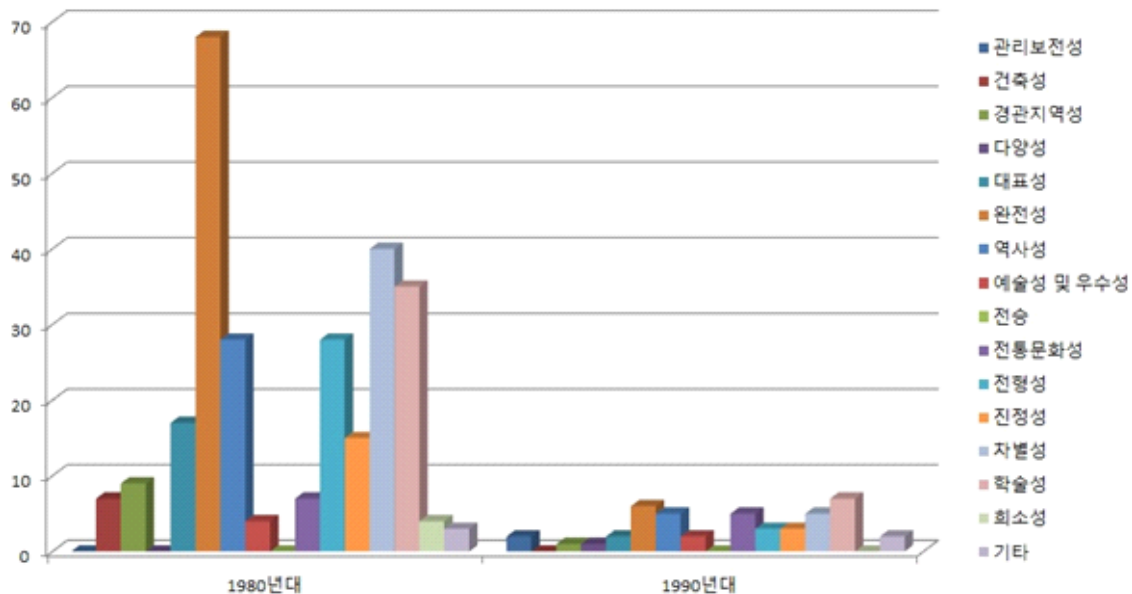
○ 1960년대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최초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국가민속문화재의 당시 명칭은 ‘민속자료’였음. 1964년 덕온공주 당의가 처음으로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총 15건이 지정
- 법 제정 당시 ‘민속자료’로 정의됨으로써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을 전제로 하였음
- 1960년대에는 출처와 연대가 명확하여 해당 문화재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동시대·동지역에서 보기 드문 ‘차별성’이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건조물이 지정됨

○ 1970년대

- 1970년대에는 국가민속문화재가 총 93건이 지정되었으며, 1960년대 지정 건수에 비해 6배가 지정되어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시기였음
- 지정건수 증가에 대한 배경으로 1970년대는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전통 농촌마을의 급격한 변화와 해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시점이었음
- 문화재관리국은 1972년 ‘집단민속자료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다음해인 1973년에 이를 제정
- 유적건조물은 1960년대에는 9건이 지정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52건으로 눈에 띄게 급증

- 1970년대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어 ‘희소성’ 과 ‘관리보전성’ 이 있으며, 이미 지정된 문화재와 ‘비교평가’ 하여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민속자료로 지정
- 1970년대에도 ‘민속자료’ 로 정의됨으로써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 을 전제로 하였음



[그림 5-42] 국가민속문화재 1980-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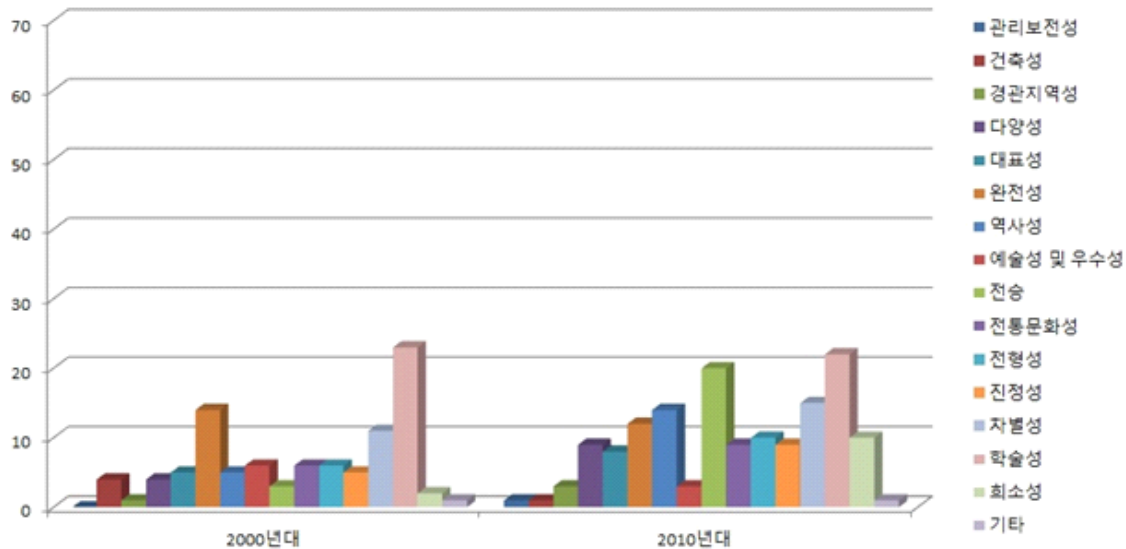
○ 1980년대

- 1980년대에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시대별 지정 건수 중 가장 많은 112건이 지정
- 특히, 유적건조물이 84건 지정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전통가옥 및 민속마을에 대한 지정을 통한 보호 관리 시행
- 1980년대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완전성’ 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대·동지역에서 보기 드문 ‘차별성’ 이 있는 문화재를 민속자료로 지정
- 1980년대에도 ‘민속자료’ 로 정의됨으로써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 을 전제로 하였음

○ 1990년대

- 1990년대에 국가민속문화재는 총 14건만이 지정되었으며, 그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급감

- 이 시기에도 ‘민속자료’로 정의됨으로써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을 전제로 하였음



[그림 5-43] 국가민속문화재 2000-201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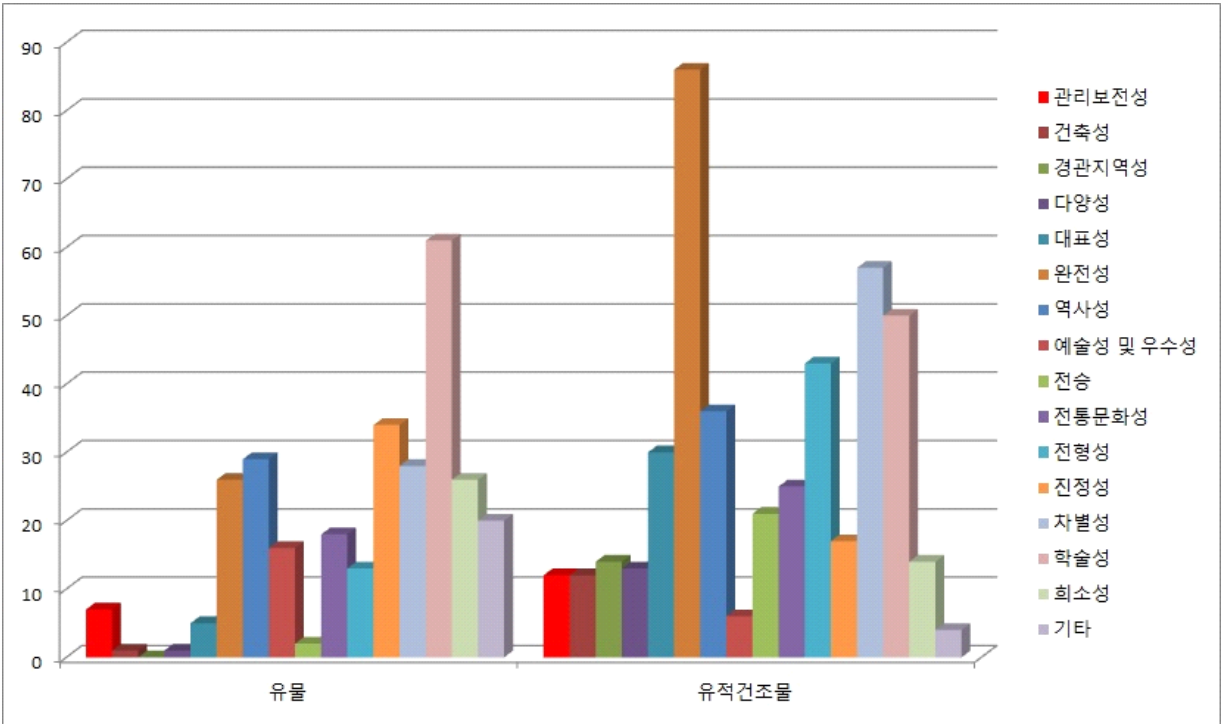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 201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민속자료’에서 ‘민속문화재’로 개칭됨
- 1990년대 이후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대·동지역에서 보기 드문 ‘차별성’이 있는 문화재를 민속자료로 지정
- 민속자료에서 민속문화재로 개칭되었지만 가치평가요소 중 여전히 ‘학술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 2000년대에는 유형의 유물·유적건조물과 함께 현재까지 민족의 전통 문화가 함께 전승되어 오는 무형적 가치인 ‘전승’을 주요 지정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음
- 따라서 2000년대 이후에는 민속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가 다양화 되면서 학술성, 전승, 차별성 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치평가요소의 증가 경향은 기존에 학술성에만 집중되어 있던 민속문화재의 가치평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민속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즉, 다른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가치평가의 다양성 및 문화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음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20]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유형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전체				
	관리 보전		건축		경관 지역		다양		대표		완 전성	역사		예술우 수		전승	전통 문화		전형성	진정		차별성	학술		기타			
	관 리	보 존 필 요 성	구 조	기 술 성	경 관 성	조 경	다 양 성	유 물	대 표 성	상 징 성		고 고 성	역 사 성	예 술 성	우 수 성		민 속 성	전 통 문 화 성		인 물	진 정 성		교 육 성		학 술 성	희 소 성	기 증 격 려	비 교 평 가
유물	1	6	0	1	0	0	0	1	4	1	26	6	23	16	0	2	14	4	13	4	30	28	1	60	26	1	19	287
유적 건조 물	0	12	5	7	12	2	1	12	29	1	86	3	33	2	4	21	17	8	43	9	8	57	0	50	14	0	4	440
전체	1	18	5	8	12	2	1	13	33	2	112	9	56	18	4	23	31	12	56	13	38	85	1	110	39	1	23	727



[그림 5-44]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유물’ (복식, 생활자료, 자수, 신앙자료)과 ‘전통가옥’, ‘민속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문화재청의 문화재검색에서는 국가민속문화재를 크게 유물과 유적건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민속마을을 유적건조물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현황
 -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총 97건으로 ‘학술성’ 이 61건으로 62.9%, ‘진정성’ 이 34건으로 35.1%, ‘역사성’ 이 29건으로 30.0%, ‘차별성’ 이 28건으로 28.9% 다수 추출
 -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건조물은 총 196건으로 ‘완전성’ 이 86건으로 44.8%, ‘차별성’ 이 57건으로 29.7%, ‘학술성’ 이 50건으로 26.0%, ‘전형성’ 이 43건으로 21.9% 다수 추출
 - 유물과 유적건조물 모두 공통적으로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 과 ‘차별성’ 을 전제로 하였음
 - 유물은 출처와 연대가 명확하여 해당 문화재의 ‘진정성’ 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지정, 유적건조물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완전성’ 이 있는 문화재를 지정한 것이 특색
 - 따라서 유물의 경우 여전히 학술성에 대한 가치평가용어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유적건조물의 경우는 완전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면서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적건조물의 경우 차별성, 학술성, 역사성 등과 같은 가치평가 용어도 빈번히 사용되면서 유적건조물의 가치평가용어의 다양성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유물과 유적건조물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다양성과 개별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평가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2) 국가민속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 추세 및 전망

- 1990년대 이후 ‘유물’, ‘민속마을’에 비해 ‘유적건조물’이 꾸준히 지정되고 있는 추세.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민속문화재의 정의 상, 민속문화재 지정은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가치평가요소 중 ‘학술성’을 전제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국가민속문화재는 ‘민속자료’로 정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술성’을 전제로 지정되어왔음
- 또한 공통적으로 ‘차별성’과 ‘희소성’이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오랜 ‘역사성’ 속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유물과 유적건조물이 선별 지정됨

○ 유물과 유적건조물(동산-부동산) 분류에 따른 가치평가요소

- 유물은 동산문화재로 ‘희소성’과 ‘차별성’이 있으며, 온전히 남아 있어 ‘완전성’을 갖춘 유물이 중점적으로 지정
- 유적건조물은 부동산문화재로서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전통 농촌마을의 급격한 변화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보전성’이 있으며, 시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성’을 보여주거나 ‘대표성’이 있는 유적건조물이 중점적으로 지정
- 가치평가요소 중 ‘관리’, ‘교육성’, ‘기증격려’는 유물에만 해당되는 요소이며, ‘우수성’, ‘경관성’, ‘구조’, ‘다양성’은 유적건조물에만 해당되는 요소임

○ 유적건조물의 무형적 요소를 포함하는 가치평가요소 ‘전승’

- 국가민속문화재(법제정 당시 ‘민속자료’로 칭함)의 개념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상 처음 등장.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 민속자료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이외에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을 표상하는 유형문화재’로 규정(시행규칙(1964))
- 따라서 민속자료의 개념은 전통적인 생활양식 전반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개념에서 유형의 문화재만을 칭하는 개념으로 축소

-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유물·유적·건조물과 함께 현재까지 민족의 전통문화가 함께 전승되어 오는 무형적 가치인 ‘전승’을 주요 지정 요소로 하고 있음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은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과 전통문화를 온전하게 보존·전승하여 왔다. 대대로 이어온 괴헌가의 가승음식인 전통술 이화주, 수란, 보푸람, 육말 등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내놓는 음식으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2009b, 「영주 괴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승격 지정)
 -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은 “3대가 거의 50여 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볼 수 있는 가족친족생활, 의례 등의 민속생활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문화재청, 2012년도 제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회의자료)
 -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은 “장흥 방촌리 석장승은 현재에도 살아있는 마을문화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 현재까지 행해지는 마을제 등의 살아있는 신앙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는 석장승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 2013년도 제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회의 결과)
 - 국가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함양박씨 희이재사는 “조상의례가 관련된 독특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 20150821 「안동 허백당」 및 「예천 희이재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7. 국가무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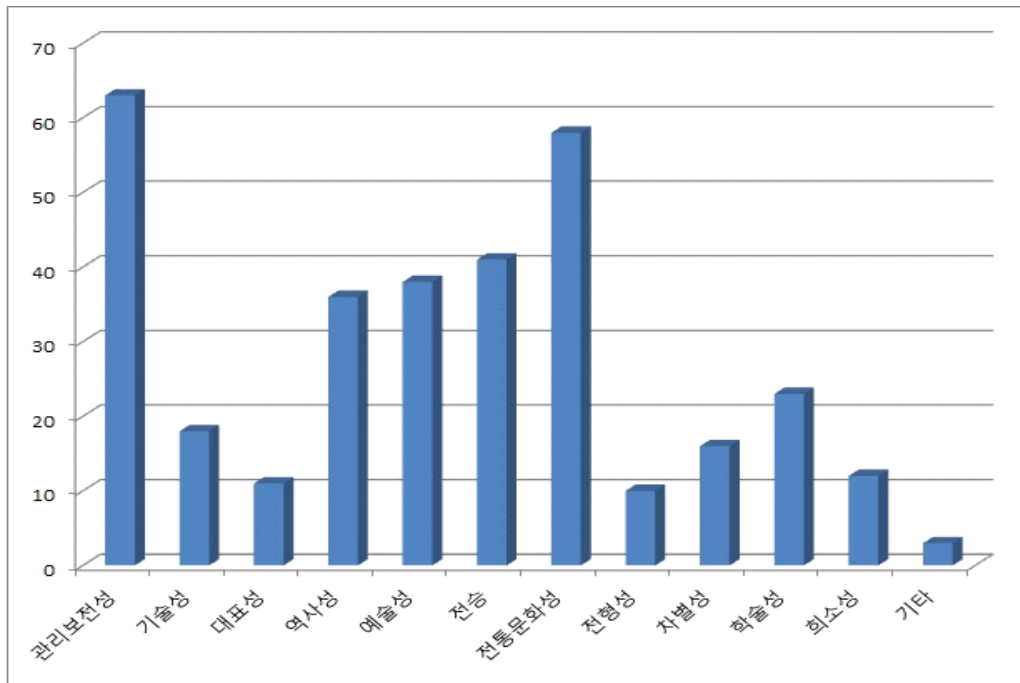
1)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분석

(1)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⁶³⁾

[표 5-21]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현황

구 분			빈도	퍼센트
가치평가 요소	관리보전성		63	19.1
	기술성	기능성	1	5.5
		기술성	17	
	대표성		11	3.3
	역사성		36	10.9
	예술성		38	11.6
	전승	완전성	22	12.5
		전승력	8	
		전형유지	11	
	전통문화성	민속성	23	17.6
		전통문화성	30	
		향토성	5	
	전형성		10	3.0
	차별성		16	4.9
	학술성	교육성	1	7.0
		학술성	22	
희소성		12	3.6	
기타	다양성	1	0.9	
	비교평가	2		
합계			329	100

63) 추출된 19개의 가치평가요소를 비슷한 성격의 범주 12개로 묶음.
관리보전성, 기술성(기능성, 기술성), 대표성, 역사성, 예술성, 전승(완전성, 전형유지, 전승력), 전통문화성(전통문화성, 민속성, 향토성), 전형성, 차별성, 학술성(교육성, 학술성), 희소성, 기타(다양성, 비교평가)



[그림 5-45]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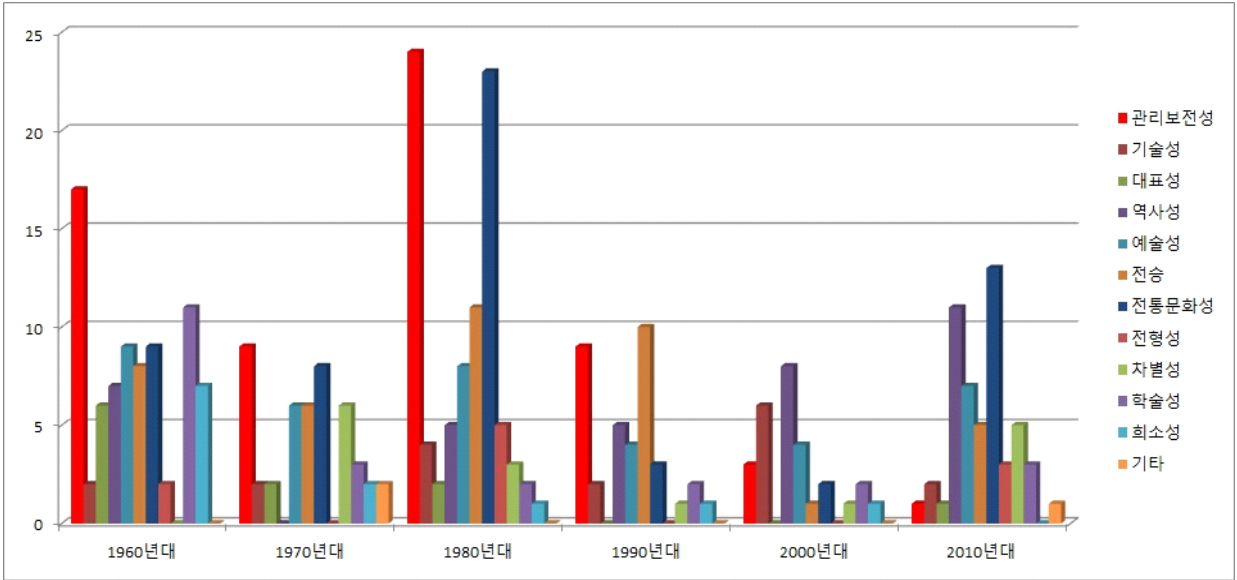
○ 가치평가요소 현황

- 2017년 9월 기준 총132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으며, 23건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문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9건에 대한 지정 관련 문헌을 통해 가치평가요소를 추출
- 국가무형문화재 한 건당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됨(ex.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보존필요성,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 추출된 가치평가요소는 총 19개로 국가무형문화재 109건을 대상으로 총 329개가 추출됨
 - 그 중 ‘관리보전성’ 이 63건으로 전체에서 19.1%를 차지, 가장 많이 추출된 가치평가요소임
 - ‘전통문화성’ 은 58건으로 17.6%, ‘전승’ 은 41건으로 12.5%, ‘예술성’ 은 38건으로 11.6%, ‘역사성’ 은 35건으로 10.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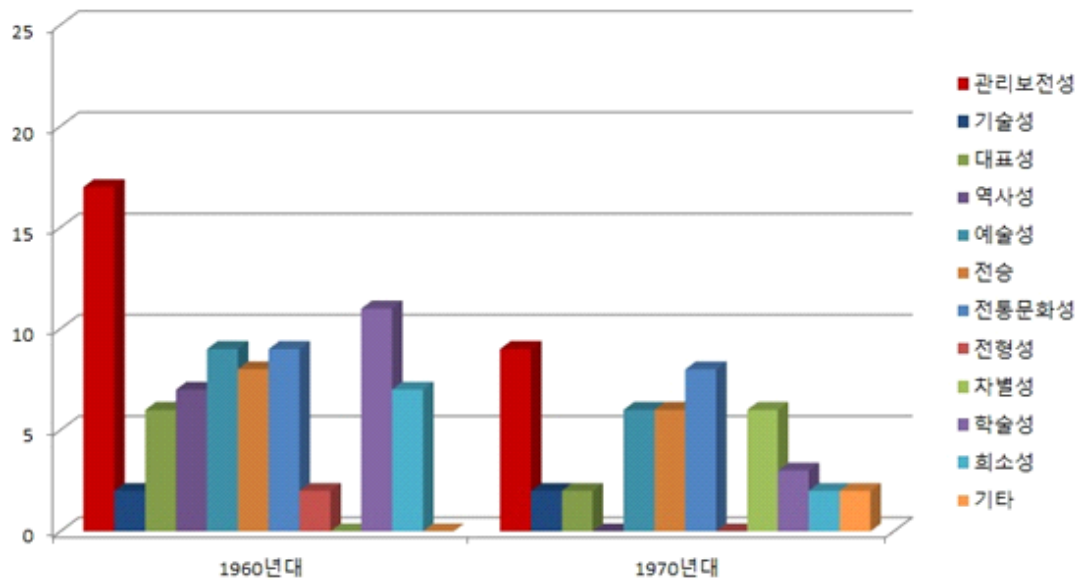
(2)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22] 국가무형문화재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시기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전체	
	관리 보전 성	기술성		대표 성	역사 성	예술 성	전승			전통문화성			전형 성	차별 성	학술성		희소 성	기타		
		기능 성	기술 성				완전 성	전승 력	전형 유지	민속 성	전통 문화 성	향토 성			학술 성	교육 성		다양 성		비교 평가
1960 년대	17	0	2	6	7	9	4	0	4	3	4	2	2	0	11	0	7	0	0	78
1970 년대	9	1	1	2	0	6	6	0	0	2	4	2	0	6	3	0	2	0	2	46
1980 년대	24	0	4	2	5	8	8	2	1	9	13	1	5	3	2	0	1	0	0	88
1990 년대	9	0	2	0	5	4	2	5	3	2	1	0	0	1	1	1	1	0	0	37
2000 년대	3	0	6	0	8	4	0	1	0	0	2	0	0	1	2	0	1	0	0	28
2010 년대	1	0	2	1	11	7	2	0	3	7	6	0	3	5	3	0	0	1	0	52
합계	63	1	17	11	36	38	22	8	11	23	30	5	10	16	22	1	12	1	2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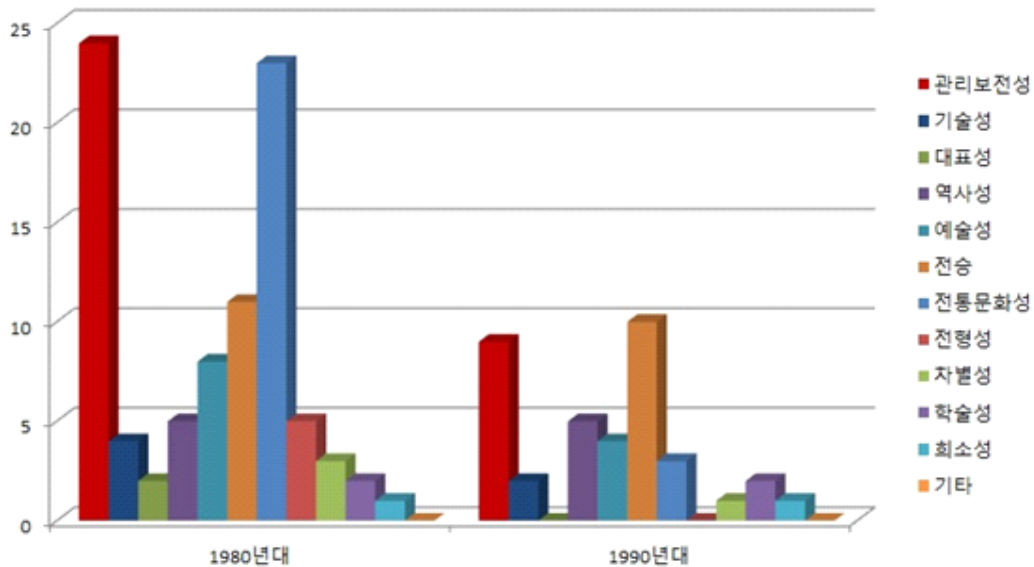
[그림 5-46] 국가무형문화재 시기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그림 5-47] 국가무형문화재 1960~197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1960~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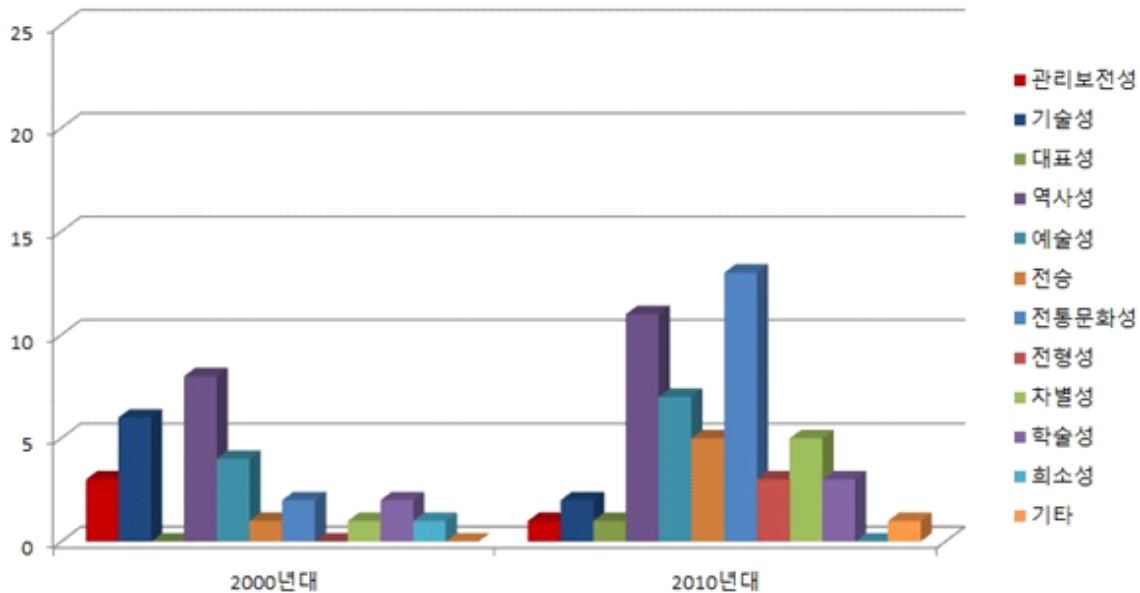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최초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64년 제1호 종묘제례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하여 보존·관리와 전승 기반 구축
- 1968년 2월 29일 민족문화의 가치체계 확립을 위한 한국민속종합조사에 착수 하며 1960년대 31건에 이어 1970년대 26건으로 다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인멸을 우려하여 ‘관리보전성’에 의해 지정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 또한 해당 시기에는 기능종목에 비해 예능종목이 다수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치평가요소 중 ‘예술성’이 다수 추출되는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모두 가치평가가용어 사용에 있어서 관리보전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관리보전성에 가치를 둬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무형문화재의 문화재의 특성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48] 국가무형문화재 1980~1990년대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1980~1990년대

- 1980년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가 42건 지정되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총 지정건수 132건에서 31.8%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건수가 지정된 시기임
- 그러나 1990년대에는 15건이 지정되며 지정 건수 급감
- 1982년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1962년도에 제정된 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였고, 전승실태조사(1981)와 같이 정책적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이 추진되었기 때문(문화재청, 2011b: 248)
- 따라서 해당 시기에는 전승실태조사를 통해 인멸 위기에 처해 보존이 시급한 무형문화재들이 지정됨으로써 ‘관리보전성’에 의해 지정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 더불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전통문화성’을 지니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다수 지정됨
- 전반적으로 1980년대에는 ‘관리보전성’과 ‘전통문화성’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에는 ‘관리보전성’과 ‘전승’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즉, 국가무형문화재에서는 ‘관리보전성’, ‘전승’, ‘전통문화성’ 등이 중요한 가치평가요소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49] 국가무형문화재 2000년대 이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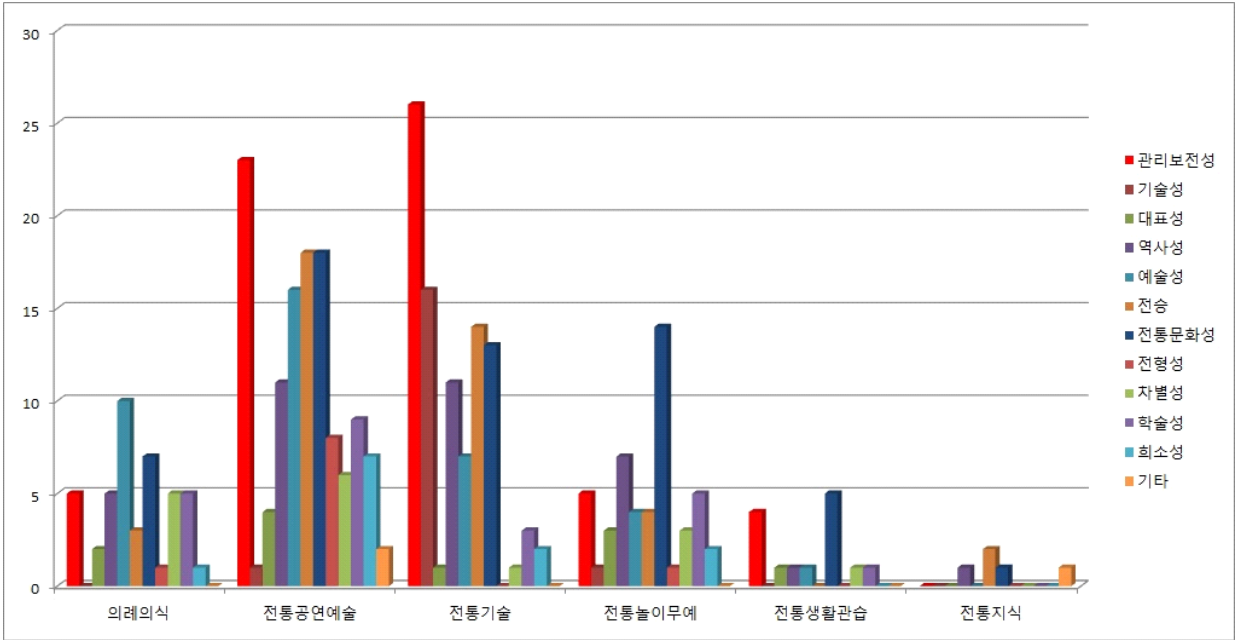
○ 2000년대 이후

- 2000년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가 11건이 지정되었는데, 이 중 10건이 기능종목이었음
- 예술적 가치가 큰 기능종목들이 지정됨으로써, ‘기술성’과 ‘예술성’이 다수 추출
- 2010년대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새로운 유형이 지정
- 새로운 지정가치요소 ‘다양성’ 등장(2017.5.1. 제132호 해녀 지정)
- 200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적었으나,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반영되었음
- 2000년대에는 ‘역사성’과 ‘기술성’이 높은 비율로 가치평가요소를 차지하고 있었음
- 2010년대에는 가치평가요소 중에서 ‘전통문화성’과 ‘역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2010년대에는 ‘예술성’과 ‘전승’, ‘차별성’ 등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중요한 가치평가 요소로 나타남
- 따라서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차이는 전반적인 지정건수의 상승과 ‘역사성’과 ‘전통문화성’, ‘예술성’ 등이 중요한 가치평가요소임

(3)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표 5-23] 국가무형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지정 유형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전체	
	관 리 보 전성	기술성		대 표 성	역 사 성	예 술 성	전승			전통문화성			전형성	차 별 성	학술성		회 소 성	기타		
		기 능 성	기 술 성				완 전 성	전 승 력	전 형 유 지	민 속 성	전 통 문 화 성	향 토 성			학 술 성	교 육 성		다 양 성		비 교 평 가
의례 의식	5	0	0	2	5	10	0	1	2	7	0	0	1	5	5	0	1	0	0	44
전통 공연 예술	23	0	1	4	11	16	14	0	4	10	6	2	8	6	9	0	7	0	2	123
전통 기술	26	1	15	1	11	7	5	6	3	0	13	0	0	1	2	1	2	0	0	94
전통 놀이 무예	5	0	1	3	7	4	2	1	1	5	6	3	1	3	5	0	2	0	0	49
전통 생활 관습	4	0	0	1	1	1	0	0	0	0	5	0	0	1	1	0	0	0	0	14
전통 지식	0	0	0	0	1	0	1	0	1	1	0	0	0	0	0	0	0	1	0	5
전체	63	1	17	11	36	38	22	8	11	23	30	5	10	16	22	1	12	1	2	329



[그림 5-50] 국가무형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빈도 분석

○ 국가무형문화재 유형의 변화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규정되었으며,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에서 예능종목과 기능종목으로 크게 분류
 -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종목에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다섯 가지 유형이 포함
 -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종목에는 ‘공예기술’, ‘음식’ 두 가지 유형 편성
-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개칭되었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행정적 유형 구분 방식도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일곱 가지 유형으로 재편성
 -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음악’, ‘무용’, ‘연극’은 ‘전통공연·예술’로 통합되었으며, 기능종목의 ‘공예기술’은 ‘전통기술’으로, ‘음식’은 ‘전통생활관습’으로 재분류
 - 또한 예능종목의 ‘놀이와 의식’, ‘무예’가 2015년 이후 ‘전통놀이무예’로 통합되었고, ‘놀이와 의식’에서 ‘의식’이 분리되어 ‘의례의식’으로 재분류
- 주목할 점은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정 범위가 확장

○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현황(2017.09. 기준)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의례·의식은 총 18건으로 이 중 ‘예술성’이 10건으로 55.6%, ‘전통문화성’이 7건으로 38.9% 다수 추출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공연·예술은 총 46건으로 이 중 ‘관리보전성’이 23건으로 50.0%, ‘전통문화성’이 18건으로 39.1%, ‘예술성’이 16건으로 34.8% 다수 추출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기술은 총 51건으로 이 중 ‘관리보전성’이 26건으로 51.0%, ‘기술성’ 16건으로 31.4% 다수 추출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놀이·무예는 총 16건으로 이 중 ‘전통문화성’이 14건으로 87.5%, ‘역사성’이 7건으로 43.8% 다수 추출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생활관습은 총 5건으로 모두 ‘전통문화성’이

추출되었으며, ‘보존필요성’은 4건으로 80.0% 다수 추출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지식은 총 1건(제132호 해녀)으로 다양성, 민속성, 역사성, 완전성, 전형유지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됨

2) 국가무형문화재 가치평가요소 빈도분석의 시사점

○ 지정추세 및 전망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상의 중분류인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례의식’에서 전통공연예술과 전통기술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지정 수량이 극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낮음
- 반면,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활 문화적인 성격을 갖는 ‘전통생활관습’,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이 새로이 추가
- 향후 생활문화적 성격을 갖는 무형문화재 조사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그 지정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전통문화적 성격을 갖는 유형의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정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

○ ‘전통문화성’, ‘전승’, ‘예술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재

- 전통문화성, 전승, 예술성은 전체 빈도 분석에서 관리보전성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치평가요소이며, 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임
- 국가무형문화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전통문화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통한 인적 ‘전승’을 전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발굴은 전국민속경연대회, 전통공예대전 등 전통문화 관련 행사에서 수상하거나 특별히 돋보인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진 바 있음(문화재청, 1994: 10)
- 따라서 예술성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관리보전성’에 의한 지정에서 다양한 가치평가요소에 의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1990년대까지는 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정을 통한 보전이 시급한 문화재가 지정되어 왔음
- 2010년대 들어서는 ‘관리보전성’이 감소하고 ‘역사성’, ‘전통문화성’, ‘민속성’ 등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되고 있음
- 즉, 2015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원칙이 원형 유지에서 전형 유지 변화
- 전통지식과 구전전통 및 표현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무형문화재가 추가됨으로써 변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제3절 가치평가요소 DB 분석의 시사점

1. 문화재 종별 가치평가요소의 특징

○ 국보

- 유형문화재 국보는 '학술성'을 전제로 보물 중에서도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대표성'과 '희소성'을 띤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었음

○ 보물

- 유형문화재 보물은 현재까지 약 2000여건이 지정되었고, 가치평가요소가 매우 다양하게 추출되는 유형으로 '학술성'을 전제함
- '예술성', '희소성', '차별성'은 전체 빈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가치평가요소이며, 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임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는 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정을 통한 보전이 시급한 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 왔음
- 가치평가에서 '전통문화성', '전승', '예술성'은 전체 빈도 분석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가치평가요소이며, 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임

○ 사적

- 기념물의 사적은 '역사성'을 전제로 당대의 제도사, 정치사, 사회사, 인물사, 기술사 등에 대한 학술적 사료로서 '학술성'이 전체 빈도 분석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가치평가요소이며, 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임

○ 명승

- 기념물의 명승은 '심미성'을 전제로 동시대·동지역의·생활문화 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경관이 지정되어 왔음
- 즉, 명승의 심미성에 대하여는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

○ 천연기념물

- 기념물의 천연기념물은 '대표성'을 전제로 하며, 대표성은 한반도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전형적이거나 특별한 표본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한국인의 문화,

종교, 생활, 역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포괄하는 요소임

○ 국가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민속자료'로 정의되었으며, '학술성'을 전제로 지정되어왔음
- 또한 공통적으로 '차별성'과 '희소성'이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오랜 '역사성' 속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춘 유물과 유적건조물이 선별 지정됨

2. 종합시사점

-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 DB 구축을 통해 가치평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 유형문화재는 2010년대 들어 다른 시기에 비해 지정건수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가 고려됨
 -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 상, 1990년대까지는 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정을 통한 보전이 시급한 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 왔음
 -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관리보전성'이 감소하고 '역사성', '전통문화성', '민속성' 등 다양한 가치평가요소가 추출되고 있음
 -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추출되는 가치평가요소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
-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시기별로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종류와 빈도가 증가되는 경향
 - 1990년대 지정된 문화재 가치평가의 용어들은 대부분 단순함을 유지하지만, 2000년대 이후 문화재 지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치평가용어가 다양화되었음
 - 민속문화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물·유적건조물과 함께 현재까지 민족의 전통문화가 함께 전승되어 오는 무형적 가치인 '전승'을 주요 지정 요소로 하고 있음
- 상위 가치평가요소 변환 작업 후 빈도 분석 필요
 - 문화재 유형별 다양한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
 - 따라서 일부 가치평가요소의 경우 의미가 내포 또는 중복되거나 각 유형 간 용어 사용 불일치가 발생함
 - 가치평가요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요소 간 의미의 위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상위가치개념을 정리한 후 일괄적으로 모든 유형에 재적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제6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1절 문화유산 용어의 근거와 향후 연구 방향

제2절 문화재 분류체계 모형의 구체화와 향후 연구 방향

제3절 가치평가용어 DB 구축 활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

제4절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과 향후 연구 방향

제1절 문화유산 용어의 근거와 향후 연구 방향

1.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1)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검토

○ 문화재의 어원과 개념

- 문화재는 한자로 文化財로 쓰이며 이는 독일어 kulturgüter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박정희, 2007: 12)
- 문화재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 일본에서 사용되었고, 일본은 기존의 국보, 중요 미술품 등을 총칭할 수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⁶⁴⁾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많은 부분을 원용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지칭했던 ‘문화재’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
- 원어인 독일어 kulturgüter에서 güter는 재화(財貨), 영어로는 goods를 의미하며, 재화의 의미가 덧붙여진 것은 근대적 관점에서 문화재(kulturgüter)가 ‘자산’의 개념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음(문화재청, 2013: 15)
- 이러한 자산의 의미가 부여되어 영어로는 문화재를 cultural property로 번역하기도 함
- 여기에서 property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한 것을 지칭하는데, 때문에 문화재를 cultural property로 번역할 경우 사전적 정의에 따라 소유권이 명확한 문화적 물적 자산으로 문화재의 개념이 좁혀질 수 있음
- 물론 개념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사전적 정의에 그 개념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음
- 그러나 현재 국내 문화재 관련 법령,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유산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⁶⁵⁾

64) 유형문화재(동산 및 건조물)을 보호하기 시작한 「고기구물보존법(1871)」 및 「고사사보존법(1897)」을 시작으로 기념물을 보호하기 시작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 국가·공공단체·개인 소유의 기타 물건들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에 이른 「국보보존법(1929)」, 고미술품 등의 중요미술품을 국가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했던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까지 일본에서는 다양한 문화재보호 관련 근대법령이 제정되었고, 1950년 기존의 법령을 일원화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때부터 공식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65) 문화재청의 영문명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으로 영문 상으로는 문화유산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문화재청 소관 법령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문화유산신탁법)」에서는 문화재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문화유산을 사용하고 있음(「문화유산신탁법」 제2조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 또한 국제적으로 유산(heritage)개념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문화재(cultural property)의 개념은 법률용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문화재청, 2013: 16)
-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 두 용어 간 통일된 사용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끊임없이 제기

○ 문화유산의 개념

- 유산이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서도 명시하듯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정의됨
- 그리고 여기에 문화의 의미가 덧붙여진 문화유산은 기존의 협소한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에 비해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와 유산이 합쳐진 문화유산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과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⁶⁶⁾한다고 정의 하는 것을 통해 문화유산에 문화재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 확인 가능
-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다소 협소한 재화적 의미 중심의 문화재를 보다 포괄적인 문화유산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기도 함
- 한편, 국제협약 상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헤이그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에서 사용되었지만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이 체결되면서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을 유산의 개념 안에 포함시킴
-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개념을 동일 위계에서 구분하여 별개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음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66) 국립국어원 사전적 정의 현황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Article 1.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shall cover, irrespective of origin or ownership:

- (a)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of great importanc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every people, such as monuments of architecture, art or history, whether religious or secular; archaeological sites; groups of buildings which, as a whole, are of historical or artistic interest; works of art; manuscripts, books and other objects of artistic, historical or archaeological interest; as well as scientific collections and important collections of books or archives or of reproductions of the property defined above;
- (b) buildings whose main and effective purpose is to preserve or exhibit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defined in sub-paragraph (a) such as museums, large libraries and depositories of archives, and refuges intended to shelter,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movable cultural property defined in sub-paragraph (a);
- (c) centers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sub-paragraphs (a) and (b), to be known as ‘centers containing monuments’.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I. Definitions of the cultural and the natural heritage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ultural heritage’:

monuments : architectural works, works of monumental sculpture and painting, elements or structures of an archaeological nature, inscriptions, cave dwellings and combinations of featur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groups of buildings : groups of separate or connected buildings which, because of their architecture, their homogeneity or their place in the landscape,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art or science ;

sites : works of man or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and area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historical, aesthetic, ethnological or anthropological points of view.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atural heritage’:

natural features consisting of physical and biological formations or groups of such formations, which a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aesthetic or scientific point of view;

geological and physiographical formations and precisely delineated areas which constitute the habitat of threaten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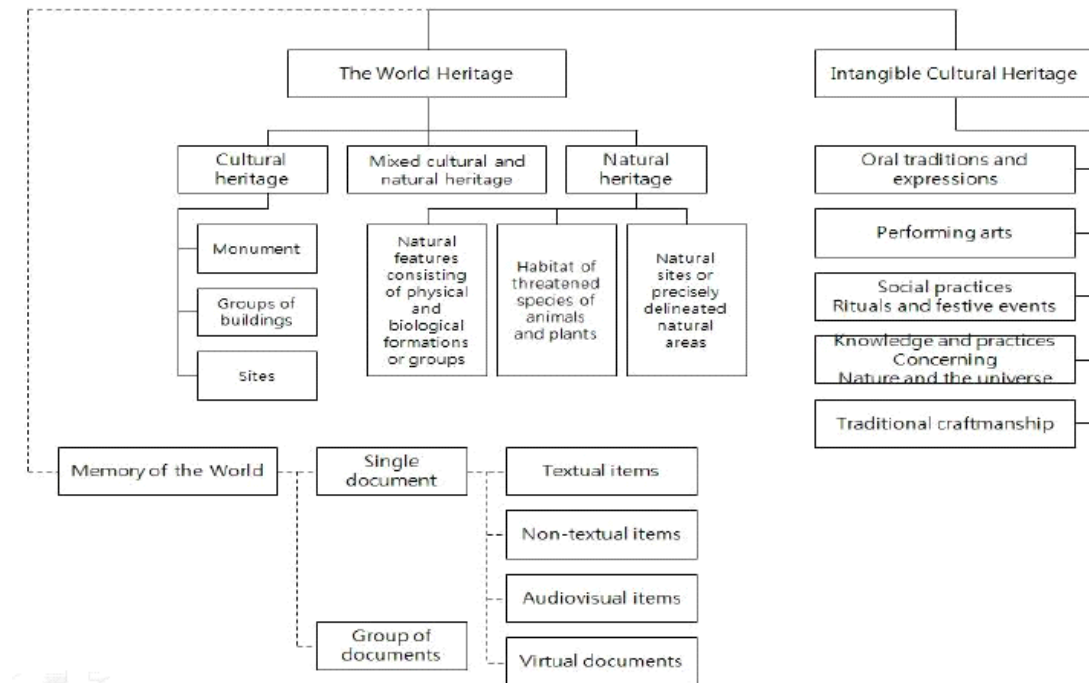
natural sites or precisely delineated natural area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conservation or natural beauty.

Article 3

It is for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identify and delineate the different

properties situated on its territory mentioned in Articles 1 and 2 above.

- 그러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상 문화유산은 건조물, 유적지 등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인류무형유산이 문화유산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음⁶⁷⁾



[그림 6-1] 유네스코 문화재 분류체계 모식도

자료: 문화재청, 2016c: 259

- 즉,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는 문화유산이 문화재의 사전적 정의 보다 포괄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국제협약 상의 개념 확인을 통해 ‘유산’ 이 재화(goods, property)의 의미보다 확장된 개념이며, 여기에 문화의 개념이 더해진 문화유산은 자연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별도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

○ 국내법상 문화재의 개념

- 국내 문화재 정책의 기반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

67) 세계기록유산은 <기록유산보호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의 1.1.1 항목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세계문화유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which in turn represents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이라고 명시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소개(문화재청, 2016c: 257)

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앞서 언급되었듯 문화재의 사전적 정의는 재화나 소유의 개념이 강하지만, 국내 법령 상 문화재의 개념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가 강한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사적(기념물)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불확실한 무형의 자산 또는 자연물(천연기념물)을 포함
- 즉, 국내법상 문화재의 개념에는 무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어 재화적 성격을 띠는 문화재의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자연유산(자연물) 또한 그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국제법상 문화유산의 개념보다도 더 넓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기관의 영문명칭을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으로 하여 영문 명칭에는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여기에서 사용되는 문화유산의 의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ultural Heritage 개념의 외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럴 경우 정책입안자가 국제교류 차원에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실행 할 때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음

- 또한 세계유산제도와 같이 국내에 도입된 국제적 제도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게도 제도 수용과정에 혼란을 줄 여지가 큼

2) 시사점

○ 통일된 용어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용어 사용에 관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재를 재화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무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기념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 치환하여 사용하는 통일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
- 그러나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어원과 사전적, 법령 상, 그리고 국제협약 상 정의를 살펴본 결과 이 두 용어가 단순 치환될 수 있는 단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 됨
- 따라서 현 상태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히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국내 법령상 문화유산의 개념이 국제협약상 문화유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⁶⁸⁾
- 즉, 문화재의 문화유산에 대한 단순한 용어 변경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현행 문화재법 및 국제협약상의 개념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 그러므로 문화유산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합의 도출을 위한 실무적 논의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문화재 관련 용어의 정리 필요

68)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 치환할 경우 국내법상 문화유산의 개념에는 국제협약 상 문화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용어 간 개념의 외연에 차이가 발생

2. 관련 선행연구

- 『문화재보호법개론』(김창규, 2004: 73-74)
 - 한국 문화재보호법은 제정 당초부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재를 정의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가치를 50년 이상으로 규정
-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와 실현방안 연구』(박정희, 2008: 11-12)
 - 문화재에 대한 질적·양적 수요 요구 증대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문화재의 개념도 환경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국가자원, 민족자산으로만 인식되어온 문화재의 개념적 의미를 넘어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할 인류공동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의미를 자각해야함
 - 따라서 ‘문화재’는 민족이나 국가 등의 소속과 소유권이 분명한 사회적 자산인 반면에 ‘문화유산’은 범민족적·범세계적 인류 공동의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선적이고 일방적이었음을 지적. ‘문화유산’은 상속재산, 물려받은 것, 유산, 전통, 천성 등 정신적이고 토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 「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범화 경향연구」(정상우, 2011: 372)
 -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용어사용 관계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란을 언급하였음
 -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문화재’라는 용어 사용
 - 중국은 ‘문물’, 대만의 경우 ‘문화자산’이라는 용어 사용
 - 최근 일본에서는 국제조약의 영향으로 실무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언어학상으로 ‘문화재’는 재산, 물건, 소유물의 특성이 강한 반면에 ‘문화유산’은 유산, 전통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화재는 과거지향적인 반면에 문화유산은 미래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유산이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국제규범이나 중국 또는 대만의 용어 사용법에 비추어 보거나, 무형문화유산 등 문화재 개념의 확대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다만,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천연기념물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구분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도 일단 양자를 구별하고 있음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화재보다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동법에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포함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자연환경자산에 포함
 - 천연기념물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문화재에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과 유사하게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유형을 분류
 - 대만의 경우, 문화자산에 자연지경(자연기념물)이 포함되지만 동물은 제외
- 따라서 천연기념물이 문화재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비교법적으로 생소한 것은 아니며, 무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등도 문화유산의 개념에 포함시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용어로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언급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문화재청, 2013: 5-26)

-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크게 대별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률상의 표현으로만 본다면 문화재의 개념은 이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음
- 그러나 두 영역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세계적인 동향과도 부조화로 나타남
- 따라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화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개념에 대한 현행규율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을 비롯한 해당 유산을 ‘공간적 단위’로 취급하여 유산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환경과 시설물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함
- 반면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된 유물을 주로 ‘점’ 단위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유품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보호하고 있는

편을 알 수 있음

- 또한 ‘문화재’란 용어는 오늘날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것 그리고 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섭하기에는 부족
- 「문화재보호법」은 개념적 혼재로 인하여 체계정립상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즉, 문화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자연적 유산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문재의 소지가 발생함

첫째,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라는 표현 사용은 재산적 가치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류와 민족의 가치적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우려

- 둘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와 자연을 포함하는 포괄적 유산으로 정의함에도 실제로 있어서는 문화적 요소에 비해 자연적 요소가 소외됨
- 기존 ‘문화재(cultural property)’로 상징되는 명칭 속에서 자연적 유산은 사실상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기념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용어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별 유산의 특성을 포괄하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념물이라는 용어는 본래 독일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 상 천연기념물(Naturdenkmaler)⁶⁹⁾ 배제하는 것으로 ‘문화기념물’⁷⁰⁾ 또는 ‘문화유산’을 의미하기 때문
- 결론적으로 국가적 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각 유산별 규율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규범체계에도 정합하도록 ‘문화재’라는 용어대신

69) 독일에 있어 천연기념물은 개념적으로 기념물과 달리 정의되고 있고, 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연방자연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은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정의와는 달리 “학문적, 자연사적으로나 지역학적 이유에서 또는 희귀성, 고유성이나 아름다움의 이유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연의 창조물 또는 그에 유사한 5헥타르까지의 토지”를 말한다. (문화재청, 2013: 25)

70) ‘기념물’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기념물법에서 유래되어 통상 ‘문화기념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각 주의 기념물보호법의 대상이다. 형체가 있는 물체, 즉 유체물을 중심으로 정립하여 종물로서 주위환경, 시설이나 건조물군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가령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기념물보호법에서는 “학문적, 예술적 또는 향토사적인 이유에서 그 유지에 공익이 존재하는 사물”, 바이에른주의 기념물보호법에서는 “과거에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사물 또는 그 일부로서 역사적, 예술적, 도시건축적, 학문적, 민속학적 의미에서 그 유지에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 (문화재청, 2013: 25)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더불어 자연적 유산은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의 제정을 통한 국가유산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법적 체계 제시

○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 재구축 연구」(채경진·서순복, 2017)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라는 속성을 지닌 규제 중심적 법률 체계는 문화재 진흥, 향유, 기본권, 산업 등의 개념과 충돌할 수 있어 법정정책적 관점에서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의 정책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체계에 대해 제안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의 개념(제2조 제1항)은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볼 때 유산을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음
-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공공재나 사유재처럼 재화(property)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주무부처인 ‘문화재청’ 명칭과 일맥상통
- 그러나 문화재청의 영문명은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으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학술적 견해를 통해 ‘문화유산’이 ‘문화재’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접근임
- “문화유산은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정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재산’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정수진, 2013: 94)”이며 “문화재는 재산이라는 물질적인 의미가 강하여 다양한 성격의 유산을 포용하기 어렵지만 문화유산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김봉건, 2014: 257-274)”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에드워드 타일러가 정의한 문화의 개념을 포괄하기에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적합함
- 결론적으로 문화재로부터 개념적 확장과 더불어 법집행과 정책적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칭)「문화유산 기본법」 제정을 제안

○ 시사점

- ‘문화재’라는 용어 보다 시대적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화유산’ 용어의 개념 및 사용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문화유산’ 용어 사용에서 ‘천연기념물’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용어의 제한적 사용 및 활용 문제가 제기됨
 - 문화유산의 개념에 무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포함시켜 ‘문화재’를 ‘문화유산’ 용어로 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
 -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유산’ 용어를 사용하고, 자연적 유산은 개별적인 관리방안을 두는 것을 제안
- 기존의 문화재 관련 법률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새로운 관리방안을 제안

3. 대내외 환경 변화

1) 문화재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 국내 문화재 정책 환경 변화의 추세

○ 2002~201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원형보존: 원형 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 체계적 관리: 개발과 보호의 조화로운 추진과 행정조직의 강화, 체계적인 문화재 기록의 작성과 관리
- 효율적 활용: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 2007~2011 「문화유산 2011」

- 핵심역량 강화: 문화재청을 비롯한 문화재 유관조직에 대한 성과제 도입을 통해 경쟁적 환경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
- 합리적 보존: 문화재 유형 별 특성에 따라 전문화·고도화 된 보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과 보존”을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수립
- 협력적 관리 정착: 시민사회·기업·북한 및 인접 국가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가치 활용 활성화: 문화재의 기본가치로부터 효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반 활용사업을 활성화 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2011~2016 「문화재 5개년 계획」

- 문화재 형평성 확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문화재 활성화: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 문화재 갈등 관리: 합리적 규제와 사유재산 보호기반 확대
- 국제화·세계화: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위상 강화

(2) 국내 문화재 정책 환경 변화의 시사점

○ ‘원형’ 개념의 상대화

- 기존에 ‘문화재 원형’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 관리형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상대적인 보존방법을 수립

-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 문화재 원형을 유지하는 한에서 개발활동을 규제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문화재 보존과 지역발전을 양립하는 발전적인 시각으로 변화함
- ‘합리적 활용’에서 ‘가치 활용 활성화’로
 - 문화재 활용의 대상을 ‘문화재 실물’이 아닌 ‘문화재 가치’로 재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화된 문화재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주체도 정부, 민간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다변화
-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 문화재에 대한 향유를 단순 욕구가 아닌 헌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
- 국제화 및 세계화
 - 문화재를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아가 세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접근
- 사유재산권 보호와 갈등관리
 - 문화재 지정 등 보존관리를 위한 침익적 행정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의 토대 마련

2) 문화재 관리 자연환경의 변화

(1) 문화재 자연환경의 변화의 추세

- 기온의 변화
 - 기상청의 『한국 기후변화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10년 간 연평균기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기상청, 2011: 41)⁷¹⁾
- 강수량의 변화
 - 2000~2010, 10년 간 평균 강수량은 1.359mm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관측 시기와 비교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강수량의 경우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되지는 않음
 - 다만, 여름과 가을에 강우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름·가을에는 다습, 봄·겨울에는 건조한 계절 간 차이가 뚜렷해지는 추세

71) 2001~2010, 10년 간 평균기온은 12.8° C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남

○ 자연재해

- 최근 30년 간 지진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에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커지는 중에 있음(기상청, 2016)
- 그 밖의 재난에 대하여는 뚜렷한 변화 경향이 파악되지는 않음

(2) 문화재 자연환경 변화의 시사점

- 문화재 관련 자연환경에 변화로부터 보존환경의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온변화에 따라 천연기념물, 명승 등의 자연유산 자원과 문화재 주변 자연환경에 식생의 변화, 동물 서식지 이동, 재해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의 유의미한 피해 내지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지진에 의한 한반도 자연 재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짐

3) 문화재 관리 사회인식

(1) 문화재 향유에 관한 사회인식

- 문화재에 대한 사회인식에 관한 간접적 통계에 따르면 문화재 향유 수요의 증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국내 여행 및 외래 관광객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6b; 문화체육관광부, 2015)
 - 여가 활동의 장애요인이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여가 선택의 방법으로 관광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며(통계청, 2015) 가계 문화향유 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각 년도)
 - 문화유적지 방문은 사회적인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문화향유 방식 중 하나이며, 만족도가 높은 여가활동으로 파악됨(문화체육관광부, 2014a)

(2) 문화재 향유에 관한 사회인식의 시사점

- 문화재 관광을 비롯한 향유는 이미 주요한 여가선택의 방법 중 하나로 정착되었으며 그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따라서 국민들의 문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 분류체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문화재 장르별 분류의 필요성

- 문화재의 주요 콘텐츠, 장르, 내용 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향유자가 관련된 정보를 취득코자 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재 향유 방식에 따른 분류의 필요성

- 문화재에 대한 향유 방식은 ‘무형문화재-공연, 체험’, ‘사적지-방문, 답사’, ‘유형문화재(동산)-박물관 관람’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못함
- 따라서 문화재 향유방식에 따른 구분을 문화재 분류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여 문화재 향유자의 편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

4) 문화유산 관리의 세계적 추세

○ 세계유산 제도의 보급과 문화유산 관리의 국제적 표준의 확산

-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92년 「세계기록유산 사업(Memory of the World)」, 2003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이 추진됨에 따라 유산 보호의 국제적 표준의 제정과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
- 더불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적 문화재 인식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적 표준을 조화시켜 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유산에 대한 포괄적/ 복합적 인식

- 광범위한 공간에 소재하는 문화적 자원을 포괄하여 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문화재 유형
- 세계유산제도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은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지역(Core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에 소재한 문화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공간적 개념에 있어서는 ‘면적(面的)인 관리’가 될 것이고, 대상적 개념에 있어서는 복수의 대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복합적(複合的), 포괄적(包括的)인 관리’가 될 것임

- 공간 개념 관리제도는 특히 서양의 문화재 관리 제도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의 “National Heritage Areas”와 이탈리아 「문화 및 경관자산법」에 따른 문화유산 개념이 이러한 포괄적/복합적 인식에 해당함

○ 자연환경에 대한 인문적 해석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자연유산은 자연미, 지구과학적 실증 자료, 생태·생물학적 자료, 생물종 서식 현장 보존 등에 있어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한 보호제도
- 2016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 6차 IUCN⁷²⁾ World Conservation Congress(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전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연보전상의 중점사항으로 다루어 질 2개 분야, 7개 안건을 설정
- 설정안 중에서 “정신, 종교, 문화와 연계된 보전”과 “지속가능한 식량공급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주목할 만 함
- “정신, 종교, 문화와 연계된 보전”은 자연유산의 역사·문화·상징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 연장선에서 자연유산의 보호를 논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
- “지속가능한 식량공급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은 근대 이후 확산된 대규모 농장의 파괴적 영향에서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적 농업기술과 그에 관련된 자연환경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식량부족 사태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식량 공급에 관한 생활문화와 자연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임
- 자연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1972년 세계유산 제도에 비해 자연과 인문의 관련성을 보다 중시하는 관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무형유산 보호의 보편화

- 2003년 유네스코에 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체결 이전 한국, 일본 등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형유산 또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음
-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역성에 기반한 고유 문화현상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식하는 관점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독일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이듬해인 2013년부터 『독일 전국 무형문화유산 목록(German Nationwide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음

72)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세계 최대의 국제 환경 보전 단체,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부문 자문기구

- 독일에 소재한 무형문화유산⁷³⁾을 모두 집대성한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전승지원은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영국 웨일스 역시 지역의 언어, 축제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 웨일스는 지역에서 크리스마스에 실시하는 ‘마리 루이드’ 행사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고유언어인 ‘웨일스 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
 - 그러나 웨일스의 종주국인 영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비준을 보류한 탓에 그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추진되고 있지 못함
- 중국은 2011년 「비물질문화유산법」을 제정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 이후 즉각 한국 및 일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음
 -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작성 외에 전승인(Living Human Heritage)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전승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음

○ 기록물의 유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

- 유네스코의 유산인식에 있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은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기록유산 가치를 강조
 - 국내를 비롯하여 다수 국가는 기록물을 “유형문화재“, 내지는 “동산문화재” 등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함
 - 유산인식의 경우 기록물의 내용 보다는 외관, 상태, 재질 등 물질적 원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기록물의 내용으로부터 가치를 도출할 경우 내용(Contents)과 관련된 ‘다른 실물’에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함⁷⁴⁾
 - 예컨대 사적, 보물 등의 문화재가 특정 기록물의 내용(삼국사기 등)에 언급될 경우 해당 문화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73) 독일의 게르만 민족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외래 이민자들의 전통 문화 전승 행위 역시 ‘독일에 소재한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해 차별 없이 목록화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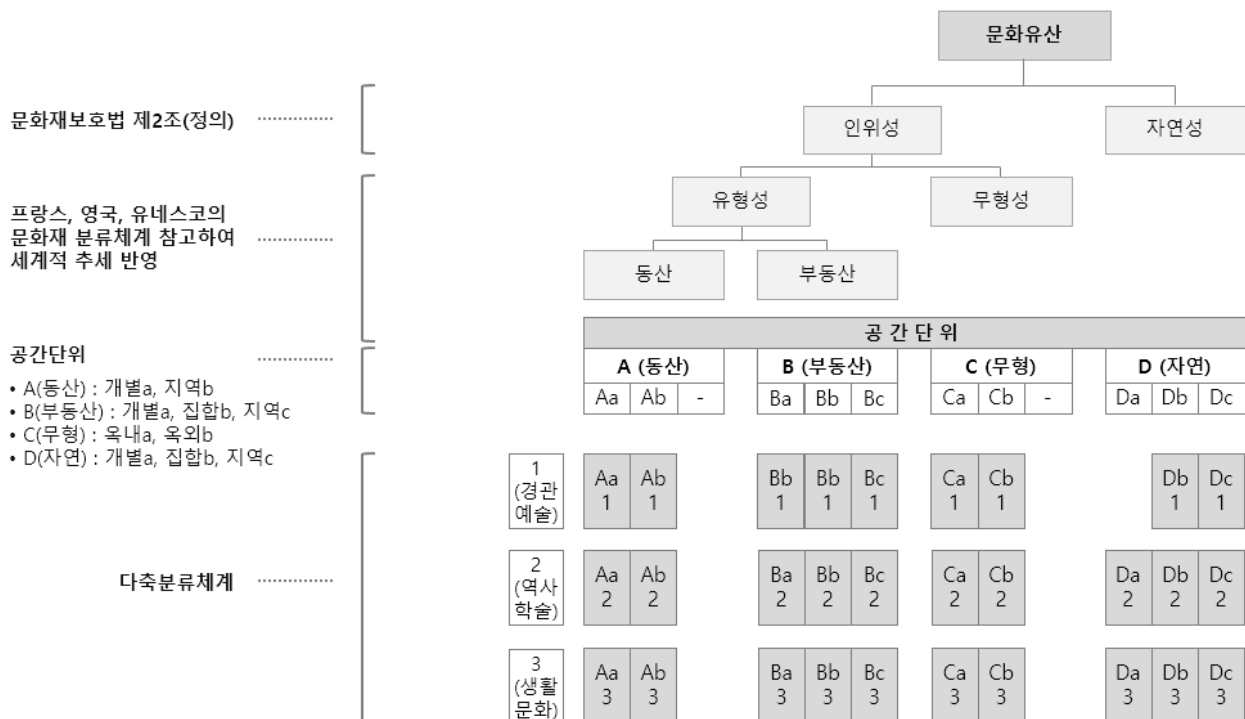
74) 예컨대 사적, 보물 등의 문화재가 특정 기록물의 내용(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에 언급될 경우 해당 문화재가 역사기록을 실증하는 자료로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세계기록유산은 기록물의 물리적 외형과 더불어 기록물의 내용 그 자체에 보다 큰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대상으로서의 기록물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음
 - 국제도서관연맹을 비롯한 서지학 관련 국제단체들의 지지를 통해 독립 문화재의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문화재 관련 용어의 사용은 국제적 협약에 대한 준수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관련 용어의 혼용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행정 현장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식 등의 논의와 조사가 필요함
- 즉, 문화재의 문화유산 변경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인 논의를 통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유도하고, 국제적인 경향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문화재 분류체계 모형의 구체화와 향후 연구 방향

1.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위성과 자연성으로 구분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상의 구분과는 상당한 차이 발생
- 문화재의 대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현행 법적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대분류 이하 중분류와 세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향후의 문화재 분야 개선 모형에서는 문화재의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인위성과 자연성으로 구분하여 대분류 체계를 설정
- 또한 문화재의 중분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개별적 정의와 더불어 공간단위 특성과 가치평가용어의 복합적인 특성 반영이 필요
- 따라서 문화재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축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분류하는 개선 방안 도입 필요



[그림 6-2]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안)

-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안)은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모형(안)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개념 정의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분류체계를 반영하였고, 공간단위 개념을 새로이 추가하였음
- 즉,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공간단위와 가치평가를 결합하여 다축분류체계 혹은 다차원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임

2.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적용(예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 개선 모형에 따라 개별 문화재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 제시해 볼 수 있음
 - 보물 제2호 옛보신각 동종은 동산이고 개별적 속성을 가지며 역사학술적 특징을 가지므로 [Aa2]에 해당될 수 있음
 -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보부상유품은 동산이고 지역적 속성을 가지며 생활문화적 특징을 가지므로 [Ab3]에 해당될 수 있음
 - 천연기념물 제191호 제주의 한란은 자연성이고 집합적 속성을 가지며 경관예술적 특징을 가지므로 [Db1]에 해당될 수 있음

												문화유산												
보물 제2호 옛보신각 동종 [Aa2]			사적 제10호 한양 도성 [Bb1 혹은 Bb2]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조선왕조궁중음식 [Ca2]			천연기념물 제191호 제주의 한란 [Db1]			인위성			자연성									
												유형성			무형성									
국립민속문화재 제30-1호 보부상유품(1) [Ab3]			국립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Bc3]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Cb3]			명승제9호 진도의 바닷길 [Dc1 혹은 Dc3]			동산			부동산									
												공 간 단 위												
공간단위 • A(동산) : 개별a, 지역b • B(부동산) : 개별a, 집합b, 지역c • C(무형) : 육내a, 육외b • D(자연) : 개별a, 집합b, 지역c												A (동산)			B (부동산)			C (무형)			D (자연)			
												Aa	Ab	-	Ba	Bb	Bc	Ca	Cb	-	Da	Db	Dc	
												1 (경관 예술)	Aa 1	Ab 1		Bb 1	Bb 1	Bc 1	Ca 1	Cb 1		Db 1	Dc 1	
												2 (역사 학술)	Aa 2	Ab 2		Ba 2	Bb 2	Bc 2	Ca 2	Cb 2		Da 2	Db 2	Dc 2
다축분류체계												3 (생활 문화)	Aa 3	Ab 3		Ba 3	Bb 3	Bc 3	Ca 3	Cb 3		Da 3	Db 3	Dc 3

[그림 6-3]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 적용 예시

3.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 모형의 향후 연구 방향

- 문화재의 다축분류체계 혹은 다차원분류체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분류체계를 분석할 필요
- 일반적인 분류체계가 가지는 특징인 범주화, 기능, 역할 등에 따라 개별 분야의 분류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를 분석해야 함
- 또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분류의 역사와 과정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논거를 통해 분류체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Wright(2008)에 따르면 분류의 과정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하여 발전해 왔으며 산업화, 정보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분류의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왔다고 주장함
- 분류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분류에서 린네(Carolus Linnaeus)는 생물 종의 다양성에 대한 분류체계인 이명법(二名法, binomial nomenclature)을 제시
 - 린네는 생물들의 각각의 계급, 종(種, species), 속(屬, genera), 목(目, order), 강(綱, class)에 배치하는 분류 위계 체계를 확립(원정현, 2014: 244-255)
 - 또한 린네는 주도적인 분류체계가 없어 각 나라가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때 생물학 분야의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시도하여 생물학 분류체계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따라서 문화재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분류체계 방식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분류체계의 방식과 기준의 비교분석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최근에는 분류체계의 방식이 전통적인 분류체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한 환경변화와 정보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계로 변화하면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축분류체계 혹은 다차원 분류체계로 변화됨
- 따라서 문화재 분류체계의 다축분류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와 다축분류체계 및 다차원분류체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 의료분야의 다축분류체계, 문서분야의 다차원 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물품분류 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분류체계를 통해 비교 및 분석 연구 필요

제3절 가치평가용어 DB 구축 활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

1. 가치평가용어의 분석 현황

-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된 가치평가용어는 개별 문화재의 특징과 속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문화재의 지정기준과 혼용하여 사용되어 혼란이 발생함
- 문화재의 유형화와 문화재가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과 맥락,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
- 그러나 현행 문화재의 가치평가 기준은 법적 용어의 사용과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 심의위원, 심의기준, 심의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함
- 현재의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개별 문화재 마다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종류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남
-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지정당시의 주요 기준에 따라 가치평가가 다름
 - 국보는 대표성과 학술성, 보물은 학술성과 예술성, 사적은 연구활용성과 역사성, 명승은 심미성과 조화성, 천연기념물은 연구활용가치와 대표성, 국가무형문화재는 관리보전성과 전통문화성, 국가민속문화재는 완전성과 학술성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남
-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의 DB를 구축하여 시대적 특성, 가치평가용어의 변화 정도, 개별 가치평가용어의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경향과 특징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치평가용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으로서의 용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법률상의 가치평가용어와는 다른 차이를 나타냄
- 따라서 상위 가치평가용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등과 실제 개별 문화재 유형에 사용되는 가치평가용어 간의 위계 정립과 표준화된 가치평가용어의 사용이 필요함
 - 즉, 국보의 대표성, 보물의 차별성, 사적의 지역성, 명승의 조화성, 천연기념물의 연구활용 가치,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보전성, 국가민속문화재의 완전성 등의 가치평가용어에 대한 위계정립 및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근거 필요

2. 문화재 가치평가용어의 향후 연구 방향

- 문화재 분야 가치평가용어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용어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등의 통합평가 방법론 적용 필요
- 문화재 분야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및 타당한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이 필요
- 타 분야의 가치평가 방법 및 가치평가용어의 사용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재가치평가용어 사용의 표준화된 사용 방법과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가치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용어를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기업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설성수, 2002)
 - 예를 들어, TIC(Total Invested Capital)영업가치, IC(Invested Capital, 총투자자본, 총투자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현금 등을 제외한 유동자산, 이자부채를 제외한 부채, 고정자산 계정을 의미함
 - NOA(Non Operating Asset, 비영업가치, 비영업자산)으로 영업용이 아닌 자산으로 초과현금(excess cash) 및 비업무용자산의 현재가치 또는 시장가치를 일컫는 것으로 현금,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시장성유가증권, 초과보유부동산, 투자자산 중 비업무용자산을 의미함
- 그러나 문화재 분야에서 기업 가치평가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가치평가 방법과 정량적인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가치평가용어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의 정성적 가치평가 방법은 기존의 문화재 심의나 논의를 통한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관적 평가 방법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평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재 분야의 정량적 가치평가 방법을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정량적평가의 사례로 문화재의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도입하여 비시장 재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지를 통해 직접 질문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김영철·김은정, 2003)

제4절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과 향후 연구 방향

1. 문화재 기본법 관련 현황

1) 관련 현황 검토

○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문화재청, 2014b: 46-63)

- 문화재 정책방향의 변화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국내 문화재 정책은 국가재정의 한계,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 우선순위 부여, 재화와 서비스 등 경제적 재산적 가치 위주의 경제활동과 소비활동 등으로 국가 사회가 변화 발전해옴에 따라 중요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보존·보호 정책이 추진되어 옴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문화재정책의 방향이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의 관점 수용,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외국문화재의 보호 등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수용하여 변화하였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수립하며 기존의 문화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함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재 법체계에서도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정 요구 증가
 - 「문화재보호법」 단일 체계의 규율의 한계로 인해 2010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분법 된 이후 2015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 됨
 - 2015년 이후에도 문화재 활용법 등 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문화재 행정의 전문화, 수증문화재 등 매장문화재의 지속적 발견·발굴 등 각 부문별 개별 법령의 입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문화재 정책방향의 변화와 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 법 체계 정비를 통해 문화재 행정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는 문화재의 가치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문화재청, 2015b: 3)

○ 기본법의 개념과 기능(문화재청, 2014a: 17-21)

-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서 지도법적·지침법적인 성격을 가짐
- 따라서 기본법에는 사회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치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을 정함
- 기본법은 다음의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 행정의 통제기능
 -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 기능
 - 지방분권의 추진 기능

○ 국내 기본법 제정 현황

[표 6-1] 국내 기본법 제정 현황

법령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소관부처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경찰청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2016.12.20	2017.6.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교육부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5015호	2017.10.31	2017.10.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9.1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0629호	2011.5.19	2011.7.2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교육기본법	법률	제14601호	2017.3.21	2017.6.22.	일부개정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교육부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4459호	2016.12.20	2017.6.2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4184호	2016.5.29	2016.11.30.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법령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소관부처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	2016.5.29	2016.11.30.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2767호	2014.10.15	2015.4.16.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외교부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2787호	2014.10.15	2015.4.16.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4609호	2017.3.21	2017.6.22.	타법개정	국방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708호	2017.3.21	2017.9.22.	일부개정	국도교통부
건축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국도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12736호	2014.6.3	2015.6.4.	일부개정	국도교통부
국토기본법	법률	제14804호	2017.4.18	2017.10.19.	타법개정	국도교통부
주거기본법	법률	제14799호	2017.4.18	2017.4.18.	일부개정	국도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14547호	2017.1.17	2017.7.18.	일부개정	국도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국도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국도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기본법	법률	제14382호	2016.12.20	2017.1.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4845호	2017.8.9	2017.8.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4647호	2017.3.21	2017.3.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관광기본법	법률	제15056호	2017.11.28	2017.12.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본법	법률	제8741호	2007.12.21	2007.12.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화기본법	법률	제14425호	2016.12.20	2017.3.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법률	제14625호	2017.3.21	2017.9.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법률	제15061호	2017.11.28	2017.11.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기본법	법률	제8744호	2007.12.21	2007.12.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4974호	2017.10.31	2017.10.31.	일부개정	법무부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3640호	2015.12.29	2016.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4558호	2017.2.8	2017.8.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3.18	2014.3.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산림기본법	법률	제13025호	2015.1.20	2015.7.21.	일부개정	산림청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4662호	2017.3.21	2017.6.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법률	제14079호	2016.3.22	2016.9.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4673호	2017.3.21	2017.9.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소방청
소방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소방청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4354호	2016.12.2	2017.6.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4440호	2016.12.20	2016.12.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법령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소관부처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	2017.3.21	2017.3.2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법률	제14804호	2017.4.18	2017.10.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4805호	2017.4.18	2017.10.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제12920호	2014.12.30	2014.12.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4229호	2016.5.29	2018.1.1.	제정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	법률	제13532호	2015.12.1	2015.12.1.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4494호	2016.12.27	2017.3.28.	일부개정	환경부

자료: 한국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2017.12. 기준 총 67개의 기본법 운용 중
- 최근 진흥법, 육성법, 조성법, 촉진법 등도 기본법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을 두고 있음

○ 타부처 기본법 제정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본법」 제정 사례
 - ‘문화권’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 헌법 상 문화권이 기본권으로서 구체화되어있지 않았음(김휘정, 2014)
 - 따라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성문화하는 취지에서 제정
 - 기본법의 기능 중에서도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함인 「문화기본법」의 제정 배경이 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사례
 -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신지연 외, 2010: 7)
 - 「지식재산기본법」은 개별법들의 모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

- 산림청의 「산림기본법」 제정 사례

- 다양화되는 산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따라 산림의 보전뿐만 아니라 이용이 용이하게 하고, 또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되게 함으로써 산림의 경영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산림기본법을 제정(박영도 외, 2003: 15-16)
- 「산림기본법」 이전에 존재했던 「산림법(1961년 제정)」은 특정된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서 단계적 분화 과정을 거쳐 왔고, 「산림기본법」은 그 분화 과정에서 제정된 법률
-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산림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 「산림기본법」의 제정으로 「산림법」에는 산림일반법적 기능만 남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규율대상에 따라 「산림법」이 지속적으로 분법화 되고 있음⁷⁵⁾

○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이러한 기본법의 기능을 반영한 문화재보호법제의 기본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2014년과 2015년 진행됨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된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와 그에 따른 법체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문화재보호법령의 기본법체계화 방안을 제시
 - (가칭)문화재기본법 제정안 및 기본법체계화에 따른 개별법령 정비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분법화 된 법령 및 향후 예상되는 법령을 기본법체계 아래의 개별법령으로 재정비시 그 개정방향과 개정안 연구를 함께 진행

[표 6-2]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기본법(안)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기본법(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재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기본법으로서의 입법목적 을 명시 •기본적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문화재정책 방향과 추진

75) 「문화재보호법」은 기존 산림청의 「산림법」의 기능을 하고 있던 것으로, 현재 분법화 경향을 띄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향후 기본법 제정이 될 경우 「산림법」의 분법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 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2001)」, 「산지관리법(2002)」 등이 분법되었으며 「산림법」은 2005년 폐지됨. 현재 산림청 소관법률은 19건으로 확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기본법(안)	비 고
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규정
-	제2조(기본이념) 문화재는 현재 및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하는 민족,국가, 인류 공통의 문화적 자산이며, 선사·역사 자원 및 기념물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문화는 물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이념을 기조로 각 개별 법률의 정책 및 입법방향을 조율 ●미래세대에 물려줄 민족·국가·인류의 공동자산성 ●지속가능한 보호와 활용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생 략> 2. 시·도지정문화재: <생 략> 3. 문화재자료: <생 략> ③ ~ ⑧ <생 략>	제3조(정의)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나.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재 3. 시·군·구지정문화재: 제1호나 제2호 이외의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④ ~ ⑨ <현행 ③ ~ ⑧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이므로 정의규정은 다른 개별 법률에도 통일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개념을 추가함. ●기본법의 정의규정이므로 분법된 매장문화재의 개념도 포함함. ●향토유적을 법적 보호를 받는 시·군·구지정 문화재로 법률에 명시

- 2015년 수행된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연구」에서는 문화재기본법 관련 문헌

분석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문화재기본법안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정으로 하여 문화재기본법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

2) 시사점

○ 문화재 유형별 관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분법화 경향

-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보호·관리함에 있어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분법이 진행됨
-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기본법은 지침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분법된 법령의 근거와 역할을 하게 됨
- 문화재보호의 기본법체계화 및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경향은 문화재 유형법 맞춤형 보호·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문화재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분법화 경향에 따라 관리 방식이 명확히 차이가 나는 유형을 구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관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유형 구분, 즉 분류체계를 구성한다면 각 규제의 모범이 되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강화 가능을 하게 됨

2. 기념물 관련 법령 선행 연구

1) 자연유산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문화재청, 2011c)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자연유산이 문화유산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현 「문화재보호법」 체계 하에서 일괄적인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유산법에 관한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해 별도의 관리 제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자연유산에 대한 인식 : 본 제도 연구는 자연유산을 민족문화 계승, 지속가능한 환경 활용,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 발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재로 인식함으로써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문화재로 보았음
-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 : 본 제도 연구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둘을 아울러 자연유산으로 지칭하였음, 이는 문화유산에 대비되는 ‘자연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유산을 구분하는 인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명승에 대한 정의 : 본 연구는 명승을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였음
- 여기에서 경관을 “자연유산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문화경관’, 즉 cultural landscape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반영하였음
-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의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을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질·지형,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지칭하였음
- 즉, 현행 국내 문화재보호제도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을 계승한 것임

-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존중 : 본 연구는 문화유산과 구별되는 자연유산의 특성에 주목하여 별도의 관리체계를 입안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50여 년 간 운영되어온 「문화재보호법」체계의 기본법적 지위를 존중하여 기존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
-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인식 : 본 연구는 자연유산 보호제도를 보존과 관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활용에 까지 확장하고 있음
 - 즉, “미래세대의 기대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 내, 세대 간 그리고 생태적 형평성을 두루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조화로운 자연유산 보존활용 방안의 제도화 : 자연유산 구역 및 그 보호구역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자연유산 보호제도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장기적 및 단기적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도 내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연구의 한계

-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개념적 구분의 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함 : 명승을 ‘자연경관 자원’, 천연기념물을 ‘천연환경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관리체계의 연장에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양자 간의 개념적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지 못함
- 천연기념물 지정 유형의 구분 누락 : 국내 천연기념물의 지정은 개체, 종족, 구역, 대단위 복합 구역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나 이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2)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문화재청, 2013)

○ 연구개요

- 이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계된 여러 국제협약의 당사국인바 국제적 규범을 반영하여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문화재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그 특성과 성질에 따라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국제적 규약과 국내적 법률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자연유산 본위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임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유네스코 국제 규약에 따른 자연유산 인식을 반영 :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인식을 국내적 개념으로 치환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임
- 즉, 협약의 정신과 정의에 따라 자연유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안을 제시하였음
 - 국제적인 협약의 측면에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인 명승과 천연 기념물을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 자연유산과 자연환경을 인문적 가치에 따라 구분 : 자연유산이 단순한 자연물 또는 자연 상태이기에 앞서 인간이 만든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민족의 유산(한국법제연구원, 2013: 40)이라는 인식 하에 “인간의 삶과 영향을 주고 받는 배경으로서의” 자연환경과 “예술성, 학술성, 진귀성, 희귀성, 고유성, 특수성, 분포성, 역사성의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한국법제연구원, 2013: 40)을 구분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상 자연유산 보전 제도의 한계를 적시 : 첫째, 너무 많은 유형을 하나의 제도 속에서 다루는 탓에 체계성이 떨어짐; 둘째, 문화재의 용어 상 자연유산의 포함 여부가 모호함; 셋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자연유산 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 본 연구는 제도 개선안에 자연유산 정보망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 간 또는 정부-민간 간 자연유산 정보의 공유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
- 자연유산에 대한 2단계 지정 추진 : ‘국가지정 자연유산’이라는 최대 분류 개념을 두고, 이를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각각 구분하며 가치 판단에 따른 2단계 지정 체계를 둘 것을 제안하였음
- 자연유산 공통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세계유산 제도의 구조와 유사하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기준을 유형별로 달리 둘 것이 아니라 공통된 지정기준 하에 지정 대상 문화재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자연유산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 해당 연구는 ‘자연유산 마을의 지정과 자연유산마을 공동체’의 지정과 구성을 법제화하여 자연유산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여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하였음

○ 연구의 한계

- 해당 연구는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임⁷⁶⁾
-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권고제도’인 세계유산 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동반하는 국내적 ‘규제제도’인 문화재 보호제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국제적 표준을 따르는 데 대한 이점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제도의 형식을 도입할 것을 지나치게 강조⁷⁷⁾

2) 자연유산법 관련 법령개정과 향후 연구 방향

(1) 법령 개정 방안

○ 자연유산법 분법의 필요성

- 선행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 및 실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유형으로서의 자연유산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인 바 「문화재보호법」을 모법으로 하는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연유산 세부 유형의 구분과 명확한 분류기준 규정

- 자연유산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유형인 바 현행 문화재 체계의 ‘명승’과 ‘천연기념물’이 이에 해당할 것임
- 다만 경관지를 대상으로 하는 명승과 자연환경 또는 자연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기념물’은 보호 대상과 보호 취지가 다름에도 그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임

76) 해당 연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및 시행령에 따른 “천연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을 실제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천연보호구역 유형을 삭제하였는데 법령상의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로서의 보호대상이 일정 구역 내에 복합적·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대단위 공간을, 보호구역은 문화재 구역과 그 외부 지역 간의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을 띤 개발제한 구역을 의미하는 바 그 개념이 다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 외에도 문화재의 개념을 단순히 ‘재화적’ 낙양스를 갖는 용어로 치부하여(한국법제연구원, 2013: 74) 문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의미를 간과하는 등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77) 특히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경우 면적에 대한 지정 외 개체지정, 종족 지정 등이 불가능하여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임

- 예컨대 천연보호구역의 일부와 명승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것
- 따라서 현행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구분 대신 개체 지정, 생물종 지정, 면적 지정 등을 구분하거나,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구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분류기준을 신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조항 수립

- 상기 두 개 자연유산법 제정 연구의 공통적인 사항은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활용을 위해 세대 내, 세대 간 그리고 생태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임
- 즉,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책, 이후 세대를 위한 유증의 방안, 현 세대를 위한 지원책, 자연 환경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책 등이 제도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물론, 이러한 방안은 자연유산의 특성에 걸맞은 방안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세계유산 제도의 선별적인 수용

- 세계유산 제도는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보편화된 규범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유산 제도와 국내 제도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문화재 기반의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는 현 시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그러나 세계유산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현행 문화재 제도 하에 발전해 온 국내 문화재 관리 인프라와 괴리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유산제도의 목적, 정신, 취지, 용어 등을 수용하되 이를 국내 행정환경에 따라 적절히 변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향후 연구 방향

○ 자연유산 보호 환경 연구

- 자연유산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개발의 위협에 직면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자연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명승, 천연보호구역 등의 면적단위 자연유산에 뿐만 아니라 생물 종족, 개체 등의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연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자연유산 각 유형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연유산 보호제도 비교연구

- 세계유산 제도가 국제적 표준으로서 그 보편성을 더해가는 현재에 있어 유네스코 제도와 국내제도 그리고 그 외 자연유산 보호 우수사례 국가의 자연유산 보호제도를 비교연구하고 그 이점을 국내에 적절히 적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국내 천연기념물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는 ‘면적 개념의 자연유산’ 뿐 아니라 ‘생물종, 생물개체, 멸종위기 동물, 수목, 자연환경보호제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연구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연유산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연구

- 자연유산이 지역 개발, 공동체 활동, 관광활동 등의 활용사업과 양립할 수 있음으로서 다양한 계층에 지속적인 편익을 낳을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연유산법 제정 연구

- 자연유산 보전환경, 제도 사례,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자연유산의 보전, 관리, 활용을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3. 문화재 활용법 관련 선행 연구

○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문화재청, 2006)

-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체계 정립을 위한 행정법제적 기본 방향을 제시
-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활용과 관련된 법적 조항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재 활용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법령의 총괄적 운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 및 지방부처간에 필요한 협의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즉, 문화재 활용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권한 강화 등의 재규정 및 관련 법령의 재조정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따라서 문화재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 및 시행령 등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활용체계의 법적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함을 주장

○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문화재청, 2015a)

- 현재 문화재 분야에서 가장 상위 법률로서 역할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제정 추진 중인 「문화재기본법」 등 「문화재 활용법」의 법적 성격이나 위치를 설정을 제시
 - 「문화재기본법」을 문화재 분야 최상위 법률로 전제하고, 규제 기능중심의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활용기능중심의 「문화재 활용법」을 동일한 법적 위계로 설정 제시
- 「문화재활용법」은 문화재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 속성이 강한 법률로서 기존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별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처럼 문화재 유형별 접근과 달리 모든 문화재 유형을 포함하는 법적 위상을 지님
 -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주요 대상으로 함
 - 활용적 특성이 강한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최근의 문화재 활용 대상이 비지정 문화재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장문화재 및 앞선 모든 문화재에 준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장시켜 정의

○ 시사점

- 200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활용 체제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되어 왔음
- 2015년 관련 연구에서 「문화재 활용법」은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분류 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형 이외에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등 광범위한 범위 포함할 것을 제안
- 「문화재보호법」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정 및 등록을 전제로 한다면, 「문화재 활용법」은 각 개별법을 통해 규정된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정 및 등록 행위가 불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지정 분류체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다만, 문화재 유형별 활용에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의 중분류체계 위계에서 세부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활용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문화재의 분류는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구분을 함으로써 개별 문화재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대분류 단계만 제시하고 있고, 중분류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화재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의 방법은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학술지, 보고서, 발표자료, 법령 등을 통한 문헌분석임
- 또한 국가 지정문화재 현황의 내용 분석과 지정문화재의 원자료(Raw Data)의 코딩 및 Data 통계분석임
- 제2장의 국외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분석에서는 유네스코,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의 대분류체계 현황 조사하여 대분류체계 개념변수(물리적 특성, 개념적 차이)에 따라 검토 및 시사점 도출하였음
- 국내 타 부처 분류체계 분석에서는 관계 법령과 조직도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환경유형 분류,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분류, 산림청의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 분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어촌경관 및 국가중요농업유산·어업유산 분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분류 검토 및 분석하였음
-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 현황 분석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4가지로 분류하였음
- 한국의 문화재 대분류체계의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하나의 위계에서 2개 이상의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념 간 종속 발생
 - ‘국가유산’이라는 최상위 개념 사용
 - 최대분류 단계에서는 ‘유산’, 대분류단계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문화재’로 명칭을 사용

- 한 위계에 하나의 동일한 분류 기준 적용
- 통일 대비 북한 문화재 분류체계 분석에서는 「민족유산보호법」의 문화재 대분류 체계(2015) 및 개념변수 검토 및 시사점 도출하였음
- 북한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이 채택되어 한국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사적에 속하는 역사유적·역사유물과 명승지·천연기념물을 각각 구분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고, 확대된 무형문화재의 지정범위와 북한의 2015년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의 비물질유산의 지정 범위가 유사함
-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국보, 보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3장의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위계별 분석은 대분류 체계 분석, 중분류 체계 분석, 세분류 체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대분류 단계의 문화재유형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서 대분류 단계의 하위 유형들은 ‘절(문장)’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 및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대분류 하위 단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률에 따른 문화재 중분류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기준에 열거된 예시 및 서술을 준용해 중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있음이 확인됨
 -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 문화재보호제도 상 지정기준을 토대로 문화재 중분류를 구체화하고 있음
 - 세분류 체계는 행정명령에 의한 분류체계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종별 지정기준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문화재 관리기관, 국립박물관 및 온라인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이하 기관들의 훈령, 예규, 지침 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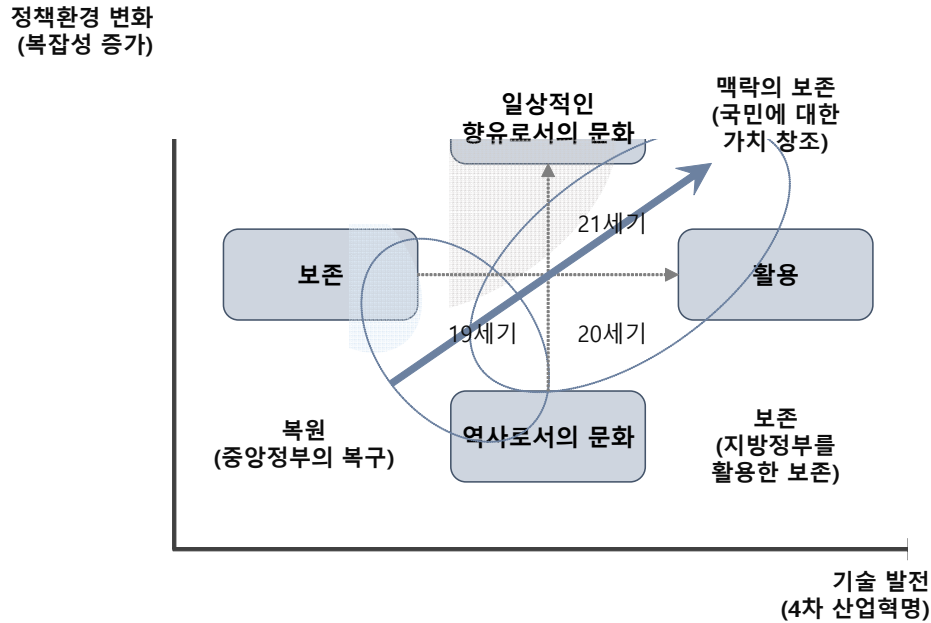
- 제4장의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개념 분석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 종별에 대한 가치평가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의 각 종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가치평가 개념을 부가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문화재 관련 가치평가용어의 DB 구축 및 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 총 3,713건의 지정문화재 현황(2017년 5월 지정기준)
 - 국보 (320건), 보물 (1935건), 국가무형문화재 (126건), 국가민속문화재 (286건), 사적 (479건), 천연기념물 (457건), 명승 (110건)
 - 조사방법
 - 지정조사보고서, 지정사유서, 가치조사보고서, 기록화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및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에서 해당 문화재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내용 확인 및 정리(한글문서)
 - 가치평가내용 중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Excel DB 구축
- 국보 가치평가요소의 빈도분석에서는 대표성, 희소성 가치의 적용되었고, 특정 유형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법령 상 명시된 가치평가 요소의 두드러진 사용 확인
- 보물 가치평가요소 분석에서도 전적/서적/문서의 특정유형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 특정유형에만 나타나는 가치평가요소 확인, 예술성의 경우 고고자료, 무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만 가치평가요소로 고려된 것 확인
 - 상위 가치평가요소로 변환 작업 후 빈도 분석 필요
- 사적·유형의 경우 정치/국방과 제사/장례 유형에 대한 지정이 집중되었는데, ‘역사적 건조물 또는 유적지’라는 사적의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명승 유형은 자연경관에 대한 문화재 유형으로서 지정되어왔으나, 2000년대 이후 역사문화명승에 대한 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과 인문이 양립되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천연기념물 유형에 대한 지정은 2000년대 이후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와 조사사업의 확대에 약간의 증가폭으로 보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줄어든 모습을 보임
- 국가민속문화재는 1990년대 이후 ‘유물’, ‘민속마을’에 비해 ‘유적건조물’이 꾸준히 지정되고 있는 추세.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민속문화재의 정의 상, 민속문화재 지정은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국가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지정 기준 상의 중분류인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례의식’에서 전통공연예술과 전통기술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지정 수량이 극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낮음
- 제6장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방향에서는 향후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에 필요한 연구 분야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리하였음
 -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단순히 변경한다 하더라도, 국내 법령상 문화유산의 개념이 국제협약상 문화유산의 개념과 일치하기 않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인위성과 자연성으로 구분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상의 구분과는 상당한 차이 발생함을 지적
 - 따라서 문화재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축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분류하는 개선 방안 도입 필요성을 제안
 - 문화재의 다축분류체계 혹은 다차원분류체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분류체계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안
 - 문화재 분야 가치평가용어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용어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등의 통합평가 방법론 적용 필요
 - 문화재보호의 기본법체계화 및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경향은 문화재 유형별 맞춤형 보호·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문화재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분법화 경향에 따라 관리방식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을 구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제2절 정책제언

○ 문화재에서 문화유산 용어로 변경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문화유산 용어 사용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문화재는 한자로 文化財로 쓰이며 독일어 kulturgüter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도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 현재 국내 문화재 관련 법령,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유산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
- 또한 문화와 유산이 합쳐진 문화유산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
-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국제협약 상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헤이그협약에서 사용되었지만,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체결 되면서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을 유산의 개념 안에 포함시킴
- 따라서 문화재 분야의 세계적 추세와 문화재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문화재 관련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
- 문화유산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역사문화유산은 18세기 후반 문화재 개념의 형성기, 19세기 문화재 보호 제도의 형성기, 20세기 초반 제도 확립기, 20세기 후반 대상 확대 및 개념 전화기를 거쳐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가치부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최민아, 2016: 46)
- 아래 [그림 7-1]은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개념 변화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책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라 문화재의 개념이 문화유산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
- 문화재 영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보존에서 활용으로, 역사로서의 문화에서 일상적인 향유로서의 문화로, 중앙정부 중심의 복원에서 지방정부 및 시민이 참여하여 문화재의 가치창조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
- 즉, 문화재 관련 영역의 변화에 적합한 문화재 용어의 사용과 활용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



[그림 7-1]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의 개념 변화

자료: 최민아, 2016:46을 재구성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차원 혹은 다축 분류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차원 및 다축 분류체계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함**
 -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위성과 자연성으로 구분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상의 구분과는 상당한 차이 발생
 - 또한 문화재의 대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대분류 이하 중분류와 세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문화재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축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문화재를 분류하는 개선 방안 도입 필요
- 다차원 분류체계의 사례로 정부기능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목적별·기능별로 분류한 것임
 - 단위과제별 업무의 기본정보, 속성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 등 다양한 연계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부기능분류체계
 - 정부기능연계모형은 범정부적으로 행정기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연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책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이 기능분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그림 7-2]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체계도

자료: 온라인 행정학사전, 2014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과학기술 인력 관리의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전 분야의 표준적인 분류틀(김용희 외, 2015: 1)
- 정규분류: 연구분야 분류와 적용분야 분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2차원 분류체계로 구성
 - 연구분야 분류는 3개층 체계로 구성
 - 6대 분야, 33개 대분류, 369개 중분류, 2,899개 소분류
 - 적용분야 분류체계는 1개층 체계로 구성
 - 2재 분야 (공공분야, 산업분야), 33개 대분류
 - 공공분야는 OECD의 경제사회목적 분류를 반영하여 도입·운영
 - 산업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분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OECD의 경제사회목적 분류 중 '산업생산 및 기술'을 세분화하여 구성
- 임시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시 정규분류 반영을 위한 근거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독립적·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류
 - 3개 분야 하위에 대분류 1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69개로 구성
 - (에너지/자원 대분류 하위) 가수에너지(중분류) 및 하위 소분류 4개
 - (건설/교통 대분류 하위) 지능형 수자원관리(중분류) 및 하위 소분류 5개
 - (농림수산물 대분류 하위) 중분류 7개 및 하위 소분류 27개

- (인력 및 인프라 대분류) 대분류 1개 및 하위 중분류 5개와 소분류 28개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대분류 하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중분류) 및 하위 소분류 5개(김용희 외, 2015: 11-12)

		적용분야					
		공공	산업				
		대분류 13	대분류 2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 분야	과학기술	자연	4	47	347		
		생명	3	49	447		
		인공물	9	111	854		
	인문 사회 과학	인간	5	61	547		
		사회	9	88	634		
		인간과학과 기술	3	13	70		
	임시분류	생명-농림수산식품(대)	-	7	27		
		인공물-에너지/자원(대) (가스에너지(중))	-	1	4		
		인공물-건설/교통(대) (지능형 수자원관리(중))	-	1	5		
인문과학과 기술-과학기술과 인문사회(대) (과학기술과 재난/안전(중))		-	1	5			
인간과학과 기술-인력 및 인프라(대)		1	5	28			

[그림 7-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

자료: 김용희 외, 2015: 12

- 학술연구분야분류체계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류체계(홍슬기, 2016: 18)
 - 현재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학술연구 지원의 관리와 통계, 대학의 연구활동 실태 등의 조사, 연구과제의 접수와 심사 및 평가자의 선정에 활용
 - 분류표는 국내와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명칭, 교과과정, 국내 교수진의 세부 전공 분야의 분석과 다양한 한문분류표의 항목 비교를 근거로 설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 4개의 위계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대분류로 구성됨
 - 대분류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등이 있음
 - 중분류는 전체 152개, 소분류는 1,551개, 세분류는 2,468개로 구성되어 있음

[표 7-1] 학술연구분야분류표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인문학	23	167	298
사회과학	22	269	479
자연과학	13	135	371
공 학	28	310	457
의약학	39	409	648
농수해양학	7	64	132
예술체육학	12	104	61
복합학	8	93	22
합 계	152	1,551	2,468

자료: 홍슬기 외, 2016: 18

○ 문화재 가치평가 용어의 개념 정립과 문화재 가치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용어 사용의 적합성 분석 필요

- 현재의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치평가용어는 개별 문화재의 특징과 속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발생함
- 문화재의 가치평가를 단순히 예술성, 학술성, 문화성, 경관성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문화재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부족함
-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평가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 국립공원의 경우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통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여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설정(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5)

-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적용 되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Dichotmous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국립공원의 이용가치(Use Value)와 보존가치(Preservation Value)를 추정
- 이용가치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탐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소비적인 개인의 이익관심에 관련된 가치로 국립공원 탐방객이 체험하고 획득하는 탐방만족을 금액으로 계량화된 가치(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8-9)
- 보존가치는 소비적인 이익관심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가치로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 그리고 선택적가치(Option Value)로 구성

(Krutilla, 1967: 재인용)

-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가상적인 환경의 질적 또는 양적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to-pay, WTP)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문화재의 경우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를 활용하여 박물관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음(정민섭 외, 2008: 181-183)
 - 허스의 보상잉여(CS)는 최초 환경질 수준에서 최초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의해 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
 - $CS = E(p, q^0; U_0, Q, T) - E(p, q^i; U_0, Q, T)$ (식 1)
 - p: 시장재화들의 가치 벡터
 - q : 최초의 환경질 수준
 - U : 최초의 효용수준
 - Q :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다른 공공재의 벡터
 - T :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 벡터
 - 환경질 개선 평가의 측정수단으로 환경질 개선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함수
 - $WTP(q_i) = f(p, q_i, q_0, Q, Y_0, T)$ (식 2)
 -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시장재화들의 가격(p)과 최초의 환경질 수준(q_0), 변화된 환경수준(q_i), 변화되지 않은 공공재의 수준(Q), 응답자들의 선호(T), 현재의 수입(Y_0) 등에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는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다른 분류 방식으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나타낼 수 있음(옥성수 외, 2013: 67)
- 즉,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방법으로 조건부가치평가방법(CVM)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재의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법임

○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가칭 「문화유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문화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관련 연구 또한 진행되어 왔음
- 문화재 관련법의 연구동향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문화재청의 2014년 「국가지정 명승 유형별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문화재보호 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에서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됨

· 다만, 기본법 제정연구에서는 「문화재 기본법」의 기본적 사항을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안하고 있지만, 문화재의 분류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목적과는 다름

- 또한 문화재 관련 법률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분법되어 개별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기본법」, 소방청의 「소방기본법」,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사례와 내용으로 기본법을 통하여 업무를 분류하고, 조직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의 연구는 단순한 기본법 제정의 차원이 아닌 문화재 정책 전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즉, 문화재의 분류체계와 가치평가 관련 내용 및 문화재 관련 업무와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현재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과 기본법 제정은 한국의 문화재보호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의 실현을 위한 입법체계,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함(김창규, 2015)
- 따라서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진행되어야 함

□ 참 고 문 헌

- 국문

- 국립고궁박물관. (2010). 「국립고궁박물관 연보 제2호 2007-2009」.
- _____. (2016). 「국립고궁박물관 연보 제5호 2014-2015」.
- 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결과 보고서」.
- _____. (2013). 「근대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등록문화재 분류 및 잠정 목록 대상 발굴을 중심으로」.
- 국립민속박물관. (2010). 「박물관 소장품 관리 일반과 실제」.
- 국립중앙박물관. (1993).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의 항목분류와 코드분류」.
- _____. (1995).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방안」.
- 국립중앙박물관. (1996).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대한민국 수중발굴 40주년 특별전」.
- 국토해양부. (2008).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권혁산. (2014). 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DB구축 사업. 「2014서울역사박물관 리뷰」.
- 기상청. (2011). 「한국 기후변화백서」.
- _____. (2016). 「2015 지진연보」.
- 김기호. (1996). 계취탈트 이론을 적용한 도시경관관리에 관한 연구—산을중심으로. 「국토계획」, 31(3): 143-157.
- 김봉건. (2013). 「한국건축개념사전」, 서울: 동녘.
- 김성욱. (2010). 남북한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0 남북법제 연구보고서(II)」, 47-88.
- 김순호. (2011).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예능계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김은정. (2003). 정보서비스를 위한 가치의 평가.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0(3): 741-747.
- 김용희·최문정·강선영. (2015). 「2015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재응·김승민. (2014).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 및 세계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91-200.

- 김정신. (2013). 사례조사를 통한 근대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연구—총체적 분류와 천주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10: 165-202.
- 김창규. (2010). 「문화재보호법개론(단일법체제 최종판)」, 서울: 동방문화사.
- _____. (2013).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의 재조명. 「법과 정책연구」, 13(3): 1211-1246.
- _____. (2015).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15(3): 879-910.
- 김현정. (2015). 「조선시대 한강변 명승의 향유방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효정. (2012). 한국의 유네스코 자연성지 잠재자원 현황과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1): 492-501.
- 김휘정. (2014).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810.
- 노재현·신상섭. (2010). 제주 방선문의 선경적 이미지와 명승적가치. 「한국조경학회지」, 38(1): 98-106.
- 노중국. (2006). 사적의 이해. 「2006년 문화재관리교육 자료집」.
- 문화관광부. (2005).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문화재관리국. (1988). 「국가지정문화재재평가」.
- 문화재청. (1985). 「중요무형문화재해설: 놀이와 의식편」.
- _____. (1988). 「중요무형문화재해설: 공예기술」.
- _____. (1994). 「중요무형문화재 관리 편람」.
- _____. (1996).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_____. (2003). 「천연기념물백서」.
- _____. (2004a).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 _____. (2004b). 「중요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 관리방안 연구」.
- _____. (2005). 「문화재 분류체계」.
- _____.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 _____. (2009a). 「사적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_____. (2009b).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
- _____. (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 _____. (2011a).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 _____. (2011b). 「문화재청 50년사」.
- _____. (2011c).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 _____. (2013).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 _____. (2014a). 「국가지정 명승 유형별 보존 및 활용방안」.
- _____. (2014b).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

- _____. (2014c).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_____. (2015a).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 _____. (2015b).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연구」.
- _____. (2015c).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_____. (2016a).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일괄공모제 실행계획 연구」.
- _____. (2016b).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 _____. (2016c).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디지털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박물관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_____. (2012). 「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
- _____. (2014a).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_____. (2014b).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 _____. (2015). 「국가문화유산 정보, 확인·관리하기 쉽도록 한곳에 모은다」. 보도자료. (7월 23일)
- _____. (2016a). 「2015 연차별 국민여행 실태조사」.
- _____. (2016b).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_____. (2016c).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대남. (2008). 「북한의 문화재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 박정희. (2008).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와 실현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운기·유정칠·한규황. (1996).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지정된 홍도에서 번식 또는 통과하는 조류. 「Bulletin of Korea Institute of Ornithology」, 5(1): 69-73.
- 산림청. (2003). 「산림법령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 설성수. (2002). 「기술 기업가치평가 용어사전」. 서울: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 신준. (2017). 「경관유산 명승에 부여된 인문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정현. (2014). 린네 분류체계의 성립과 확산: 지역에서 보편, 보편에서 지역으로. 「서양사연구」, 50: 243-276.
- 옥성수·박조원·박호정·심승구. (2013). 「문화재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석해·이행렬. (2001). 문화경관으로 본 곡운구곡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4): 47-59.
- 이완건. (2014). 도시경관 자원으로서 건축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제천 엽연 초생산조합 구사옥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1): 69-77.

- 장호수. (2004). 문화재 분류체계 시론. 「인문콘텐츠」, 4: 78-101.
- 전종한. (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유산의 가치평가와 범주화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929-943.
- 정만섭·한혜숙·박선희. (2008). CVM을 이용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 최초의 박물관의 건립사례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7(3): 175-195.
- 정상우. (2011). 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범화 경향연구: 동아시아 비교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3: 355-378.
- 정수진. (2013).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 표상. 「동아시아문화연구」, 53: 91-116.
- 정은찬·문철훈. (2017).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1): 91-113.
- 정창현. (2012).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 53: 223-251.
- 조준현. (2015). 「울산 대곡천 유역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경진·서순복. (2017).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재구축 연구. 「법학논총」, 24(2): 61-86.
- 최민아. (2016). 문화유산 개념 변화에 따른 프랑스 도시 역사성 보전·활용방안 변화 및 시사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6): 37-47.
- 최연규. (2012). 「건축문화재 분류체계 적용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5). 「2015 사회조사 결과 보고자료」.
- 특허청. (2010).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문화정보센터. (2013). 「국가유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
- 함규황. (1997). 한국의 주남·동판저수지의 9년간('88~'96)의 천연기념물 현황. 「연구보고」, 6(1): 63-71.
- 환경부. (200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_____. (2011). 「보호지역의 재분류 및 협력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
- 홍슬기·김미·이현익·최한림·김병수·권설아. (2016).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 R&D 사업 분류기준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영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Hunter, Eric J. (2009). Classification Made Simple: An Introduction to Knowledge Organisation and Information Retrieval. Third Edition. Farmhan: Ashgate Publishing Limited.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alua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Alex. (2008). Glut Mastering Information Through the Ag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김익현·김지연 역. (2010). 「분류의 역사」, 서울: 디지털미디어리서치.

-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http://gogung.go.kr/>)
-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archive.gugak.go.kr/ArchivePortal/index.jsp>)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ntok.go.kr/kr/Museum/Main/Index>)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홈페이지. (<http://portal.nrich.go.kr/>)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네이버 국어사전 홈페이지. (<http://krdic.naver.com/>)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다음 한국어사전 홈페이지. (<http://dic.daum.net/index.do?dic=ko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ch.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 서울사진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photoarchives.seoul.go.kr/>)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seoul.kr>)
- 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egislation.gov.uk>)
-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yoksa.aks.ac.kr/main.jsp>)

온라인 행정학 사전 홈페이지. (<http://www.kapa21.or.kr>)
외교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en/list/>)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 (www.unesco.org/culture/ich/en/)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en.unesco.org>)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modern-history.museum.go.kr/>)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dryplate.museum.go.kr/>)
천연기념물센터 홈페이지. (http://www.nhc.go.kr/naturalweb/main/Index.do?mn=KO_01)
프랑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egifrance.gouv.fr>)
한국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국내 법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고시 제 2016-19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국립고궁박물관예규 제69호)
「국립국악원 자료 관리 규정」(국립국악원예규 제219호)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 무형유산원훈령 제6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3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8호)
「국유재산법」(법률 제1484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81호)
「농지법」(법률 제1424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9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 제13875호)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문화재청훈령 제291호)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0호)
「산림보호법」(법률 제14519호)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4494호)

- 국외 법률

「민족유산보호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헤이그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부 록

1. 착수보고회

- 일시 : 2017년 5월 31일(금), 14:00
- 장소 : 대전 문화재청 회의실
- 안건 : 과제의 연구 방향 및 수행 내용 검토 및 협의
- 주요 자문 의견
 - 문화재 분류체계 연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검토 및 사례 제시와 정책적 분석이 필요
 - 용어 등에 관하여 기존 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연구 필요
 - 과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함
 - 분류체계 설정은 분류에 근거하여 법과 행정적 편성까지 연계되는 작업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의 결과 도출 필요

2. 중간보고회

-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10:00
- 장소 : 대전 문화재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 안건 : 연구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과 향후 성과 도출 계획 협의
- 주요 자문 의견
 - 도출한 분류체계 개선안과 문화재청 조직체계와의 상관성 크로스 체크 및 이후 피드백 과정 필요
 - 용어 사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 분류체계 및 그의 도출 과정에 있어 단순하고 명쾌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음
 - 분류의 결과물이 문화재의 학술적 연구 및 문화재 활용에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분야의 분류체계와 호환성 갖추도록 할 것

3. 최종보고회

-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14:00
- 장소 : 대전 문화재청 소회의실
- 안건 : 연구 수행 성과 보고 및 보완 사항 논의

○ 주요 자문 의견

- 연구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보강할 것
- 분류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것

4. 전문가 자문 및 학술회의**1) 서면 자문**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 안건 : 연구 진행 상황 검토와 보완 사항 자문

○ 주요 자문 의견

- 제시된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모형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분류체계 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문화재 분류체계는 문화재를 행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도구이자 장치임
- 향후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문화재 성격에 보다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

2) 제1차 전문가 학술회의

○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13:00

○ 장소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안건 : 분류체계 개선 방식과 연구 진행의 방법 및 목표 성과 검토 및 자문

○ 주요 자문 의견

- 분류체계 개선 방식 전반 : 분야별, 사안별 다양한 견해 확인되고, 대치되는 의견도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선정 및 활용
- 연구 진행의 방법 관련 : 문화재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항이 다양하며, 최대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도출하여 다양한 문화재 분야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위한 단계별 연구 방법 구체화
- 연구 목표 성과 관련 : 단계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대다수의 의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의 내용적 범위 고민. 본 과제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후속 필요 연구와 체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언 필요

3) 제2차 전문가 학술회의

- 일시 : 2017년 11월 1일~2일(수, 목), 14:00
- 장소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안건 : 연구 내용 보고 및 보완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 수행
- 주요 자문 의견
 - 문화재 분류체계는 단계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후속 필요 연구와 체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언 필요
 - 결과적으로 대분류 및 중분류 단계에서의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할 필요
 - 후속 필요 연구와 법제도적 반영 및 실천 가능한 수준의 제안할 것
 - 문화재 대분류 단계의 기준 및 요소와, 명승·경관의 분류 결정되어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 2017. 12. 15.

발 행 처 : 문화재청

연구기관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 Tel. 042-481-4816

Fax. 042-481-4829

(<http://www.cha.go.kr>)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978-89-299-1245-1 93600